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







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2007.12.26)
하. 현충원 참배(2008.1.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

일시 : 2007. 12. 28(금)

장소 :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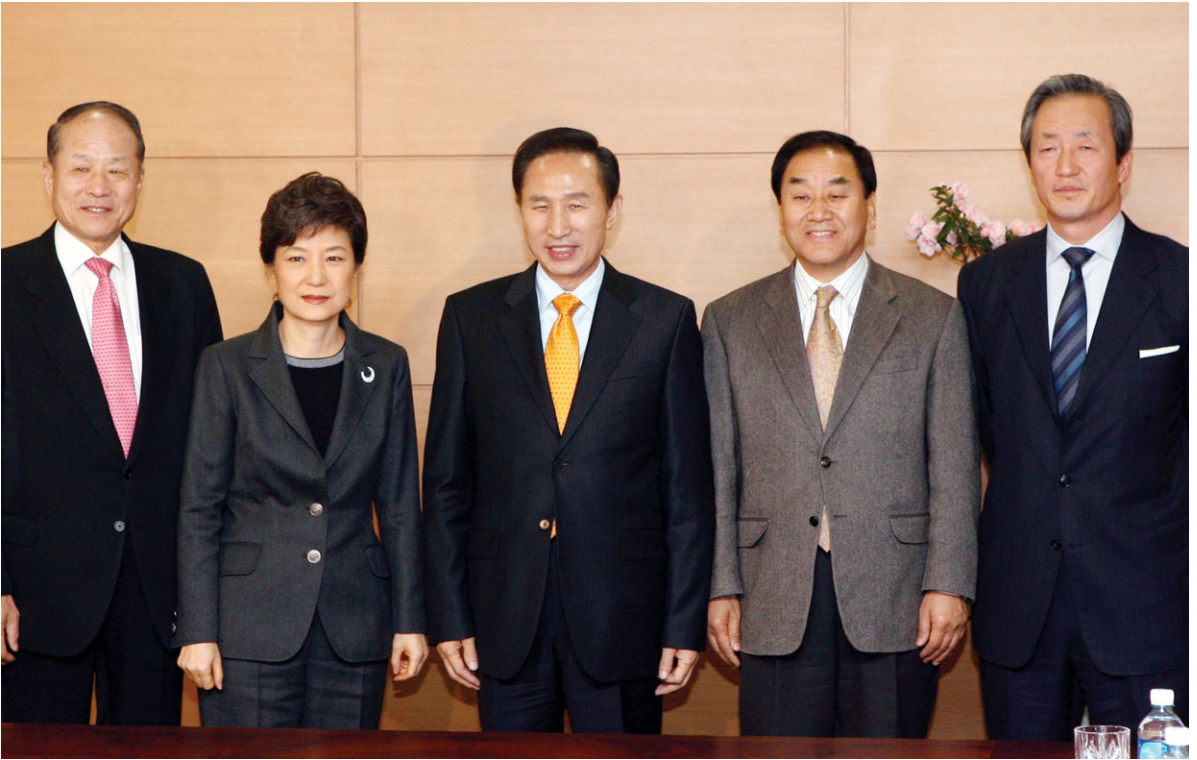


상. 경제인 간담회(2007.12.28)

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7.12.31)

우.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접견(2008.1.5)





상. 마 일·중·러 4개국 특사단 집견(2008.1.11)

하. 한미연합군사령부 방문(2008.1.15)



상. 해외 자랑스런 한국인들과의 화상대화(2008.2.5)

하.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관람 후 출연진과 대화(2008.1.20)



상. GM대우 부평공장 방문(2008.1.29)

하. 용문산 군 헬기추락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 참석(2008.2.22)



상. 서울 용산구 '영락어린이의 집' 방문(2008.2.2)

하. 서울 봉천동 원당재래시장 방문(2008.2.3)



상.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새벽 산책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2.17)
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2008.2.22)



상.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2008.1.15)
 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연설(2008.2.21)



상. 환영나온 효자동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2008.2.25)
하. 취임식 식전행사





상. 취임식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하.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마당



상.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는 참석자들
하.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

세계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땀 흘린 수고와 희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를 성숙의 단계로 한걸음 전진시켰습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이끌며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성장엔진을 발굴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국민 한명 한명이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 할 때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선진화의 사명을 감당해 세계일류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진화는 국민적 희망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로 선진화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화합을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업과 도전을 실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 방안으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더불어 '섬김 리더십'으로 밑거름을 다지며 실용정부의 싹을 틔우고 국민성공시대를 꽃피우게 되리라는 믿음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화로 이룩한 보람의 결실과 기쁨을 나누고,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매력 있고 아름다운 국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수위원회는 50여일의 숨가쁜 여정을 보내며 새 정부의 초석이 될 미래 청사진과 전략 및 계획들을 세우는 데 매진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본받을 내용은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터전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애썼습니다.

한편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

목과 시야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본 백서는 이러한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발자취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핵심정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중점활동과 쟁점정책 등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두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의 열의 넘치는 행보와 끊임없는 토론 끝에 창출한 국정 실천계획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본 백서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후대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며 밤샘 작업과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백서를 편찬하느라 정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의 지평을 여는 데 본 백서가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 3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 경 속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1

발간사

제1부 이명박정부 출범의 시대정신과 국정철학/23

제1장 대내외 여건과 우리의 현실/24

1. 문명사의 전환과 한반도 / 25
2.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 28
3.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 / 30
4.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기대 : 발전과 통합 / 33

제2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34

1. 국가비전 :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 36
2.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 / 37
3. 비전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 신(新)발전체제 / 38

제3장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목표 / 193개 국정과제 / 40

1. 섬기는 정부 / 41
2. 활기찬 시장경제 / 42
3. 능동적 복지 / 43
4. 인재대국 / 45
5. 성숙한 세계국가 / 46

제2부 주요 국정지표별 핵심정책/49

제1장 인수위 정책활동 기초/50

제2장 국정지표별 국정과제/52

1. 섬기는 정부 / 53
 - 전략 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 53
 - 전략 2.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 63
 - 전략 3.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 68
 - 전략 4.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 78
2. 활기찬 시장경제 / 84
 - 전략 5.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 84
 - 전략 6.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 97
 - 전략 7. 신성장동력 확보 / 104
 - 전략 8. 서비스산업 선진화 / 115
 - 전략 9. 일자리 창출 / 129

- 3. 능동적 복지 / 135
 - 전략 10. 평생 복지기반 마련 / 135
 - 전략 11.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 146
 - 전략 12.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152
 - 전략 13.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163

- 4. 인재대국 / 167
 - 전략 14.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 167
 - 전략 15.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 175
 - 전략 16. 평생학습의 생활화 / 181

- 5. 성숙한 세계국가 / 186
 - 전략 17.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186
 - 전략 18. 실용적 통상외교와 능동적 개방 / 194
 - 전략 19.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 200
 - 전략 20.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 206
 - 전략 21.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 215

제3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자료 모음 / 219

제1장 활동보고서 / 220

제2장 보도자료 / 356

제3장 브리핑자료 / 380

편집후기 |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며 / 442

발행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행인 이경숙
편 집 문화체육관광부 www.mct.go.kr
편집인 유인촌
발행일 2008년 3월 24일

제작협력 (주)사사연
인쇄제본 삼성문화인쇄(주)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004-13

이명박정부 출범의 시대정신과 국정철학

1.

제1장 대내외 여건과 우리의 현실

제2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

제3장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목표 / 193개 국정과제

제 1 장

대내외 여건과 우리의 현실

1. 문명사의 전환과 한반도
2. 대한민국이 걸어온길
3.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
4.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기대 : 발전과 통합

1. 문명사의 전환과 한반도

● 심화되는 세계화

최근 세계경제는 국가 간 분업·협조 체계와 글로벌 경쟁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01년 0.2%에서 2005년 7.3%로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도 2004년 7,018억달러에서 2006년 12,304억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대국형 개도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2040년경 미국 GDP를 추월하고, 인도가 2030년경 일본 GDP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BRICs의 GDP 합계가 G6(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화의 또 다른 양상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와 경제통합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2006년 역내 수출 비중이 동아시아 46%, 유럽 68%, 북미 54%로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FTA 체결 건수도 1990년 27건에서 2005년 18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더 넓은 수출시장과 글로벌 최적화라는 기회요인이 되는 동시에 국내산업 공동화,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수 두뇌 유출 등의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다.

● 가속화되는 지식정보화

경제구조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정보·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IT·BT·NT 등 신기술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야를 넘나드는 기술융합이 신사업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IT-NT 간 융합기술의 시장규모는 2005년 495억달러에서 2010년 4,610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식정보화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혁신능력의 격차가 소득과 계급의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삶의 패러다임 변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여성의 사회 참여·진출 확대, 외국인 인력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구·사회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저출산을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 1.60명, 2003년 1.19명, 2006년 1.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인 노인 1명당 부양인원 역시 1980년 16.3명에서 1990년 13.5명, 2003년 8.6명, 2005년 7.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른바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해 단수의 인생에서 복수의 인생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젊은 시절에 어떤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인력 유입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다민족·다문화 국가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중 2007년 현재 10만 5천명이 결혼 이민자이다.

●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위기가 세계의 정치·경제·안보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인도의 산업화로 환경·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 사용가능 연수는 석유 43년, 천연가스 62년, 우라늄 72년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갈 위기에 처한 에너지 문제로 신고유가시대가 도래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 정치·군사 질서의 재편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부활 등으로 다극화돼 미국이 독단적으로 세계질서를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종래 중요시되던 군사·경제력 등의 경성 권력(Hard Power) 외에 국가브랜드·문화 등의 연성 권력(Soft Power)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ODA(공적개발원조), 인권·문화 외교를 통한 국가 간 연성 권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신뢰와 숙의(熟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법·원칙 준수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성숙한 시민사회, 사회적 합의 등 민주적 환경과 절차가 더욱 중요해지고 개인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정치·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성숙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자율성 증대 및 시장기능 활성화와 함께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크게 세 단계 또는 세 개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 건국 단계(1948년 체제)

해방의 환희와 분단의 비극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실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냉전구조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수호하는데 중심 목표가 있었던 체제이다.

미·소 대결체제라는 세계정세 속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한민족의 생존 활로를 모색했으며, 전 세계적 냉전구도와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던 시기이다.

● 산업화 단계(1963년 체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발전의 중심 에너지로 삼았던 시기로 ‘자립경제 달성과 공업화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당시의 보수주의는 통상적인 보수주의와 달리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는 ‘발전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단계는 고도성장이라는 놀라운 ‘발전국가의 성취’를 보여준 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간극이 확대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민주화 단계(1987년 체제)

근대화의 또 다른 숙제였던 민주화를 실현해냈던 시기로 1987년 헌법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유보도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복리, 민주주의를 고르게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복합적인 대내외 도전들이 함께한 시기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노력을 지속하면서 사회안전망과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했다. 탈냉전 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세계화·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문명사적 도전에도 대처했던 시기였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성장 기반 약화, 양극화 심화, 전통적인 동맹관계 약화 등의 민주화 비용이 지불되기도 했다.

● 선진국 진입 장벽에 직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 산업화 → 민주화'의 격동기를 숨가쁘게 헤쳐 왔지만 '선진국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건국은 했으나 통일과 국민 화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했으나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민주화는 됐으나 자율과 책임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3.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

● 정체되는 선진경제 진입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4%대로 둔화된 가운데 경제 조로화(早老化)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 위축, 노동력 공급 감소, 생산성 향상 부진 등 각 성장기여 요인이 복합적으로 부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보수적 기업 경영과 약화된 기업가 정신, 이공계 진출 기피 등 성장동력의 위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기업의 불신이 반복되어 규제와 투자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속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좋은 일자리(decent jobs) 부족과 함께 고용의 질 저하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늦어지는 미래 대비

점점 짧아지는 기술·지식의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인적자본 축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시스템 미비의 결과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핀란드(64.8%), 미국(48.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래를 대비할 핵심인재 양성체계 역시 낙후되어 있다.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부족하고, 세계적인 과학인재 양성·유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 불안정한 삶의 질과 양극화

급격한 성장률 감소가 가져온 사회 각 부문의 정체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크게 하락했다. 기업이 중신고용제를 폐지함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와 조기퇴직을 초래했으며, 종래 대가족 구성원 간 이뤄졌던 상호 지원은 핵가족화에 따라 거의 사라졌다. 민간이 담당해 왔던 양대 복지 축이 붕괴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만한 국가의 역할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전달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정체현상이다. 수출 부문과 IT 분야를 제외하고는 체감경기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성향을 떨어뜨림으로써 자영업자 등 내수 부문의 소득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부문 소득정체 현상이 중산층 이하 소득 정체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자본 및 국가 거버넌스의 후진성

법·원칙 준수, 기초생활 질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특히,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의 미비는 노·사 불신, 일부 시민단체의 과잉 정치화 등 막대한 갈등관리비용을 유발했다.

한편, 정부조직과 기능에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관성이 잔존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영역별 편제로 인해 정책수요의 복잡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도 저하됐다. 특정 산업과 영역에 대한 보호·규제 위주의 기능으로 인해 미래 대비 및 정책개발 기능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 또한 다층구조로 인해 효율적·광역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 국격(國格)의 상대적 저하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격(國格)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선진외교 능력이 부족하며, 한·미동맹 약화와 중국·일본의 군비 확충 등에 따른 안보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언어, 의료·교육·금융 서비스, 국적 문제, 정주여건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여건 및 외국인들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은 기초질서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국격의 수준을 방증한다.

4.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기대: 발전과 통합

건국·산업화·민주화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가 17대 대선을 통해 표출됐다. '통합'과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국가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화 단계에서 나타난 성장동력 실증에 대응해 '경제살리기'를, 그리고 분야별로 노정된 이념적·지역적·경제적 갈등에 대응해 '국민통합'을 요구했다.

분야별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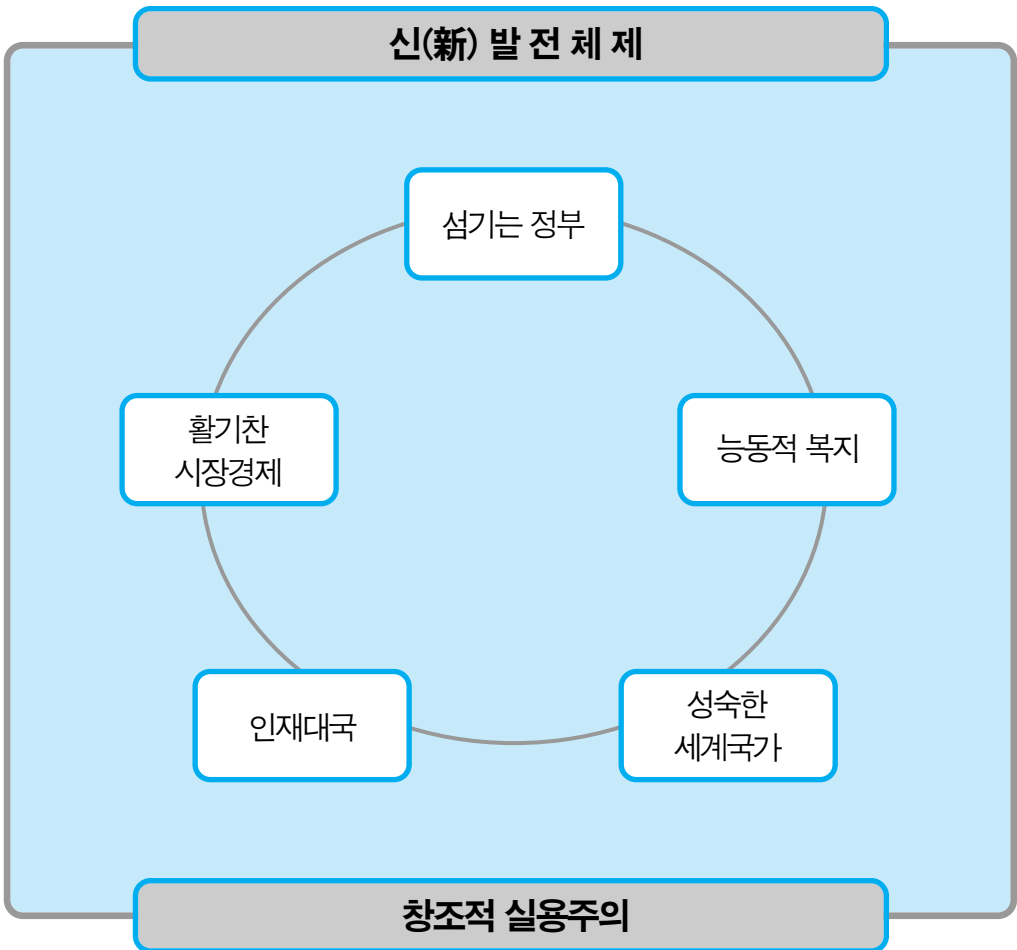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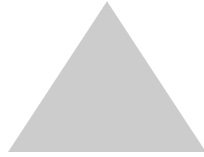
● 경제·산업 분야	“경제가 성장되어 전 계층의 살림살이가 짝 펴졌으면” “기업활동·투자 의욕을 꺾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으면” “우리 자식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보람있게 일할 수 있기를”
● 교육·문화 분야	“학교에서 학생수준에 따라 제대로 가르쳐서 학원 갈 필요가 없기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대학교육이 이뤄지기를” “평생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선진국 수준의 문화를 전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기를” “한류 등을 통해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뻗어나갔으면”
● 세계화·남북 관계	“외국어 능력, 국제매너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췄으면” “대외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도 챙기는 외교를 했으면” “일방적 퍼주기 아닌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가 정착되기를”
● 복지 분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재정이 안정되기를” “큰 질병으로 우리 가족이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았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 환경·에너지 분야	“쾌적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유가 시대의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를”
● 국가 거버넌스 분야	“불법 시위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으면” “신의 직장, 첩보통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을 슬림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

제 2 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

1.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2. 행동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3.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신(新)발전체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의 모습



1. 국가 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우리는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왔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이제 제도를 넘어 문화와 의식의 내실화를 이뤄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해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했다.

세계 일류국가란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요소로 한다.

먼저,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서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등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경제체제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로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왜곡과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그리고 식·의약품 안전 강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재해예방 등 안전한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IT·문화 등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익우선의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

오늘날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시장주의 대 국가주의, 보수주의 대 진보주의 등 종래의 대결 패러다임은 그 의미가 약화됐다. 이제 이념과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실용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용주의는 서양의 실용주의(Pragmatism) 철학과 조선왕조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앞세운 실학사상을 통합한 것으로 관념과 이념보다 경험적 실증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용주의에 창조성을 덧입힌 것이 창조적 실용주의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철학이나 원칙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 등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다. 행동규범으로서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정책과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정책과 주장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과 주장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이나 사유실험에 의해 검토되고 비판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변화하는 현실의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재조정하고 재설정하며,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항상 새롭게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제를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문제점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는 점진주의적 자세가 요구된다.

3.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신(新)발전체제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는 산업화 단계에서 민주화 단계를 거쳐 왔으며, 새 정부는 선진화를 추구한다. 산업화·민주화 단계의 구발전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제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즉, 산업화를 이뤘지만 아직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권리주장만 있고 책임의식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신발전체제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발전체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운용방식도 규정했다. 민주화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일부 관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이 최대의 보장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결과를 보정하는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장전략에 있어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을 우선 추구하는 “선-성장 후-복지” 전략을 추구했으며, 민주화 단계에서는 복지에 방점을 두는 동반성장을 추구했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생산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복지전략에 있어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극빈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시혜적·구호적 복지정책을 펼쳤다. 민주화 단계에서는 노동력의 보호, 인적자원 제고 등을 통해 복지가 투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적 복지전략으로 전환했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회투자적 복지전략을 한층 발전시켜 일을 통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할 것이다. 물론 전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러한 선진 복지전략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괴리되어 헌법이 사문화됐다면, 민주화 단계에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의 괴리가 일부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헌법규

범이 현실세계에서 준수되도록 할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이었던 산업화 단계와 자주 외교를 표방했던 민주화 단계를 넘어 국익을 바탕으로 실리외교를 실천하는 그물망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평균주의에 입각해 대량생산체제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면, 민주화 단계에서는 평준화와 보편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펼쳐졌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로 전통적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권위주의가 대두됐다. 민주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됐으나, 잠재되어 있던 권리의식의 동시적 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투명성 제고,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고신뢰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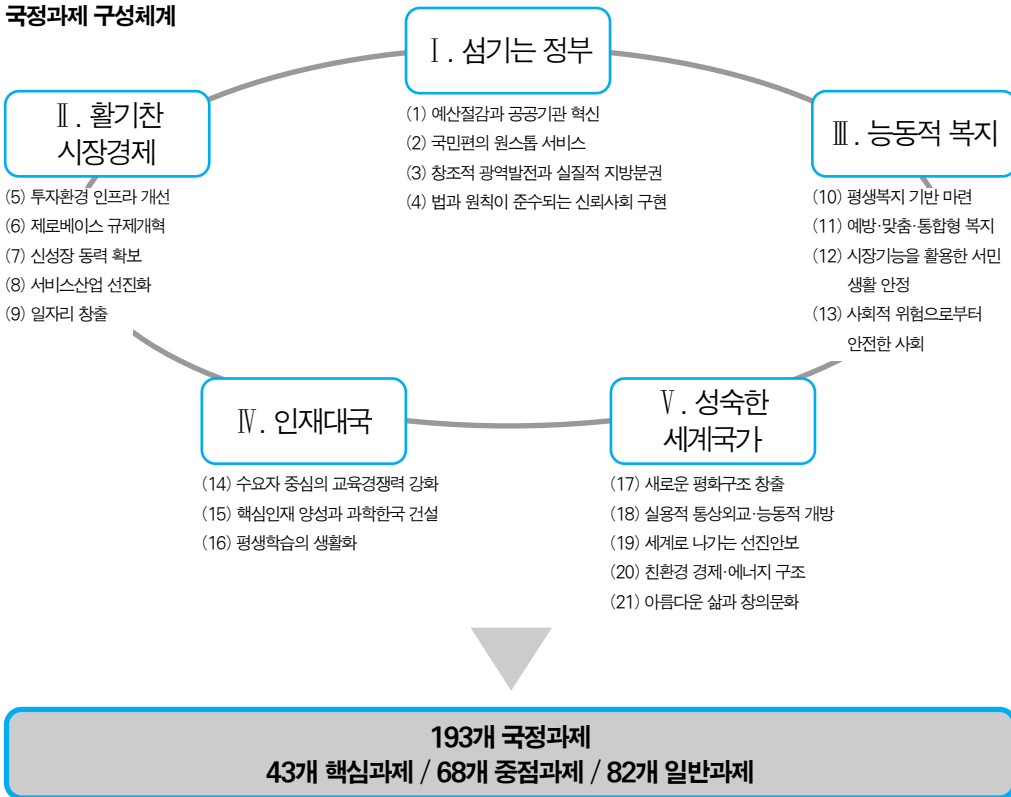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단한 민족주의하의 내셔널 스탠더드가 중시됐다면, 민주화 단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가 경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진화 단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 조화를 추구한다.

제 3 장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

1. 삼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

국정과제 구성체계



1. 섬기는 정부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해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중복된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둘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정부조직을 ‘국민을 섬기는 기능’ 위주로 재편하며, 행정규제를 혁파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권역 단위의 광역개발을 추진한다.

구분	구발전체제	신발전체제
정부 기능	정부 주도, 정부 규제	민간 자율, 경쟁 촉진
정부 규모	큰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각자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
지역개발	시·도 단위 균형발전	경제권역 단위 광역 개발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을 10% 절감하고 정부 조직을 기능 위주로 재편하며 공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둘째, 국민을 섬기는 도우미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며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을 구현한다.

셋째,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다.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하며,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넷째,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신뢰사회를 구현한다.

국정지표	1. 섬기는 정부			
전략목표	△	△	△	△
	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2.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3.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4.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국정과제 (36개)	(핵심과제) 3개 • 예산 10% 절감 • 정부조직 개편 • 공공기관 혁신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1개 •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4개	(핵심과제) 2개 • 광역경제권 구축 • 특별행정기관 정비 (중점과제) 6개 (일반과제) 5개	(핵심과제) 2개 • 법질서 확립 • 공직자 부패척결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3개

2. 활기찬 시장경제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첫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 투자환경 개선, 감세 등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대기업·제조업 중심에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IT, NT, BT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한다.

셋째, 사람과 제도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한다.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수출지향형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시장개방형 대외전략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분	구발전체제	신발전체제
경제운용	정부주도	시장중심
산업	제조업·대기업 중심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성장동인	요소투입 중심	사람과 제도 혁신 중심
대외	수출지향형	시장개방형
성장 인프라 구축	국토불균형발전, 부동산시장 불안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개혁하고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한다.

둘째,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선진화한다. 융합 신기술, 금융, 의료, 문화·관광 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다.

셋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쓴다.

국정지표	Ⅱ. 활기찬 시장경제				
	△	△	△	△	△
전략목표	1.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2.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3. 신성장동력 확보	4. 서비스 산업 선진화	5.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50개)	(핵심과제) 2개 • 감세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5개	(핵심과제) 3개 • 출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 전략적 규제 개혁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4개 •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 •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경제 중심도시화 • 과학비즈니스벨트 • 농·어업 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2개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1개 •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5개

3. 능동적 복지

능동적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복지 수요자를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으로 확대한다.

둘째, 복지 공급방식을 국가 주도에서 사회공동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복지 형평성 제고에 주력한다.

셋째, 복지는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빈곤과 질병의 사후보전 차원에서

나아가 보육, 건강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등 사전적·예방적 복지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각종 재해·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분	구발전체제	신발전체제
복지수요자	취약계층 중심	대부분 국민(중산층 이하)
복지공급자	국가 주도	사회 공동(중앙·지자체·민간)
우선순위	복지 전반의 기반 구축	예방적 미래복지 우선(보육·건강·노동 등)
안전관리	사후적 대처	예방적 시스템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등 예방·맞춤·종합형 복지를 구현한다.

셋째, 시장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며,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수월하게 한다.

넷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정지표	Ⅲ. 능동적 복지			
	△	△	△	△
전략목표	1. 평생 복지기반 마련	2.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정과제 (42개)	(핵심과제) 2개 • 국민연금·기초노령 연금 통합 •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핵심과제) 1개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핵심과제) 3개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재래시장 활성화 • 부동산시장 안정	(핵심과제) 1개 •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3개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7개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4개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5개

4. 인재대국

인재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화 시대 범용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인재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며 전문지식근로자, 연구개발인력 등 고급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둘째, 공공성과 수월성, 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학교의 다양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자율과 분권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의 통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구분	구발전체제	신발전체제
인재상	산업화 시대 범용인력 양성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적 인재
교육내용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교육제도	획일화, 평준화	다양화, 경쟁과 개방
교육행정	관치	자율, 분권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입시 및 대학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국가장학제도를 강화한다.

둘째, 미래대비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일생 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한다. 평생학습 계좌제 등을 통해 평생학습 유인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국정지표	IV. 인재대국		
전략목표	1.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2.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3. 평생학습의 생활화
국정 과제 (18개)	(핵심과제) 3개 • 대입 3단계 자율화 •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2개	(핵심과제) 1개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2개	(핵심과제) 1개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2개

5. 성숙한 세계국가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루기 위해 첫째,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실용외교를 실천한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를 자제하고 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기후온난화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힘쓴다.

셋째, 군사력·경제력 등 경성권력에 기반한 안보체제 강화와 함께 국가 브랜드, 문화 등의 연성권력을 보충한다.

넷째, 국제사회와 협력해 남북문제를 해결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일본의 우호를 복원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다섯째, '문화 코리아'를 지향,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도약한다.

구분	구발전체제	신발전체제
외교	수동적 대응, 이념·민족 중심	능동적 개방, 탈이념·실용 외교
에너지·자원·기후변화	에너지 과소비 자원 빈국 고탄소형 경제구조	에너지 저소비 자원 강국 저탄소형 경제구조
안보	군사·경제력 등 경성권력 위주	Korea Brand, 문화 등 연성권력 보충
통일	북한·국제사회 분리(한반도 중심)	국제사회와의 협력(지역과의 공동번영)
문화	부차적 주변적 영역으로서의 문화	주도적 중심적 영역으로서의 문화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선진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을 육성한다.

둘째, 실용적 통상외교를 구현한다.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면서 FTA 체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를 확대한다.

셋째,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를 정착시킨다. 친환경 대운하를 건설하는 한편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을 조성한다. 또한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넷째, 창의적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공공디자인 확산으로 창조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디자인 강국을 구현한다.

국정지표	Ⅴ. 성숙한 세계국가				
	△	△	△	△	△
전략목표	1.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2. 실용적 통상외교, 능동적 개방	3.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4.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5.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국정과제 (47개)	(핵심과제) 4개 • 북한 핵문제 해결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한·미 전략동맹 •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2개	(핵심과제) 1개 •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5개	(핵심과제) 1개 •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4개	(핵심과제) 4개 • 패키지 자원개발전략 추진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 친환경 대운하 건설 • 광역 생태축 조성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6개	(핵심과제) 2개 • 창의적 디자인 강국 구현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일반과제) 6개

주요 국정지표별 핵심정책

2.

제1장 인수위 정책활동 기초

제2장 국정지표별 국정과제

제 1 장

인수위 정책활동 기초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자 했다. 정책기조 및 방향의 설정과 관련해 인수위는 대통령당선인의 비전과 선거 당시의 공약을 실행가능한 방안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 인수위는 새 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4C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수업무에 임했는데, 이는 ①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 (Care) ②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자세(Credibility) ③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협력관계 (Cooperation) ④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시(Creativity)였다.

먼저 인수위는 이명박정부의 특성과 지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국정철학과 국정지표를 마련하는 활동을 했다. 민간 전문가와 인수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논의했다. 국정철학 및 국정지표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대통령 선거과정 등을 통해서 제시된 국정운영 및 철학과 관련된 개념,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와 연결했다.

국정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인수위는 조기에 정부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착

수했다.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노 할리데이’ 원칙에 따라 신년 초부터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약 이행방안을 각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정과제의 이행방안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보고서가 이명박정부의 ‘할일’에 대한 실천계획서이자 대국민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명박정부의 지향점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국정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1.8) : 산업은행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으로 분리해 투자은행 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 기능은 정책은행으로 운용하고,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Korea Investment Fund, 가칭)으로 운용
- 정부조직 개편 방안(1.16) : 현행 56개 중앙행정기관을 43개로 축소, 정부 기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 발표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1.22) : (1단계) 수능등급제 혼란 종결, 대입 업무 대학협의체 이양 → (2단계) 수능 응시과목 축소 →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 광역경제권 구상(1.24) :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2 광역경제권 구상(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광역경제권발전특별회계, 특별법 제정 추진 등)
-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공청회(1.30) :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신규 채용,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 전용 보조교사 지원 확대,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등의 실천방안 제시 및 토론
- 농가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2.4) :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사료구매자금 한시 특별지원 실시 등
- 예산절감 지침 발간(2.10) : 감사원의 5년간 회계 관련 지적사항을 분석,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를 도출하고, 절감방안을 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앞서 상술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도출했으며, 193개 국정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구분했다. 이 과제들은 선거 기간 중 제시된 각종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재점검해 임기 내에 달성 가능토록 구체화하거나 공약의 취지에 맞춰 추진방향을 재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국민제안 등을 통해 파악된 과제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 과제들은 새 정부 출범 즉시 행정 각부에 전달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행해 나갈 것이다.

제 2 장

국정지표별 국정과제

1. 삼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

1. 섬기는 정부

◎ 전략 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1-1-1. 예산 10% 절감 추진

① 과제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 교육, 환경,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 스스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야 한다. 새 정부는 낭비를 없애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요 공약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인수위는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곳곳에 숨어 있는 각종 낭비요인과 비능률적인 측면을 제거해 정부예산의 10% 수준을 절감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예산절감은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실현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 예산을 항구적이고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절약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② 추진계획

2008년 예산에 대한 절감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인건비·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위주로 국민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절약분뿐만 아니라 집행 부진이 예상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절감 여지가 있는 사업비도 함께 절감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절감으로 발생한 재원은 서민경제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감

세 및 국제발행 축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보다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과 재정 시스템 재정을 본격화할 것이다. 당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기를 연장한다든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단순 축소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진해 정부의 군살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은 예산편성단계는 물론 예산집행단계, 그리고 추가적인 세입 확충 등의 측면에서도 예산절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0% 수준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2008년과 2009년 예산절감분의 합).

각 단계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편성단계에 있어서는 R&D사업의 평가 강화, 보육료 자율화 등 재정소요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낭비적인 것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축소할 것이다. 실적공사비 등 원가심사 강화, 계속비사업 지정 확대, 시공자 차입에 의한 공기 단축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예산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등 사업 집행방식과 연도말 예산 집중 집행관행을 개선하고 부처간·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으로 공통 경비를 절감할 것이다. 전자우편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및 재외공관 예산의 투명성 제고 노력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징세 행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세입 확보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장기·고액 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국세·관세 행정 선진화를 통한 세금 탈루 방지,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및 유희장비 민간임대 등 경영기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산절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각 기관별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수입증대 등의 노력을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며, 각 부처별로 내부 부서·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을 절감한 부처에서 유용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③ 기대효과

정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감세조치가 가능해지며,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도 새 정부의 공약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고,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촉발되고 원가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2.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① 과제 개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 작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를 저해해 왔다. 또한, 정부조직이 일부는 영역별로 편제되고 일부는 기능별로 편제됨에 따라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처 간 영역싸움과 업무조정으로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했고,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생색나지 않고 책임만 지는 분야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 등 416개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위원회공화국을 이뤘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좋은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비판이 우세했다. 더욱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 수뇌부 기구가 커짐에 따라, 각 부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져 행정 각부가 소신껏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됐다. 국민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져 국가가 꼭 수행해야 하는 재난방지, 사회안전망 기능, 공교육 기능 등의 서비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과 조직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 영국·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국민이 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자손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

인수위에서는 2008년 1월 16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확정지었다.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중앙정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였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과 44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새로운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는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는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새로운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앞으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에 따라 각 부처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처별로 실·국·과 등 하부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의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예산 이체 등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알뜰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추진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밑그림을 마련한 것이었다. 정부 기능과 구조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책임행정을 이룰 수 없다. 책임의식을 갖는 부처를 만들고, 주인정신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한 성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실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손을 맞잡은 공무원들이 현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을 효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를 효율화해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화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③ 기대효과

정부 기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간소한 정부로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3개로 줄고,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국가 일반공무원 중 6,951명(5.3%)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은 현행보다 나아지도록 내부운영 시스템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하고 해당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자연적인 규제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이 효율화되면 국민생활이 보다 편안해질 것이다.

1-1-3. 공공기관 경영혁신

① 과제 개요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감사와 견제의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한 운영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 됐다. 참여정부 5년간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인력은 2만 7천명이 증가했다. 공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었음에도 직원과 부채규모는 동시에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6.10),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존립근거는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존치하는 경우에도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성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치권·기득권 집단의 저항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에 '공공기관경영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도로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연구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시작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실천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실천계획을 기초로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의 범위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이 선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1차 민영화·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 기능·조직 개편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경영혁신도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상황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민간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고, 공공성이 크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으로 존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를 합리화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기관장 실적 책임제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임금체계 등도 개선할 것이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까지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성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민간 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이고,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과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값에 보다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1-4. 국가채무 관리 및 균형예산

① 과제 개요

나라살림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나라빚을 줄여나가는 것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까지는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구조조정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바뀌었으며,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7년도의 재정수지는 14조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7년 말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5배 증가한 300조원으로 GDP 대비 33%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07~2011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수위는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회복시키고 장기적 지속가능성(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며, 새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이하로 억제하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재정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경제·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될 것이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입확대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와 효율적 징세행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출 측면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강력한 예산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 운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완급을 적절히 조절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33% 수준인 GDP 대비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 이하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당초 공약내용은 국가채무를 2007년 말 수준인 300조원으로 동결하는 것이었으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2008.1.8)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 규모를 동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에 따라 GDP 대비 비율로 목표를 수정하게 됐다. 국가채무 동결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일반회계 적자국채(7조 4천억원 : 2008년 전체 예산 195조원의 4% 수준), 외평채(2008년 계획 : 10조원), 국민주택기금채권(2008년 계획 : 9조 5천원) 발행을 중단해야 하나 과도한 재정긴축 등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가채무 부담능력이 증가됨을 감안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목표로 설정했다. 참고로 EU의 경우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60%)을 관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와 일반회계 적자국채 등 적자성 채무로 구분해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즉, 재정의 건전성 관리대상이 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에 초점을 두고 중점 관리하고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2007년 말 현재 127조 원으로 GDP 대비 14% 수준이다. 이러한 적자성 채무는 앞으로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해 14% 이하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2007년 말 현재 173조원(2006년 163조원)으로 GDP의 19% 수준이나 대응자산이 162조원(2006년 기준)인 상황이다. 금융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평채(2007년 말 : 90조원)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2007년 말 : 45조원)은 주택법상 주택구입시 국민주택채 매입이 의무화돼 있어서 채권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적연금, 공공기관의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중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균형예산 추진을 위해서 감세, 공약사업 추진 소요예산 등 세입·세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 관리 및 균형예산 실천을 위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거쳐 2008~2012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국가채무 관리 및 균형예산 실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 4대 공적연금 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재정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듯이 새 정부 기간 중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부담 등 통일에 대비하는 튼튼한 재정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1-1-5.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① 과제 개요

헌법상 감사원의 기본책무인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내실화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출예산 10%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회계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인수위는 지난 5년간의 감사원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공통·반복적으로 지적된 예산낭비사례(200여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예산낭비 집중 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 10%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사례집을 작성, 각 부처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로 활용토록 전달했다.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10% 절감 방안 이행을 확인·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에 각 부처별 '예산절감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절감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및 재무회계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예산지킴이센터'를 감사원에 설치, 국민으로부터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받아 예산낭비 현장을 점검, 적기에 시정하도록 한다.

기관별, 재정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실천계획에 의한 체계적 감사 수행으로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1~2월(전년도) 및 12월(당해년도)에 국가결산을 위한 재무회계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 감사 순기에 따라 연중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24개), 금융 공기업(12개)에 대해, 그리고 2단계로 64개 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회계 사각지대인 산하기관,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문제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지원금 횡·유용, 자의적 집행 여부를 점검한다.

국가채무 규모와 위험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금의 조성·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점검해 기금 낭비를 막고 기금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사업 착수단계부터 진행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문제사업은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내실 있는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 세출예산 10%를 절감해 향후에 늘어날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1-6.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① 과제 개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혁파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점검,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장애요인을 발굴·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금융·환경규제 등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 되는 불합리·과잉규제에 대한 분야별 특별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임기 초반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정해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한다.

② 추진계획

우선 기존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지적 규제사례' 유형을 분석, 그 결과를 향후 규제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할 것이다. 이를 각급 기관이 새로운 규제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령 등을 제·개정할 때 심사기준 등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도록 한다. 감사원은 규제감사를 수행하면서 위 사례집에서 지적한 유형의 규제가 그대로 존치하거나 신설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규제 분야별 특별감사의 수행은 감사의 시급성과 인력 여건을 감안,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창업과 공장 설립 및 외자 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투자 관련 규제 △토지이용·건축규제 △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 경쟁력 제고에 저해요인이 되는 진입 규제 및 투자 장벽 △건설 관련 중복규제와 환경규제, 건설공사 인·허가 관련 비리·부조리 등 사실상의 규제에 대한 직무감찰 △교육·의료·관광 등 고용창출과 실업해소의 주축이 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집중 감사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경제규제에 특화된 감사로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건설·환경 등 중복규제 개선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등 기업민원을 부당하게 처리지연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일소해 기업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1-1-7.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① 과제 개요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운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합리적 경쟁원리를 적용하고 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우선 성과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중심의 합리적 경쟁원리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처별 관대화 경향지수를 측정·공표하고, 기관 인사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며, 엄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평가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을 평가자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코칭, 성과면담 스킬 등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 결과를 전보인사에 반영해 성과와 보직관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 전략2. 국민편의 원스톱서비스

1-2-1.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① 과제 개요

지속적인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 복지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태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긴급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위기상황 극복지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을 '희망복지129센터'로 개편해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와 복지·급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실종아동이나 장애인·노인 등 긴급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련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일시적 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과)'을 '희망복지129센터'로 변경하고, 이 센터를 통해 복지·보건·고용 등 핵심적 3대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129 콜센터 기능을 부여해 개인·가정의 위기발생시 긴급출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며, 복지 대상자 방문상담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 방문, 전화 문의시 최초 상담자가 급여·서비스 결정시까지 책임지는 1:1 원-스톱 서비스 지침을 설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통합정부시스템'은 주민생활 관련 8대 서비스(복지 서비스 포함)의 대국민 인터넷 접점 역할을 수행해 서비스 소개, 신청 및 결과 통보와 지역 서비스 자원 DB 등으로 '희망복지129센터'의 대국민 Front Office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 보장 등의 급여 및 서비스를 복지대상별 소득, 재산, 금융정보, 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 개인별로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를 구축해 '희망복지129센터' 지원을 위한 Back Offic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지원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생계·주거 지원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의료지원은 1회에서 2회로 긴급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본 지원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의 위기상황 인정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긴급의료비 지원을 의료안전망기금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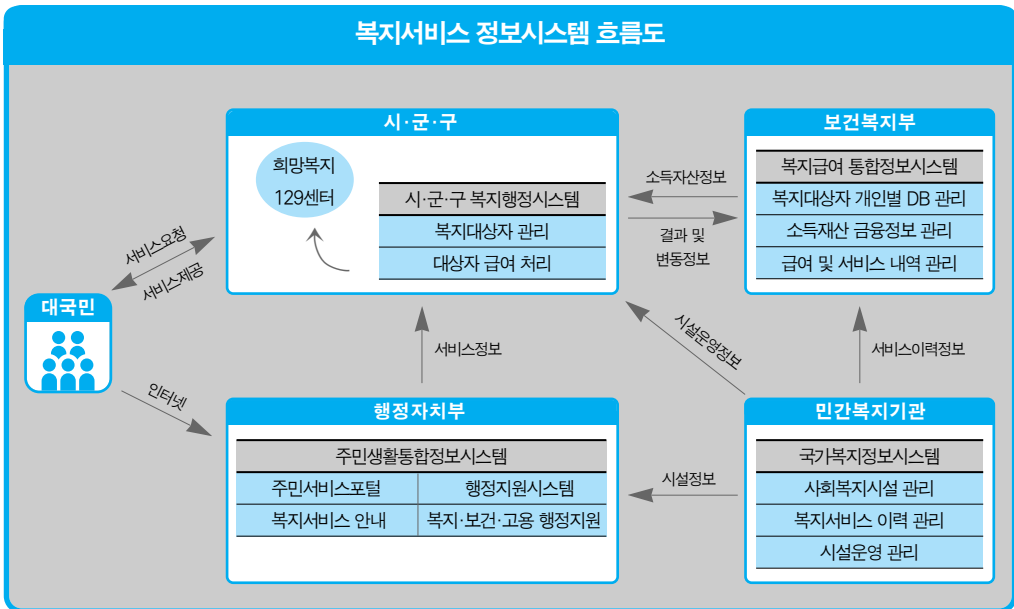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폐합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며, 협의적 의사결정(Governance) 기능과 민·관, 민·민 간의 연계 및 조직화(Network) 기능 강화 등으로 민간복지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생활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종아동 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

십 구축으로 실종아동 보호업무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사회 서비스관리센터를 '복지급여서비스센터'로 확대해 복지·급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복지·보건·고용 등 생활보장형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는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통합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자와 중복수급자를 방지함으로써 급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급여비용을 1% 절감할 경우 연 2천억원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대상범위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으로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개입제도로써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의 재원,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복지급여 통합정보 시스템 주요 내용



1-2-2.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發) 창업 촉진

① 과제 개요

창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특히 기술창업은 우리 경제의 신산업 촉진과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 매년 약 50만개 기업이 창업해 140만명 이상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해 왔으나, 2004년 이후 신설법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술창업의 열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법인을 설립하려면 평균 8개 이상의 기관 방문과 37종 이상의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등록세 등 창업비용도 건당 평균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부담이 많아 창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이 조사한 세계 주요국의 창업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창업순위는 전 세계 178개 국가 중 110위에 불과해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구조는 생산형 창업보다는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 위주이다. 창업실패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보육 등에 의한 준비된 창업이나 지식·기술 창출의 원천인 대학·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체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② 추진계획

창업(법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금납입증명서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업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상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법인 설립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법인설립 TF'을 구성해 2009년 말까지 행정전산망(지방세 전산망), 국세 전산망, 대법원 전산망을 연계해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인 회사 및 1원 미니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유사상호 금지 폐지',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1인 회사의 경우는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창업법인의 등록세 면세 또는 3배 중과 규정 폐지, 법인 설립시 '주택 및 도시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의 점차적인 상향조정(자본금 1억원→5억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지식 등을 이용한 신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269개 창업보육센터(BI)의 일부를 생산형 BI로 확대 건립하고 종합적인 창업기능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로 발전시켜 우수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역 또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지역특화산업 전용, 유학생 전용 또는 예비창업자 전용 BI 등 다양한 형태로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이 특허권 등 현물 출자를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대학의 출자방식을 현행 현물출자방식에서 현금출자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연구원 등의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회계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창업절차 간소화로 누구나 최저자본금(기존 5천만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10단계 17일이 소요되던 창업절차가 6단계 12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약 30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되어 우리나라의 World Bank 창업순위가 110위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개편과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학·연구소발(發) 신기술 창업이 확대되고, 산·학 협력을 통한 창업촉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략3.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1-3-1.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과제 개요

세계화·지식기반시대의 가속화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보다 많은 인력, 자본, 정보(기술) 등을 유치하기 위해 거대 지역경제권의 형성 등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고속 교통망·정보화의 진전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의 공간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에 따라 지역 간 사업 중복, 수도권-지방의 대립, 한정된 재원에 따른 소모적 경쟁,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나타내왔다. 반면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행정구역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세계적인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 공간이 광대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설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지역 간 공동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행정구역 초월, 창조적 지역협력',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권 신성장동력 구축', '분권과 통합'이라는 4대 기조하에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5대 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설정하고,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번째는 광역경제권과의 연계사업 활성화이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유망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광역 유형(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 기초유형(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 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다. 광역경제권 투자 활성화 여건의 획기적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 수요자 중심, 기업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 등을 통해 스피드하고 저렴한 산

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간 간선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 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이다.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 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건강 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국토 신발전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관계를 불식하고 상호 윈-윈의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간 연계투자 및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지역 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 실질적 분권화 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활용해 국가경쟁력 특위 업무 중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논의토록 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운용해 국가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간 정책 기획·조정·모니터링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업무지원을 위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조정해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해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실질적 권한 미흡에 따른 유명무실 문제를 해소하고, 시·도 간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는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역 간 정책·사업 조정, 국내외 민간투자를 해당 광역경제권으로 신속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윈-스톱 행정 구현 역할 등을 하게 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전국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광역경제권이 조성되어 7% 경제성장, 4만달러 시대의 조기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권 단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사업효율성 증가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권역별 기업활동을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체제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역발전 방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3-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① 과제 개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현재 노동부 등 23개 부처에서 총 4,5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력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60만 4천명의 33%이고, 세무·공안·현업기관을 제외할 경우 국가공무원 전체의 3%에 해당하는 1만 6,419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방의 자율적 역량 축적을 저해하고 있어 지방적 사무의 합리적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중복이 현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전체 13개 기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사례와 특수성을 감안해 9개 기관을 정비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며,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필요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법은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기능조정 방안부터 점진적으로 정비 하되, 2008년 중에 우선 추진할 정비대상 기관은 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를 감안해 선정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도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되면 총무·인사 등 기관 간 중복 운영되던 인력이 감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감축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중복돼 처리되던 민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국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3-3.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① 과제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교육 업무 수요 증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추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 9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교부세 도로보전분 기한 만료(2008년 말), 보통교부세 전환에 따른 불교부단체 지원방안(기한 연장 또는 별도지원 근거 등)도 검토돼야 함이 적시됐다.

특별교부세는 특정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력 지수, 낙후도 지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대상사업을 5~6개 사업군(群)으로 블록화해 포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정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수요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회계별로 분산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재원을 통합해 포괄적으로 지방발전교부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차원의 SOC, 낙후지역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분권교부세가 기한이 만료(2009년 말)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복지균형이 필요한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적인 수요보전은 보통교부세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② 추진계획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수요를 종합 분석해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하고, 광역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는 광역시 자치구 간 업무배분 개선, 재원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조정 등과 연계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의 포괄지원을 위해서는 교부대상 사업군 블록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성과 평가와 특별교부세 성과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발전교부세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를 고려하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환원, 포괄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개편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이 제고되고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은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분권교부세가 개편되면 기본적 복지 서비스(National Minimum)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으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및 기본적 복지 수요에 대한 전국적 균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4.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① 과제 개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된 반면 지방세 비중은 감소해 자치와 분권원리 구현에 미흡한 실정이다.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세수기반 확대를 목표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범위, 과세표준 등 기준을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조례에 의한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및 신세원 개발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이원적 세원배분 체계를 △특별시와 구 △광역시와 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자치단체 계층별로 다원화(4원적 세원배분체계)해 세원을 재배분하는 방안과 계층별 세목교환 및 공동과세 등 세원불균형 완화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지방세 구조개편은 국세이양과 연계한 대안별 분석 및 구체적 도입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와 신세원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자주권 확대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

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세수현황, 세원 배분실태 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세원재배분 등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며, 기업 유치, 관광개발 등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3-5. 주택거래세 인하

① 과제 개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거래세율은 2004년 5.0%에서 2006년 2.0%까지 인하됐고, 추가로 1%까지 인하할 경우 2008년에 추가로 1조 5,1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돼 총결손액은 총 2조 4,200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부세로 보전 △교부세로 보전 △지방소비세를 신설·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첫째, 중부세로 보전하는 경우 2008년의 경우를 볼 때 중부세 증가분이 3,210억원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1조 5,100억원)은 보전이 곤란하다.

둘째, 교부세로 보전하는 경우 거래세 세수결손액의 61%를 차지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교부세로 보전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오히려 자주재원 비중 감소로 자치단체 재정 의존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보전하는 경우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수감소분 보전이 가능하고, 지방세 비중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다.

② 추진계획

주택거래세가 줄어들면 지방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16개 시·도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정책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거래세완화추진단(TF)'을 구성해 거래세수 및 세 부담 영향분석을 실시하며, 부동산 경기, 중부세 등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주택거래시 납세자 세부담이 경감되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며,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부응하는 세제상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1-3-6. 중앙권한 지방이양

① 과제 개요

지난 8년간 총 1,211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대단위 기능의 포괄적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용보다는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발굴·이양에 치우치는 등 미시적 단위사무 위주로 이양되고 있어 지방 체감수준은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도 해당부처의 소극적 대응, 국회심사 지연 등으로 현재 소관 법령 개정까지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즉시 이양이 지체되어 체감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양보다 질 위주여야 하며 지방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만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지방이양 추진체계의 정비 불가피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지방이양 대상과제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등 파급 효과가 큰 실질적인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2008년 6월 말까지 단기(1년 이내), 중기(1~2년), 장기(3년 이상) 과제로 구분해 장·단기 이양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양과정에는 지방 4대 협의체, 국회, 기업 등 실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6개월~1년 단위로 신속한 이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부처별 '지방이양 완료예고제' 시행을 통해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평가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사후적 지방이양 방식은 법령 제·개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고려해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개정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에는 지방분권·이양의 기본이념, 분권 및 이양과제 선정, 사무배분 원칙과 사전심사제 도입 등 「분권특별법」상 핵심내용이 반영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실질적 지방자치 정착이 당겨질 것이고,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7.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① 과제 개요

민선자치 이후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건의사항 처리, 지역 여론 수렴·전파 등 중앙-지방 간 다양한 협력채널은 마련·운영돼 왔으나 대부분 사전적 의견조율보다는 정책결정 이후 협조 요청에 그치는 등 실질적 협력에는 애로가 있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비율,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중앙-지방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과제 추진 및 지방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간 정례화·제도화된 협력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했으며,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지지와 협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을 적시했다.

② 추진계획

중앙과 지방의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고위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하되,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행정자치부 장관,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위원이 되며, 협의사안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관련 사항, 중앙-지방 간 자원배분 등 주요 국정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사항, 국책사업 및 지역발전 현안 관련 사항, 기타 지방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지방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국정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돼 국정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방현안 등의 해결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

① 과제 개요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5.12~8.12까지 3개월간 80여개국 800만명이 함께하는 국제행사이다. 지난 11월 말 유치돼 새 정부에서 준비에서부터 개최, 그리고 행사 이후 시설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새 정부의 철학과 긴밀히 연계해 해양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 성과와 국민역량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전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급성장한 것처럼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21세기 해양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수는 공약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중심지로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인수위는 국제박람회(BIE) 사무총장이 방한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국토균형발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의 공약과 새 정부 국정철학과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및 단계별 준비 절차를 점검했다.

② 추진계획

현 박람회 유치체제를 신속히 박람회 준비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 중인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을 2008년 4월 중으로 민·관 합동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 제정에는 관계 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나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직위원회 구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

파리의 에펠탑이 1883년 파리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길이 남길 멋진 상징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여수를 찾았을 때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각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전시시설, 아쿠아리움, 마리나 등의 건설에 있어서도 스페인의 세비야나 포르투갈 리스본 등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지역을 미래형 관광·레저 항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 중으로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람회장 시설 건립과 더불어 전주~광양항 고속도로, 국도 17호선,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각종 도로·철도·항공 등의 SOC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함으로써 여수지역의 접근성이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각종 관광시설과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여수지역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남해안권 전역으로 파급해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람회에 보다 많은 BIE 회원국들이 참가해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람회 유치활동에서 회원국들의 관심을 주목시킨 '여수프로젝트(해양 관련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할 경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795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여수와 남해안 일대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동안 박람회 개최가 성공적인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10조원, 부가가치 창출 약 4조원, 고용유발 효과 약 9만명으로 남해안 지역발전의 기폭제로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해양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걸맞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육상자원의 고갈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결방향을 바다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지식이 심화·발전되고, 해양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진형 해양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 전략 4.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1-4-1. 법질서 확립 방안

① 과제 개요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국내외 기업이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및 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만 유지하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1%(연간 8조원)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2007.1, KDI)가 있다.

② 추진계획

국민의 합리적 법률생활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생활질서(줄서기, 공공장소 금연 등), 안전질서(교통, 소방 등), 사회질서(성매매, 마약 등), 신뢰질서(가짜학위, 식품위생 등) 등 분야별로 법질서 유지를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관련 뇌물 등 위법행위 3회 적발시 5년간 관급공사의 입찰을 금지하고, 위법현장에서의 실효적 공무집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 현장에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으로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회지도층,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실천적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각 부처는 핵심 주요 정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표명하고, 민·관이 실천하는 법질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현장의 기초질서 확립운동 지원 Best Practice 선정,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경쟁 및 확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법 교육 활성화 및 시민 법률 콘서트 등 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군·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주민대표 등의 참여로 지역사회 차원의 교통·소방·학교폭력·실종아동찾기 등 유기적 안전질서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지역치안협의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폭력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검

찰청·경찰청·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각 부처의 중점 추진사항을 조율해 추진하며, TV 공익광고, UCC 공모, 불합리한 제도 발굴·연구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규제 위주의 법령 정비로 법이 지켜지지 않고 규제가 부패를 낳는 잘못된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본적인 법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감소돼 사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폐법’과 ‘정서법’이라는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게 됨으로써 시위문화의 선진화와 산업평화가 정착될 것이며,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WEF(세계경제포럼) 등 국가경쟁력 평가가 상승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2.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① 과제 개요

경제성장의 기초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 저해요소인 공직부패 척결이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특징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높은 계약, 세무조사,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업무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취약 분야의 단속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 부패척결(청렴화) 종합대책은 △예방적 제도 개선 △부패사범 적발 시스템 활성화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민원업무 공무원단 사기 진작 등이 검토됐다.

예방적 제도 개선은 규제의 과감한 철폐, 공무원 재량권의 전면 재검토, 주요 발주사업 최저가 낙찰제 확대적용 및 계약심사제 강화 등 행정 투명성의 제고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제거 방안이 적시됐다. 또한, 민원 관련 윈-스톱 처리(상담·접수, 소관부서 배분, 결과 통보 등), 민원 처리단계 및 기간 대폭 축소,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직접 대면 회피효과 등을 고려해 ‘민원전담지원관(가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부패사범 적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리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부처 감찰담당관 등으로 5대 부패 ‘특별감찰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중대비리나 사회적 물의 야기 사건 담당 ‘중점수사TF’를 대검찰청에 구성(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운영할 예정이다. 이 TF는 수사완료 후 즉시 해체하고, 각 분야 후속조치는 해당 부처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뇌물의 50배에 상당하는 벌금형 병과제 조기 실시와 비위 유형별·금액별 양정기준 세분화로 온정적 징계를 배격하고, 엄격한 '검찰사건 처리기준' 및 '법원 양형기준' 확립, 공직비리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형집행정지의 신중한 운용 등 비리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시민사회·기업 등이 동참하는 '투명사회(청렴성)협약'의 제도운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업무 공무원단 신분보장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민원업무 공무원단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 중이다.

② 추진계획

선진화를 위한 법령TF팀 업무와 연계해 부패요인이 되는 규제철폐 및 재량권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원전담지원관'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점수사TF' 구성은 근거 규정을 제정해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뇌물사범 50배 벌금형 병과제는 2008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외국 입법례 등 기초조사 후 형법·특가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엄정한 처벌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확립해 전국 청으로 확대시행하고, '법원 양형기준' 수립도 추진할 것이다. 가석방, 형집행정지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 민원인 부패비용 감소, 정부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인식지수(CPI), 뇌물공여지수(BPI), 부패바로미터(GCB) 상승으로 국가신인도와 정부신뢰도가 제고(국제우수사례 선정 가능)되면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20위권 이내로의 진입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2005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소득증가율이 매년 1.37%p 추가 향상돼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의 실질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3.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① 과제 개요

신문산업 전반의 경영 악화와 신문기업의 부실화 지속 등으로 인해 산업적·저널리즘적 측면에서의 신문의 위기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 후반에 들어와서는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고, 「신문법」에 의한 지원제도도 공정하게 작동되지 못해 당초 취지인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 취지를 달성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② 추진계획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먼저 문제의 소지가 된 「신문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방송 경영 허용 등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기관의 통합과 신문기금 지원 등 신문산업의 지원정책을 내실화하며,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의 정비와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를 설립해 현행 신문공배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정부 부처별 기사송고실 복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및 부처별 청사 사정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설치시기 및 규모, 운영방법 등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약속을 전제한 면담취재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 측면이나 해외의 일반적 기준과 언론사 취재윤리규정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부처별 청사 출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자출입증으로 청사 출입을 허용하되, 기관별 업무성격 및 보안성, 청사 구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신문·방송의 경영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신문 분야의 산업적 활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공배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통해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문사 자율유통기구화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근거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신문산업의 진흥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의 정부 부처 취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는 등 취재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언 관계 정상

화로 불필요한 대언론 업무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정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4.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

① 과제 개요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먼저 갈등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부처 등에 갈등관리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다. 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중장기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공무원 갈등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갈등 해결사례, 갈등협상 기법, 국내외 연구자료 등의 DB를 구축하고, 기관별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분야별 갈등현안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주요 갈등현안을 해결하도록 하되 범정부적 정책과 관련된 과제, 국정과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 다수 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연계된 갈등사안은 총리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다문화 사회,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현상을 조사해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 갈등 관련 연구기관, 국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갈등의 발생 유인을 예방하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갈등유발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제도 구비, 지원·연구 조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절차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사회갈등으로 중단 또는 취

소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갈등해결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상기 과제 외 '섬기는 정부' 를 위한 국정과제 목록**

-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 자치경찰 도입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 정부업무 평가의 내실화
-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 보훈·보상 체계 개편
-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제 구축
- 기관위임사무 폐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2. 활기찬 시장경제

◎ 전략5.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2-5-1.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① 과제 개요

연 7% 경제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투자 활성화이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기업의 몫이므로 정부가 기업에게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동시에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투자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의욕을 높여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인수위 활동 기간 중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상의 유인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② 추진계획

최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 등 주변 아시아 경쟁국들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을 처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와 병행해 복잡한 현행 조세감면 구조를 축소, 단순화할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도 동시에 인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10%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와 연계해 8%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연계해 법인세 과표구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상향조정시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현재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해 기업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투자한 기업도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다만, 2009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차 연장할지 여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과 연계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율 인하 등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욕 고취와 함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R&D 시설투자의 확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5-2.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① 과제 개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못지않게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가 중요하며,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제 선진화도 촉진될 수 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도·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 각종 세제·절차상 지원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확립 △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 △ 최고급 의료 시설 확충 및 영어 생활화 강화 등이 제시됐다.

어떤 외국인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는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처럼 총액 위주의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할 경우 투자유치가 국가 산업정책과 유리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와 국가산업전략 상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외국인투자로 분류해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유입형 투자는 자발적 시장동기형 투자이므로 한국 투자환경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 의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정책상 중요한 산업의 경우 타깃(Target) 업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유입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인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데, 이러한 인프라가 바로 기업 투자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이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개혁과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투자환경은 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해 창업과 고용 부문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춰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유인력을 제고해야 한다.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은 투자판단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며,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생활여건은 교육·의료·주거·교통 환경 등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생활환경 5개년계획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외국인 생활환경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의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동적이며 무차별적인 투자유치 활동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집중화된 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국내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한다. 국내 유치기업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지향형 투자 및 기술집적이 이뤄진 신기술 첨단 분야 등은 우선 유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② 추진계획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있어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한 추진과제이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행 진입장벽과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해 외투기업에 대한 제한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산업 클러스터 집적과 배후지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입지제한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규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한국의 고용규제 및 노사관계에 생소한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해 예방적 노무관리지원기구(가칭 '외투기업 노사관계TF')를 설치해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고질적인 장애요인이 되어온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개념을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국유지 등을 활용해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비축·공급할 계획(가칭 '산업용지은행제도')이다. 이를 위해 산업용지기금을 설치해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기존의 투자규모 위주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고용,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기술수요와 성장축진 잠재력, 기술변화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센티브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반면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며, 현금지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인투자 업무 부서를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부처의 공무원 과건을 확대하며, 민원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과건공무원에게 권한을 최대한 위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 고충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옴부즈만의 조직과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 산업전략상 중요한 투자유치 대상 선정에 있어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기업, 다국적 기업 등을 타깃으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설정·평가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타깃 업종별 전략 마케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책사업의 투자유치에 전략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통합·조정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외국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책사업 지원재원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유치 전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조세행정 선진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특구 내 우수 외국인학교 및 외국대학을 유치하며 수익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설립자격을 완화할 것이다. 외국인학교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내국인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인학교 및 신설 외국인학교에 국한된 재정지원을 기존 외국인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한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진료가능 병원과 전용 병원을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우수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공급체계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이원화시키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설립 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며 영리법인을 인정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교통표지판과 안내체계를 개선해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확충해 외국인 생활환경을 현저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 법령 등 주요 법령의 영문본 서비스를 추진해 외국인이 국내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투자유치TF를 설립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도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새 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새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시된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개혁과 지원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입장벽, 수도권 입지규제, 개발제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규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여하며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장기임대 산업용지의 비축·공급을 통해 투자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의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 목적의 가매입 수요를 차단하고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노사문제 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옴부즈만 조직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창업활동과 고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자발적 투자유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양적 목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산업전략상 중요한 투자유치 대상을 타깃 업종으로 선정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외지향형 투자,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외국인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고용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제도를 타깃 기업 유치에 맞춰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재원을 확충한다면 전략적 투자유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료·교통·주거에 대한 지원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긴다면 외국인투자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기준 완화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상의 제한 완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잉여금의 대외송금 허용과 영리법인화 인정계획은 실행에 옮기는 데 여

러 장애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5-3.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① 과제 개요

그동안 토지수용권 행사의 정당성,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택지원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공공사업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을 민간에 개방해 자유경쟁을 통해 택지비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공영택지개발 조성시에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제를 통해 사업추진 주체(PM회사)를 선정하게 해 토지조성비 인하를 유도하고, 이와 병행해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② 추진계획

공공택지 개발시 경쟁원리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공공성 확보 등을 전제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그 1단계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간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기관에는 택지개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간 경쟁을 통해 저가로 택지를 공급하는 곳에 택지개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간 경쟁 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완전 참여를 허용해 공공과 민간 간에 완전한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2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여건을 조성한 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택지 조성원가 투명성 제고와 산정기준의 개선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조성원가의 15%)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사업지구별로 독

립회계 시스템 구축, 조성원가 공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령 등을 2008년 상반기 중에 정비해 즉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및 민간의 창의성을 택지개발사업에 도입해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으로 택지비가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5-4. 제조업 U턴 지원대책

① 과제 개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임대산업단지를 확충하는 등 국내 U턴 기업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진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산업 내(intra-industry)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U턴 기업들이 저렴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입해 3.3㎡당 연 5,000원의 임대료로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단계로 군산, 군장, 목포, 대불, 포항 등에 248만㎡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5년간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300만㎡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국내 U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기업과 해외 소재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R&D 시설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기업은 8개 첨단업종 관련 R&D 시설만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25개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폐지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25개 첨단업종의 R&D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업, R&D 등의 업종에 대해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

는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 산업자원부(정부조직 개편 후 지식경제부)에 국내 U턴을 총괄 지원하는 TF를 구성해 국내 이전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공장부지, 정착자금, 외국인 고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들섬 구상’과 연계해 국내 U턴 기업에 저렴한 입지 및 북측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 3통(통행·통신·통관), 원산지 문제 등의 해결을 전제로 저임금의 북측 근로자를 활용하는 노동집약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을 병행해 육성할 것이다. 나들섬에 입주하는 생산시설이 수도권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 주변 공단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 국내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간에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들섬 계획 관련 대책은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5. 물가안정 방안

① 과제 개요

경제성장과 서민생활의 뒷받침을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품목 중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가격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물가안정, 특히 주요 생활비의 안정을 위한 대책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방안은 임기 내에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수요측 물가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단기적 물가안정 대책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물가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가격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비와 같이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 물가는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제도를 시행하며, 정유사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료원료 구매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수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필품 가격 인상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 수강료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액 수강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고 전월세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조직의 대형화·전문화 등에 농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장터를 확충하고 산지·운송·소비 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개방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수입유통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병행수입을 확대하는 등 유통망을 강화하고 품목별·업종별 수입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공동구매와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고 대형 유통망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물가 안정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6.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① 과제 개요

내수와 수출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과잉 유동성에 대한 부담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를 균형 또는 소폭 흑자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6~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시에 대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상품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는 실물 부문의 하방위험에 주목하면서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정 환율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첨단 에너지·환경, 융합IT 등 미래 신산업 및 거대·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우주·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가소재 R&D 종합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소재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관광·교육·의료와 같이 소득탄력성이 높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숙박시설 등이 종합된 체류형 관광 복합 리조트를 대폭 확충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관광호텔의 인증을 확대하고 홍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분야 밀집지역과 관광 연계가능 지역을 의료·관광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과 설립자격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득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켜 배당금·이자 등의 안정적인 해외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소득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계 지원을 확대하며, PEF(사모펀드)에 대한 해외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해외 M&A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고용 증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일자리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경제성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에 양질의 영어학습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초·중·고의 조기 유학생이 감소함으로써 교육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2-5-7.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① 과제 개요

성장잠재력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우선 전국단위에서 진행돼온 대화채널을 지역별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민·정 타협이 이뤄진 무과업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키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② 추진계획

노사 간 대화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경총·상의·한국노총·민주노총 등 4자 대화채널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화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단위인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정착을 보아가며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무과업,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사 간 자율협상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법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전지도, 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2단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필요성이 검토됐고, 2010년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협의를 거쳐 2008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과업,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으며, 2009년 고용보험기금 예산 등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③ 기대효과

그동안 중앙단위에서 집중된 노사 간 대화의 틀을 지역단위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안정,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인 대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이 정립되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8.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산업용지 비축·공급

① 과제 개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함에 있어 가장 먼저 당면하는 문제는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의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m² 당 평균 90만~120만원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 공급되지 않는 등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용지 가격이 높은 것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개발한 용지를 분양해 왔던 데 기인하며, 기업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개발자·공급자 시각에서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의 산업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기업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국가가 일정 부분 매입(국유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산업용지 비축·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위치, 규모 및 공급시기 등을 공급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 생산 활동의 3요소인 자본·노동·토지 중 공급이 가장 비탄력적인 토지를 국가가 일정 부분 매입·비축·통합 관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② 추진계획

국유지를 활용한 저가의 장기 임대산업용지 제공은 우선 첨단 중소기업, 유치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정지역과 연계해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적기에, 적지에 제공하기 위해 첫째, 국가 소유의 산업용지를 통합 관리하는 '산업용지은행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농촌공사가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들에게 대여하는 농지은행제도를 산업용지 공급에 적용한 것이다.

용지 확보는 현재 약 1,428km²에 달하는 잡종국유지 중 산업용지로 적합한 부분은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부적합한 부분은 매각하거나 공기업이 개발한 용지와 교환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개발한 용지를 국가가 분양원가 또는 분양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국가(농수산부 장관) 소유로 개발 중인 시화·화옹지구 등은 관리청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전환해 일정 부분을 산업용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업무는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능에 산업용지은행 기능을 추가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기업이 개발한 용지를 매입하는 등 산업용지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산업용지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기금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교육 등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예산은 가급적 최소한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자금 일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일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토지공사 등이 조성·매각한 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어 산업용지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요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운영의 주체가 되어 산업단지 위치, 규모 및 공급시기를 결정하고, 토지공사 등은 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공사만을 수행토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상기 업무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주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공동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정밀한 투자수요 조사, 중장기 산업용지 관리계획 수립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과거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영국 등에 진출할 때 외국은 산업용지

를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용지 가격이 높아 외자유치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국내기업도 동남아·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장기임대 산업용지의 비축·공급 체계가 마련되면 국내외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투자 애로요인이었던 산업용지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정부가 산업용지를 임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차익 목적의 가(假)매입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용지의 사전 비축으로 향후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략6.제로베이스규제개혁

2-6-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① 과제 개요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경쟁 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제도이다.

출총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그동안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경영 등을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규제를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의 비계열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우선 2008년 2월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야 합의 등이 어려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제18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2월 현재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어 여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

나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미 마련된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제18대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08년 6월 국회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출총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이면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예로서 '공시 등 시장자율감시를 통한 합리적 출자 유도', '연결납세제도 또는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방식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그동안 기업의 출자행위를 제한해왔던 출총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규제 최소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 분위기 조성 및 투자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주회사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희망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2.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① 과제 개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는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산업자본(비금융 부문 자산규모 2조원 또는 자본 비중 25% 이상)에 대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정책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서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한편 신규로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② 추진계획

금산분리 완화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PEF(사모펀드) 등을 통해 은행 지분 취득시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 제고와 함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해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경영·회계상 투명성 제고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산업은행을 대체한 시장 안정기능을 보장한 후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설립방법, 조직·지배구조 등을 검토하고,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역량 강화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분 매각 방법 및 일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민영화 매각대금 중 일부를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신설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범위,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은행지분 취득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이 가능해짐은 물론 은행 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서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투자은행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상당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3. 전략적 규제개혁

① 과제 개요

전략적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선진 경쟁국에 없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규제체계를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규제를 조사해 규제 담당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규제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규제법률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다수 법령에 산재된 규제들을 일괄 개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규제개혁 대상을 선정해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성과평가제와 규제자유지역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과「규제개혁추진법제정안」(가칭)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원초과 인력을 활용해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관료 및 기득권 집단의 저항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에 참여한 인력은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희망부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실천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실천계획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 해소해 주고, 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장설립이나 창업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투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규제개혁 실천계획에 반영된 규제개혁 과제들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전략적 규제개혁은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시급하고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폐·완화 조치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 실천계획에 반영된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 추진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4.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① 과제 개요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당초 취지인 시너지 극대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직원 겸직 제한, 자회사 간 거래 제한 등 자회사 간 방화벽(firewall)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례이다.

현행 제도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조직 내(in-house)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in-house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 간의 규제 차이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직원 겸직제한, 자회사 간 거래제한 등 자회사 간 방화벽을 재검토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와 분리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에 재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시 예견되는 부작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5. 수도권 규제 합리화

① 과제 개요

글로벌 경제하에서 규제 중심의 현 체제로는 수도권이 런던·도쿄 등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발전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무분별한 집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방안은 지방발전정책

과 연계해 추진하되 수도권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방안은 단기적 추진방안과 중·장기적 추진방안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 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현재의 권역을 조정해 기업 입주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낙후지역 내 개발사업 및 대형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 등 실효성이 적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광역경제권 구축 등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계획과 병행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관리 주체도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의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사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8년 중에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기업·낙후지역 관련 규제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와 협의해 계획적 관리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광역 거버넌스 기구 설치도 추진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수도권 관리체제를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수도권 규제의 정비로 수도권 내 공장 등 개발수요를 흡수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외자를 활발히 유치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 내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면 수도권 내 지역별로 특성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

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모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6.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① 과제 개요

현행 농지와 산지 관리체계에서는 토지 거래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규 산업용지와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농지·산지의 거래 및 전용 규제완화, 개발용지 공급 확대, 토지의 이용·개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게 됐다. 아울러 지나친 난개발과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상승을 막을 방안 등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② 추진계획

먼저, 농지와 산지의 거래 및 전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에 약 20만 6천ha로 추정되는 한계농지의 소유·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전용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농지·산지 전용 허가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개발예정지내에 산발적으로 포함된 보전용지에 대한 개발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 등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농업진흥지역 전용시 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하게 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여건을 감안해 보전산지 일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고, 일부 요존 국유림을 불요존 국유림으로 재분류하며, 요존 국유림 안에서의 수목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토지의 이용·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의 도로·녹지율 확보기준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계획수립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은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설치계획이 확정된 도로·철도 등으로 기존 개발지역과 분리될 경우 연접개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예정지를 주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진입도로 설치기준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농지·산지 취득시 세대원 전원의 당해 시·군 사전 거주요건(현재 1년)을 완화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산지 취득 및 매각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산지 등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지나친 난개발과 투기, 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한 난개발 방지 대책도 별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소유한도도 폐지된다. 농지 소재지 시·군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다가 매각할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농지·산지 등 토지 관련 규제 완화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택지·산업용지의 공급이 확대돼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7. 신성장동력확보

2-7-1.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융합 신기술 산업 창출

① 과제 개요

21세기는 세계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업종과 국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 시대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모두 미래사회의 트렌드(변화)를 제대로 읽고 산업·기술 간 융합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 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인수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미래 환경산업, 첨단 에너지산업, 융합 IT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 금융산업, 고도 국방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산업 등 주요 성장동력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제품 중심의 산업뿐만 아니라 인프라성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등 성장동력산업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세부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② 추진계획

새로운 전략과 틀로써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이나 성장동력 육성 등에서 답습하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정부중심이 아닌 민간과 기업중심의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소, 정부가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가 도출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환경과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력 기간제 조업, 서비스, 에너지 산업 및 미래신기술 분야 등을 망라하는 국가 전체 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이 가졌던 기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계 초일류화를 지향하고, 잠재력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주력산업화를, 다른 산업의 발전 토대가 되는 기반산업 분야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BT·NT 등 이종기술 간 융합·복합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효과적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재원계획, 효율적 추진체계 설계 등으로 성과 중심의 명확한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단순한 R&D 투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제도·문화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의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추진할 것이다.

발굴된 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대국민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과 명확한 성과목표, 재원계획 및 추진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제도·문화 개선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사업화, 지적재산권 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신성장동력의 육성은 '샌드위치 코리아'로 상징되는 우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보건·의료,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서비스업의 육성과 신기술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화 과정을 통해 기술창업이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이 선풍 나서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율이 낮은 것은 마땅히 투자할 곳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므로 정부의 신성장동력 청사진 제시는 기업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해 정부 재원의 직접적인 투입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7-2.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① 과제 개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만 8,300ha의 땅과 1만 1,800ha의 담수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익, 지역발전, 환경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함께 한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새만금에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 활동기간 중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고, '세계경제 자유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 확정발표(2007.4)된 토지이용계획을 농지조성 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 건설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항공·우주복합 과학단지 및 환경단지 등의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우선 기존의 내부토지 이용계획상 72%인 농지를 30%로 축소 조정하고 토지용도별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기간은 2030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10년을 단축하고자 한다. 개발방법도 기존의 순차적 개발방식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통해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완벽한 수질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29개소와 하수관거 2,820km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왕궁 축산폐수 처리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해 당초 2011년까지 완료예정이던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2010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해 전국항만기본계획(2001~2011)에 이를 반영하고 무역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즉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은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을 먼저 건설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연계 기반시설 건설도 추진한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하고, 새만금↔군산간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2006~2015)에 반영해 조기 착공한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도 조기에 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항공수요를 감안해 추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뒀다.

방수제 건설(138km : 동진수역 98km, 만경수역 40km), 방조제 다기능복합·사면부지, 군산산업단지·부안관광단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개발수요가 높은 사업은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민간자본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각종 지원 시스템과 특례 조항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건설 분야에만 연 38만명(2012년 기준시 11만 8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10억원당 연 17.9명 고용유발효과 발생)되고, 산업·관광용지 등을 우선 개발해 조성·운영할 경우 14만 2천명(2012년 기준시 2만 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중규모 저수지 200개분 상당인 약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신규 저수지 개발비 3조 1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북도민 190만명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연간 3만 7천톤(26만석)의 쌀 생산이 기대된다. 아울러 1만 2천ha에 해당하는 배후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7-3. 세계화를 이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① 과제 개요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1세기 지식경쟁시대를 대비해 세계적 첨단 연구시설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 성격을 가진다. 미래의 먹줄거리를 만드는 국가전략으로서의 과학벨트 조성은 과학과 인문학·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연구공간과 세계적 과학두뇌 유치, 유기적인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새로운 과학지식 창출과 창조과학의 리더십 확보를 통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고, 품격 있는 삶과 국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② 추진계획

① 사업 핵심사항

창조적 연구공간과 세계적 과학두뇌 유치를 위한 과학벨트 조성은 지역별 기초조사와 과학계 등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우선 창조적 연구공간은 기초과학 및 의료·생명과학 발전의 기반이 될 세계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가칭) 설립으로 구체화한다. 학문 분야별로 세계 정상급 과학자 10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해 연구·기획, 평가에 대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자를 팀 리더로 선발해 연구그룹 구성,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후 연구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인력 수준을 최고로 유지할 것이다.

연구시설은 융합연구의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등이 연계 결합할 것이며,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기반시설인 가속기 설치로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가속기는 중이온 가속기(세계 5대 시설)를 검토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무통·무혈 암 치료시설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빔 생산 및 신물질 개발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신소재 개발, 재료·화학·의학 등 응용과학과 물성, 원자·분자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 과학두뇌와 다국적 기업의 교류를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지식세계화 축으로서 '세계지식교류센터'를 설치해 국제 지식축제·컨퍼런스 및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 생산·교류를 지원하는 '지식융합센터'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교류·융합할 수 있도록 지식융합 심포지엄 운영 및 과학

예술센터·과학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한다.

멘토링, 기술 평가, 글로벌 마케팅, 창업 지원 등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선행기업 및 기술 발굴·유치·투자로 과학·비즈니스 모델을 단계별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을 위한 주택·학교 등 건설, 의료·종합행정 서비스 지원, 영어공용화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진 시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 초부터 전담조직 신설, 특별법 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착수하고, 2012년까지 가속기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제반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1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의 기초를 정립한다.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특별법」과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법」 등 2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조기에 추진하고,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 결합하는 조직체계 구성이 요구된다. 추진체계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공동협력체를 마련하되 주관 부처는 과기부로 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을 총괄케 한다. 협조부처인 산자부는 과학사업화 지원업무를, 건교부는 기반시설 조성 업무를, 복지부는 연구병원 업무를, 문화부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재정기획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설계비 등 2009년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6조 7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4천억원, 고용유발 13만 7천명 등의 경제적인 과급효과가 예상되고, 부가적으로 연간 1조 40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기술수출효과 포함)와 수도권 인구분산과 해외인구 유입 등을 통해 약 15만명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과학 선진화로 세계적 과학두뇌를 유치해 국가적 활력 확보와 신지식 창출, 노벨상 수상, 원소주기율표상에 대한민국 이름을 새길 코리아늄(Koreanium) 발견 등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에게는 국가적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7-4. 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과제 개요

FTA 확산 및 DD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 농어업 외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어업인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기업적 경영 방식 도입, 농어업 R&D 확충 및 유통 개선, 종자 및 바이오 에너지산업 육성, 수산자원 회복, 해외 농어업자원 개발 등 공약에서 제시한 대책들을 포괄하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② 추진계획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은 개별 농어업인 중심에서 농수산물 가공·유통법인 중심으로 전환해 농어업인의 시장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간 위탁·수탁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들 법인이 시장조사, 상품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및 수산 장비를 임대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8년 상반기 중에 농협중앙회에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대형 농기계부터 단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 농업인 및 민간인 출자 회사 등의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전문회사를 육성해 파종(이앙), 방제, 수확, 가축분뇨 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심사 강화, 농협을 통한 중고 농기계 매입 및 재임대 등 농기계 공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장비 임대 활성화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심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가의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업 경영혁신을 주도할 유능한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 확대, 직불제·재해보험 확충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집중해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농가등록제를 전국단위로 실시해 농가를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부업농으로 구분하고, 고령농은 생계지원을 통해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비농업 분야 소득이 높은 취미농·부업농은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젊고 유능한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농·수산계 고교 및 대학에 후계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시 연간 일정 기간 이상 지원사업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경영·기술 교육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치의 농업회의소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도매상 체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갈 계획이며, B2B, B2C 등 사이버 거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 R&D 투자 확충 및 지원체계를 개편해 유전자원 수집·보존, 종자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기술을 연구·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외해양식 구조물 및 환경개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중립·바다목장·인공어초 조성, 치어 방류사업, 감척 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남미·동남아 등지에 해외 곡물 생산기지 건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수산투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수산펀드 조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농어업 분야에 기업적 경영기법 확산,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 정부와 농어업인 단체 간 협력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영세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업의 한계를 극복,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R&D 확충, 해외 농업자원 개발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국민건강과 식생활 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7-5.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① 과제 개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많은 환경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과 기술도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물 부족 등 세계적인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물산업 등 새로운 환경산업시장 창출이 본격화

되고 있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의 국제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살리기의 큰 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관련 산업계·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환경산업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② 추진계획

그간 우리나라 시장 여건은 국내 환경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아시아 시장, 그리고 선진국 시장으로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일부 환경산업체 수출지원 수준의 업무를 벗어나 국내 시장구조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대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산하기관 기능집단 등을 통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2008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신규 환경산업 분야의 국내 육성을 위해 물산업·생물산업·폐기물자원화·토양복원·환경서비스업 등 유망 환경산업 시장조사를 거쳐 분야별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단기적인 수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국·베트남 시장을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해 경쟁력 있는 환경기술, 플랜트, 정책 시스템(굴뚝 TMS 등)을 대상으로 민·관 패키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인도 등 유망 진출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환경시장 조사, 정보망 확충, 맞춤형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 환경산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는 해외시장의 초기 진입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환경산업 수출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 및 계약, 자금순환, 금융 지원 등 해외진출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 유망 환경기술 R&D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개도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2012년까지 세계 환경시장 965조원의 7% 수준인 67조원 이상을 점유하고, 이를 통해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탄한 내수기반을 조성해 중소 환경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2012년 해외수출액 8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6. 금융산업 발전방안

① 과제 개요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해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금융 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 인프라를 정비함과 동시에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부 펀드로서 한국투자공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추진계획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감독을 선진금융 허브제도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법·보험업법령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게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해 지주회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자산운용,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자본시장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사모펀드(PEF)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상장절차 국제화 등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외 파생상품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의 금융회사가 편하고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다. '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선진국(영국·싱가포르·호주 등) 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전문인력 교육·훈련 개선방안 및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를 활성화해 국부의 수익성을 높이고 국부펀드 운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어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10년 내 GDP 대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현행 21%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와 작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강한 금융회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7-7. 식품산업 육성

① 과제 개요

인수위는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1차 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식품산업 육성을 채택하고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육성기반 마련,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2008년에 식품 R&D 및 수출 허브 역할을 담당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2009년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2010년 이후에는 기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단위의 중소 식품 클러스터 및 지역기반형 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도 2008년 중에 마련되며, 2009년부터는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 농수산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농업 전문 투자펀드와 농업 전문 사모펀드 1조 2천억원을 조성하고, 수산벤처지원센터의 설립·운영도 검토한다. 2009년부터는 정부가 식품 R&D·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식품·외식 정보를 분석해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산업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식재료 가공·공급센터'를 생활권역·거점도시별로 설립하고, 외식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한식 메뉴 개발·교육,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한식 홍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해외 판매 촉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중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식품산업 육성으로 식품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농어업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수출형 식품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로 농식품 수출이 2012년까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략8. 서비스산업선진화

2-8-1.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① 과제 개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고 국제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해 서비스산업의 허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한·중·일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조속히(1년 이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② 추진계획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의료·문화·방송 등 지식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2008년 중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이를 위해 공공성을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 종합편성 PP 불허, 방송·신문 겸업

금지, 영리 의료·학교법인 금지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 의료·방송·광고의 발전을 유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둘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 또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인프라성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등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컨설팅 등과 같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유망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지원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기반 서비스가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될 것이다.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볼거리를 확충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비자면제, 문화·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중국·일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컨벤션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역량의 컨벤션 전문인력도 양성할 것이다. 또한 유관인사 초청 지원 및 유치 캠페인 전개, 대형 국제회의 개최 지원, 로드쇼 개최,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지식·문화·예술·감성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에 마련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계획(콘텐츠 창작 인건비 세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송·게임·영화 등 콘텐츠가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기획·제작·수출될 수 있도록 자금·인력·마케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저작물 단속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③ 기대효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신규 서비스업계의 성장과 골프장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라 고용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600개(추가 335개) 골프장이 확충될 경우 건설기간 중(3년)에는 약 8만 3천명(1개당 250명 고용)의 고

용창출효과가 예상되며, 골프장이 운영되면 약 5만 5천명 내외(1개당 165명 : 정규직 65명, 캐디 80명, 일용 2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가 확대(2008년 외래관광객 유치 700만명 목표)되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과 서비스 수지 적자도 개선될 전망이다.

2-8-2.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및 투자 확대

① 과제 개요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총성 없는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군수산업과 더불어 문화산업을 제2대 전략산업으로, 영국 역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금은 GDP의 8%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가까운 일본과 중국 역시 정부가 앞장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자칫 '샌드위치 코리아'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우리의 문화산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9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그동안 내수 중심의 성장기조로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그나마 한류열풍이 감소하면서 수출액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이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을 이루기 위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및 투자 확대'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돌파구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매출액에 있어 지난 2004년 10%대에 이르던 증가 추세가 2006년에는 7%로 둔화됐고, 수출액 증가율은 2004년 50%였던 것이 2006년에는 8%로 급락했음은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증명해주고도 남는다.

인수위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콘텐츠 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진흥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해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를 보이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과 해외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됐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확충과 집중적인 투자 추진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거처럼 무작정 새로운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기존 기금의 출연과 모태펀드(분산계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특성(고위험 및 물적담보 부족)을 고려한 펀드를 신설해 창작, 해외 마케팅, 이용환경 조성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중복 투자 및 과잉규제 양상을 보였던 콘텐츠 관련 법률의 정비와 업무추진체계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콘텐츠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콘텐츠의 범위, 부처간 정책 조정, 재원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상·게임·음악·방송 등 핵심 콘텐츠의 집중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고려됐다. 무엇보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창작 인프라의 획기적 강화,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복제 방지 및 부가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 복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첨단 미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2008~2012) 수립을 통해 미래형 게임콘텐츠(Serious 게임, 융합형 게임 등) 개발 및 한·중·일 e-스포츠 리그 개최 등을 통한 e-스포츠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대중음악 공연의 국제 브랜드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HD 드라마 콤플렉스, 방송영상콘텐츠 자산관리센터 구축 등 방송영상콘텐츠 창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문화콘텐츠의 기획, 창작, 해외 마케팅 등 영역별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R&D 역량 강화와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통해 킬러 콘텐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CT 융합형 미래 신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Biz(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는 아시아 문화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교류와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DICON,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문화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략적 문화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취약했던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라이선싱,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전략기지로써 재

외문화원을 확충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복합문화공간인 코리아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③ 기대효과

핵심 문화콘텐츠의 집중육성과 투자 확대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9위(2.4%)인 우리나라가 5년 후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5%)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동 국정과제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 58조원에서 2012년 1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며, 수출은 13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향후 5년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3.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① 과제 개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도달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GDP 증가율은 80년대 7.7%에서 1990년대 6.3%로 축소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5.2%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용증가율 역시 1980년대 2.8%, 1990년대 1.3%, 2000년대는 1.8%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우리 경제구조는 서비스 부문의 GDP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양·질적 측면 모두 아직은 취약한 수준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음식·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형인 생산자 서비스(컨설팅·S/W, 금융·보험 등) 분야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② 추진계획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발굴해 업종별 발전모델에 맞게 육성해 나갈 것이다. 컨설팅, 시험·분석, 패션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서비스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에 IT, 창의적 지식 등을 활용해 프로세스 혁신이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유망업종 발굴과 더불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발굴되는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의 사업화 등 성장을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의 정책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1%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비스 R&D를 2007년 산업기술 R&D의 3.4% 수준에서 2012년까지 산업기술 R&D의 6.8%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IT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IT 활용 확산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사업, 온라인 경영진단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기반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직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책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쿠폰제 컨설팅 사업'의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시장창출을 위해서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아웃소싱 성공사례 발굴·보급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러닝, 시험·분석 등 유망 서비스 기업의 업종별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체계, 통계, 표준·인증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정책자료, 기업 정보, 업종별 트렌드, 시장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공유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각종 통계를 생성하고 분산된 서비스 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통계분석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표준 확충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제조업지원 서비스, 지식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카드, 경영컨설팅 등) 관련 210여종의 국가표준을 제정해 나가고, 소비자 신뢰 제고,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KS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장비·시설과 달리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점을 고려해 지식기반 서비스산

업의 인프라로서 우수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인력수급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업종별로 '지식 서비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확립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2007년 28.1%에서 2012년이면 30.1% 수준으로 상승하고 고용비중 역시 2007년 25%에서 2012년이면 30% 이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선진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8-4.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① 과제 개요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기술(HT)과 BINT의 신융합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뷰티 등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 국제화,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 강화, 개량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 플랜트 수출 등 의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해외홍보를 강화한다. 세계 한의약 시장을 60%나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의학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으나, 한국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 한의약 시장을 겨우 3%만 점유하고 있다. 한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을 강화·재편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2008년 12월까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 철폐,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2008년 12월까지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을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화 추진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집중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미용·성형, 맞춤형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뷰티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2008년 12월까지 수립해 해외공관 연계 의료 플랜트 수출, 다국적어 홈페이지 운영,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민간 에이전시 활성화, 전문 무역관 파견 등 지원체계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방산업 육성 및 한의약정책 집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IT·BT·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 융합형 한방 의료기기 개발과 한방식품 등 산업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③ 기대효과

의료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철폐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경쟁력 제고로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 관련 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의료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제품 개발이 촉진되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이뤄져 고용창출과 국부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은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촉진해 서비스 영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5.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 서비스 활성화

① 과제 개요

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콘텐츠

전반에 걸쳐 융합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 정비 및 신규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송·통신계 간의 이견으로 인터넷TV(IPTV)·디지털방송 도입이 수년간 지연됐고, 방송·통신시장의 경쟁도 미흡한 편이다. 디지털 융합현상에 적극 대응해 방송통신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융합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재판매제도 도입, 요금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방송, IPTV 등 융합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영어FM방송 실시,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권역 확대 및 인터넷전화(VoIP) 품질개선 등을 통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첫째, 방송·통신 융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방송·통신 간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융합 환경에 맞는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의 진입·소유·겸영 제한, M&A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의 관련 법률들은 통합법 체계(기본법+개별법)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중 법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매제도 도입, 소매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및 사업 허가요건 완화 등을 위해 2008년 중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해 주파수 이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에 의한 주파수 가치결정과 이용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2009년 중 전파법 개정을 통해 경매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해 정도가 낮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시험·인증 생략,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검사대상을 전수에서 표본으로 축소하는 등 전파이용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인터넷TV(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실시간 방송이 제공되는 IPTV 상용 서비스가 도입된다.

인터넷전화(VoIP) 요금인하를 위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당초 1,500원에서 950원으로 조정하고 인터넷전화와 사내전화 간 번호이동제 및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을 2008년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권역을 2010년까지 단계

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08년 42개 시, 2009년 84개 시, 2010년 전국 서비스).

지상파DMB와 위성DMB는 서비스 다양화 및 규제 완화를 도모해나가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방한 외국인의 국내정보 접근과 정착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영어FM방송을 도입한다. 영어FM방송은 수도권·부산지역 및 세계박람회 개최지(여수) 등을 대상으로 우선 허가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지상파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2008년 중 디지털지상파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아날로그방송 종료(2012.12월 이전 예정),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한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온라인상 판매 시스템인 디지털 방송콘텐츠 유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며, 경기도 한류우드 내에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무엇보다도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의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규제완화 및 규제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융합 서비스 도입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경감된다. 예를 들어 과거 IPTV 도입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됐던 법·제도적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시험·인증절차 간소화로 신제품 시장 출시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인증비용도 7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방송·통신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규제, 요금규제 등의 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IPTV·WiBro 등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는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PTV 상용 서비스의 도입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6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8천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WiBro는 같은 기간 14조 6,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5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다. 통신요금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제고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1998~2000년 사이에 이동전화시장에 재판매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6년까지 32~50%의 요금인하를 시현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DMB, 인터넷전화, IPTV 등 신규 서비스 보급으로 전화·TV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향후 5년간

IPTV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27% 성장해 2012년에는 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인터넷전화 이용자는 2012년에 약 700만명 수준으로 성장해 유선전화 시장의 30% 수준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8-6. 세계일류 IT 인프라 및 u-Korea 구현

① 과제 개요

최근 일본·유럽 등 우리의 IT 경쟁국들이 경제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광대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대용량화돼 가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Giga 인터넷 서비스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다양한 신종해킹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및 피해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유해 정보 심의체계를 마련해 음란, 친북, 도박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지원센터, IT도우미제를 운영해 한 단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RFID·USN 확산 사업을 통해 농업, 식의약품, 의료, 재난·재해, 물류 등 각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RFID·USN 기술을 본격 적용할 시점이다.

② 추진계획

기가(Giga)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용기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및 솔루션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가 인터넷 선도 서비스 시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인터넷 세상 구현을 위해 연동망 구간에 DDoS 제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유해정보 심의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정보 단속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스팸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안 서버를 3만여개의 개인정보 취급 사이트에 보급하고 지역거점 2곳에 인터넷 중독 지원센터 신설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RFID·USN 확산사업은 2008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서비스 및 사업결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관련 산업 분야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u-City 건설은 u-City 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지침을 제정·보급하고, u-Eco City 시범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가지원과 기술 확보로 u-City 등 한국적 도시 건설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기가 인터넷 서비스 도입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최소 10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통해 3D 입체 영상회의 등 고품질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통신 장비·부품, 시스템, 서비스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및 유해정보 심의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음란 등의 유해정보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상 모든 개인정보 사이트에 보안서버가 설치되어 송수신 정보가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성인·대출 등의 휴대전화 스캠 수신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2012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2006년 62%)

RFID·USN 확산사업의 경우 식·의약품 분야는 매년 1조 2천억원 정도의 식품폐기 비용 중 10%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연간 1,500억원의 농가소득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물류·유통 분야에서 연간 4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USN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어린이 부상 25%, 사망 3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형 u-City 건설은 20조원 투자시 201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산업생산 유발효과 약 57조원,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측되고 있으며 u-행정, u-환경, u-방법 등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u-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u-City 수출은 전 세계를 국토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해외에서 글로벌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다.

2-8-7.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 과제 개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최근 2008년 관광산업의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8억 4,200만명(2006)이었던 관광인구도 오는 2010년에는 10억 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중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율이 평균 8%로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8%로 자동차 71%, 휴대폰 52%, 반도체 43% 등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고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600만명을 넘어섰으나 일본 733만명, 중국 4,960만명으로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외래객 입국은 낮은 증가율(3~5%)을 보이는 반면 해외여행은 15%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특화된 관광자원 확충,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정과제로 선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의 52.6%(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관광전략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1위 국가이나 200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 1,008만명(홍콩, 마카오 제외)의 8.8%(약 90만명)에 불과한 데 비해 2006년 방중 한국인은 392만명으로 중국 출국자(1,161만명)의 34%나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관광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광교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자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테마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 외래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 개선, 컨벤션산업 육성,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중저가 관광호텔 확충 지원, 관광산업의 제부담금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추진, 비무장지대 내 남북합작 문화관광마을 조성 등의 세부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면제제도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를 주관부처로 하고, 법무부·외교통상부·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즉시 구성해 운용하고, 2008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상호 무비자제도 운영을 시범 추진하며, 2008년 말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인 한·중 무비자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테마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08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스포츠 등 한·일 교류 확대, 유치 가능성이 높은 '단카이세대(실버세대)'와 한류 고객층 등 타깃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 집중 강화, 일본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 캠퍼서 실시, '2008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2008.10), '한·중·일 청소년 관광교육포럼' (2008.8)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관광 교류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의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구축,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 핵심연계사업 활성화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순신광장 등 랜드마크 구축 등의 여수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기존에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2009→2012) 등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저가 관광호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 고유의 중저가 브랜드(베니키아, 굿스테이) 관광호텔 확충을 지원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신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자금 용자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각종 관광산업에 부과되는 제부담금의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특징을 잘 살리고 이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가칭 '평화통일시'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내 남북합작 문화관광마을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8년 내에 남북합작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요청, 북측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협의 도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되는 남북합작문화관광마을에는 주택, 공연장, 종합촬영소, 작업실, 체육시설, 연구시설 및 DMZ 에코 뮤지엄 등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인프라 구축시 물자와 기술은 남측이 제공하고, 인력은 북측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외래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 개선을 위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제주행 항공좌석의 확충 및 연결편을 확대하고, 중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조건 개선 및 지역 간 항공취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인수위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2008년 외래관광객 유치 700만명(목표) 달성으로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및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현재 세계 16위 수준의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은 2012년 UIA(국제건축가연맹) 기준 세계 10위, 아시아 1위의 컨벤션 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호텔에 수출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영업이익 개선 및 신규 투자 활성화, 27.2%의 숙박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DMZ 내의 남북합작 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어 하는 한국대표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관광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9. 일자리 창출

2-9-1.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① 과제 개요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우리 경제가 매년 7% 성장과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는 성장잠재력이 4%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규제완화·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2~3%의 성장을 추가할 수 있다. 경제가 연 7% 성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는 한편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도 대폭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물가와 경상수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특히 성장을 제고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시차(Lead Time)를 가지고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과 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우리 경제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조성하며,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관광산업, 운하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유도하고, 민간주도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제 등 경쟁 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선진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률도 경쟁 선진국 수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최저화하는 한편 금융에 대한 규제·감독·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편해 원활한 기업 지원과 함께 금융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불법 노사분규에 강력 대처해 성장동력의 일실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고용창출능력이 크고 부가가치 제고 가능성이 큰 의료·교육·금융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산·학 연계, 증권·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다. 현재 2만 3천개 수준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2012년까지 5만개를 추가함으로써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 창업을 위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M&A시장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당해고시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한 보상제도 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2008년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미시적 대응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 변수의 조정(Realignment) 등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2008년 6% 성장에 이어 점차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서 2012년에는 7%대 성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2.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① 과제 개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2006년 60.8%, 한국 5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1%밖에 오르지 않아 경제성장동력 핵심자원인 여성이 저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고학력 여성인력이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을 포기하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학력과 육아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여성고용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여성일자리만들기TF'에서 논의한 결과 청년층 여성의 입직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고학력 여성을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적합직종을 선정하고 취업의식을 고취하며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을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로 선정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의욕 고취, 훈련, 채용장려금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에는 지역 교육훈련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취업설계사 등을 배치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사업도 실시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적응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학력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면서도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요구를 반영해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택근로 모델을 개발하고, 육아기·학습기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 여성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트타임 일자리 बैं크를 구축해 여성 파트타임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학력 청년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의 ‘고학력 여성경력 개발’ 거점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전문직종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 기업체, 고용지원센터와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취업연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협력망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개별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나가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늘려 이 제도의 활용률을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직업능력과 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M커브 현상과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 복귀를 포기한 L커브 현상을 극복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9-3.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① 과제 개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외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과 청년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외 전문가 양성은 대학생 인턴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해외 인턴십 비용에 대해서도 매칭펀드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국제기구, 재외공관, 비영리단체,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국내기업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인턴 수요

처 및 발굴처로 활용함으로써 임기 내 3만명을 목표로 추진코자 한다.

청년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센터를 ‘글로벌 리더 양성본부’로 개편해 해외 취업 지원을 총괄케 함으로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 알선업체, 대학 등과의 업무연계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 취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해외 취업 목표는 5만명이다.

청년해외봉사단은 KOICA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연차적으로 2만명까지 확대해 청년층에게 국제적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단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 파견 내용 및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② 추진계획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부처 등 일방의 노력보다는 과제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대학, 정부 등 유관 기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인수위에서는 기업·대학·정부 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담은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경제단체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을 활용해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를 확보하고 해외 취업(인턴) 청년들의 사후 관리를, 정부는 경제단체와 해외 진출 기업의 관련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은 주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해외 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대기업 해외지사, 협력업체 등을 통해 인턴·연수업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하며, 주요 대상국가와 장기적·안정적 해외 수요 확보를 위해 MOU의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외 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언어 능력과 해외 인턴·취업 지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글로벌 H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전교육을 강화토록하고 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상국가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IT, 자동차 설계, 간호사, 비즈니스 전문가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인턴 참가자, 해외 취업자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민간단체를 육성해 언어능력 배양, 해외 인턴·취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해외 취업 민간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개 요금의 자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외 인턴사업의 대상과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 12월에 만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대체해 청년자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직업 진로지도, 인턴·직장체험, 산·학 협력 지원,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③ 기대효과

해외 취업을 확대하고 해외 인턴 지원 등 청년층의 해외 진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아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도 해외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기 과제 외 '활기찬 시장경제' 를 위한 국정과제 목록

- 원화의 국제화 방안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 외국 인력제도 개선
-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기술금융의 활성화
-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 고령자 일자리 창출

3. 능동적 복지

◎ 전략 10. 평생 복지기반 마련

3-10-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① 과제 개요

단순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 정부·열린우리당과, 노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한 한나라당 간 개혁방향을 둘러싼 약 4년간의 여야 대립 후 2007년 7월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불안(2060년에 적립기금 고갈 예상)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과 개정된 국민연금 간의 역할분담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한나라당 대선공약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해 운영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넓히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공약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정책은 당선인의 핵심 8대 과제 중 하나인 노인복지정책의 중심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적연금 문제 해결 없이는 초고령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한 희망사회도 만들 수 없고, 본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택가능한 대안도 줄어들어가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정 후에도 불안정한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국민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대선공약상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는 별도 법령으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 포괄해 노인소득보장제도 재정립 관점에서 사각지대 축소와 증복급여 해소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기초노령연금제를 기초연금으로 만들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하는 2층 체계화하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보완적 최저 보증연금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대선공약에서 약속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대상범위도 정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의 기축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미완성된 부분을 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공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충해 적어도 불입한 연금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만큼은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노후생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수준의 급여조정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금보험료도 현행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부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의 자산소득 조사방식이 아닌 연금소득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 혹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는 기준선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은 현행 40%의 급여율과 9%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국민연금상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의 배분 구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10%p 확대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구조는 세계개편 등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시에 국고로 조정하도록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 of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능한 조속히 ‘공적연금개혁TF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개혁TF팀에서는 본 과제 외에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

금 개선(중점과제 4-1-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중점과제 4-1-5),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일반과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공적연금체계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연금개혁TF팀은 총리실 산하에 두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하고,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개혁TF팀은 기존에 논의돼 왔던 개혁방안을 포함해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추가적으로 종합 검토해 최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정을 거친 이후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2008년 말까지는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2009년부터는 개혁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적연금개혁TF팀의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공적연금개혁TF팀 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대부분의 노인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중복급여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해당 분만큼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 재정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함으로써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개혁부담감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3-10-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① 과제 개요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의 재원조달을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집행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매년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질적 성장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불만인 상황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그에 대한 대책 수립도 명확해질 수 있다. 2008년 상반기 중 재정 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시 함께 고려할 정책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을 담당할 민간 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초보장형인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함께 담당토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보공유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향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관리·운영의 통합일원화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리·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관리·운영 비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보완이나 의료 공급자·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구조 개선, 지출 효율화 및 민간 의료보험의 보완적 역할 설정,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등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공급 구조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10-3.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 서비스 지원

① 과제 개요

‘자녀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해 부모 부담을 낮추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출산 관련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기형검사·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으로 임신 과정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전 관리에서 불필요한 검사, 과다 중복진료 등은 억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제고를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시 현재 1회 평균 시술비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신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 횟수와 지원액 확대가 요구된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건강투자 차원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퇴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 발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의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 항목의 보험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를 면제해 산모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경감할 계획이다. 다만, 산전 검사 중 비급여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검사의 급여 전환은 추진시기,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요양급여비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횟수를 2회(2007)에서 3회(2008)로 확대하고,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범위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한해 평균시술비의 90%를 지원하고 일반계층에 대한 지원액 상향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소요비용(민간 병원 접종 포함)을 2009년부터는 국가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방접종수가를 책정해 고시하고, 사업 지침 개발 및 의료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실시 중이므로 사업의 조기정착과 후속관리대책을 추진한다. 2008년에는 법 개정으로 타 부처 영·유아 건강검진과 통합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2009년에는 조기 발견된 발달장애아에 대한 후속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6세 미만 아동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은 외래 본인부담률은 성인의 70% 수준(21~35%)으로 경감하고(2007.8.1 시행), 입원 본인부담률은 10%로 설정해 시행 중이므로(2008.1.1 시행),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 우려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 서비스 이용 비용 경감으로 부모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 기피 현상 완화가 기대된다. 산모 산전 진찰 보험급여 확대로 산전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50% 이상 경감될 것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지원 횟수 확대로 임신성공률이 높아지고, 시술비 경감으로 출산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임신성공률은 30~31% 수준으로 외국의 임신성공률(2회시 34%, 3회시 45%, 4회시 52%, 유럽생식학회)보다 낮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달성해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영·유아를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3-10-4.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선

① 과제 개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등 이른바 4대 공적 연금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4대 공적연금은 급속하게 확대 발전해 왔지만, 1973년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 이후 200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재정위기에 빠졌고, 사학연금(2020년경)도 적립기금이 고갈될 전망 이어서 연금개혁 문제가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2007년 7월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문제가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혁은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대선공약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자보전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

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추진계획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연금 재정 불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현행 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GDP에서 3개 특수직역연금 급여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를 훨씬 넘어서게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채무는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지만 140조~200조원 내외(2007년 말 기준)로 추정된다. 여기에 군인연금 22조원, 사학연금 30조원을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한해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부채증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 연금 부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전망(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연금수입(a)	연금지출(b)	정부보전액(b-a)	퇴직수당
2010	51,320	72,367	21,047	13,385
2020	75,519	181,175	105,656	32,879
2030	103,980	349,673	245,693	50,644
2040	143,570	506,905	363,335	56,971
2050	190,604	6,891	499,047	77,662
2060	242,956	954,896	711,940	108,740
2070	319,133	1,261,168	942,035	128,371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때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기간 동안 누적된 연금부채에 대한 인식과 이의 청산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하고, 제도개혁 시점 이후에는 국민연금 이상의 부채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측면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은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같이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1층)+법정퇴직금(2층)+저축계정(3층)'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급격히 감소된 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저축을 하면 이에 상응해 일정 한도 내에서 매칭펀드식의 국가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다층적 구조개혁 방안 외에 현행 공무원연금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

준을 조정하는 모수적(母數的) 개혁방안도 있다. 모수적 개혁방안은 제도개정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았듯이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래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 구조개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73년에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202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틀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연금은 계급정년제 등 군인 직역의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사학연금은 사용자인 사학법인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본 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재구조화(핵심과제 4-1-1) 과제와 함께 '공적연금 개혁TF팀'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기존의 제도개선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와 협력구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큰 틀은 공적연금개혁TF팀이 주도하되, 각 이해단체와의 의견조율 등은 각 제도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공적연금개혁TF팀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개혁방안을 포함해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추가적으로 종합 검토해 최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친 이후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로 미래정부 및 미래국민의 부담을 축소시키고,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구조 선진화로 개별 직역의 특수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제도개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개선된 제도하에서 자율적인 노후소득보장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예산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0-5.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① 과제 개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직장이동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권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연계방법에 대한 부처·제도 간 이해상충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200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무원연금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 중에 있고, 합의안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연금 간 이동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계기로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서도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은 제도 간 재정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는 각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대상자 중에서 연계를 통한 연금수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간 기존의 연계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모두 일반 연금수급자와 동일 수급률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부가급여에 있어 일반 연금수급자와 차등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예 : 62세 정년인 사학교원)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르도록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자(국민연금 · 특수지역연금)로 한정하도록 하되, 경과규정 마련 여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재구조화(핵심과제 3-10-1),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 개선(중점과제 3-10-4)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적연금개혁TF팀에서 구체화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간의 연계제도 도입은 큰 예산부담 없이 직장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 활력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10-6.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① 과제 개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현행 의료비 지원 관련 기금들을 의료안전망기금으로 통합하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혈액관리원 설립 등 국가 혈액관리정책의 개편, 선진국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공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 등 장단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7%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재정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재정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관리·운영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② 추진계획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2008년에 비급여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장 확대 계획을 2009년 중 수립해 추진하고자 한다.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안전망기금조성TF를 구성하고, 2008년 중 복지부 내에 의료비지원사업 통합관리 조직을 두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공책임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혈액관리원, 정신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필수약품 유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장·단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급여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경감되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의 통합관리 및 민간재원과의 역할분담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안전망 확충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필수약품 유통구조 확립과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 혈액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정신보건체계의 선진화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10-7.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① 과제 개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이행 등에 따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보다 질병예방과 건강 확보 등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한 인적자본 확보는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예방적·보편적·능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기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 모형으로 6대 권역별로 건강마을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 등과 연계한 예방적 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건강 서비스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건강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건강정책에 대한 지방분권화 강화를 위해 '지역건강기금' 과 '건강증진재단' 을 설치해 중앙정부의 획일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단위의 건강증진정책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심 부족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자생력을 잃고 있으나 향후 지자체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재정 지원체계를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추진계획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관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건강포인트제도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제도를 추진한다.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국민보건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건강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

해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 스스로가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색을 갖는 다양한 모형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운영은 지방정부가 민간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활성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까지 지역 건강기금 및 건강증진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지역건강기금을 설치하고, 정기적 평가를 통해 중앙보조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이 기부할 수 있는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예산 확보를 통해 소외된 지역의 소규모 운동시설, 노인운동교실 등 지자체 단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③ 기대효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바우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규 건강 서비스 시장이 조성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건강 스스로 지키기’가 활성화되면 의료비용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민건강 향상으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의 근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략 11.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3-11-1.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① 과제 개요

아동을 미래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투자 효과가 높으므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아동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적 단일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통합 서비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식된다.

이에 빈곤아동의 다양한 발달·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보육·교육·문화 등 종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2007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희망스타트)에 영·유아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시·군·구에 공무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인프라와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사례관리와 통합적 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빈곤층 미취학아동(0~5세)에 대한 조기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의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추후 민간 시설의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계를 강화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족 지원, 건강 지원 등 개별 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2008년에 3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사업 수행체계,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모형 등 지역별 드림스타트 모형을 개발해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에 100개 지역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하고, 2010~2012년 기간 동안에 232개 지역(시·군·구당 1개소씩)으로 확대, 전국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빈곤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빈부에 따른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을 높여 전인적 발달이 가능하게 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1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① 과제 개요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의 치매·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12.1%인 43만 5천명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가정에서 노인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수발비용이나 수발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요양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과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를 현행 요양3등급에서 요양4등급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현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급여대상자 확대를 요양 4등급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확충이 어렵고 법적·재정적 추가 조치가 필요한 관계로 임기 내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제도 시행(2008.7) 1년 후 평가해 요양 4등급자 중 대상자 확대 범위 설정을 검토할 것이다. 본인부담금 인하는 제도 시행 후 평가를 통해 검토하되,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는 국고(보험료 수입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용부담(국가와 지자체가 향후 개정될 하위법령에 따라 분담하게 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 국고부담분이다.

③ 기대효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전문적 요양,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만~200만원이 소요되나, 제도 실시 후 월 40만~60만원(급여비용의 20%+식비 포함)으로 비용이 감소해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

노인수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 경제적 편익 향상과 함께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요양시설의 추가적인 확대와 함께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필요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3-11-3. 수요자 중심 보육·유아교육 정책 개편

① 과제 개요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여성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취학 전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 성장동력 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보육시설, 유치원 수 및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 수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보육·유아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무상보육·교육과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은 부모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보육료·교육비 지원체계를 개편해 차등보육료·교육비와 기본보조금으로 이원화된 비용지원을 통합해 차등보육료·교육비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계층 구분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비율을 제고하되, 상위 소득계층은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형과 연장형으로 구분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모의 취업여부 등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화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비용 지원방식에서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부모가 전체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액, 본인 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형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수단으로는 평가(인증)제도를 수정·보완해 활용하고자 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료상한제

는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한편, 보육료 자율화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른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균형 배치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보육료 자율화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파견 보육사업을 확대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며, 영·유아 이용시설(예 : 서울시 육아플라자)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단계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수준 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고,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으로 부모의 맞춤형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보육료·교육비를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 체감도와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전망이다.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11-4. 맞춤형 개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① 과제 개요

2000년 10월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빈곤층 지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뤄져 왔으나, 보호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해 오고 있다. 특히 수급자에게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빈곤합정이 심화되는 반면 차상위 계층의 복지수요 대응 부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은 자산조사와 급여지급 프로세스의 혁신, 사회복지인력의 추가배치 등 일선 전달체계 보강이 전제된다.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② 추진계획

저소득 주민의 욕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으로는 급여 특성에 따라 자산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차등화하고, 근로능력자의 복지 의존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활장려금의 확대 및 수급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지원세제) 적용 등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별 법률안(기초생계급여법·주거급여법·자활급여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차상위 계층 학비지원 사업 등과 같이 타 부처 유사·관련 사업과의 관계 정립을 검토하고,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정보 시스템과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급여별 수급기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다. 다만, 2007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에서 제도 개편 효과 검토 결과(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안전망 기금에 의한 지원분 제외)를 살펴보면, 총수급자 수는 현행 153만명(인구의 3.2%)에서 개편시 347만명(인구의 7%)으로 증가할 것이며, 소요재원은 현행 6조 2,468억원에서 개편시 6조 7,56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맞춤형 개별급여, 급여별 수급기준 차등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분야별 기초보장 확대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단계적인 탈수급 경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11-5.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① 과제 개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인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이들의 공직진출과 대표성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및 실적주의 원칙과 조화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와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고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② 추진계획

한시적인 조치보다는 가산점제·할당제 등 지속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빈곤층의 공직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시범 적용하고 일정 기간 시행성과를 평가해 여타 직종·계급으로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한다.

지원의 시급성과 시험관리의 공정성 측면을 감안해 공식 증명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영성과 평가, 증명체계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자활 촉진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며, 빈곤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통해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 전략12.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3-12-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① 과제 개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10등급, 700만명)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매입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소액서민대출은행 등을 통해 창업·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금융소외자 등이 연체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악성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금융소외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설립준비 중인 휴먼에듀관리재단을 소액서민대출은행으로 전환해 창업·생활안정 등을 위

한 소액자금 대출과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금리 채무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환승 보증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이상 채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관련 기록 삭제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악성 추심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입법으로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소외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금융·제도금융권 연체자를 악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2-2.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① 과제 개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우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이 곤란한 실정이다. 30대 가구의 자가율(自家率)은 23.9%에 불과하고 58.3%가 내집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기초자산은 5천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2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LTV, DTI)로 서민층의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2004년 12월에 5.41% 수준이었으나 2008년 1월에는 7.4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초기부담을 대폭 낮추어 무주택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지분형 주택의 기본구조는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재무적 투자자가 49% 이하의 지분을 갖도록 한 것이다. 분양가 2억원 주택의 경우 기금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지분투자 1억원을 합치면 자기 자금 5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해진다.

권리행사 측면에서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 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또한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는 없으나, 실수요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 중 일정액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실수요자는 전매제한기간 이후에 자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고, 투자자는 7~10년 후 청산하되 청산 전에도 지분거래를 할 수 있다. 청산시에는 실수요자가 투자지분을 감정가로 매입하거나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는 현행 주택세제를 적용받고, 지분투자자는 리츠·민자사업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를 적용받을 것이다.

지분형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의 공공택지 소형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송파 등 예상투자수익이 과도한 지역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광역시의 주택단지와 묶어서 투자상품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방법은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이 이뤄지고 별도의 청약제도는 불필요하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 연·기금, 적립식 펀드, 리츠 등 단지별 총액으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최초분양가가 시가보다 30~50% 낮으므로 기본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증권시장이 침체된다거나 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자금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임대료 없이 집값차액만을 기대수익으로 하는 유사한 투자구조로 2007년 9월 수도권 4개 지구 비축임대 5,645세대분 3,083억원(지분42%) 투자모집에서 성공한 바 있다.

2008년 6월까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마치며, 2008년 9월 첫 시범분양 실시를 거쳐 2009년부터 지분형 주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지분형 주택은 저소득 실수요 가구의 내집마련 자금부담을 50% 이하로 내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호지역 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로또식(武) 시세차익이 연·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기회가 넓어지고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맞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2-3.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① 과제 개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은 활성화됐으나,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도·폐업이 속출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체 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소상공인들은 전체 중소기업의 88%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이고,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03년 이후 대·중소 유통업체 간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단순한 ‘비막이 공사’ 등 시설개체 지원에 그치고, 대형 마트 확산에 대한 소득적 대응 등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인수위는 그간 추진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지원대책을 점검한 결과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권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과 문화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대도시, 지방공설 재래시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점가·지하상가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권이 광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도시 재래시장은 지역상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광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가 가능한 구도심의 침체 상권 등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정비, 테마거리 조성, 고객 편의시설 확충, 상권가꾸기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형 상권개발모델’을 연구해 가능한 지역부터 광역단위의 지역상권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지방 공설시장은 지역 특산물의 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고유의 유통기능이 강한 곳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개발하고, 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주말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래시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주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시설개선사업 위주에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즉,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201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현재의 43%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아케이드·진입로 등 공동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재래시장 내에 전시실·무료영화관·고객쉼터 등을 만들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상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 마케팅을 위한 케이블TV, 지역방송 등을 통한 시장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상인대학, 상인 해외연수 등 상인교육을 통해 가게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상업 경영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속히 확산된 대형 마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하고 대형 마트 입주시 재래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여력 확충 등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도시기능에 맞는 지역단위 상권 개발, 지방공설시장을 지역특산물 유통거점으로 개발, 고객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 개발·운영, 시설 현대화 등이 점차 확대될 경우 다시 찾는 재래시장으로 모습이 바뀌고, 점차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또한 대형 마트 설립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 카드 수수료의 점진적 인하 등을 통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 간의 합리적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12-4.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

① 과제 개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규제완화의 기대감에 따른 집값불안이 조장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도에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대폭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집값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과제이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공급의 확대효과는 건설기간에 따른 시차(Time-lag)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전국 50만호와 그중 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개선해 민간 택지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등 도심지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서민 주택건설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해 기 지정된 신도시(송파, 판교 등 10곳)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소 규모 공공택지의 지속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한계농지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해 투기억제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가기로 했다. 주택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고, 재건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도 위축시키는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인하하고, 거래세도 인하할 계획이다. 미분양이 급증한 지방은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억제 지역·지구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1월 중에 전면 해제했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세수 등을 검토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조치와 병행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기로 했다. 관계 부처 간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2008년 중에 마련한 다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도심지 고밀·복합개발, 규제 개선, 개발이익 환수, 산지·한계농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도심 고밀·입체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제도를 정비하고,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 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 (2003~2012) 을 수정해 지역별·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외환위기 직후 주택건설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 30만~40만호를 공급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급등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나, 전국에 연 6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집값이 장기간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연 50만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주택보급률과 인구 1천인당 주택 수가 높아지는 등 주택재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까지 확대되고, 1천인당 주택 수는 2005년 330호에서 2012년에는 390호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수급균형을 토대로 주택가격의 장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건설 및 집값 추이(단위 : 천호,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급	613	575	695	623	619	592	596	306	405	433	530	667	585	464	464	470	548
가격	-0.5	-5.0	-2.9	-0.1	-0.2	1.5	2.0	-12.4	3.4	0.4	9.9	16.4	5.7	-2.1	4.0	11.6	2.7

3-12-5. 가계 통신비용 부담 경감

① 과제 개요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말 가계 통신비는 월 13만 5천원으로 식료품·교통·교육비에 이어 네 번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용자가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측면도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요금경쟁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 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 등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과소비 방지 등 합리적인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자율에 의한 요금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같은 이동전화 사업자 간 통화료 할인(망내할인)과 문자메시지(SMS) 요금할인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첫째, 가계 통신비 중 이동전화(8만 5,393원)가 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동전화 중심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판매제도 도입과 함께 요금인가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통신 네트워크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필요시 적절한 도매제공대가 기준을 제정하고 소매요금 인가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일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교체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WCDMA 단말기 잠금장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하는 의무약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요금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상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일괄 제공하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장기 가입자에 대해 현재 50%(지배적사업자의 경우)인 동일 회사 가입자 간 통화할인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가족 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통화료를 할인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유선통신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망 이용대가 인하(1,500→951원 : 2008.1 시행), 시내전화와의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셋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등장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이동전화, IPTV 등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요금경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 요금인하 등으로 2006년 대비 2008년 연간 가계통신비는 최대 15%까지 절감(연 2조 3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네트워크와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돼 2012년 연간 가계 통신비는 2006년 대비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12-6.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등

① 과제 개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막혀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석유제품과 물가가 크게 인상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를 인하해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고통의 일부를 국가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거래 동결 효과 해소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연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한도를 8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휘발유·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조치 시행시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매도를 꺼려왔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섬으로써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율 10%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80원, 경유는 리터당 약 60원, LPG부탄은 리터당 20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는 택시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다.

3-12-7.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

① 과제 개요

최근 유류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높은 유류가격과 함께 매번 부과되는 통행료로 인해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공약으로 반영되어 있는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첫째는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노선의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출·퇴근시 통행료를 50%까지 할인하는 방안이다.

② 추진계획

현 시점 기준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노선의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관리와 신규노선 건설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투자비 회수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미회수 노선의 요금을 약 60%까지 인상해야 하고, 신규 고속도로 투자와 기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이 과제는 향후 고속도로 전반의 수지구조 및 장래 투자요인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퇴근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는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자동차 유입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적용지역은 전국 고속도로 중 진·출입 거리 20km 이내로 했다. 적용 시간은 출근시간(05:00~09:00), 퇴근시간(18:00~22:00)으로 해 현행(06:00~09:00, 18:00~22:00)보다 인하시간을 늘리되,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자 최고 혼잡시간 직전·후 시간대를 더 많이 인하하고, 최고 혼잡시간대에는 현행과 같이 20%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사용시에만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05:00~07:00에는 50%, 07:00~09:00에는 20%를 할인하며, 18:00~20:00에는 20%, 20:00~22:00에는 50%를 할인한다. 다만,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을 국도로 지원해야 하고, 기존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민원 소지가 크므로 할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③ 기대효과

매 출·퇴근시마다 부과되던 통행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관교 구간은 월 7,200원~18,000원, 서울~수원간은 13,600원~34,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어 고유가 시대에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12-8.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① 과제 개요

주거비가 총 결혼비용의 66.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주택과 주거비를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관련 사항이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시행상 신혼부부 기준이 적정하지, 특히 여성 34세 미만, 출산 후 1년 이내 기준의 적절성 여부, 장기간 청약대기 중인 일반 무주택자의 불만 문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적정분담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인수위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② 추진계획

신혼부부 12만 가구 중 저소득 신혼부부 4만 8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과 용자로, 나머지 7만 2천 가구는 용자지원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소형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중 전체 물량의 20% 수준인 매년 5만 호 정도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 특별공급에 따른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조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추가 공급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이외에 용자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장기저리 용자(연리 5%, 1년 거치 19년 상환, 구입자금 기준)를 통해 주택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의 변경, 구체적인 청약 대상·자격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저렴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략 13.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3-13-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과제 개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및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재난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90여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행정기관별로 분산 수행되고 기관 간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다중이용업소 화재, 산업시설 재난, 풍·수해 등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점검 및 대응·복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법령 정비를 통한 대형 재난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비상대비, 민방위, 국가기반체계 보호, 자연재해 피해조사·복구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에 대한 긴급대비·대응 구조·구급, 시설물 화재예방 및 위험물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점검 및 수습·복구 대책 체계를 정립하고 재난기금을 확충하며, 자치단체장과 소방관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방관서장의 재난대응현장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강(문산·과주), 낙동강 하류(고령~부산), 강원 영동지역, 서울 중랑천·안양천 등 반복적 수해 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홍수피해, 강수 집중도, 유역별 저류량, 치수시설 등을 분석해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재정여력을 감안해 예방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절개지, 하천, 교량, 도로 등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대책' 추진과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 등의 피해복구비 지원사업과 행정자치부 주도의 예방투자사업의 통합적 조정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강화와 활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소방시설 검정에 대한 독점체제를 폐지해 민간부문의 고품질 신기술 도입 활성화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소방관서의 소방안전 교육 부문에 민간기관의 참여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보고서로 일부 공적검사 대체 △화재 등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투자 규모 확대 △시설물 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로 시설주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유인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를 위해 민·관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

난분석·평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대형 인명·재산상 피해유발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 후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예방대책 강구도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기능 조정,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권과 소방관서 현장통제권 확립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점검 결과 활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확대를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이동중 위험물 정보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위해 중앙재난분석평가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예방활동의 역량 강화로 대형재난 위험의 감소와 상습적 수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점검 활동과 재난 책임성 강화로 국내 안전점검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13-2.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① 과제 개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추진해 교통사고 사고율을 5년간 50% 감소시키는 등 OECD 평균 이하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는 한국 3.2명, 일본 1.0명, OECD 평균이 1.6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조 1,229억원으로 GDP의 1.1%에 해당된다.

교통법규·시설 등 교통질서 체계의 선진화와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을 선진국의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및 재난 방재 시스템의 통합 구축을 통한 합리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토

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의 부처별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UTIS(교통정보수집 시스템) 등 확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통단속 장비의 기계화 및 단속장비 확충,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정보제공용 통합 DB 구축,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홍보, 노인 보호구역 지정·운영, 보행자 안전지대(Safety Zone) 등의 사업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포함된다.

③ 기대효과

이러한 대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고 가정 보호를 도모하며,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13-3.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도물 공급체계 구축

① 과제 개요

최근 정수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수도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들의 비율이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최종적인 국민 입장에서의 정책접근이 미흡한 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지표수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정책으로 각종 간접취수방식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소홀했고, 수도물 공급체계 또한 광역과 지방으로 나뉘어 과잉 투자된 결과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급수체계의 비효율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차례에 걸친 물 관련 전문가 자문과 정수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도물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수도물 취수·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위해 동 과제를 중점과제로 분류했다.

② 추진계획

안전한 수도물 서비스를 위해서는 취수체계 다변화 등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전제된다. 현재 지표수 중심의 취수체계에 부가해 선진국형 간접취수 방식을 도입하고 실시

간 수도물 수질 및 수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다 더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본류 구간에 위치한 주요 수도시설에 연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2008년 중 서울시 영등포 정수장을 대상으로 막여과시험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주요 본류구간 25만톤 이상의 대형 정수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시간 수도물 수질 및 수량관리 시스템은 대규모 취·정수와 급수계통 위주로 구축할 계획으로, 2008년 중 8개 정수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에는 총 81개 정수장에 대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물의 최종 수요처인 가정에서 느끼는 녹물 유입 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수장에서의 수도물 병입·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전한 수도물 공급체계는 수도사업구조 효율화사업이 병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광역과 지방으로 나뉘어 투자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북한강권역 등 4개 권역의 1일 잉여 정수량 122만톤을 부족지역에 연계·공급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해 2008년 중에 우선적으로 주요 권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을 완료하고, 2009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급수체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며, 2009년까지 권역별 수도사업자 구조개편 실천계획을 마련해 2012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50%이상(급수인구 기준)의 구조개편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대효과

급수체계 조정과 수도사업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통합운영 등으로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절감비용 외에도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첨단 정수 시스템을 접목해 고품질 서비스로 개선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국민들의 수도물 음용비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기 과제 외 '능동적 복지' 를 위한 국정과제 목록

- 양성평등 수준 향상
-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사회 서비스를 통한 자활 지원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 완화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 식품안전관리 강화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양육수당)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LPG 경차 허용
-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4. 인재대국

◎ 전략 14.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4-14-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① 과제 개요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 및 대학 양자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 속에 점수 위주의 선발에 머물러 있었으나,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의 입시제도에 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는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자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한을 보장하고 학생선발능력을 제고하되, 대입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먼저 대입 자율화 1단계로 그동안 정부에 의해 주도됐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등 반영할 전형요소의 종류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고교별 교육과정의 특성, 개인적 환경·특성 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 위주 대입정책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제 및 고급과목선 이수제 등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능력 향상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적 활용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수험생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및 대학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대학들의 의견을 조율해 초

·중등 및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운영하게 된다. 각 대학의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출신 고교의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전형결과 등 신입생의 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입자율화 2단계로는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수능은 탐구영역 최대 4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서는 탐구영역 2~3개만 활용하고 있어 학생의 학습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2학년도 입시(현 중3 적용)부터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을 2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13학년도 입시(현 중2 적용)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현재 평균 7과목에서 최대 4과목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입자율화 1, 2단계를 통해 기본원칙이 정립되면 이를 법제화하고, 대학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자율화 3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③ 기대효과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됐던 대학입시 삼중고(三重苦)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만들어졌던 전형방법이 명확화돼 진학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 선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14-2. 영어 공교육 완성

① 과제 개요

우리 영어 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어 있다. 10년 넘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까지 영어에 막대한 시간과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에서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우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들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를 2013년까지 2만 3천명 새롭게 채용할 것이다. 국내외 영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영어권 국가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직 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등 영어 수업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심층적인 구술면접 등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교수법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를 거쳐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계약을 새롭게 맺고, 5~10년마다 영어전용교사 자격을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에게는 국내외에서의 심화연수 기회를 늘릴 것이며, 영어 사용 국가들과 교사·예비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원어면 교수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영어 교사 임용고사에서도 말하기와 쓰기 능력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나 주부, 지역주민, 그리고 해외교포도 '영어전용 보조교사'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점 인정,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다.

학교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는 3~4학년, 2011년에는 3~6학년에서 주당 3시간으로 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영어 수업이 영어로 실시되도록 교사와 시설을 준비해 갈 것이다. 중·고교 영어 수업은 말하기·쓰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교과서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방침이다.

지금의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 영어시험을 실용영어가 강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교육부에서 2007년 7월 착수)으로 대체할 것이다. 다만,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입시(올해 중2, 중1 학생)에서는 4영역 중 듣기·읽기 영역을 평가하고, 2015학년도 입시(올해 초등 6학년생)부터는 4영역 모두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학교 밖 영어 교육 기회 확대 및 방과후 영어 사교육 흡수를 위해 영어 학습교재, 영어 동화책(Storybook), 멀티미디어 등이 다양하게 구비된 시·군·구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 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학습 공간을 확대할 것이다. 한편, 학교 내 우수 영어 교육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 규모 축소를 위한 영어전용교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체험센터를 거점 초등학교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정규수업 외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재량활동 시간, 방과후 학교, 방학 중 영어캠프를 활용해 학습 부담 없이 흥미와 영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다.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교육도 영어로 진행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밖

에 방송, 인터넷, 농어촌 화상영어수업 강의 등을 지원해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지역 등에 우수한 영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말하기·쓰기 실용영어 중심 학교 공교육 강화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중심이 되는 영어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인적 자원의 영어교사 입직 경로를 다양화해 우수 인재 활용을 통한 학교 영어 교육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적의 효율·효과적인 인적·물적 영어학습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 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약 4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해 국가 전체적인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한편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14-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① 과제 개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대학을 경영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여러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립대는 학사 운영과 재원 확보 측면에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대학경쟁력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먼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칙보고제, 수업일수 감축 승인, 입시휴업 보고의무 등이 폐지되고,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지침 폐지, 편·입학 전형업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된다.

또한 사립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업무를 정비해 기본재산처분 허가권 축소·이관, 정관 변경 인가(보고제 전환), 기채허가제도 등도 폐지할 예정이며, 국립대의 경우 대학 행정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국립대(사무국장 포함) 순환전보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조직·정원 자율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대의 경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제도를 향후 3년간 운영 후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 수업연한 자율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조직이 아닌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 입법절차를 재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필요에 따라 남של해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구비, 장학금, 포물라 지원 등 3개 방식으로 간략화해 교수·학생·대학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포물라 방식의 재정지원은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교육중심 우수대학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해 대학 간 경쟁이 학생 및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자생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국내산 교육 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대학 입시, 대학 학사,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 등을 자율화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대학 운영의 경직성 완화 및 대학 인사·행정 자율 확대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학생·교수 등 직접적인 수요자 방식으로 변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연구비 획득을 위한 교수 간 경쟁, 포물라 지원을 위한 대학 간 취업경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14-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① 과제 개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학교의 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기숙형 공립고교,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책무성을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묻는 자율형 사립고교, 학생의 특성, 취업·진학의 모든 기회를 살리는 마이스터고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 추진계획

우선 기숙형 공립학교를 추진할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립고 중에 지역 기여도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해 기숙사를 설립한다. 동시에 도서실·어학실·다목적실 등 교육시설과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산·어촌 등 교육 취약지역의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로 설립이념이 뚜렷하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재정이 건실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다. 학생선 받은 사교육비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필고사를 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시·도별 학생배정제도와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검토·추진할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기존의 전문계고는 물론 기업체 혹은 지자체 등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모형이다. 우선 기존 특성화고 중 학교운영이나 성과면에서 우수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인증해 과감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별로 교장이 교육감과 학교운영협약을 체결해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다.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가 공모 교장·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과 보수체계를 유연화하고, 교육과정도 혁신해 전문계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학교는 특색화·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성과협약서를 체결해 학교회계 전출금을 시·도 교육청별로 추가 지원해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별로 ‘교과 특성화’가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교원임용의 자율성 또한 확대해 학교 특색 살리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더불어,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 등 학교별 특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의 인사·재정 재량을 대폭 부여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순회강사 우선배치 등의 지원책을 실시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낙후지역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사학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스터

교 학생들은 재학 중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전문화된 직업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예비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별학교별로 특성화·다양화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연계해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4-14-5. 국가장학제도 구축

① 과제 개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독립된 기관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교육 진학률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의 장학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장학제도는 현재 각 부처별로 산별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의 장학사업 및 학자금 대부사업을 총괄해 효율적으로 운영, 학생에게 다양한 국가·민간 장학사업을 한번에 안내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및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검토했다.

② 추진계획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도록 한다. 필요 예산은 관련 부처와 여타 기관의 기존 장학예산을 증액하고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확충토록 한다.

둘째, 저소득층 장학지원 및 근로장학생제를 확대하게 된다. 학생의 소득이나 가정형편, 진학대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상장학금, 무이자 대출, 금리보전, 신용대출 등 맞춤형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전문대학에만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학생제도를 4년제 대학까지 확대 시행하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해 대학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일반인의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대학의 재정수입을 다양화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도록 한다.

넷째,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소득 발생시부터 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연계형 용자제도 도입을 고려하고자 한다. 동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포착과 국가 조세체계와 연계

한 상환 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 조건이므로 우선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기숙형 공립학교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다. 해당 학교의 연차별 설립계획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해당 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약 70%에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다. 해당 학교의 연차별 설립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 재원을 통해 입학생의 30%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일반 고교의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시·도의 저소득층 학생(기초 및 차상위)에게는 수업료를 포함한 학교운영 지원비 등 일체 지원으로 확대해 일반 고교 학생의 학비 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국가·민간 장학사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14-6.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① 과제 개요

공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의 가장 큰 투입요소인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해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자격 등과 연계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원의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5~10년 주기의 교사연구년제도 도입도 구상하게 됐다.

② 추진계획

교원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 상호간 및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 능

력개발평가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 학생 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라는 형태로 교원 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는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하고, 평가지표 개발 등 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관리·운영은 교육감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모든 교사는 입직 후 4년이 되는 해부터 3년을 주기로 직무연수 90시간 이상, 교원 능력개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원은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감이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교사연구년제도는 교사가 전문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간 국내외 대학 및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활동과 국내 연구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채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휴직제도를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교단 입직경력 10년 이상으로서 연구년제를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교육감이 교원 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을 선정해 연간 1% 교사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교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점검과 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교원 개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도 촉진돼 결과적으로는 교원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 15.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4-15-1. 대학 연구역량 강화

① 과제 개요

대학은 글로벌 지식경제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 지식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지원 기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과 연구기관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 및 최고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경쟁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외 석학의 영입을 확대해 대학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간 연계 촉진이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개인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연구비 지원구조를 단순화한다. 소요 재원은 정책사업비 폐지·축소 및 구조개편 전환 재원과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관련 예산 통합·효율화를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기반 자율 확충을 위해 연구간접비를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기반과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8년 중 영문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사업을 신설하고, 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 등 국제 공동연구 관련 제사업을 영문 연구계획에 의해 신청·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과 연구비 지원시 IF(Impact Factor : 영향력 계수) 등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동 자료를 심의, 성과관리, 인센티브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논문 관리·유통 확산과 인용도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풍토 및 연구자가 우대받는 풍토개선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사업은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사 시스템에 반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사립대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학 유치에 따른 주택임대료, 자녀교육비, 사무공간 등 부대비용을 반영한 적정 지원금 산정 및 지원과 대학부담 대응자금을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연구지원 체계를 개편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20여개 대학들은 세계적인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는 글로벌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 다른 대학들도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특화된 분야의 일류대학으로 거듭나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며,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좋은 대학들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4-15-2.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① 과제 개요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정을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필수 교과목은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졸업 필요 학점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시설·교원 등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② 추진계획

교육과정 개편 체제를 개선할 것이다. 교육과정 심의기구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반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정책 기획기능만을 맡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은 전문기관에, 심의기능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두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고 법령에 근거를 둔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교육과정 관련 업무 일체를 교육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부는 최종 고시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교과별 이수 시간을 최소·최대 시수제 형태로 도입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중학교 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학년·학기 집중이수제로 실질적 교과 축소와 학습내용의 적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총 이수 단위 감축과 더불어 향후 수능시험 과목 축소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교과서 유통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가격사정 기능과 이익금 균분제와 같은 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 사업, 대학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며, 정기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 및 개정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학교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4-15-3.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① 과제 개요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략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정부 R&D 투자를 임기(2008~2012) 중 1.5배 확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가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투자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해 기초·원천기술 강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투자 확대와 더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 추진계획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2008년 상반기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50% 달성을 위해서 기초·원천 투자를 연평균 30.3% 확대해 임기 중에 총 24조 8천억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정부 R&D 투자 증액분을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확보 및 과학기술자 배출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기술 R&D는 산업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운영에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적인 R&D 예산 배분방향, 주요 국책과제의 예산연계방안 등을 담은 예산편성지침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개별 R&D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R&D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므로 부처 간 조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수석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학문(과학) 지원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능을 조정해 효과적인 연구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기능을 연구지원과 장학지원을 수행토록 조정하고 연구지원의 경우 선진국(예 : 미국과학재단(NSF))처럼 분야별 전문가(Coordinator)에게 강력한 예산배분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부처 자율평가', '특정평가'로 단순화하고, 평가주기를 확대하는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혁신평가 및 상위평가는 폐지하고, 기관평가 주기를 확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연구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눠먹기식' 국가 R&D 사업배분체계를 개선하며, 대학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간접경비를 원가계산에 의한 실소요 간접경비 지원체제로 개선하고 대학별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칸막이 문화를 제거해 융합연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출연(연) 융합신기술개발사업'(가칭)을 신설해 출연연구기관 간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대학 겸임교수 발령, 출연(연)과 대학의 학과 공동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기술혁신이 촉진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국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 대학별 간접경비의 차별화 등 선진 연구개발체제 도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15-4.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① 과제 개요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창의적 핵심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융·복합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귀국을 지원하며, 아울러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의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② 추진계획

과학영재의 육성, 핵심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저변을 확대하고자 권역별로 과학영재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과정에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해 수월성 교육이 단절됨에 따라 생애 전주기적 과학영재의 지속적인 육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단계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25세 전후의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창의적인 초일류 과학두뇌를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해 세계 10위권의 선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이들 대학을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통합해 IT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IT 인재 양성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관련 법령을 제정해 창의적인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재단의 기능을 조정해 효과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석좌교수 및 국가석좌연구원제도를 도입해 세계 수준의 국내외 석학과학자를 발굴·초빙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인재 유치·활용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08년 6월까지 해외인력 유치·활용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재가 국내 정주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는 '해외과학기술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2008년 9월까지 기존의 브레인폴사업, 포스트닥터지원사업, 해외우수연구원 장기채용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과학영재 교육의 활성화·특성화를 통해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핵심 과학리더 후보군을 양성하고, 세계 10위권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창조적 핵심과학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분야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선진 연구환경 조성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우수과학인재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부족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고급두뇌의 공동화 현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 16. 평생학습의 생활화

4-16-1.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① 과제 개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새 정부는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 정규 교육기관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인증평가를 통해서 통합적 평생교육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우선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하는 학습계좌제를 단계별로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2008년에 교육부와 노동부가 각각 시범실시한 후 2009년부터는 통합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학습비 지원과 이력관리, 학습결과 평가인정체계를 갖추어갈 계획이다.

실업자나 저학력 성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대군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해갈 계획이다. 초기에는 기초문해교육, 직무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후 인문교양·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직무소양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최종단계에서 평생학습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대학·원격대학·학점은행제 간 통합체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 민간자격, 비형식 학습결과를 포괄한 국가자격체계의 재설계와 연동해 교육·훈련·자격·학력이 호환 가능한 학습결과 활용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와 노동부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가칭)'를 운영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 학습계좌제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은행·기업체 등 민간기관을 평생학습계좌 등록·지원 기관으로 활용해 학습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해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해 평생학습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실업자, 비정규직,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학습결과의 누적관리체계와 국가자격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16-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① 과제 개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종래의 평생직장 보장이라는 목표보다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의 제고·유지가 더욱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학습 현실은 '낮은 참여율'과 '낮은 직무 관련성', '낮은 질적 수준' 및 '참여 격차'라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로 OECD 국가 평균 4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숙련 노동력의 활용 용이성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세계 47위에 머물고 있다(IMD 보고서). 2007년 기준으로 보면 기업 규모별 훈련참여율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90.1%이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13.5%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용직의 훈련참여율은 41.6%인 반면 임시직은 15.8%, 일용직은 3.8%에 불과해 고용형태별 훈련참여율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생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근로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적,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②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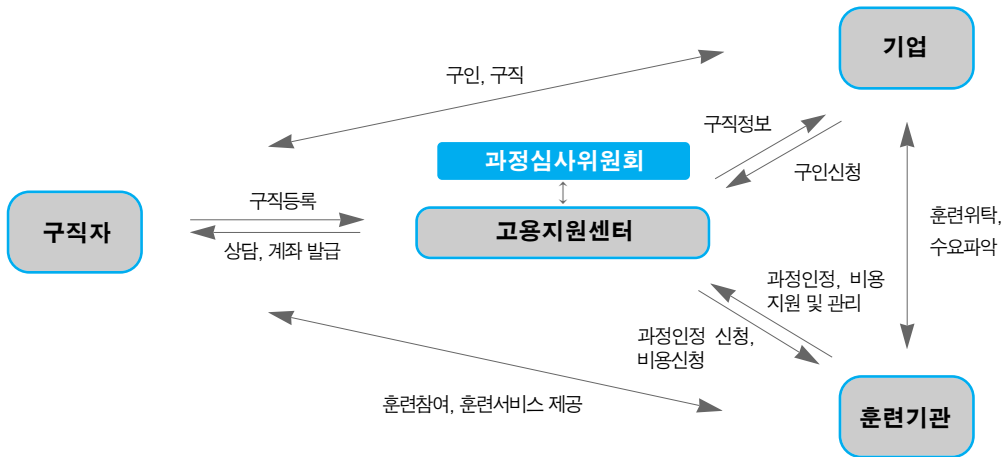
정책 추진목표는 두 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현행 공급자 위주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수요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편한다. 둘째, 현재의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직업훈련 소비와 전달구조에서 탈피해 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도 충분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

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급자(훈련기관)가 수요자(훈련생)를 선정해 훈련을 실시하던 기존의 방식을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바우처제도'는 우선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2008년 하반기), 청소년·제대군인(2009), 중소기업 근로자(2010), 비정규직(2011)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실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훈련정보가 제공되고 적절한 훈련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개인능력개발계획(ILP : Individual Learning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상담 후 개인별 한도를 설정한 직업능력개발 바우처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개인능력개발계획에 기초해 스스로 훈련받을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계비 대부(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와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상담을 통해 훈련대상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업급여 수급권과 훈련의무 연계(mutual obligation)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개인별 수강과정, 수료 여부, 바우처 잔액 등의 정보가 DB화되어 근로자에게 제공될 것이며, 다양한 유·무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 등의 결과가 임금·승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훈련과정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것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폭넓게 개설·운영하도록 하며, 직무과정 외에도 직무기초능력(수리·문해, 팀워크 등), 창업과정(네일아트 등), 직무 관련 교양과정(바리스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의 형태도 다양화해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집체방식 외에 e-Learning(온라인 학습)을 포함한 Blended Learning(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 과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양한 훈련 내용들을 통합적인 정보망을 통해 공개·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의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시장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훈련시장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훈련시장에 대한 진입장벽과 가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우처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다. 우선 훈련시장의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적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과정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은 모두 훈련시장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훈련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요건은 완화하되, 성과평가 후 부실기관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대학도 성인의 현장 직무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비학위·비정규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지원해 훈련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의 직무과정과 직무 관련 교양과정, 대기업과 노조의 훈련과정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비용 지원체계를 다양화해 가격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기준단계에 따른 지원위주의 비용지원체계를 사업단위의 공모·평가, 실비 지원, 수익자 일부 부담방식 등으로 개편한다. 훈련비용체계의 다양화는 질 높은 고급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공급기관의 참여유인을 제고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병행해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를 강화해 성과저조 기관은 퇴출되는 관리체제를 조성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시설·장비, 강사, 훈련기간, 수강료, 평가결과, 취업률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훈련 참여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바우처제의 법적 시행근거,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직무기초능력과 직무 관련 교양과정 등), 대학의 성인 대상 개방형 정규과정 지원, 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완화, 업종별 능력개발협의체 및 사업체 부설 훈련·연수기관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특별법」 제정을 계획 중에 있다.

③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및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14.1%(2004)에서

34.1%(2012)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율은 23.9%(2006)에서 38.0%(2012)로, 비정규직(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12.3%(2006)에서 25.0%(2012)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층훈련상담과 고용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소요기간(직장탐색기간)이 축소되고 실업자의 취업률이 제고될 것이다. 청년층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1개월(2004)에서 6개월(2012)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실업자의 취업률은 54.7%(2004)에서 70%(2012)로 증가할 것이다.

진입장벽 완화,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훈련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훈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숙련노동력의 활용 용이성은 현재 47위에서 2012년 22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과제 외 '인재대국'을 위한 국정과제 목록**

-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 기초학력, 바른인성 책임제
-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5. 성숙한 세계국가

● 전략 17.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5-17-1.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① 과제 개요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에 '철저'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② 추진계획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합의 및 10·3합의에 따른 북한의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이어서 핵폐기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우리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의 전략적 연계하에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 역시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핵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작업 역시 본격화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해 북한의 실질적 개방·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감 해소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이 조성되고, 국제적인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외국인투자 증대, 국내 주가 상승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5-17-2.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① 과제 개요

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될 '비핵·개방·3000' 구상 실천의 첫걸음은 동 구상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내 각 부처의 역할을 통합·조정해 나가고, 남북 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요 과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검증이 완료된 후 핵폐기 협상과정에서는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 협력협정 체결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후 북한 핵폐기 단계에서는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분야(경제, 재정, 교육, 인프라, 생활 향상)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수출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개방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② 추진계획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북한 비핵화 및 개방 단계에 따른 사업 이행을 관리해나가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남북 간 협의체는 우선 기존의 남북회담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상반기 남북회담에서 우리측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대 분야 사업은 범정부 협의체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각 분야별로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을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북한 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해외수출을 진흥시킨다.

② 재정 분야에서는 10년 간 총 400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되,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며,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해외 직접투자 유치, 북·일 관계 개선 관련 자금 등을 활용한다.

③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도로(新경의고속도로 등), 항만, 통신, 에너지 등 분야별·단계별 협력을 추진한다.

④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훈련센터 설립, 경제시찰단 교환, 국제기구 등을 통한 북한 경제인력 양성 지원사업부터 추진한다.

⑤ 생활향상 분야는 보건·의료, 주택·상하수도 개선, 농업협력, 산림녹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기존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 당국간 협의가 상호 보완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기대효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과정에서 북한의 개방 및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남북 경제 통합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17-3.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① 과제 개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적·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동맹·신뢰동맹·평화구축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가이익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이해 및 상호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미래 안보 수요에 부합되도록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는 한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해 한·미 간 신뢰의 질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② 추진계획

2008년도 상반기 중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신뢰·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및 대북정책 등 주요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새로운 동맹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1세기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한·미 양국의 정부·학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한·미

동맹미래비전위원회'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FTA의 조속 비준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③ 기대효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에 기초한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장래와 직결된 북한문제 및 동북아 지역 정세 관리 등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전략동맹의 구축·발전은 우리의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 목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17-4.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① 과제 개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국가적 책무 차원에서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문제의 본질상 일방적 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임기 중 확고하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며 끈기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왕래와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남북자·국군포로의 상봉과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일관성 없이 대응해 온 행태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해외 입국 대기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각종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이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첫째,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9차 적십자회담(2007.11)의 합의수준(연간 대면상봉 400명, 특별상봉(재상봉) 100명, 화상상봉 160가족, 영상편지 120가족)에 따른 교류를 진행해나가면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2008.7 예정)을 계기로 상봉규모를 확대하고 상봉 상시화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추후 판문점에도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산가족의 접근성·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고, 면회소 주변에는 유스호스텔, 공원 등 시설을 건립해 복합문화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 당국간 별도협약의 채널을 구축, 근본적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들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 현행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해결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식, 이의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제사회 및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민간 합동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 강화, 『북한인권백서』(영문·국문) 발간 지원, 배포 확대 등이 그것이다.

넷째, 재외 탈북자들의 해외 대기기간 장기화, 수용시설 과밀화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수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내외적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재외 탈북자 문제 해결은 국내 탈북자에 대한 지원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를 점차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국내 지원체계도 개선해나갈 것이다.

3 기대효과

상기 인도적 과제들의 해결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17-5. 나들섬 구상 추진

1 과제 개요

한강 하구의 자연상태 퇴적지 위에 하천 준설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의 인공섬인 '나들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들섬에는 우리측의 노동·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주로 입주하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공업지구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나들섬, 그리고 강화도,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직결도로, 연육교, 항만 등을 건설해 그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나들섬 구상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 이전 단계에서도 실현할 수 있으나, 중립수역

의 개발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사업인 만큼 북한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 하구 자연습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인공섬 조성으로 인한 홍수 유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건설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강화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나들섬 구상은 타당성 조사 및 대북 협의,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 순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첫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북 협의부터 추진한다. 한강 하구 현지조사와 더불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남북회담에서 나들섬 구상을 제의할 계획이다.

둘째, 나들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소요예산 산정과 편익 분석은 관련 부처·기관 등의 협조하에 면밀히 진행한다.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입지 등 여건을 고려, 수출지향형 기술산업과 물류산업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생태환경 보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들섬은 복합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업지구 외에도 문화지대, 관광지대, 평화지대 등을 개발하고 출퇴근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도시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나들섬은 남북경협을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틀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나들섬 조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는 효과와 더불어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습득과 시장경제 교육을 병행하는 이점도 있어 남북한 모두 윈-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나들섬을 중심으로 해 개성공단과 인천을 잇는 남북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로까지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17-6. 동북아 신흥력체제 구축

① 과제 개요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와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상호 이해·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

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양자·다자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환경·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한·미·일 및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등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① 한·일 신협력체제 구축

한·일 간에는 우선 서틀외교를 복원해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최고위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일·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할 것이며, 한·일 FTA 협상 재개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한·일 간 보편타당한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의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력 확보와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한·중 신협력체제 구축

한·중 간 신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 한·중 정상 간 교류와 고위급 정책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고, 에너지, 환경보호,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내 우리 기업 보호 및 중국 기업 한국 투자 유치 방안 마련 등을 통해 2012년 목표 양국 간 교역액인 2천억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양국 간 호혜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한·러 신협력체제 구축

한·러 간에는 적절한 시기에 정상 방문을 추진해 에너지 분야와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 등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2008년을 '한·러 우주협력의 해'로 선포하고,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계기로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및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러 간 호혜적 경험 추진을 통해 첨단기술 및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 확보 등과 같은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러시

아의 건설적 역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 증진 및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한·미·일 3자 협력

한·미·일 3국 간 폭넓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활성화해 동북아 지역 내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08년 중 개최될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한·미·일 3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중·일 3자 협력

한·중·일 3국 간에는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의 순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며, 3국 간 FTA 체결 추진을 위해 3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도 계속할 계획이다. 환경, 항공·물류, 투자 환경 개선, 청소년 교류 등 분야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한 실리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17-7.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① 과제 개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생태적 가치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를 실제 개발해 이용하는 것은 △ 군사·안보적 측면 △북한의 호응 △ 개발과 보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설득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남북회담 기회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가치 및 평화적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UNESCO,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설득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간 이미 합의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역사유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이용계획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평화도시 건설, 합작농장, 생태공원 조성 등 본격적인 남북공동개발과 함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해나간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사업은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생태계 복원 및 공동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되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은 물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전략18. 실용적 통상외교와 능동적 개방

5-18-1.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① 과제 개요

최근 국제사회는 범세계적 차원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급한 외교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정부는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에너지·자원 외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취약한 에너지 안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에너지·자원 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② 추진계획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 자원보유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연계 진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외교, 총리·특사 파견 등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아중동·동남아·중남미를 아우르는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해 에너지·자원의 공급기반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러, 동북아 역내 에너지 수요국과 공급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 에너지 정책 대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외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내 '에너지 외교전략 협의체'를 신설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 정책 조정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거점 공관을 확대·운영하며, 에너지·자원 담당대사를 임명해 순회 에너지 외교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동·아랍 소사이어티' 창립, 유망 자원·에너지 거점국가에 대한 상주공관 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이러한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기반을 마련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2. FTA 체결 다변화 추진

① 과제 개요

우리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선진경제권 국가와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 예상국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에너지·자원 부국과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2008년 중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인도·멕시코·캐나다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일 FTA 및 한·중 FTA는 이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제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협상 재개·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러시아 등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 예상 경제권, GCC(걸프지역 6개 산유국의 정치·경제 협의체) 등 자원부국과의 FTA도 추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중·일 FTA, ASEAN+3 FTA(EAFTA) 등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무관세 교역 혜택을 우리 수출액의 7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3. 기여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① 과제 개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책임의식에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외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물질적 기여를 증대하고, 해외청년봉사단을 확대해 UN의 천년개발목표(MDG)와 국제사회의 최빈국 및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추진계획

2008~2015년간 우리의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GNI 대비 ODA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ODA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조효과를 강화하고,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ODA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ODA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지역별·국가별 개발 수요에 따른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유·무상 원조 간 조화를 통해 전체 ODA의 효과를 제고하고 △비구속성 원조 확대 및 EU 등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과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KOICA 청년해외봉사단 파견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청년층에게 국제적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UNDP(유엔연합개발계획), World Bank, UNICEF(유니세프), MOPAN,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등 다자개발기구 참여확대를 통한 공여국 간 원조 조화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OECD-DAC 가입을 통해 ODA 체계를 선진화하고 원조효과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DA를 대개도국 경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18-4.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① 과제 개요

21세기 들어 분쟁의 국제화, 실패국가 증가 등으로 PKO 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선진국들도 국익과 연계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예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 경험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PKO 참여 관련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우리 국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유엔 PKO 활동 참여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해 PKO 파병 관련 국내절차를 합리화·간소화하기 위한 「PKO 참여법」 입법을 추진하고, 유엔상비체제(UNSSA) 참여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평화·안정에의 기여 차원에서 필요시 다국적군 활동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PKO 파병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와 관련해 실제 수요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가 차원의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 센터 설립시 연구·교육·세미나 개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③ 기대효과

PKO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 평화·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의 국제화를 통해 그 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고 대개도국 협력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건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5. 외교부 인력충원제도 개선 및 해외공관 인력 조정

① 과제 개요

한반도 평화 정착, 미래 성장동력 창출, 대국민 영사 서비스 향상 등 당면 외교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인력충원제도를 개선해 다변화하고, 해외공관 인력 재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외교부 인력충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외무고시, 특채 등 다양한 경로로 외교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우수인력 임용을 위해 검증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1세기 외교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외공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인력이 해외공관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공관 인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에 주재관 재배치 및 업무 분야 조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에너지·자원 공관의 추가 개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다양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외교관을 선발해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업무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재외공관의 인력 재배치로 외교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자원 공관 추가 신설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관련 대기업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18-6.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① 과제 개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은 비자제도를 개선해 우수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36개의 비자 종류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대별하고, 비이민비자의 종류를 유학·취업·방문 등으로 단순화해 외국인 과학자·투자자·기업인 등 우수인재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국내 대학 우수 졸업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허용하고 영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4만 1,780명 중 연간 약 5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목적의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및 면제 범위를 확대해 연평균 30% 증가를 목표로 5년 이내에 연간 중국인 입국자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정자격의 숙련 기능인력을 기업이 선택해 적시에 고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근무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인력 활용체계도 개선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숙련 기능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 및 국적제도를 개선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해 선별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해 고급인재의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도모하고, 중국동포·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② 추진계획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비자제도 개선 내용에는 외국인 과학자 등 우수인재와 국내 대학 졸업 우수 외국인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및 영주권 부여, 중국인 비자 발급 및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비자체계 단순화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숙련 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의 근무처 자유 이동 허용 등 기업의 인력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는 등 외국 인력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수국적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적법을 개정해 출입국 및 국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적극적으로 우수 이민자를 수용하고 중국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기술혁신, 세수확대, 고용창출로 새 정부의 역점사업인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별적 복수국적 인정으로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이 보장돼 우수인재의 귀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략19.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5-19-1.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① 과제 개요

‘국방개혁 2020’은 21세기 선진 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계해 미래 안보 상황 및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은 국방개혁을 통해 최첨단 전력구조를 갖춘 강한 군대를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군도 가용한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보 상황 변화와 소요 예산의 부족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설정한 필수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재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계획

‘국방개혁 2020’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군은 병력을 감축하되 전력은 첨단화하고, 해·공군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구조를 정보·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립된 기본 계획 중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안보 상황과 가용한 국방재원을 반영해 중기적 감축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단계별 병력 감축 수준과 연계해 부대구조 개편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북한의 상비·예비병력 수준(890여만명) 및 우리의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해 예비전력의 활용에 대해서도 심층 깊게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300여만명에 달하는 예비병력 규모를 1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무기·장비를 현대화하며, 효율적인 전·평시 동원을 위한 「동원기본법」을 제정하고 훈련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예비전력 운용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적정 국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국방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계획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소요 예산은 기간 중 정부재정 증가율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재산정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병력·부대 구조조정을 연계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재설정할 계획이다. 비전투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과 유사 기능, 중복 조직의 통·폐합 등을 통해 전력 투자비의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부·합참·각군 및 관련

부처 대표자, 안보 관련 민간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2008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국방개혁 2020'의 보완을 통해 군을 21세기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킴으로써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자원 절약형 군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19-2.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① 과제 개요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과제는 병영시설 현대화 등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의료체계를 개혁하며, 직업군인의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전반적인 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류 선진병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추진계획

① 신세대 병영생활 여건 개선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 병영생활관, 독신자 숙소, 군 관사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중점사업으로 관리하되, 독신자 숙소와 군 관사는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부대별 독립가옥 형태보다는 지역별 타운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병들의 불만사항이던 군 피복 및 장구류의 품질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며, 획득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어학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대별 사이버 지식정보 방에 어학 콘텐츠를 보강하고, 교재 지원을 확대하며, 부대별로 특기병을 활용해 자율적인 어학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말에 치르는 어학시험 응시 여건을 보장해 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내에서 생활하는 의무복무자와 초급간부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영내 군매점

(PX)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현역 의무복무 이행으로 희생한 시간과 기회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 차원에서 의무복무자 부모나 전역 이후 본인에게 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을 근거로 해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민군통합복지센터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 인력의 역할 증대를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군내 여성 활용 직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근무저해 요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군 의료체계 개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사단급 1차 진료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계획을 2008년도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군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병원의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의사 채용을 연차적으로 늘어나갈 계획이다.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적시에 후송할 수 있도록 전천후 의무헬기(10대) 도입을 검토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개선형 구급차 보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후방지역은 국·공립 병원과의 교류·협진을 확대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의료 인력의 수련과 연구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며, 전방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민·군 통합병원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직업군인 복지 증진

지역 혐오시설로 전락된 노후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군인에 대해 군 관사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직업의 특성상 이사가 빈번한 직업군인에게 실질적인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희망지역에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7급 이상 과장급과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책별 특정업무비'를 군인 해당 직급인 중령·소령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정책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비해 훨씬 낙후된 군 병영 환경과 복지 수준, 의료 서비스 등의 질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해 장병들이 국가방위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5-19-3.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① 과제 개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재래식 전력의 능력과 공격적 태세는 한반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워 북한군을 ‘총폭탄 정신’으로 사상 무장하면서, 세계 제5위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주요 전력을 증강하는데 연평균 GDP의 1/4 이상(우리의 국방비는 GDP의 3% 이하 수준)을 투자해 왔다. 더욱이 북한군 전력의 70%가 평양·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경우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등의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모호성 유지전략’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노동·대포동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다량의 화학·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도 장사정포·잠수함·공기부양정·C4I능력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북한 체제 내부요인에 의한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위험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의 계획과 준비노력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② 추진계획

우리 군은 평시 위기관리 및 즉응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가능성과 내부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방적·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조기경보·정밀타격·요격·방호·C4I능력으로 구성된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비롯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해 개인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의 실상과 우리 군의 대비활동에 관해 공개 가능한 내용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미연합방위태세는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군의 의도·능력·태세 등 모든 변화요소들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연합작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중장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평가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증원전력 전개에 관한 공약이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자연 재해·재난시 인도적 활동 지원, 연합 탐색과 구조 훈련 등을 확대해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 새 정부의 ‘정숙한 세계국가’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및 방위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08년 8월에 실시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 연습시 정부의 연습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환원시킬 것이다.

핵·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기구(NPT, IAEA, CTBT, OPCW, BWC, MTCR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군비통제 관련 기구들에 정부 대표 또는 상주근무인력의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테러집단 등 ‘비(非)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540호’(2004)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국내법, 즉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화학생물무기금지법」, 「남북교류촉진법」, 「원자력법」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Track II)의 활동을 촉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구축해 나갈 것이다.

3 기대효과

위와 같은 노력과 활동으로 지난 10년간 약화된 안보의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의 중요성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19-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① 과제 개요

전작권 전환은 중대한 안보·국방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자주’의 논리로만 접근하다보니 논의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왜곡됐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간 공식적 논의는 참여정부의 최초 제의에 따라 2005년 10월에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본합의서인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실천계획’(2006.10)을 완성하고, 이를 구체화한 이행계획서인 ‘전략적 전환계획’(2007.10)을 마련한 상태이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시간에 의한 접근’ 원칙을 고수하면서 2012년 4월 12일 전환 시점을 안보환경 변화 등의 조건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양국 정부간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② 추진계획

새 정부는 이미 양국이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시점까지 세부 합의사항과 그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우리 연합방위태세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환을 계획대로 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우리 군의 전구(戰區)작전 지휘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의 진전 상황,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가시적 진전, 2009년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연도인 2012년에 양국이 공동으로 설계한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및 협력체계’ 하에서 과연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지,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한반도, 아·태지역, 세계 차원에서 ‘역할·임무·능력(Role·Mission·Capability)’ 등 3개 영역에서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미 합의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둘째,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안보환경 변화 추이, 합의사항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한·미 양국이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셋째, 매년 한·미연합연습(을지 프리덤 가디언)시 우리 군의 전구작전 지휘능력과 체계를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보완 작업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결정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미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추후 협의시 융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관리는 양국 간 이해 증진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포괄적(경제·문화 등 포함)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전략20. 친환경 경제·에너지구조

5-20-1.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 해외진출전략 추진

① 과제 개요

최근의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범국가적 어젠다(국책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자금력·기술력 등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기본역량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와 유사한 전략과 방식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외 자원개발전략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 자원개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이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은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산업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보유국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SOC 건설, 기간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다.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고도의 경제개발을 달성한 경험이 있고, 에너지 인프라, SOC 건설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보유국의 좋은 경제·산업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현재 나이지리아·방글라

데시 등과 자원개발과 발전소 건설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알제리·아제르바이잔·인도네시아 등과는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과 전략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 활동 기간 중 다양한 논의를 통해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로 설정해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② 추진계획

자원보유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자원개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할 것이다.

이때 자원보유국의 경제·산업 여건, 자원보유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발계획,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의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원보유국별로 자원개발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발전소 건설, IT 통신망 구축, 석유화학 등)를 발굴해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위주로 돼 있는 동반진출 산업을 건설·플랜트 등 기간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해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발굴·수주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각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가별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동반협력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적기에 발굴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 지원을 도모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자원개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자원개발 전문기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해외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함으로써 해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2년까지 18.1%(2007년 4.2%), 철·동·유연탄 등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2012년까지 32.0%(2007년 18.2%)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자원개발과 연계한 자원보유국과의 경제·산업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이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0-2.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① 과제 개요

지난 100년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0.74°C 상승했고, 평균 해수면도 연간 1.8mm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2007년 9월 UN 고위급회의와 주요 경제국회의, 12월 발리회의 등이 개최됐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문제가 최우선 국가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위기)인 동시에 핵심기술 선점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SOC 인프라 보강, 생태·농·림·수산자원 보전 등 적응대책,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기후변화대응 R&D 대책 마련 등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방향으로 △국제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전략 수립 △기후변화·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화 △복합 조립사업 등을 통한 한반도 생태축 연결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기후변화·에너지 외교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② 추진계획

① 온실가스 감축 분야

첫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06년 2.2%→2012년 5%→2030년 9%), 천연가스·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인벤토리도 구축한다.

둘째, 2008년 중 중장기 원자력 국가 목표를 재설정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디자인·금융·보험 등 에너지 저소비형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해 환경친화형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셋째,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감축계획을 이행하고, ESCO사업을 강화하고 투자를 지원한다. 교통·물류 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확대하며, 대중교통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한다. 국토·도시 부문에서는 저탄소형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가정·건축 부문에서는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을 확대하며, 가전기기 효율 제고, 건물외피 및 창호 열성능 개선, 단열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북한 황폐지 산림녹화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축분·바이오매스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펀드 추가 조성 등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② 기후변화 적응 분야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형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대기·보건·산업·도시·해양·물관리 등 부문별 적응대책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행, 기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환경·교육 캠페인 강화, 지자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범사회적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③ 연구개발 분야

차세대 원전, 수소연료전지 등 기초·원천기술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개발, 보일러 등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고효율화, 원자력 독자 시스템 개발과 기술자립화를 추진한다.

④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

태양광, 풍력,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IGCC),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상용화를 통한 국제시장 진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진출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해외 발전설비용량 8,000MW 확보, 해외 전력플랜트 연간 300억달러 수출, 중전기기 연간 200억달러 수출, 석유제품·정유(비축) 플랜트 및 관련 기술 수출,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⑤ 국제협력 및 인프라 구축

국가별 감축의무 대비 Post-2012 협상 대응전략 수립, 기후변화 통계 작성 등을 지원할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지원, 국제협상·배출권거래·CDM 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재원 조달, UN 부설 국제지속가능 에너지연구소 유치 등을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사전 이행준비를 통해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수준의 친환경산업 육성 및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 2조달러 이상 규모로 전망되는 세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시장의 4%를 우리 기업이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전대책 수립·시행으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5-20-3.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

① 과제 개요

한반도대운하사업은 한반도를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로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물길로 연결해 환경 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 예방, 물류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내외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친환경·친문화적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② 추진계획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프로젝트 자체의 정확한 이해 증진이다. 대선 과정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구체적인 필요성과 논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뜬구름 잡기식의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한반도대운하가 친환경·친문화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물류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전문가(예 : 네덜란드·독일 등) 현지답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자체·학회 등 중심의 토론회·설명회·현지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친문화적이고 재해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이다. 토사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진 이른바 '손상된 자연'을 대운하 건설을 통해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연보

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친문화적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문화재·생태계는 전문가(NGO 포함) 중심의 전반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 편익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인 발상전환이다. 폐쇄적으로 짜여진 내륙중심의 국토구조를 개방지향적이고 해양지향적으로 개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하의 이용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국제 물류·운송 제도와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대운하와 주변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역사·레저 등의 부대사업을 짜임새 있게 준비할 것이다.

넷째,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민자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이다. 경부운하, 호남·충청운하 등 대운하사업의 추진방식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간제안이 이뤄질 경우 민간사업자(Special Purpose Company)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한반도대운하는 생명을 파거나 콘크리트를 바른 독일 MD운하의 모델이 아닌 우리 옛 수로를 그대로 복원하는 생태복원사업이다. 수로 주변에 생태하천, 인공습지 등을 조성해 수질의 정화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의 자연강변 등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설을 통해 물 밑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을 건어내 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준설에 의해 확보된 공간으로 다량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홍수 위 저하에 따른 홍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운하 주변의 매몰되거나 사라져버린 문화와 역사를 되찾는 사업이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레저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하를 통해 사라져버린 옛 문화와 역사를 축제화해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여가활동과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면 본격적인 여가활동·관광시대가 열리는데, 물길이 이어지면 문화관광권이 줄지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길이 이어지면 인심이 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륙수로 교통망이 없다. 경제규모 10위권대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내륙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EU 국가들은 장기적·지속적으로 도로교통으로부터 철도 및 내륙수로교통으로 운송수단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구미·대구·문경·충주·여주·광주·나주 등을 내륙 항구화해 각 도시의 세계화·국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륙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식어가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하는 도로수송에 비해 물류비용을 1/3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물류운송의 경쟁력은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정시성·안정성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급한 상품을 제외하고 운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도로수송에 비해 운하는 1/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에너지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20-4.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① 과제 개요

급속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국 산과 하천, 연안의 생태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이 흐르는 길로만 여겨 복개해 도로로 사용하던 실개천과 도랑이 청계천 복원사업 등 환경 재창조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생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감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생태계 또한 소극적인 보전조치를 넘어 적극적인 복원대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생태계 보전과 복원업무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어 있어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인 하구나 석호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거나 부처간 영역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륙과 연안의 생태계 현황을 점검해 끊어진 곳은 잇고 잘 보전된 곳은 새로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단위 자연생태계 관리가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

자연환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전국을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태백권 등 5대 대권역의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식물축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태의 여건, 지리·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해 광역 생태축을 설정하고 훼손된 핵심 생태축에 대한 연차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중 각 기관별 합동TF를 구성해 복원목표와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생태복원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천~하구~연안 등 물길로 이어지는 생태계와 이를 매개로 한 연안도시와 농촌지역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5대강 하천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천·도랑·실개천에 대한 생태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생활주변 생태공간을 제대로 살려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훼손된 지방하천 1만 2,077km 중 15%에 해당하는 1,784km를 연차적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2008년 중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해 2009년부터 매년 100개의 실개천·도랑의 오염조사와 생태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구·갯벌·사구(砂丘), 도서(島嶼), 석호(潟湖) 등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 등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보전·관리전략을 수립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천과 해양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매년 홍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 하천과 해양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대강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하천과 하구 쓰레기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③ 기대효과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동 사업을 통해 국가 생태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한 국민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활주변의 하천과 실개천이 2012년까지 62%가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게 돼 국민들의 환경과 생태 향유권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20-5.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① 과제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여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주요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급증하고 수소연료전지의 세계시장도 1천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돼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해 중점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 연구개발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보급의 병목현상(Bottleneck)을 제거하고 미래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증과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인수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② 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축적되어 있는 반도체와 기계 분야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효율 태양전지와 차세대 태양전지의 기술개발, 5MW급 해상풍력 시스템 기술개발 등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선진국도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국내 기술경쟁력과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모니터링(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에 민간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보급협약인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정부와 9개 에너지 공기업 간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에는 한국전력, 6개 발전사, 한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RPA 참여를 통해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성과를 점검하고 제2차 RPA(2009~2011년)를 2008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보급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PA에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하는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에너지 공급·발전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할당제도)가 검토될 것이고, RP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008년의 68%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 2012년까지 부분별로 75~95% 수준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RPA, 기술개발 투자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600억원 정도가 투자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 전략 21.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5-21-1.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① 과제 개요

창의성이 중시되는 감성시대의 도래로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디자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디자인을 통해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반의 디자인정책을 관장할 국가디자인위원회(National Design Council)를 구성해 범국가적 디자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국가 이미지 브랜드를 개발해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공공·민간·산업 분야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디자이너의 창의성 함양을 위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감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성화된 디자인 교육기관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디자인산업의 공급자인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R&D 예산 중 디자인 분야의 비율을 제고하고, 선도 디자인 기업 육성과 디자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트렌드, 소재·색채 등 패션의 개념을 디자인에 융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상반기 중에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멋진 한국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 지원·육성·확산에 관한 협의체로서 ‘국가디자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국가 디자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디자인정책의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 디자인 지원·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08년 하반기부터 디자인 교육 강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디자인 지원·육성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③ 기대효과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 특징이 살아 있는 국가 이미지 브랜드 정립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문화·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디자인 관련 인재육성과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 고용 창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5-21-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① 과제 개요

글로벌 환경에서 도시의 경쟁력은 창조성, 문화 인프라, 생활여건 등에 달려 있다. 특색 있고 창조적인 공간은 국가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건축 분야에 친인간·친문화 디자인을 적용해 일상생활 공간을 개조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도시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전통과 특색이 적고, 일률적인 건축물 형태와 공공시설물로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 디자인정책은 단편적인 시각 디자인 개선(가로 포장, 건축물 색채 개선 등)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축·경관을 아우르는 통합된 체계를 갖춰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②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축·도시 디자인 정착을 위해 건축·도시 디자인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건축기본법」 제정(2007.12)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축·도시 디자인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해 도시 공간, 건축 설계,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위원회는 건축·도시 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한반도대운하, 새만금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에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건축·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시설에 관한 디자인 조정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의 정체성, 안전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을 반영하는 건축·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에는 도시 매력성(Amenity)과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의무화한다.

주요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건축·도시 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의 창조적 건축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일부 건축법령의 특례를 인정하는 '건축·도시디자인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철도역사지구문화 복합화사업, 역사문화지구 공간디자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중소도시 상징가로(Brand Street)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자인정책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광장·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관련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관법」에는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건축법·건축기본법에 총괄계획가(Master Architect, Master Planner) 제도 및 건축·도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도시 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도시 공공시설·건축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품격이 제고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상징성과 특징 있는 건조(建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과제 외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목록

-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 공동체 구축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 인권·문화 외교 강화
-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 물동량 유치를 위한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 다문화 가족 포용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시행
- 국방경영 효율화
- 방위산업의 신경계성장동력화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 에너지 R&D 확대 및 사업화 촉진

제3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자료 모음

3.

제1장 활동보고서

제2장 보도자료

제3장 브리핑자료

1 장

활동보고서

2007년 12월 27일

- 오늘은 각 분과 간사단회의를 오전, 오후 계속하였음.
- 오전 회의는 김형오 부위원장이, 오후 회의는 이경숙 위원장이 주재하였음.

1. 주요 결정 사항

1) 인수위 8대 어젠다 선정

- 오늘 회의 모두에서 향후 인수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 :
민생경제 최우선 / 공공부문 및 정부조직 개편 /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 교육 개혁 / 부동산 안정화 대책 / 부패 척결 방안 / 청년실업 해소방안 /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 마련
 - ▶ 이동관 대변인이 어젠다에 대해 소상한 브리핑을 했음. 특히 28일 당선인의 기업총수들 면담은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에 큰 뜻이 있음을 부연 설명했음.

2) 정부에 대한 공무원 인사 자제 요청

-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인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기로 했음.
 - ▶ 이에 따라 금일 오후 즉각 청와대비서실장(인사수석 경유)에게 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3) 정부조직 개편

- 국무총리 등 조각에 필요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입법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을 감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1월 10일경까지는 시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시안 마련 후 그에 대한 토론을 수차례 거치기로 하였음.
 - ▶ 언론 브리핑에서 '2주일 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나왔으나, 대변인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답변함.

4) 정부부처 업무보고 문제

- 업무보고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종료한다는 원칙 아래 서둘러 진행기로 했음. (각 분과별 일정 수립 후 적절히 조정할 계획임).
-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통상의 방법을 크게 탈피하여 과제 추출 및 공약사업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부처별 일반현황 자료 등은 대폭 축소토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보

고서에 포함토록 하였음 : 지난 5년간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 경과, 문제점, 예산절감 방안 등/대통령당선인 공약 연도별 추진계획/예산 10% 절감방안 및 절감예산 활용방안 /규제개혁 방안/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 이같은 방침을 각 부처 장관에게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보고서는 하루 전에 인수위에 도착토록 하여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협조요청함.

2. 인수위 운영 관련 사항

1) 인수위 운영 원칙 전달

- 백성운 행정실장이 간사단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선인 운영 원칙을 전달했음.
 - 위원회 인력 및 경비 20% 절감/전력, 물자 절약 등 검소하고 수범적인 인수위 운영

2) 회의 운영

- 당선인 주재 전체회의 :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 ▶ 단 1월 1일(화) 회의는 12월 31일로 앞당겨 개최
- 간사단회의 : 매일 오전 7시 30분 개최, 위원장 주재, 필요시 부위원장 주재

3) 당선인에 대한 주제별 보고회의

- 각 분과별로 해당 주제 담당 위원이 직접 보고(당선인집무실)
- 일정은 당선인에게 보고하여 적의 조정 예정

4) 워크숍 개최

- 12월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개최
- 장소 : 인수위원회 대회의실

5) 기자단 브리핑

- 1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대언론 관계 강화 : 오전 9시30분 / 오후 3시
- 분과별 회의 결과는 위원장단 및 기획위와 협의 거친 후 해당 분과위원과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하는 방식 : 추측 보도 및 왜곡 차단

6) 보안 문제

- 공식발표하지 않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지위고하 막론, 책임을 묻겠다' 고 하신 당선인 말씀을 김형오 부위원장이 전원에게 강조하여 전달
-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그 내용을 인수위와 협의 없이 누출 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다는 내부 방침 확정
 - ▶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장관에게 보낸 공문에도 포함시켰음.

3. 이경숙 위원장 활동 및 예우 관련

1) 기자단 오찬 준비

- 적절한 시점에 이경숙 위원장과 기자단 오찬 마련(이동관 대변인에 일임)

2) 민생·정책 현장 방문 기회 마련

- 현장 중심 인수위 활동 일환으로 이 위원장이 민생 현장과 정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예정

3) 기타

- 당선인, 당직자, 당 원로 등과 회동 기회를 마련할 예정, 오찬 또는 만찬 형식

2007년 12월 28일

- 오늘 간사단회의는 당선인의 일정 등에 따라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샌드위치로 아침을 들며 오전회의만 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이경숙 위원장 당부말씀 요지

- 우리는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 원칙 아래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나가야 함.
-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함. 이 같은 정책의 중심에 바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함.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함.
- 저는 요즘 매일 학기말 시험을 보는 기분임. 열심히 공약집, 16대 인수위 백서 등을 챙겨 읽으며 공부하고 있음.
- 2월 25일 취임까지 많은 날이 남아 있지 않음. 그리고 인수위 일은 사실상 한 달 새에 이루어져야 함. 낮밤 가리지 않고 모두가 적극적인 성의를 갖고 노력해야 함.

2) 김형오 부위원장 당부말씀 요지

- 당선인의 어제 태안 재난현장 방문, 오늘 재계 인사 간담회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 면담 등 매우 분주한 행보에 대해 인수위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와 관련한 방재·안전 시스템 등과 오늘 경제인들의 건의 내용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

- 박형준 위원의 발제로 토론이 있었음.
-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는 중소기업과 함께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사인만큼 인수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명박정부가 보수정부·친기업적 정부라는 인식이 일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음.
- 핵심 과제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약속이 구호로 끝난 점을 감안할 때 지방화와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위해서도 △광역 지방경제 활성화 △새만금, 과학비즈니스 도시 △한반도대운하 등 지방발전 프로젝트들은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졌음.
- 이에 대해 지방 관련 공약은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인수위가 당장 다루기엔 벅차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론이 있었음.
- 그러나 국정 주요 목표 설정과 차기정부의 의지를 시현하는 입장에서 일단 인수위의 과제로 설정하기로 했음.
 - ▶ 이에 따라 대변인은 경제분과·국가경쟁력강화특위 등이 구체안을 마련해 나가라는 이경숙 위원장의 지시를 포함, 지방경제 활성화를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는 점을 발표하였음.

4) 언론 대처 및 오보 방지문제

- 동아일보(2009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민일보(국정원 개혁방안) 등 최근 언론의 인수위 관련 일방 보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음.
 - 박진, 진수희 의원의 상황설명이 있었음.
- 이런 보도는 없어야 하며, 필요시 공식 항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 김형오 부위원장이 대변인과 함께 기자실에서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음. 당부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인수위, 인수위 관계자 이름으로 나가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 달라. 미확인 사안,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
 - 인수위의 논의의 장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나 논의된 것이 보도되는 것은 국민적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으며, 확인된 것만 보도해 달라.
 - 특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보도되면 대단히 혼란이 온다. 꼭 확인한 이후 보도해 주길 당부한다.

2. 국민여론 수렴방안

- 일반 국민의 인수위에 대한 기대, 시민단체 등의 정책건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론했음.
- 국민성공제안센터의 체제가 갖추어지기까지는 대변인실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여론을 취합키로 했으며, 국민성공제안센터의 가동이 본격화되면 간사단회의에 매일 활동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통로를 대폭 할애키로 하였음.

3.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활동

1) 외국인투자 현황 및 과제 브리핑

- 면담자 : KOTRA IK 정동수 단장 외 4명
- 면담요지 : 외국인투자 관련 TF의 핵심과제, 외국인투자 현황 및 개선과제, 외국인투자 유치 증장기 발전계획, 외국인투자 인프라 구축문제, TF 인력지원 문제
- 외국인투자 TF 구성 방안 논의

2) 한반도대운하 관련 5개 건설사 초청 조찬 모임 참석

- 참석자 : 장석호 한반도대운하TF 팀장
- 일시 : 12. 28(금) 07:30, 강남 임페리얼호텔
- 주관 : 5대 건설사 대표(삼성, 대우, GS, 현대, 대림)
- 토의 내용 : 5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운하 건설 관련 민간제안서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008년 1월부터 업무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함.

3) 국제과학비즈니스 관련

- 비즈니스 TF 조직 구성 : 과학비즈니스벨트TF를 3개 위원회의 자문위원 17명과 실무위원 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
- TF 활동 일정
 - 2007.12.31(월) :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전체 워크숍
 - 2008.1.4(금)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이슈 발굴
 - 1.11(금) 이슈별 해결 방안 도출
 - 1.25(금) 실천계획 완성

4) 정부혁신·규제개혁 관련

- 정부조직 개편안 10개 수집 및 분석 : 당 정책위, 행정부, 학회, 캠프 등

2007년 12월 29일

- 오늘은 인수위원회 첫 워크숍이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음.
- 워크숍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됨.

1. 워크숍 내용 요약

1) 제1부 :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초

(1) 박형준 위원 기초발제 요지

- 이명박정부의 철학은 21세기 자유주의와 실용주의 : 새로운 공동체주의 향한 포용적 자유주의/성장성과 경험 중시하는 실사구시 정신
- 2008년 신발전체제 : 경제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민간주도형 발전과 성장·분배 동시 견인/지방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적극적 능동적 복지/인재 강국, 창조적 프로젝트, 서비스 부문 강국/법치주의와 뉴 거버넌스에 입각한 민주주의
- 이명박정부의 성공 조건 : 화합 속의 변화와 민심의 지지/성과와 업적의 생산/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정교화/안정의식 확보와 생산적 국회 관계/공직 부패 방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 첫해의 성공이 절반의 성공 : 성공적 인수위 활동과 조각 등 인사/기초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정상화/초광역 단위 공동 프로젝트 지원 강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너지 외교 등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2) 토론

-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중요하다.
- 좌우 이념 스펙트럼을 10으로 할 때 70년대는 7정도의 우, 지난 10년은 4정도의 좌였다. 이명박정부는 6정도 돼야 한다. 10년 좌경은 청산돼야 한다.
- 핵심은 경제와 교육개혁이다.
- 실용주의에 대한 해석은 이제는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2008 신발전체제 개념이 좋다.
- 자기창조적인 신실용주의가 되어야 한다.

(3) 정부 호칭 문제

-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와 같은 별도의 정부 호칭을 창안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중론은 '이명박정부' 로 하하는데 모아졌음. 당선인의 강력하고 압도적인 이미지보다 더 좋은 명칭은 창안하기 어려우며, 굳이 별도의 호칭이 필요한가 하는 것임.
- 반면, 이 문제는 쉽게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외부의 견해 등을 청취하자, 공모도 고려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 일단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았음.

2) 제2부 :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곽승준 위원)

대선 공약 설명(강만수 위원)

(1) 총론

- 공약을 다 추진할 수는 없다는 공감하에 △각 분과위에서 해야 할 일은 공약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실행가능성(재원조달방안 포함)을 점검해 추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기획조정 분과에서는 분과간 중첩되는 것, 타 대통령 후보 공약 중 쓸만한 것, 부처간 공동 프로젝트(ex.광역경제권) 등을 검토하기로 함.

(2) 주제별 토론 내용

- 7% 경제성장 관련
 - 당선인은 숫자는 언급하지 말 것 △정부출범 후 적정시점에 관련 부처에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함. △인수위 단계에서 성장률 관련 논의를 내놓는 것은 신뢰성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논의는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음.
 - 7% 관련 개념과 관련하여 국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잠재성장률을 의미하며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5년 평균개념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예산 10%절감 관련
 - 지방경비 비중 과다, 비탄력성경비 70% 등 우리의 예산구조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함.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을 잘 묶어 추진해야 한다는 점, 업무추진비 사용 축소 등 실현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 그러나 예산절감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방안 강구키로 함.
- 서민생활비 30% 절감 관련
 - 유류세 인하, 통신비, 사교육비, 보육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서민생활비 절감정책은 빨리 실행하기로 함.
- 안보통일외교 관련
 - 4강 외교, G8회담 도쿄 개최, 8월 베이징올림픽, ASEM 정상회의 등 내년도 외교일정을 활용, 성숙한 세계국가의 원년으로 만들자.
- '유럽에는 사르코지, 아시아는 이명박' 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할 것임.

- 한·미동맹은 원칙적으로 안보동맹인데 공약이 너무 빈약하므로 내용을 더 확충해야 함.
- 문화부문 취약 지적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주로 금융, 미디어, 문화 쪽임. 특히 문화산업 관련 분과에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함.
- 위원회 운영방안 토론
 - 정부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는 것은 책임을 물을 것임. 언론브리핑은 분과위와 대변인이 협의해서 시행하기로 함.
 - 부처업무보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주 단위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인수위 활동 취재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기조 분과와 대변인이 협의하여 주 단위 언론홍보계획을 세워 집행하기로 함./시기별 단계별 전략적 이슈선택 필요성이 제기됐음.

2. 인수위원장실 이전

- 위원장실이 통의동사무실에 설치됐던 관계로 불편이 따랐던 바, 29일자로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로 이전 완료했음.

3. 인수위원회 실무인력 인사

- 전문위원·행정관 등 실무자 선정을 마쳐 31일자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임.
- 이미 일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정부 측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것임.
- 인수위 사무처에 배치할 수 없는 인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중 필요한 인력은 상근직을 신설했음.

4. 연말연시 일정

-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는 정상 가동함.
- 일정
 - 2007.12.30(일) : 실무 인력 분과별 업무 착수
 - 2007.12.31(월) : 08시- 인수위 전체회의 / 16시-임명장 수여식
 - 2008.1.1(화) : 08시-현충원 참배 / 09시-위원장, 부위원장 한나라당 신년인사회 참석 / 11시-인수위 시무식 / 떡국으로 점심 식사 / 오후-간사단회의

2007년 12월 31일

- 오전 8시에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인수위 예산 등 2건을 의결 처리함.
- 정부 업무보고는 1월 2일 시작하여 초순에 다 마치기로 함.

1. 제2차 전체회의

1) 인수위 예산안·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 21억 9,700만원 규모의 인수위 예산안을 의결, 정부에 요청함. : 당선인의 예산절감 지시에 따라 16대 대비 12.2% 실질 감액하였으며 인수위원용 사무집기를 일반직원용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고 모든기기는 임차하는 등 필수 소요 중심의 실용적 예산으로 편성
- 인수위 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안 의결 :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정책연구위원으로 하여 전체인원을 줄이고도 업무 효율은 극대화 도모

2) 결정 및 논의사항

- 부처별 업무보고는 1월 초순 내 완료하기로 함.
 - 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을 주책임자로 하며 인원은 최소화하여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임.
 - 부처 보고는 앞으로 5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고 참고사항임. 공약 및 현안중심으로 하고 종합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로 함.
 -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 이슈를 전·중·후반에 적절하게 배분, 예를 들면 청와대·교육부는 초반에 보고받기로 함.
- 각 특위는 업무(Task)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고받기로 함.

3) 각 분과별 주요 보고 내용

- 대운하 관련 : 대운하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인수위부터 대운하사업 관련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워크숍에서 설명하기로 함.
- 경제연구원 원장들과의 간담회 : 당선인의 전경련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월 2일 경제 I 분과 주관으로 10개 경제연구원 원장들과 간담회 개최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운영계획
 - 국민 주관심사인「경제살리기, 교육개혁, 국민통합」정책 중점 발굴
 - 추진전략은 △기다리는 접수가 아닌 분야별, 계층별 탐방을 통한 능동접수 △국민 개인은 물론 NGO, 중소기업, 언론, 오피니언리더 활용 접수 △자문위원단 적극 활용 등
 - 1주 단위로 취합하여 해당분과에 이첩하고 우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방안 검토

2. 임명장 수여, 본격 업무개시

- 전문위원 등 총 192명에 임명장 수여 : 전문위원 63명(정부측 37명, 당측 26명)/실무위원 59명(정부측 38명, 당측 21명)/자문위원 42명/정책연구위원 28명
- 위원장은 “섬기는 정부·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다리를 만드는 무거운 책임감, 사명감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

3.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활동

1) 사공일 위원장 12월 30일 기자회견

- 당선인의 경제철학 등 중심으로 특위 활동방향 설명/출입기자 30여명 대상

2) 새만금TF

- 새만금 추진을 위한 특별법 검토/법안 성안 및 추진전략 검토/정부 예산 파악

4. 내일(11) 일정 및 활동사항 관련

- 전체 직원 정상 근무실시 : 11시에 시무식 개최, 분과위별 회의 및 활동 실시
- 위원장 일정 : 08시-국립현충원 참배, 09시-한나라당 신년인사회 참석, 11시-인수위 시무식, 12시-전체직원과 구내식당 오찬

각 분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12.31 현재)

구분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기획조정분과위								
정무분과		총리실 중앙인사위 국정원			청와대	감사원		
외교통일안보분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행정분과		국정홍보처 법제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 검찰청				
경제Ⅰ분과		금감위 재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기획예산처			
경제Ⅱ분과			해양수산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사회문화여성분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	노동부 문화관광부	
비고	1	6	5	5	5	6	5	

2008년 1월 2일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 인수위는 5년 청사진을 그리는 한시적 실무기구임. 국민들이 인수위에 대해서 책임감·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제되지 않은 내용,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이 인수위원이나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
- 정부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됨. 내용은 날카롭게 지적하되 말·태도는 공손하게 하여 일하는 인수위가 되어야 하겠음. 형식주의·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2) 고위공무원, 산하기관 임원 인사 자제 요구

- 중앙인사위에 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 관련 공문 발송
 - 청와대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협의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으나 일반 고위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 인사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고 표명(김형오 부위원장, 문재인 청와대비서실장 전화 통화)해움에 따라,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 대해서도 자제 및 사전 협의를 촉구하기로 했음.
 - ▶ 이에 따른 공문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발송했음.

3) 각 분과위 주요 보고사항

(1) 사회교육문화분과

- 교육부 보고 관련 1일 밤 내부조율을 했음.
 - 규제 통제 중심 기조에서 자율 지원 중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교육부 내부갈등이 큰 상황으로 파악되며,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보임.
 - 분과에서는 교육개혁의 방향·내용이 정치한 수준까지 준비돼 있으며 2월 중 발표계획임.
- 기능 개편, 특히 기능 이양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음.
 -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이양, 고등교육은 대학자율 확대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기구 역할 강화
- 대응전략은 평준화 개선 관련 3단계 자율화 논의는 계속하되 조기 이슈화는 방지.

- 교육부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개혁 필요성 부각.

- 향후 여론조성을 위해 당선인이 참여하는 시도교육감회의, 인수위원장이 참여하는 대학 총장 간담회 등 개최 검토.

(2) 외교통일안보분과

- 5개 우선추진과제 확정 : 각 부처 업무기능 개선방안/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현안(각종 합의사항 등)/4강 외교(미, 일, 러, 중) 추진전략/국방개혁 2020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경제통상외교 전략
-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남성욱 교수(동분과 상임자문위원)의 “2월 대통령 취임 때 북 김영남 서울 오길” 제안 기사와 관련,
 - 박진 간사는 이것은 사건으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보고함.
 - 이와 관련 위원장은 “인수위 끝날 때까지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경고 조치함.

(3) 경제Ⅰ분과

- 중소기업인 간담회 및 상견례(1. 3), 금융기관장 간담회(1. 9) 추진

(4) 경제Ⅱ분과

- 핵심공약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방향 설정 : 투자 활성화는 종합적인 구상 필요, 수도권 규제완화와와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 시기 및 관련부처 협력 종합적 추진 검토
- 공약실천 10개 중점추진 과제 마련 : 유류세 인하, 통신요금 인하 등과 같은 가시적인 과제 선택/방향성, 실천가능성을 감안하여 취임 전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중소기업, 재래시장 관련 공약 등 선정

2.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 금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업무가 본격화되었음.
- 인수위 분과 간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의를 위해 간사회의와는 별도로 분과 전문위원 간 실무협의체 가동
- 국정목표 제정 TF 구성·운영 : 박형준(팀장), 박재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외부전문가 각 2명
- 각 분과위원로는 부처업무보고에 대비하여 보고자료 분석, 업무과와 전략 등 업무보고 준비에 역점을 두고 활동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 교육부 업무보고시 부처별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의 작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업무보고

에 포함시키도록 업무보고 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보고 부처 모두에게 스스로 조직개편방안을 제안토록 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혼선 야기, 시간 부족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

▶ 각 부처는 기능 및 조직의 현행유지,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논리를 인수위 외부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무질서한 논의 초래 우려

- 모든 부처에 동 사항을 포함시키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함.

1) 정부분과

○ 총리실, 인사위 업무보고자료 분석 및 검토 : 당정관계 정상화 방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방안, 조직 및 인력 팽창 사유 및 합리화 방안,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 검토

2) 법무행정분과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자료 분석 및 검토 : 국정홍보처 및 한국정책방송 폐지 문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폐지문제, 국정홍보 수단 강화 방안 등

3) 경제Ⅱ분과

○ 휴대전화요금 관련 인터뷰(YTN, 최경환 간사)

4) 사회문화여성분과

○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청취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1.4 예정) 관련 쟁점사항 논의

5)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정부혁신·규제개혁TF : 정부기능 및 조직 재설계 방안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해 향후 활동방향 논의
- 한반도대운하TF : 인수위 활동기간중 한반도운하TF 실천계획 작성(경부운하 민간제안서 1월중 작성 등)/TF 팀장(장석효)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운하의 내용과 효과)
- 투자유치TF
 - 산자부·IK(Invest Korea,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 주요 업무보고 내용 작성 : 입지 문제 등 투자여건 개선 과제, 핵심과제 발굴 등 향후 추진 방안 논의, 투자유치 추진 시스템 정립 및 개선방안
 - 재정부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활동보고서 제출 요청 :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동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추진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 새만금TF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업무보고/다양한 개발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논의
- 과학비즈니스벨트TF : 실무자 워크숍 개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비전 공유, 업무분담
 - ▶ 사공일 위원장 동정 : 1월 4일 SBS 라디오 출연 예정

3. 인수위 행정지원 관련

1) 당선인 인수위 시무식 말씀 전문 배포

- 말씀 내용이 훌륭했다는 내외의 지적이 있었음 : 당선인의 말씀을 인수위 업무의 지침으로 삼고, 정부 각 부처에도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문을 가감 없이 배포했음.

2) '당선인' 호칭 일원화

- 그동안 '당선인' 과 '당선자' 를 혼용해 왔으나 이후로는 법률·격식상 옳은 용어인 '당선인' 으로 통일하기로 했음.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업무 개시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성공센터)가 1월 1일을 기해 1단계 업무를 개시했음 : 인수위 홈페이지(www.17insu.or.kr)에 제안접수창구를 설치, 가동 2일 만에 900건에 달하는 각종 제안과 민원이 쇄도했음.
- 접수된 각종 제안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책화, 민원 회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임.
- 1월 7일부터는 방문 및 전화 상담창구를 개통할 예정임.
- 공간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었으나, 삼청동사무소(인수위 인근)에서 장소 제공을 자청해와 해소되었음. 간단한 집기 등을 갖추는 대로 정식 개소할 예정임.

[현직 충북경찰청장 정책제안 화제]

- 현직 충북경찰청장(박종환)이 성공센터에 직접 공개적으로 '경찰의 몇 가지 현안과 해결 방안' 을 제안했음.
- 박 청장은 "경찰 출신에 의한 경찰 혁신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청장 직위 개방, 장관급 격상 등을 주장했다.
- 이 제안에 대해 많은 언론이 반응을 보였으며, 홈페이지 해당 코너에는 많은 댓글이 붙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음.

4)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

- 인수위 출범 6일 만인 1월 1일 홈페이지를 구축, 오픈했음.
- △인수위 길잡이 △인수위 하루 △인수위 알림마당 △미디어 스크랩 △국민성공정책제안 등으로 구성

2008년 1월 3일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 인수위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국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과욕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면서 시간을 차근차근 해낼 것이니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호남지역 폭설 피해상황과 대책을 기획조정분과에서 마련해주시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은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피해복구 문제와 주민 지원대책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 위원장 지적에 따라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은 소관 분과인 경제Ⅱ 분과·법무행정분과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정 철학·목표 제정 위한 TF 구성
 - 석학 등 철학적 뒷받침 위한 노력 기울이기로 했음.
 - 박형준(팀장), 박재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2명, 외부 전문가 2명
- 공직자 대상 정책제안 공모
 - 국민들의 정책제안과는 별도로 공직자들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1월 22일까지 공모하기로 결정.
 -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공기업 등 전원에게 개방
 - 정책 아이디어, 개선방안, 행정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국민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등
 - 시행 및 주관은 기획조정분과가 하되, 접수창구는 국민성공제안센터를 우선으로 하고,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도 받기로 하였음.(4일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인수위원장 명의로 공문 시행할 예정)
- 인수위 자체 실천계획 작성
 - 기초분과 중심으로 부처별 인수에 필요한 일정 및 워크숍,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기

타 행사 추진사업 등 설정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전략, 추진일정, 세부과제 등도 준비되는 대로 기조위원회가 취합하고, 취임 전에 처리해야 할 법률안, 행정조치사항도 정리해서 제출키로 함.

3) 한반도대운하 관련

- 한반도대운하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당선인께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국민들에게 언급을 한 만큼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에 인수위도 워크숍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음.
- 다른 한편 운하문제로 논쟁이 제기되면 모든 것이 운하에 다 묻혀 버릴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운하를 서로 주도하겠다는 문제가 생기면서 국정 어젠다와 비전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중재안으로 전략적으로 시기·방법·강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이 있었음.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되, 그것이 다른 이슈들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음.
- 논의 끝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으며, 2월 초에 KDI,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음.

4) 기타 토의사항

- 4개국에 대한 당선인 특사 파견 문제
 - 4개국 특사파견 문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음.
 -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취임 이전에 4강에 전달, 대외관계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
 -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
 - FTA 비준동의에 걸려 있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인 바, FTA를 주도한 현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결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했음.
 - FTA는 농어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시기나 농어촌 피해 대책에 대한 당의 스탠스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총선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임을 감안, 경제Ⅱ분과에서 대책안을 마련, 보고하기로 했음.

2.1월3일 각분과별 활동

- 3개 분과에서 국무총리실, 금감위, 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음.

- 경쟁력강화특위에서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등 총 15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음.
-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조직 및 인력 축소방안이,
-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 채용 연령제한 폐지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음.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서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폐지방안, 국정홍보처 폐지방안이,
- 금감위 업무보고에서는 신용회복 지원방안, 금산분리 완화 방안 등이 토론했었음.
- 청와대와의 업무협조는 당선인 비서실과 협의하여 그 창구를 청와대 차승수 사회문화수 석비서관으로 단일화하기로 함.

각 분과위별 주요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간 실무협의회 구성 : 내일(1.4, 금) 09시부터 매일 운영 ○ 공직자 정책제안 공모 계획 수립, 내일 시행 ○ 미디어대책TF 구성 : 이재웅 국회 방동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박형준 기초분과 간사가 TF 운영 ○ 각 분과 업무보고 참석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업무보고(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기획단 및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실의 기능과 역할 검토 요구 - (총리비서실) 당정협의 활성화, 청와대와의 중복기능 축소 등 ○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14시)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현황 및 대책 파악 및 금일 중 당선인 보고 예정 ○ 외교부 업무보고(1.4) 자료 분석 및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홍보처 폐지 및 K-TV 폐지에 대해 홍보처에서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인수위에 보고 -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취재접근권 및 언론의 취재편의 제공방향으로 대안 마련 ○ 법제처 업무보고(15시) ○ 행자부, 경찰청 업무보고(1.4) 대비 대응전략 검토 : 정부조직, 공무원연금, 수사권조정, 경찰대 축소 등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 업무보고(09시) : 신용회복 지원방안, 금산분리 완화방안 등 검토 ○ 당선인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15:30) ○ 예산 10% 절감방안 등 예산분야 6개 과제 선정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요금 조정관련 업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하 가능 대안에 대한 각 업체의 입장 청취
사회문화여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1.4) 대비 대응전략 검토 : 보육정책 문제점 진단 및 방향 설정, 성매매정책 문제점,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된 부실한 기능조정방안 중점검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계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 가능성 및 여성계 인사 주류 교체 움직임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 ○ 4대 공적연금 공약점검 및 실천방안 검토 ○ 교육부 이외의 각종 교육단체와 공약실현방안 의견수립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간 1일 1천 건 정도의 제안 유지될 듯 : 경찰 관련 제안 다수(100여건), 운하, 소방 관련 제안 증가 ○ 기획조정분과 요청으로 '공직자제안' 별도코너 설치 예정(일반인에게는 비공개) ○ 계산판 해킹 시도 있었으나 완벽히 처리 ○ 국민대면을 위한 삼청동사무소 확보 협의중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가 주요 애로사항 파악 ○ 정부혁신 : 정부조직 및 기능 재설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관계부처 업무보고 시작 : 국조실, 외교통상부, 산자부, 환경부
 - * 추진체계 점검, 대외협상력 제고, 온실가스 저감노력, 친환경적 산업 육성방안, 에너지자원의 성장동력화 등 논의
- 한반도대운하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청취
 - * 운하주변 문화재 실태파악 후 보전, 복원계획 수립
 - * 운하가 방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공감대
- 새만금 : 전라북도 업무보고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주요현안 논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관계부처 업무보고
 - 출연연 발전방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방향 등 논의(과기부)
 - 기술이전센터 설치, 기술금융제도 등 논의 (산자부)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접수 3일째에도 뜨거운 반응이 계속 이어져 3일 자정 현재 2,700여 건의 정책, 민원 등이 접수됐음(전화 상담, 방문접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4. 인수위 행정지원 관련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문제, 좁은 공간 등을 고려하여 방문민원접수창구를 삼청동사무소에 마련하고 인력을 추가 지원했음.
- 비밀문건 보관 등을 위한 이중캐비닛 금고를 외교분과와 기획조정분과에 설치, 보안에 만전을 기함.
- 직원들의 출퇴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4일부터 국방부 지원을 받아 통근버스를 운영함.
- PC보안 강화를 위해 국정원의 보안교육을 4일 실시함.

2008년 1월 4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0일차로 외교통상부 등 15개 부처, 8개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
- 인수위 관련 일부 비판기사가 게재되었는 바 각 분과위와 대변인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응키로 함.
- 한미FTA 대책과 관련, 전체 농정 차원의 일반적 대책이 돼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 경제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음. 7% 경제성장 공약과도 연결되므로 경제 분과에서 대처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 어제 부처 업무보고에 하루 종일 참석했는데 공무원들이 합리화와 자기방어에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공무원은 특정 정부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토록 주의

를 환기해야 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취임 전 고위직 등의 인사 관련 : 김형오 부위원장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과 회동
 -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인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
 - ▶ 부처, 공공기관 인사는 보류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인수위와 사전 협의기로 했음.
 - ▶ 경찰청장은 취임 전에 임명한다면 인수위 의사대로 하기로 합의 했음.
 - ▶ 각 분과 간사는 각 부처의 인사 현황을 총괄 점검하기로 했음.
- 인수위 관련 오보대응 시스템 강구
 - 인수위 활동 관련 오해와 잘못된 기사를 막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함.
 - 위원장은 언론에 발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감사 방식보다는 당정협의 식으로, 내용은 날카롭게 하되 공무원들의 자발적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음.
 - 앞으로 인수위 활동이 계속될수록 오보가 많아질 가능성에 대비, 오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당선인 자치단체 등 지방순시 문제
 - 당선인의 지방순시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음.
 - 노무현 당선인은 8회의 지방순회 국정토론회를 가졌음.
- 경찰 격려 필요성 제기 : 당선인께서 군부대는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경찰에 대한 위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당선인의 중소기업회관 간담회에 대한 반응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당선인·대통령 통틀어서 최초라며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 태안 재난특별법 제정 관련
 - 신당은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한나라당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반대 입장임./인수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음.
- 신용대사면 관련 논리개발 필요
 - 도덕적 해이, 형평성 등 논란이 있는 만큼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IMF 공적자금 투입 당시 '금융 부실은 상당 부분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처럼 지금의 신용불량자들은 김대중 정권 당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등에 그 책임이 있다는 공적자금투입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특히 부채탕감이 아니라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언론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음.
 - ▶ 신용대사면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법 관련 이견이 있으므로 경제 I 분과와 당 정책위가 조율하기로 결정함.

▶ 강만수 간사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원금 탕감은 없을 것이며 동 정책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추가 기자브리핑 실시

○ FTA 농촌대책 관련

- 한미FTA 비준에 필요한 대책이 농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경제Ⅱ분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한편 농촌·농업문제는 농림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전체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특히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음.

○ 농지 규제완화 문제:농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농지 의무조성제 폐지 문제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2.1월4일 각분과별 활동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화,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주택거래세 인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국익을 중심개념으로 한 실용외교가 강조되었음.

▶ 대변인실에서 주택거래세 1% 인하 추진을 발표

○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대책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장 활용정책으로의 보육정책의 질적 전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음.

○ TTF는 예산처, 환경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국가경쟁력특위 사공일 위원장은 라디오방송에서 대운하 예정지에 대한 투기 대책으로 개발이익환수를 모색할 수 있음을 언급

○ 기타

- 향후 인수위내 청와대 관련 자료요청이나 업무협조관계는 기초분과에서 담당하기로 함.
- 업무보고 후 해당부처의 비공식적 반응을 파악, 참고하기로 함.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 공직자 정책제안 공모 시행 ○ 당선인 지방순시 및 문화예술·인문사회분야 간담회 기획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실, 인사위 업무보고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및 검토결과 제출(1.6까지), 규제개혁 업무 청와대 이관 내부연구 진행, 공무원 연령제한 폐지 등 추진상황 파악 ○ 국정원 기능 및 현안 검토 등 국정원 업무보고(1.5)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전개되어온 외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실용외교를 강조(북핵문제 및 FTA 추진대책은 소규모 회의체를 구성하여 내주 초 별도 보고) ○ 통일부 업무보고(1.7) 자료 검토 ○ 국방관련 미래 한미동맹 비전 검토, 획득제도 및 방산수출 증대방안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 경찰청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기관 위임 -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통합운영의 장단점 분석 요구 - 자치경찰제 도입, 법질서 확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요구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 지원 관련 추가 기자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정책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지 않음 -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원금탕감은 없을 것 - 6개 광역시에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설립 추진 ○ 747 공약추진방안 전문가회의(1.5-1.7) 준비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책임과 원인규명, 피해보상 예산 300억원의 조속한 집행 주문 - 항만공사와 지방청과의 기능 중복문제 지적 ○ 농림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의 농업식품부로의 전환문제 토론 - 한·미 FTA 국내 대책으로 제시한 지원금액(2조원)의 증액 필요 ○ 해양청, 농진청, 산림청 업무보고 ○ 산업자원분야 업무보고 사전검토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입지규제 합리화, 대·중·소기업 공동 R&D 대폭 확대 등
사회문화여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중점 토론하면서 반시장정책에서 시장활용정책으로 보육정책의 질적 개혁 요구 - 부처간 업무조정, 성매매산업 풍선효과 방지대책,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 ○ 대학총장과의 오찬간담회 참석(이주호 간사) ○ 교육부 업무보고 후속조치(공약 구체화 등 실천방안 마련)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TF 업무보고(1.7) 개최 준비 ○ 정부혁신 : 보고서 초안 마련 및 검토회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인수위 보고서 어젠다 설정 ○ 한반도대운하 : 업무보고(예산처,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관련 의견 청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지역 NGO 등과의 공동조사 방안 논의 ○ 새만금 : 업무보고(환경부,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현황, 수질개선사업 진행현황,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등 - 당초 2030년 완공에서 2020년으로 10년 조기완공 실천계획 강구 주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 업무보고(건교부, 행복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2017년 프로젝트 완료 등 - 출연연 선임부장 초청 간담회

3. 인수위·한나라당 간담회 계획

- 인수위 간사단과 한나라당 주요 간부가 만나 관심사를 교환하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음.
- 1월 7일, 전경련회관(오찬)

4. 인수위 행정지원 관련

1) 1월 5일 업무조정회의 개최

- 매주 토요일 워크숍과 관련, 이번 주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계속되는 만큼 업무조정회의로 대체기로 했음.
- 이 자리에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을 초청,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의견을 듣기로 했음.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창구 개설 4일째에도 열기가 계속됐음.
- 4일 밤 11시 30분 현재 하루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4,100여건의 정책·민원 등이 제시됐음.

2008년 1월 5일

- 오늘은 인수위활동 11일차로 국정원 등 4개 부처, 5개 산하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
- 워크숍을 대체한 업무조정회의는 위원장 주제로 핵심 없이 원형으로 의자만 배치해 격의 없는 토론을 실시했음.
- 엘든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여 투자유치 관련 조언을 했으며, 장석호 팀장의 설명에 이은 토론이 있었음.

1. 업무조정회의

1)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특위 공동위원장 말씀 요지

- 외국투자자에게 한국은 공정한 경쟁이 안되고 노사쟁의 등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있을 것임.
-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공정·투명하며 시장이 열려 있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 당선인의 당선 그 자체가 외국투자자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함. 중동의 오일머니 흐름이 기존의 서구사회에서 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우호적인 투자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국금융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은 수 년 동안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노력했으나 달성하지 못했음.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중심이 되고자 노력 중이나 여의치 않은 실정임. 앞으로 20~24개월이 한국에게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시간임. 금융허브를 위한 실질적 변화·투자여건을 개선한다면 투자가 몰려올 것임. 금

용서비스산업은 한꺼번에 개방할 필요는 없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자산운용업 쪽을 먼저 개방하고 글로벌 본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투자유치나 금융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 어떤 분야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글로벌시각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듣고 전달해 드리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함.

2) 한반도대운하 토론

- 장석효 팀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성에 모두 인식을 같이 했으나 환경·수질문제, 토목공사라는 잘못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설득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요구가 많았음.

- 대운하의 친환경적 조성, 홍수방지 기능, 유류절감 및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다들 공감했음. 그러나 2020년 물동량이 현재의 3배로 증가한다는 물동량 예측 및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주로 국민여론 수렴과정의 대운하 컨셉 포인트와 홍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인수위원들은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불식해야 하며, 있는 강을 연결하는 치수 공사이지 없는 강을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강의 활용이 치수→용수→친수로 바뀌고 있으며 따라서 대운하는 친수개념으로 가야 하고 이것이 시대흐름이라는데 공감했음. 대운하의 목적에 관광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컨셉에 맞으며 청계천도 단지 복개천을 뜯어냈다는 의미보다는 문화공간의 의미가 더 커서 성공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반대하지만, 보이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으면 대운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대운하가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므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음. 환경 생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지역환경단체를 실태조사 등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음.

- ▶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음.

3)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토론 요약)

- 노 대통령의 인수위 비판

- 노 대통령의 인수위 비판은 잘못된 보고와 판단에 의한 것임.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한 보고방식 지침은 행자부가 만든 매뉴얼에 의거해 보낸 것으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압적 태도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임.

- 이경숙 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정부 업무보고 시 내용은 날카롭게 태도는 부드럽게' 할 것을 인수위원들에게 강조해왔으며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

- ▶ 이경숙 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 관련 한덕수 총리의 전화에 대해 그것은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나온 말이며, 우

리 인수위는 법에 따라 인수업무와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함.

▶ 청와대의 시비에 대해서는 정면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 정부조직개편은 TF가 검토
 - 향후 혼신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과별 업무보고 시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음.
- 정부 부처 업무보고 언론발표 프로세스 확정
 - 해당분과에서 간사의 승인을 받아 부처 업무자료 요약 및 핵심사항을 부처 보고 전까지 대변인실에 전달하고, 대변인실은 업무보고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자료 작성. 기초분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하되, 필요시 해당분과 담당전문위원이 협의에 참여하기로 함.
- 기초분과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 청와대의 창구일원화에 대응하여 청와대 관련 자료요청이나 업무협조관계는 기초분과에서 담당. 2개 이상의 부처 협이가 필요한 공약이나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기초분과에서 접수받아 조정하기로 함. 업무보고 후 부처의 정부 부처의 반응을 비공식 파악하여 참고하기로 함.
- 부처 방문 업무보고
 - 기자단 이동 및 분산취재의 문제, 현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한 출입금지 등의 문제가 있으며,
 - 정부부처를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검토 끝에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음.
- 지자체 업무보고 관련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요청한 것은 기초분과가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함.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회의 개최(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진행현황 종합 정리키로 함. -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 종합하여 보고하기로 함. ○ 예산안 10% 절감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및 보고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실행계획 검토 ○ 각 분과 업무보고 참석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업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7 공약실현을 위한 경제, 국익 정보활동 전개,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 지원 등을 논의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업무보고(1/7) 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에 시장원리 도입 모색,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연계, 남북정상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평가 등 요구 예정 ○ 국방개혁2020의 현실성, 적절성 분석 및 토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1/6)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검찰 기구 재조정 및 전문화 방안, 검사 직무감찰 기능 강화방안, 법질서 확립, 산업평화 정착방안 등이 쟁점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중제 폐지,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 등 추진 - 기업 친화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주문 ○ 세무조사의 신뢰성 등 세정분야 주요추진과제 방안 검토 ○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획회의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중 이동통신 요금 인하방안 마련하여 보고토록 요청 - 방통융합에 부합하는 체제정비, IT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우정사업 민영화 신속 추진 등을 요청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업무보고(1/6) 준비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활동중인 공적연금 TF 외에 추가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체계,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기능개편TF 구성 ○ 교육부 기능개편 및 공약구체화 작업 ○ 국가보훈처, 환경부 업무보고(1/7)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10% 절감대책과 재정소요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업무보고(1.7) 개최 준비 - David Elden 공동위원장과 투자유치전략 논의 ○ 정부혁신: 보고서 초안 작성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젠다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 에너지 분야 연구 추진계획 논의 및 관련자료 요구 ○ 한반도대운하: 건교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제안서 검토 시 고려할 사항,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 등 ○ 새만금: 공약 이행방안 자체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지 축소 시 예상 문제, 기본구상 수정을 위한 절차 등 ○ 과학비즈니스벨트: 제2차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현실성, 기존 출연연 기능 정립을 통한 갈등해소 등 논의

2. 행정지원 관련

1) 인수위 간사단·한나라당 최고위원단 간담회

- 양측의 첫 만남을 1월 7일 오찬을 겸해 갖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당에 설명하기로 함.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5일 밤 10시 30분 현재 5,000여건의 정책·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5일부터 본격 시작된 공직자 제안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9건이 접수됐음.
- 삼청동사무소에 마련될 방문접수 창구는 7일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음.
- 언론들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음.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정책제안이 왜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음.
- 1월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접수 내용을 상세히 분류하여 종합보고 할 예정임.

2008년 1월 6일

- 일요일에도 인수위 활동은 계속되어 12개 정부 부처와 8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음.
- 데이비드 엘튼 공동위원장은 인수위 기자실에서 회견 을 했음. 엘튼 위원장은 금융 관련 규제의 중복이 문제라는 점을 특히 지적했음.

1.1월6일 각분과별 활동

1) 요약

- 법무부와 검찰청 보고에서는 정책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 집행 부서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였음.
- 국세청 보고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감축, 부동산 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과기부, 기상청 보고에서는 확정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방안 등 검토,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보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 산자부 산하기관 혁신, 기업투자 활성화, 고유가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었음.
- 대운하TF에서는 운하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관광벨트 조성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에서는 기초과학연구소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과제 실행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10% 절감방안,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 ○ 내주 중점 운영방향 설정 ○ 각 분과 업무보고 참석 및 참석 결과 작성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업무보고(1/8)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운영 실천계획 작성에 반영할 감사 실행방안 검토/각종 위원회 실제 특별감사 계획 등 검토 ○ 총리실 구조개편 방안 검토 ○ 주요 국정과제별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업무보고(1/7) 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에 시장원리 도입 모색,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연계, 남북정상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평가 등 요구 예정 ○ 국방개혁2020의 현실성, 적절성 분석 및 토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부서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 집행부서에 배치 - 외국인 정책의 강화
경제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업무보고

	○ 747 공약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18:30)
경제Ⅱ분과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업무보고 - 단순하고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축, 산하기관에 대한 경쟁도입, 구조도입, 민영화 방안 구체화 요청 ○ 과기부, 기상청 업무보고 - 확대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논의
사회교육문화분과	○ 식약청 업무보고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중점 논의/식약청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의 미흡 등을 지적 ○ 환경부 업무보고 준비 - 주요환경정책 기능의 분산, 산하기관의 문제점, 아토피 급증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TF 업무보고(1.7) 개최 준비/David Elden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11시) ○ 정부혁신: 조직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5개 관계기관 업무보고 ○ 한반도대운하 : 5개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대운하 추진방안 검토 ○ 새만금 : 7개 부처 업무보고 자료 사전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전문가 미팅을 통해 과학사업화 관련 제반 문제점 및 추진체계 협의 - 기초과학연구소 설치관련 검토회의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소의 법제화 방안, 기존 연구소와의 협조방안 협의

2) 1월 7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 외교통일안보분과 : 통일부, 국가안정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위, 국가비상기획위
- 경제 I 분과 : 재경부
- 경제 II 분과 : 건설교통부
- 사회교육문화 :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
- 투자유치 : 경기도, 경남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건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 한반도대운하 : 문화관광부
- 새만금 : 행자부, 건교부, 문광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교육부

2.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요지

- 외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있나?
 - 말하기에 시기상조다.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은 중국을 지켜봐 왔다. 다음 단계에서 아시아 투자지는 어디일까 할 때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기업 활동이 개방되고 투명한지, 경제활동이 활발한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고려한다. 그들은 한국이 그런 여건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한국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개발 사업에 외자유치 계획은?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서 재정을 잘 구조화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해서 자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 당선인은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두 나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두바이는 왕실의 비전과 리더십에 의해 개발되고, 140만 인구 중 80-85%가 외국인이다.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는 개방, 투명하고 다양한 업체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물류허브로 입지를 굳힌 후 금융허브로 눈을 돌린 것도 중요하다.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세제 혜택과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었다. 한국이 두바이의 이런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 한국이 두바이처럼 금융허브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2, 13위인데 다른 경쟁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내부지향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규제 체계의 중복이 있는 것 같다. 성공적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되고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더 글로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 이 당선인이 특별히 부탁한 것은?
 - 제 역할은 해외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결정은 이 당선인이 하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수익 송금을 꺼리는 인식이 있는데 해결 방안은?
 - 만약 삼성과 LG의 이익금을 한국에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이기고 지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8년 1월 7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3일차로 통일부, 재경부 등 9개 부처, 6개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
- 간사단회의에서 지난 주 평가와 이번 주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있었음.
-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국민 공감대 확보와 언론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 인수위 활동 3주차임. 주말에도 강행군을 하여 인수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함.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정부임.
- 공무원들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예의는 차리되 할 이야기는 하면서, 새 정부의 틀을 짜는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기업인 공항귀빈실 이용관련
 -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기업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함. △성실납세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각 경제단체에 적절한 기업인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임.
- 당선인에 대한 위원회 1차보고
 -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장·부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음.
- 교육개혁
 - 대학입시, 고교 다양화 등 관련 10개 TF를 구성, 2월중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음.
 - 교육법안의 경우 40, 50개 이상의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기능 축소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차분히 따져 검토하기로 했음.
- 국세행정개선TF
 - 기업인이 가장 어려운 점이 세무관계라는 원망이 많고, 친기업 정부 지향(Business-friendly)의 당선인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세행정 개선 TF 구성을 국세청에 요구할 예정임(경제 I 분과).
- 통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휴대폰 등 통신요금 인하는 20일까지 안을 마련하여 이달 말쯤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당선인 공약인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은 도로공사는 문제가 없으나 민자고속도로는 추가 논의기로 했음.

○ 동탄신도시 내 외국인 투자기업관련

- 동탄신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설립한지 2~3년도 안되어 신도시 건설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정부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청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인수위 활동 언론보도 평가 및 대책

- 대변인은 간사단회의에서 일부 '포퓰리즘' 지적이 있었지만 16대 인수위에 비해 비판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고하고 당선인께서 'low key로 해라' '차분하게 인수하는 것이다' 등 메시지를 주신 것이 국민과 공무원에게 안정감을 준 것 같다고 평가했음.

- 그러나 앞으로 인사 등 더 큰 문제들이 나올 것인데 인수위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상호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음.

- 일부 신문에만 4국 특사 기사가 나간 것, KBS의 정부조직 개편안 보도 등으로 소외당한 언론의 감정이 격앙돼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했음.

- 기획분과는 지난 주 평가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 관련 추측보도, 특정 언론에 특정내용이 보도되는 사례, 조율이 안된 정책 발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 정부조직개편 관련

-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직 개편과 함께 기능도 상당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음.

- 기능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푸는 방향임. 특히 교육, 지방자치, 산업, 금융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사무를 대폭 이양, 이관, 축소, 폐지, 완화할 계획임.

- 정부조직개편은 집권초기에 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대정권의 경험에서 알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잘 살려야만 새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조직개편은 전문가, 학자 등의 여론 환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에 필요한 리스트 작업을 하기로 했음.

2. 인수위·당 간담회 주요내용

○ 강제섭 대표 인사말

- 지금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임. 인수위나 당은 자만하지 말고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 당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빨리 나와야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작업에 차질

이 없으리라 봄. 당이 추진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수위가 과거에 비해 겸손한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음.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음. 인수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발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경숙 위원장 인사말

- 새 정부에서는 당정협약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고, 지속되어야 함.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를 인수받고 새 정부의 틀을 짜는 것임. 따라서 인수위의 목소리는 자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반성할 것임. 새 정부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크기에 앞으로 당과 정부가 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함. 당에서 개발한 정책을 인수위에서 반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것은 당의 성과물임. 앞으로 인수위가 만든 자료와 정보는 당에 제공할 것임.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람.

○ 당측 발언 요약

-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정책협약을 한 한국노총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함.
-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기 바람.
- 여의도연구소-정책위-인수위 간의 시스템적인 교류가 필요함.
- 인수위 활동이 대부분 입법조치가 필요한 만큼 법안에 대한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 공약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안 52개가 이미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자료를 인수위에 넘기겠음.
-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음.
- 통일부 폐지에 대한 신증론과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음.
-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의원들과 교감이 있어야 하며 특히 행자위는 24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빨리 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인수위측 발언 요약

- 당과의 시스템적인 협력에 동의하며, 업무보고가 끝난 후 정책방향을 정할 때 당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혁을 할 것임.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이므로 입법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먼저 검토해주시기 바람. 통일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임.

3.1월7일 각분과별 활동

- 재경부 보고에서는 7% 경제성장 방안, 금산분리 완화 방안, 국가채무 관리, 산업은행 민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작용 방지대책이 논의되었음.
 - * 광승준 위원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
- 통일부 보고에서는 북한 핵 폐기, 대북사업에 대한 재평가, 남북협력기금의 투명한 운영 등이 토론했었음.
-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방안, 건설 분야 규제 완화,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구체화, 산하기관의 적극적 정비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복지부 보고에서는 국민연금 TF를 구성해 종합적 개편안을 만들기로 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것을 주문
 - ▶ 당초 1.8(화) 16시로 예정되었던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는 이천 냉동참고 화재사건을 감안, 서면으로 대체키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운영계획(안) 검토 ○ 전문위원 회의(금주 중점운영방향, 국정과제 정리·제출) ○ 소관 주요 국정과제 검토 ○ 인수위 백서 제작방향, 목차 등 협의 ○ 각 분과 업무보고 참석 및 참석결과 작성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업무보고(1/8) 준비 ○ 총리실, 인사위, 국정원 추가제출 자료 검토 ○ 주요 국정과제 논의사항 정리 ○ 진수희 간사 mbn 출연, 최근 정치현안, 조직개편, 정부분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폐기에 통일부도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주문 - 대북사업 재평가, 남북협력기금의 투명한 운영 등 논의 ○ 4강 특사파견 관련 참고자료 작성 및 검토 ○ 외교, 국방관련 주요 국정과제 검토 ○ 제대군인 복지대책 관련 의견수렴 (재향군인회, 10시)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부패척결방안 정책자문회의 (15시) ○ 소방방재청, 국가청렴위 업무보고(1/8) 준비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경제성장 방안,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 747 공약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개혁 TF를 구성해 종합적 개편안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 - 부처별, 기관별 사회복지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 재검토 촉구 ○ 환경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민금 사업에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

- 기후변화대책, 깨끗한 수돗물 대책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계획 주문

○ 보훈처 업무보고

- 보훈대상자 보상체계 개선, 제대군인 일자리 10만개 창출방안 등 논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과 과제(산자),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과제(재경), Invest Korea 활동 (KORTA) 업무보고

○ 정부혁신: 조직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5개 관계기관 업무보고

○ 한반도대운하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 수립 추진

○ 새만금 : 7개 부처 업무보고 청취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실행계획 작성 진도 점검

- 1차 홍보세미나(1.11) 준비

- 과학비즈니스 벨트 주변지역 관련계획 검토

4. 인수위 행정지원 관련

1) 취임준비위원회

○ 박범훈 중앙대총장이 취임준비위원회장에 임명된 후 곧바로 외교통상부 청사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음.

- 7일 오전 행정실장이 취임준비위 운영 관련 전반적인 보고 했음.

2) 백서 발간관련

○ 이번 주 중 인수위 활동 백서 편집계획을 성안하는 한편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1월 7일 밤 11시 현재 정책 민원 등 인터넷 접수 7,150건.

○ 공직자 정책제안 75건 접수.

○ 전화 및 방문접수(7일부터) 각각 27건, 136건.

2008년 1월 8일

- 내일부터는 국정과제 선정 등 국정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2단계 활동에 돌입함.
- 오늘은 감사원,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14개 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
- 이천 화재참사관련 후진적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재난방지 시스템 재정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1. 인수위원 전체회의

1) 이경숙 위원장 모두발언

- 이천 화재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무거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함.
 - 이천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과 안전대책 소홀이 빚은 인재임. 조기 수습과 국가재난방지 시스템 재정비 등 인수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오늘로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인수위 활동 2단계로 돌입함. 당선인의 공약, 국민여망, 국가 현실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틀을 만들어야 함.
 - 우리 내부의 소통과 토론,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인수위의 신뢰에 금이 가거나 국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대인론 관계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함.
- 어제 당정연석회의에서 인수위와 당이 수시로 의논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음. 지금까지는 인수위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인수위가 국민에게 보고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향후 인수위활동은 국정실천계획 작성 및 현장성 강화에 중점
 - 국정과제 선정과 실천계획 작성에 현장중심활동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공약 처리 방향, 당선인 지방방문 등을 검토하기로 함.
- 당선인 지역방문 적극 검토 필요성 제기
 - 당선인에 거는 지역발전의 기대가 크고 지역공약에 관심이 높은 만큼 당선인의 지역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비서실과 협의하기로 했음.
 - 지역방문은 공약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지역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철학 및 향후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립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공약 처리 방향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검토
 -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의 국정참여 욕구가 매우 큰 점을 감안, 어떤 형식이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은 인수위 업무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다는 찬반 의견이 있었음. 대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개최를 기획분과에서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함.

○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쟁점화 차단 전략 유지

-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총선 관련 예민한 이슈는 조용한 홍보로 가야지 토론회 등 논쟁을 유발하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4월 총선 이전에는 입지가 논의되거나 결정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TF도 이 점에 대해 유의하기로 했음.
- 이와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도시'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광역화되고 기능적인 '벨트' 개념임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한편 충청지역과 해당부서에서는 행복도시와 과학비즈니스도시가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 하에 건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경제Ⅱ분과에서 설명했음.

○ 부동산 가격안정이 최우선 목표

- 새 정부는 대형공약을 많이 제시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음. 송파신도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교통·환경·녹지 공간 보완 전제하에 추진하기로 함. 혁신도시의 경우는 부지매입 등이 끝나 큰 방향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 추진에 방점을 두기로 했음.

○ 한반도 대운하 관련

- 금주 중 홍보계획 수립을 끝내고 이후에는 대국민홍보에 집중하고 언론대책은 비서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음.

○ 정부혁신 TF

- 정부조직개편안은 1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음. 관련 법령이 20여 개이고 과단위 직제까지 조정해야 하므로 시간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언론홍보 관련

- 정부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므로 각 분과별로 기획성 기사나 뉴스거리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변인실의 주문이 있었음.

2.1월 8일 각 분과별 활동

-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8일 6개 분과에서 감사원, 국방부, 예산처, 노동부 등 14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음.

- ▶ 1차 업무보고는 8일로 종료되었지만, 분과별로 필요한 경우 추가보고 및 2차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 (1.9. 경제Ⅰ분과, 한국은행 업무보고)

- 예산처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예산 10% 절감 공약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 예산처는 경상경비 절감, 조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 국방부 보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노동부 보고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문광부 보고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8일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주요 국정과제를 리스트업 하고 분류토록 하였음.
 - 주요 국정과제를 ① 즉시 추진과제와 향후 추진과제로 구분하고 ② 공약 등을 당초 의도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과제와 기본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로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업무보고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초분과에서 향후 인수위 업무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9일 간사회회의시 논의할 예정임.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향후 운영계획 수립(내일 간사회회의 논의) ○ 주요 국정과제 입법 관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주요 국정과제 확정시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입법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 분과 전문위원 회의(0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분류방법 설명 및 정리 독려 ○ 소관 주요 국정과제 검토 ○ 타 분과/특위 업무보고 참석 및 참석 결과 작성
정리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조원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충실할 것을 요청 ○ 소관 주요 국정과제 논의사항 정리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2020 내용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간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시기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 외교부 대외안보 정책조정기능 정립 등 외교분야 주요 국정과제 검토 ○ 국방개혁 2020 개선 등 국방 분야 주요 국정과제 검토 ○ 비핵, 개방 3000 구상 등 통일 분야 주요 국정과제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청렴위 업무보고 (1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위의 기능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집중 논의 ○ 공직부패 척결, 경찰개혁, 검찰개혁, 주택거래세 인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폐지, 위원회 정비 등 주요 국정과제 검토 TF 협의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운용의 형평성 제고, 공기업 관리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예산지원, 공약실천을 위한 소요예산 검증 등 논의 ○ 소관분야 주요 국정과제 우선순위 점검, 논의방향 보고서 작성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일자리창출과 민간부문 유치방안 강구, 주변 KTX 및 고속도로망 등 교통 대책 논의
- 산업자원분야 즉시 이행과제 검토
 - LPG 경차 도입방안,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 등
- FTA관련 수산부문 후속대책 정책간담회 (15시)

사회교육문화분과

- 노동부 업무보고
 -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노사분쟁 사전조정기능의 노동위원회 이관 등 노동부 기능조정 문제 등 논의
- 문광부 업무보고
 - 문화콘텐츠 산업 부진의 원인 및 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신문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방안 등 논의
- 방송위, 문화재청 업무보고
 - 소관분야 주요 국정과제 협의 및 검토
- 여성가족부 개편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간담회(16:30)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위원별 정책대안 및 건의 작성
- 정부혁신: 정부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정리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사항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과기부, 수자원공사, 산자부 업무보고/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 검토
- 한반도대운하 : 친환경, 문화적 추진방안 검토/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적극 협조할 계획, 조속 추진 요망
- 새만금 : 내부 토지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부처 업무보고 시 제기된 내용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재경부, 행자부 업무보고/경제자유구역 운영상 문제점, 관련 규제 완화 필요/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 검토

3. 국민성공제안센터

- 1월8일 밤 11시 현재
 - 정책 민원 등 인터넷 접수 8,450건/공직자 정책제안 접수 126건
 - ▶ 공직자 제안접수는 실명 접수를 유도하고, 접수된 정책 제안은 매일 기획조정분과로 이첩

2008년 1월 9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5일차로 부처 업무보고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대 당면과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음.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들되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1. 간사단회의

1) 이경숙 위원장 모두발언

- 태안 재난 복구에 오늘까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는데 그 중 60만명이 자원봉사자였음.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생각함.
- 오늘부터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짜는 작업을 본격화해주시기 바람. 정부조직 개편은 섬기는 정부의 목표에 맞게 서비스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함.

- 당선인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국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수 위도 그런 방향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일부 정부조직개편 반대 움직임 관련
 - 일각에서 산하기관 단체를 동원하여 신문광고를 내거나 로비를 하는 등 조직적 활동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대해 이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구태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음.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음.
-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대현안 재확인
 - 조직개편에 힘을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문제, 예를 들면 MBC와 관련된 방송문제,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저항이 큰 문제들로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로 했음.
 - 민간에 비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옥죄고 있다는 당선인의 문제인식을 받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박재완 팀장이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각 분과위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음. 각 분과 의견은 언제든 반영하고, 또 개편안 발표 후 구체적인 후속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음.
 - 위원들은 지난 10년간 정부조직이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역행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시대 상황·경제발전단계·국제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 재규정과 이에 따른 효율적 조직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당선인 권역별 지역 방문 검토
 - 각 분과별 의견을 취합하여 당선인비서실, 기초분과, 대변인실이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어제 나왔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기로 함.
- 당과의 상시협의체 구축
 - 인수위 대변인과 당 대변인간 상시협의체제를 구축해, 예를 들면 당선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 당이 빛날 수 있는 일은 당 쪽이 발표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음.
- 전작권전환 전환문제
 -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기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음.
- 국군포로 귀환 문제
 -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에 모든 힘을 쏟기로 함. 이와 관련 국방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군사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메시지는 계속 강화키로 했음. 그러나 이전 대상 행정기관은 현 정부에서 확정이 됐지만, 소위 '복합'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점이 지적됐음.
- 분과별 자문위원 적극 활용 요청
 - 자문위원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도를 제고키로 함.
- 대운하지역 토지동향 보고(경제Ⅱ분과, 한국감정원 조사)
 - 당선이 유력해진 10월 이후 대운하 거론지역(여주, 충주, 문경) 땅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었음. 당선 확정 이후에는 외지인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매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회수된 상태임. 향후 이 흐름세는 더욱 심해지고 투기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망됨.
 - ▶ 이와 관련, 우선 감시단 활동 강화와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키로 했다는 수준의 대변인 발표로 대응하지는 제안이 있었음.
 -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 감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조용하게 요청하고 나중에 이슈가 되면 조치내용을 공개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그러나 당분간 대운하 이슈화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이뤘음.
- 교육개혁 관련
 - 대입자율화는 당선인의 대교협 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세로 굳어진 면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개편 관련 권한이양은 교육감들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1월 25일 교육감협의회에 가서서 지방분권화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2. 각분과별 활동

- 오늘은 각 분과가 그동안의 부처 업무보고,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국정과제 검토에 활동의 중점을 두었음.
 - 기초분과에서는 과제의 적절성, 과제누락 여부, 과제수준 및 과제숫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10일중 각 분과와 협의하여 주요 국정과제를 1차 확정할 계획임.
- 경제 I 분과에서는 한국은행 업무보고시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상황 등을 각 분과별로 파악키로 하였음.

- 또한 향후 각 분과별로 인수위 활동과정에서의 핵심쟁점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예) 경제 I 분과: 산업은행, 경제 II 분과 : 이동통신사
- 기타 (협조필요사항)
 - 인수위 활동이 지나치게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통합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인수위 활동이나 정책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각 분과에서 적극 검토.
- 업무보고가 종료된 이후 시점이므로 향후 주요 국정과제 관련 발표는 전체회의를 거쳐 각 분과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향후 운영계획 확정 및 공유 (간사회의회시) ○ 분과 전문위원 회의(09시)에서 1-2월 임시국회시 제출할 법안 및 새 정부 출범 전 조치가 필요한 하위법령안 파악,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안 제출 등 실무협조방안 논의 ○ 주요 국정과제 목록 및 분류 검토 작업 ○ 인수위-한나라당간 업무협조방안 검토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내부 토론회 (10시) 및 검토자료 작성 ○ 감사원 업무보고(1/8)에서 제기되었던 질문 등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빈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장 및 박진 간사, 일본 외무성 차관 접견 - 박진 간사,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주요 국정과제 검토 및 구체화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련 조직 및 법령체계 정비 필요성, 조직문화, 규제개혁, 민간협력단체 관리부실 문제 등 ○ 주요 국정과제 검토 전체회의 및 소규모 검토회의 진행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업무보고 (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초과유동성관리,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등 논의 ○ 당선인 초청 금융인 간담회 (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 완화, 금융허브 구축, 자본시장 규모 확대 등 논의 ○ 조세, 재정분야 회의 (1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 세입, 세출분야 감세여력 발굴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연탄지원 확대, LPG 경차 도입 등 고유가시대 서민생활 안정방안 검토 ○ 우정사업의 조속한 민영화 대안 검토 ○ 수협경영정상화 관련 정책간담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 간담회 개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TF 1차 회의: 의료보장시스템 개혁방안 논의 ○ 각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안 검토 ○ 정부조직개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협회 : 여성복지부로의 명칭 변경 반대 -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 여성가족부 존치안 찬성 - 인수위 정문 앞에서 여성 관련 단체 회원 여성가족부 존치 시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노사관계 현황 및 대책 논의/경기도 주요 투자프로젝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 정부혁신·규제개혁

- 조직개편 설명자료 작성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에너지대책반 및 기후변화반 회의, 어젠다 그룹별 보고서 작성
 - 한반도대운하
 - TF 위원단 워크숍(14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
 - 새만금
 - 새만금 개발 관련 부처별 이슈사항 검토 및 내부개발 비용 산출
 - 과학비즈니스벨트
 - 복지부 보고(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 논의)/교육부 보고 : (벨트내 외국인 관련 교육시설 설치 검토사항)
-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접수 현황

- 정책, 민원 등 인터넷 제안 접수 9일 밤 11시 현재 9,530건
- 우편, 방문접수 등 400건
- 공직자 정책제안 접수 184건
 - ▶ 공직자 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해 인수위원회와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기초분과에서 추진하기로 함.

4. 위원회 행정지원

1) 위원회 백서 발간 준비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과거 인수위 백서와 확실히 차별화하고, 가치 있는 자료로 제작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 각 기구의 긴밀한 협력 아래 편집 기획단계에 돌입했음.
 - ▶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위원장, 당선인에게 보고드릴 것임.

2) 인사청문회TF구성

-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인력 6명을 지원받아 TF를 구성,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함.

2008년 1월 10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6일차로 각 분과별로 주요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음.
- 국정원장 방북대화특 언론보도는 국가기밀 누출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했음.

1. 간사단회의

1) 이경숙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대기업이 올해 투자를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섰음.
-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이 열정을 다 해도 노사정의 화합하는 분위기가 유지돼야 투자로 인한 성장이 가능할 것임. 그런 점에서 노사정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임.
- 이천 화재현장은 소방안전시설이 준공되기도 전에 검사가 끝났다는 보도가 있었음.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원인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 문화부문 예산 2% 확보는 국격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분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 ▶ 한반도대운하 관련 위원장 강조사항
 - 위원장은 '모든 절차를 밟아 운하를 추진하겠다. 운하는 국내의 민간투자자로 이루어지며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이다'는 당선인의 말씀을 인수위원들에게 전달했음. 위원장은 여론수렴 없이 운하를 급하게 추진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정부조직 개편
 - 언론에 부처 통폐합 위주로 보도되는데 대해 그것은 부처에 속해 있는 극소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이며, 이러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너무 선정적이고 여론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인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 위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정부가 해야 할 일, 간섭해서는 안되는 일을 시대와 국민의 필요에 맞게 새로 조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음.
 -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무슨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을 가장 편하게

하고 국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음을 언론에 제대로 알려줄 것을 정부혁신TF 팀장인 박재완 위원이 요청했음.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이후 2차로 규제개혁이나 개편작업의 후속조치인 법령 개정, 예산, 인력 이동 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임.

○ 국정원장 방북 대화록 보도(중앙일보 10일자) 관련

- 이번 일은 국가 주요기밀이 누출되었다는 점에서 인수위 차원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엄중 대처하기로 했음. 이경숙위원장은 인수위 내부관계자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위원장은 대화록이 누출된 경위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정원측에 이번 문건을 다룬 인수위 및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보안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음.

○ 새로운 당정협조 모델 모색

- 당선인께서 국회 방문 시 말씀하신 ‘협력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정무분과에서 새로운 당정협조모델과 청와대와 총리실의 관계 설정방안 등을 수립, 보고하기로 했음.

○ 저소득층 연탄지원, LPG경차 도입 등 서민생활 안정방안 검토

- 서민생활 안정방안으로 현재 연탄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외에 추가로 차상위계층 중 해당자 6만 가구에 연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유가대책으로 LPG경차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

○ 주택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택분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는데 당 방침도 같으므로 1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시 한꺼번에 처리해 주택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에 요청하기로 했음.

○ 대입자율화 언론보도 혼선 문제

-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과 관련, 언론보도들이 상반되어 국민과 수험생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데 대해, 대입자율화 원칙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대입 일정이나 방안은 2월 초에 발표하고 새 정부 출범 후에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기로 했음. 따라서 대교협 등의 논의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 논술의 급격한 변경은 입시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대교협이나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기로 했음.

○ 유기적인 당정 관계 추진

- ‘인수위활동이 집행기관처럼 돼서는 안된다’는 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보인 점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끝까지 겸손·성실한 자세로 안정감 있게 인수위 활동을 하기로 다짐했음.
- 한편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 등 중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당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기타

- 각 분과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인수위 활동이 경제 분야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통합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인수위 차원에서 소외계층 관련 정책이나 활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2. 각분과별 활동

- 금일 각 분과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1차 정리를 완료하여 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분과에서는 비핵개방 3000구상 관련, 통일부 관계자와 회의가 있었고, 국방개혁 2020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소방방재청 업무보고가 있었고, 경제 1분과에서는 조세·재정 2차 회의를 개최
- 경제Ⅱ분과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저소득층 연탄지원, 경차에 대한 LPG 사용 허가 방침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였음.
-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 관련, 노동부와 협의가 있었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음.
- 경쟁력강화특위에서는 윤진식 부위원장이 일본 자민당의원 모임인 아시아외교안보비전 연구회 초청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음.
- 각 TF별로 관계부처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음.
- 전문위원회에서는 당선인의 지방시찰 관련 기초자료 준비, 국회계류법안 중 출범 전 처리되어야 할 법안 등에 대해 분과별로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도 파악하여 출범 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로 하였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분과 제출자료 검토 및 분야별 총괄보고서 작성 ○ 분과 전문위원 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시 제출할 법안 및 새 정부 출범 전 조치필요 하위법령안 파악,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안 제출 등 실무협조방안 논의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인사위 관련 국정과제 내부 검토 ○ 당-청, 당-정, 의회, 정부 협조모델 검토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자료 작성 ○ 비핵·개방·3000 구상 전략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종합적 남북관계 관리방안 ○ 국방개혁 2020 관련 의견수렴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 재난관련 내부규제, 프로세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요청 - 내부직원들 부패방지 제도적 노력 강조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재정분야 2차 회의 - 법인세, R&D 등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경제 I 분과 자문위원 간담회 구성 및 운영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방안 내용 확정 ○ 저소득층 연탄지원, 경차에 대한 LPG 사용 허가 등 방침 발표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 간담회 ○ 우정사업 민영화 관련 이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대타협 TF 활동: 당선인 노동계 간담회 개최 검토 ○ 문화, 환경 분야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수립 ○ 주요 국정과제 추진 실무실천계획 작성 추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진식 부위원장, 일본 중의원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 방향 강연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용 입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지공사, 전경련, 산업단지 공단 등과 협의/제주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의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설명자료 작성, 위원회 통폐합 작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연구과제 추진 워크숍, 국정과제 도출 및 작성 ○ 한반도대운하 : 문화재, 생태계 조사방안 실무회의를 통해 실천계획 수립 ○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업무청취 결과 및 추진계획 특위 위원장 보고(공약을 명확히 해서 이행계획 추진 실천계획 제시할 것을 지시) ○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무조정실, KDI 업무보고를 받고, 단지 추진 체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등 논의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1) 인터넷 창구 개설 10일째인 1월10일 오전 11시 정책·민원 접수 10,000건을 넘어섰음.

- 인터넷 접수 10일 밤 11시 현재 11,020건
- 우편, 방문 등 접수 616건
- 공직자 정책 제안 284건

2) 국민제안 인터넷 접수 건을 내일부터 각 분과로 이첩할 예정임.

- 공직자 제안 주요 내용
 - 공직자 인제뱅크 설치 운영(해양수산부)/가족등록부, 주민등록, 인감제도 통합(영광군청)/대운하 터널 대신 환상형으로(광주시청)/빈 교실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 사용(경기도)/지붕을 푸르게 '그린루프전략' (광주광역시)/교차로 신호점등 시 남은시간 표시(한국소비자보호원)/고위직 중심의 '정책제도 개선팀' 구성(문화재청)/경복궁 가는 길 조성(국무총리비서실)

2008년 1월 11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7일차로 각 분과에서 제출한 국정과제보고서를 재정리하여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하였음.
- 대운하 관련하여 2월에 있을 외국 운하전문가의 경부대운하현장답사와 국제세미나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홍보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어제는 국가기밀이 인수위 이름으로 신문에 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 유출자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임. 이것은 새 정부의 신뢰 문제, 국가기강의 문제임.
- 앞으로 친기업보다는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람.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는 최고의 민생대책임. 기업친화적 정책이 기업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일부에서 과욕, 월권, 속도가 빠르다 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인수위의 특성과 활동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음. 인수위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5년 청사진 마련에 주력해야 하며, 오해는 적극적으로 불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정원장 방북 대화록 유출 경위
 - 정무분과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인수위나 정무분과는 문건 유출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국정원 쪽에서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음./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인수위 차원에서 취하기로 결정했음.
- 외교통일안보분과 11개 국정과제 선정
 - 북핵불능화 등 북핵 폐기 우선적 해결/비핵·개방·3000 구상실천
 - 한미 FTA 조기 비준 등 한미관계의 창조적 재건/동아시아 경제안보공동체 등 신아시아 비전외교 추진
 - 실리경제외교 강화/대외개발원조(ODA) 확대 등 국제사회 기여외교 추진
 - 남북평화협력기반 구축/실용적 선진국방체계 구축
 - 신국방경영 구현/군사랑 2012 플랜 추진
 - 외교·통일·안보 부처 업무 기능 효율화

○ 정부조직개편안 추진 관련

- 박재완 TF팀 팀장은 10일 국회 일정을 당 측과 협의했다고 보고했음. 타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반대 여론의 조직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보고했음.

- 한편 통폐합 대상 부처가 많은 경제Ⅱ분과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처 산하의 이해집단들이 인수위를 향해 폐지불가 논리나 집단행동 엄포 등을 하고 있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보고가 있었음. 특히 농림부 통폐합 관련해서 선거운동 시 당선인이 농업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농업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그밖에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통폐합 대상 부처의 반발이 아주 거세지만 지금은 총력을 다 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회 방침을 분명히 했음.

○ 외국전문가 대운하 현장답사 홍보

- 2월 방한하는 네덜란드와 독일 운하전문가들의 현장답사를 대운하 홍보 계기로 최대한 활용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대변인이 이들의 기자회견·인터뷰 등을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음.

○ 아래로부터의 대운하 추진분위기 조성

- 경북 등 대운하 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운하 추진반을 구성해 대운하를 지역개발에 본격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의 추진 열기를 반대한 극복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노력

- 입시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대학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대교협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대교협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고사 부활, 논술 변화 등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처장단의 공동선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려 나가기로 했음. 한편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고등학교 등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17대 인수위 활동 긍정 평가 65.7%

- 중앙일보 풍향계 9일자 여론조사. 인수위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 응답이 65.7%, 부정적 응답이 14.7%로 나왔는 바, 그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국민이 좋게 평가하는데 대해 감사하고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했음. 한편 CBS/리얼미터 조사에는 잘 한다는 긍정 평가가 61.3%, 못한다는 부정 평가 24.1%로 나왔음.

○ 인수위-당 대변인 등 간담회 개최

- 기획분과 총괄간사, 당선인 대변인, 당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음.
- 기타
 - 일요일 개최되는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보고회에 대비하기 위해 12일 회의는 업무조정회의 대신 오전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과학기술부 폐지, 사실 아니다” 보도 경위)

- 이경숙 위원장의 발언으로 보도된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기사는 발언 취지와 관계없는 잘못된 보도였음.
- 이경숙 위원장은 11일 오전 চে영복 회장 등 과학기술계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방문인사들의 항의에 대해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음.
- 그러나 চে영복 회장이 과학기술부 출신 인사들 신년인사회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과기부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음.

2. 각분과별 활동

- 금일 각 분과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초분과의 초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초분과는 각 분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안)을 보완했음.
- 12일 오후에는 각 분과가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안)에 대해 분과별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과 기초분과 인수위원 및 담당 전문위원과의 합동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정과제 정리 외에 별도로, 외교통일분과에서는 북한 핵문제 및 한·미 FTA와 관련한 외교부 2차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분야별 국정과제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법무행정분과에서는 공직자 부패척결 자문회의와 지방분권이양 관련 자문회의가 있었음.
- 경제 1분과에서는 조세·재정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경제 II 분과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집중 검토하였고 태안군 관계자, 해수부 등과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
-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업무협약이 있었고 국민연금개혁TF 등 분과 소관 TF 합동회의를 연속 개최했음.
- 경쟁력강화특위에서는 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건교부, 환경부 등 정부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각 TF별로 관계부처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음.

- ▶ 오늘, 법제처로부터 현재 법안심사 또는 규제심사 중인 하위법령 관련 자료를 접수하였음. 12일 각 분과에서 인수위의 정책기조 관점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할 계획임.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기획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서 작성 관련 기초분과와 행정실 공동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1차 업무보고(1.13) 형식 논의, 기자회견 준비(1.14) ○ 당선인 1차 보고(안)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과별 보고서 초안 검토 및 의견제시정무분과 ○ 주요 국정과제 외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국정과제 발굴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2차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및 한·미 FTA 등 ○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과제 자문회의 개최 ○ 통일부 업무보고 추가 요구자료 검토 법무행정분과 ○ 공직자 부패척결 자문회의 - 공직자 부패척결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시책과 입장 ○ 지방분권이양 추진 관련 자문회의 ○ 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검토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재정분야 3차 회의 개최 - 교육비 공제 등 중산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집중 논의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 참석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관계관 회의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검토 -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 균특회계 세입감소분 세수 확보방안 등 ○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정책간담회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관련 회의 ○ 문화 분야 상임자문회의 간담회 - 상견례 및 차기정권 문화정책 주요방향 자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금융허브 추진관련 의견 청취, AmCham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설명자료 작성, 위원회 통폐합 작업 추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정책방향과 관련 산자부 업무보고 ○ 한반도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문화적 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등을 위해 건교부, 환경부, 문광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정부합동 TF 구성 ○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시의 새만금 관련사업 보고 (김제시장)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소개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접수 누적 건수 : 11일 밤 11시 현재 12,600건
- 방문, 우편·전화접수 : 773건
- 공직자 정책제안 : 350건

▶ 제안접수 내용

- 불필요한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축소 제안/공직자 급여 중 일부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 제안

- 정부부처 산하 각종 협회 통폐합 제안/공동체 토지신탁제도 도입 제안
- 육아용품 면세 및 비용 소득공제 제안/고속도로 출퇴근자 할인 적용 운행거리 40km로 확대

2008년 1월 12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18일차로 13일 보고회와 관련, 기획분과와 각 분과별 최종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였음.
- 경향신문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보도와 관련, 인수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구태로 규정하고 관련 전문위원의 즉각 원대복귀와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정부의 불가안정대책반 가동은 참 잘 한 일이며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국정 운영과 민생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됨.
- 내일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회와 관련해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민간을 부축하고 지원할 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역할을 정리해 주기 바람.
 - 국정목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사변적이지 않게 설정해 주기 바람.
 - 또한 인수위가 경제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정신가치와 문화가 조화되어야 경제도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임을 인식해 주기 바람.
- 인수위가 임기 5년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부지불식간에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지 유념하면서, 장단기 과제를 잘 구분해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1) 경향신문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보도 관련

- 사건 경위
 - 1월 2일 문화관광부 소속의 인수위 과건 전문위원이 문광부 정책총괄팀장에게 '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인사를 각 분야별, 장르별로 보수 3배수, 진보 2배수로 작성해 보고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음. 소속 분과 간사위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음. 문제의 문광부 소속 전문위원이 요구한 명단은 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문화산업, 출판계, 영화인, 종교계, 체육계, 관광계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역, 전공 및 최종학교, 주요경력, 성향, 최근 활동 동향을 적도록 요구했음. 문광부 미디어정책팀은 이 메일을 토대

로 언론재단에 메일을 보내 응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내용이 12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임. 현재까지 대상자들의 성향이나 활동이 취합된 것은 없으며, 지역일간지 사장, 국장들 명단만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수위에는 일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음.

○ 상황 인식

- 인수위는 그런 요구사항을 담은 메일을 보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에 어긋남은 물론 구태적 발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또한 문광부에서 관련 부서에 그러한 공문을 얼마나 보냈는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했음.

○ 조치 사항

- 문광부 과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그 직에서 해임해 원대 복귀시켰으며 소속 부서장에 증징계를 요구했음. 특히 이번 사건은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발상으로 자행되었지만 과거와 같은 정치공작적인 발상은 우리 인수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음. 인수위 자체 보안 및 정신교육도 즉각 실시됐음. 김형오 부위원장은 전체 전문위원을 비상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은 개탄할 사례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2) 인수위 “PSI 정식참여 검토” 보도 관련

○ 인수위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큰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모든 인수위 구성원들이 언론취재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위원들은 인수위가 그 동안 보안을 잘 지켜왔는데 기자들이 정부관계자에게 취재한 다음 인수위 여기저기에 전화해 코멘트를 탄것으로 보인다는 경위 분석과 함께 아예 기자들의 전화는 받지 말자는 제안까지 있었음. 지난 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PSI는 현재 국제법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참여를 검토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음.

(3) 안보통일교육 강화

○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대북정책이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 초·중 등 교과서, 군 정훈교육 등 안보통일 교육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스크린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음.

(4)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조기 감면 실시

○ 인수위는 애초부터 감면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 신당이 합의한다면 조기에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당선인이 공약한 장기보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은 검토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하기로 했음.

(5) 등록세·취득세 1% 인하 관련

-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왔고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제 우리가 집권했다고 해서 말이 바뀌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만 2조7천억 원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경제분과에서 검토한 다음 당과 논의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수 감소부분을 국세에서 보전한다든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 예를 들면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같은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6) 미 쇠고기 수입문제

- 당선인의 방미, 한미FTA 비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따라 2~3일 내로 FTA 특위간사 윤건영 의원, 외통위 진영 의원, 농해수위 권오을위원장, 최경환 홍문표 위원이 만나서 협의하기로 결정했음.

(7) 신혼부부 12만호 주택 공급 관련

- 공약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청약저축 가입자 700만 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기로 했음.
- 예를 들면, 700만 명이 10년, 20년 동안 저축하고도 자녀 두셋 데리고 집 없이 살고 있는데 34살 미만으로 1년 내에 출산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집을 준다고 하면 청약저축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8) 선진화를 위한 법령개정 TF운영

- 지난 10년간 잘못된 법령 개폐작업을 담당할 TF를 구성하고 사무실을 법제처에 설치했음.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민원·정책 등 인터넷 접수 : 12월 밤 11시 30분 현재 13,540건
-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960건
- 공직자 정책제안 : 400건

2008년 1월 14일

1. 각분과별 활동

- 1.13(일) 당선인에 대한 1차 국정과제 보고회와 관련하여 14일 아침 전문위원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 조기 추진과제의 경우 실용적인 방안의 마련과 추진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므로, 동 자료를 1.15(화)까지 기초분과로 제출토록 하였음. 기초 분과에서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목요일 아침 간사회의 시 review 한 후 보고서를 완성해서 금요일 간사회의 시 당선인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또한, 당선인의 말씀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분과에서 조치토록 하였음. 조치결과와 추진 상황은 별도 정리하여 금요일 간사회의 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한나라당에서 요청 사항도 정리하여 각 분과에서 검토토록 하였고, 특히 2월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음.
- 이와 함께 당선인의 국정과제보고회시 말씀, 기자회견시 말씀 등을 참조하여 각 분과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의 목록을 재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내용과 일정, 예산, 입법사항 등을 검토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회의 개최 ○ 분과별 내부 회의 진행에 따른 회의 일정 및 장소 조율 ○ 광역경제권 발전 4대 기본방향과 8대 기본전략 골격 수정, 보완 및 전략별 세부내용 작성 ○ 분과별 업무 추진 사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일안보분과 :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정보수집 분석기능 강화방안,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방안 등 - 사회교육문화분과 : 출입국 정책 선진화방안 관계부처 실무회의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예산절감 추진 위해 최근 감사원감사 중 예산낭비지적 관련 내용 각 분과 전파 ○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에 예산절감 관련자료 작성 요구 ○ 주요 국정과제 등 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 내부 간담회 개최 ○ 조기 추진과제 목록 및 추진방안 제출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전문가 초청간담회 ○ 국정과제 항목 재조정 및 긴급과제 내용 정리 ○ 외빈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장, 왕이 중국 특사 접견/박진 간사, 오찬 배석

	- 박진 간사 및 현인택 위원, David Sedney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면담
법무행정분과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업무회의 ○ 성폭력사범 경찰대책 관련 업무회의 ○ 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개발구상 업무협의
경제Ⅰ분과	○ 당선인 보고 후 조치사항 추진 - 주요 국정과제 목록 수정, 2월말 입법 추진 필요한 사항 파악 - 예산절감 관련 보완자료 작성 ○ 조세·재정분야 회의 개최 - 투자활성화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계속 논의 ○ 금융 분야 규제완화 협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TF 관계자와 향후 금융 분야 규제완화 추진방안 협의
경제Ⅱ분과	○ 신성장동력 간담회 개최 준비 (1/18일 예정) ○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방산업 활성화 검토 ○ 우정사업 민영화 관련 체신노조 위원장 면담 ○ 화확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방안 검토 ○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관련 검토 ○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방안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해명기사 배포 ○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 활성화 방안 실무 간담회 ○ 출연연 효율성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
사회교육문화분과	○ 인수위원장 여성정책자문위원 간담회 -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역 민영방송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지역방송 경영난 해소 광고 및 각종 편성규제 완화 요청 등 ○ 고령화 대책 TF 회의 ○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충 관련 정책협의 ○ 교육과정 개편, 인성교육 방안 마련 실무정책협의 ○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위한 저출산(보육) TF 회의 ○ 직업훈련체계 개편방안 관련 회의 ○ 아토피 등 환경 현안 관련 실무정책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체계 개선 등 위한 투자유치 TF 자문회의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방안 정리/규제개혁 업무추진 방안 및 추진체계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반주요 과제 그룹별 검토/에너지대책반 제3차 워크숍 준비 ○ 한반도대운하 - 관련 쟁점사항 및 국민제안내용 검토/운하건설 예정구간문화재 및 생태계 조사방안 검토 ○ 새만금 - 새만금사업 개발 기본원칙 및 부처별 추진사항 파악·검토/금년 상반기내, 금년 내, 임기 내 추진사항 검토/개별 사업별 실천계획 및 소요사업비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부처별 협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덕R&D특구추진본부, 충남 행복시 지원 및 도청이전 추진단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접수 : 14일 11시 현재 15,64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017건
- 공직자 정책제안 : 420건

14일 16시 현재 분석표

구분	인터넷	우편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전화접수	합계	분과별(%)
특위	652	8	3	1	17	681	5%
정무	101	2	1	-	4	108	1%
경제1	1,871	5	18	3	115	1,012	14%
경제2	2,831	46	19	6	95	2,997	21%
법무행정	2,075	27	6	5	100	2,213	15%
외교통일	425	4	4	-	6	439	3%
사회문화	4,530	52	12	12	120	4,762	32%
민원	59	72	90	102	14	337	2%
인수위	836	24	14	11	29	914	6%
기타	133	11	6	-	7	157	1%
합계	13,513	251	173	140	507	14,584	100%
경로별(%)	93%	2%	1%	1%	3%		

2008년 1월 15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1일차로 국정과제 보고회와 신년기자회견 당선인의 말씀을 참조하여 주요 국정과제의 목록 재검토 및 보완작업을 벌였음.

1. 인수위 전체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정부조직개편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역대 정권에서도 논의가 항상 있었음.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발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 인수위에서는 창조적 발상과 종합적 사고로 접근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함.
- 우리가 하는 일의 실천을 위해 당과 국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모든 것은 정책화하고 입법화해야 하는 만큼 당이 인수위의 논의과정,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지해야 함. 특히 기초분과에서 잘 해주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정원 개혁관련 일부 언론보도
 - 국정원은 업무보고만 받은 상태임. 국정원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출범 후에 새 국정원장이 임명되면 그 때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부분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기로 했음.
- 유류세 인하

- 유류세 인하와 관련, 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인수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음. 유류세의 목적은 비산유국으로서 유류소비 절감에 취지가 있었는데 법개정을 통한 유류세의 근본적 인하는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음.
- 한반도 대운하 관련
 -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이 경부운하사업에 대해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다는데 위원회가 공감했음.
 - 장석효 대운하TF 팀장은, 민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정부는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여할 수 있게 됨을 설명했음. 광역 8개, 기초 8개 단체에서 운하 전담 팀을 구성하여 간담회 등 활동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와 같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또 상향식으로 운하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음.
- 한반도 대운하지역 땅값 상승 관련
 - 대운하 주변지역의 지가가 꾸준히 오르는 등 투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대해 대운하 개발과 상관없이 특정지역의 지가상승 및 투기에 대한 이상 징후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통상적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음.
- 대입 자율화
 - “본고사 치르는 일 없을 것” 등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신 당선인 말씀이 대입자율화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주고 신뢰를 주고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음.
 - 당선인 기자회견 이후 사교육업체 주가가 20% 하락하고 논술 폐지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 쪽에 이명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정부조직 개편 관련
 - 정부혁신TF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은 관련된 국회상임위가 여러곳에 걸쳐 있어 논의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행자위원회에서 일괄 논의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음.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보고 했음.
- 새만금사업 TF
 - 17년을 끌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실천계획이 없던 새만금 사업의 실천계획을 완성했으며, 새만금의 목적과 기한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TF는 실천계획을 조만간 인수위에 설명하고 국민에게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새만금사업개발 기본원칙
 -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 ▷ 사업기간 단축 : 2030년→2020년
 - ▷ 농지 71.6% → 30%, 산업용지·기타:28.4%→7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에 대해 하드웨어 측면만 부각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지식융합적이고 과학선진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음.
 - 각 도에 지정된 경제자유특구에 과학벨트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과학벨트가 이미 공약한 충청권 광역벨트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조화가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했음. 특히 과학벨트는 총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이 구체화되거나 논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음.
- 당선인 및 새 정부 문화이미지 관련
 - 경제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이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는 면이 있는데 인식을 함께 했음. 문화, 정신, 가치가 저변에 깔리지 않으면 지난 산업화시대의 부작용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데 공감하고 인수위가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이런 취지에서 △문화계인사와의 간담회 △대운하, 새만금은 IT, 과학기술기반사업이라는 점 적극 홍보 △잘못된 토목대통령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소통시스템 마련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서는 포퓰리즘이나 선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인 소통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으며, 현재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텔레비전 신문고' 같은 성의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당선인 지역방문에 따른 지역공약 처리방향
 - 당선인 지방순시와 관련, 광역권 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무현 정권의 균형발전과의 차별화도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그리고 지역별 대형 프로젝트들(예,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동남권 신공항 건설, 도심공항 이전 등)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경제분과와 기획분과가 함께 실천계획을 만들기로 했음.

2. 각분과별 활동

- 향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되는 바, 이를 준비하는 절차가 현재 명확치 않아 기초분과에서는 인사청문 준비절차(안)을 마련하였으며, 16일 간사회의 시 논의할 예정임.

- 또한, 기초분과에서는 각 부처와 인수위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내일 간사회의에서 논의한 후 각 분과와 부처에 지침을 통보할 예정임.
-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음.
- 금요일 당선인 보고와 관련하여
 -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가 검토하여 업데이트하고, 1차 보고회 시 나온 아이디어(교육, 농업 부분 등)를 포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고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맹형규 기초분과 간사위원은 과제의 숫자보다는 큰 줄거리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안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음.
-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선인 또는 인수위 차원의 기초예술 분야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추진키로 했음. 국민제안센터에서 추진하는 우수제안자와 인수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대해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적극 언론보도에 노력키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회의 개최 - 2차 업무보고 준비계획 등 논의 ○ 광역경제권 발전 4대 기본방향과 8대 기본전략 골격 수정, 보완 ○ 인사청문회 준비 및 인수위 활동 관련 정보공개 청구 대책 검토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분과 핵심과제 토론회 일정 확정(1. 17,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대통령-국무총리 정부운영 방식과 대외회 관계 정립방안 ○ 주요 국정과제 검토 및 보완 ○ 사회적 일자리 및 로또복권 감사 결과 감사원자료 요청(사회교육문화분과)외교통일
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검토(남북협력기금 투명성, 통일부 인력 전문성 강화) ○ 국민제안 내용검토(대북국제협력기금 신설, 남북공동청사운영 등) ○ 국방 관련 주요 국정과제 세부내용 검토 ○ 당선인 연합사 순시 (홍두승 인수위원 수행)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TF팀 운영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소방방재 예방/소방)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보고 후 후속조치사항 추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목록 수정, 예산절감 관련 보완자료 작성 ○ 747 공약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최종회의의 7% 경제성장률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관련 농림 분야 대책 회의 개최 ○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 신성장동력 간담회 개최 준비 ○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세부검토 ○ 한·미 FTA에 대비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방안 국회의심의 대비자료 작성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위한 여성TF 회의 ○ 보훈·보상체계 TF 회의 국가보훈대상(Administrative Target)와 보훈급여(Benefits) ○ 국민연금개혁/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TF 회의

- 환경 분야 상임자문위원 간담회 - 교육공약 이행 관련 실무 정책협의
- 노동 분야 실무 정책협의 및 한국노총 정책연대협약 내용 검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면담/지자체 투자유치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방안 정리/규제개혁 관련 검토사항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 보고서(초안) 어젠다별 세부 수정방향 논의/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방안 논의
- 한반도대운하
 - 호남운하관련 추진회의/문화재 및 생태계 조사방안 검토
- 새만금
 - 새만금사업에 대한 TF 조정결과 자문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특별법 제정 관련 실무 검토회의 /과학과 기술(월간지) 인터뷰 (민동필 TF 팀장)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접수 : 15일 밤 10시 30분 현재 16,67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191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500건
 - ▶ 그간 검토 완료 1280건 중 52건을 제안 반영.
 - ▶ 다음 주 중 우수제안을 선별하여 제안자와 인수위 간 간담회를 실시 할 예정임.

2008년 1월 16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2일차로 간사단회의와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음.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분과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했음.

1.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 16일 오후 1시, 위원회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공식발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음.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은 안에 대해 인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특히 우리가 소수당임을 감안할 때 개편안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극력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 ▶ 몇 가지 간단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인수위원 전원은 만장일치 박수로 안을 확정했음.
- ▶ 행정실은 공식발표에 앞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지도부에 개편안을 직접 전달했음.

2.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국정원장 본인이 방북 대화록을 유출시킨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임.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나오는데 과거에 집착하거나 부분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나라의 미래와 전체를 보아야 할 것임.
 - ▶ 위원장은 당선인께서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신년회에 참석하여 CEO처럼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소개하고,
-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고 국민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면서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수위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1) 당선인 지역방문 관련

- 당선인 비서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잠정 일정을 잡았으며 인수위에서는 기존 분과가 중심이 되어 지역방문 시 내뉘는 메시지와 정책을 작성하기로 했음.

(2) 유류세 인하

- 경제 I 분과에서, 현 정권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안하겠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법률개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는 향후 세제운영에 제약이 매우 크므로 당과 논의하여 시행령 개정 방법으로 하되, 새 정부 출범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3)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

- 어제 경제분과에서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정보통신부 통폐합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는 분위기였으며, 현재 여러 개로 나누어진 관련 협회를 한국벤처산업협회로 통합 하겠다는 의견, 벤처재단 설립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벤처기업인들은 새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4) 강남 3구 부동산 가격 안정세

- 선거 직후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당선인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 표명과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으로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경제 II 분과의 보고가 있었음.

(5) 대입 제도개선 실천계획 마무리 작업

- 교육분과에서는 오늘부터 담당위원이 시도를 순회하면서 교육 개혁방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감대 확산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음.

- 또 1월 25일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전체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이므로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음.

(6) 금융·방송통신 규제개혁에 중점

-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기로 했음.
-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시급한 분야인 금융과 방송 통신 부문의 규제개혁은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음.

(7) 시민단체·언론 등의 정보공개 요구 관련

- 참여연대·국민일보 등에서 인수위원회의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온데 대해 법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행정실장이 설명했다.

(8) 편향적 역사인식 문제

- 이경숙 위원장이 지난 10여년 과거 정권동안에 역사와 남북관계 실상 등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9)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보고

- 새만금TF에서 새만금사업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음.
 - 현재 72%로 되어 있는 농지의 비중은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유보농지로 지정하여 향후 투자수요에 대비하겠으며 동북 경제중심을 목표로 신항만건설계획을 재추진하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질문제의 확실한 해결 방안 등 그동안 TF가 마련한 개발 방향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했음.
- 또한 세계 최장 방조제를 보기 위해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음.

3. 각분과별 활동사항

- 전문위원 회의를 개최, 당선인 지시사항 관련 각 분과 업무 분장 및 2차 업무보고 준비계획 논의 광역경제권 관련 제1차 외부자문회의 개최
- 1월 23일 광역경제권 세미나 원고 보완/지방에서의 기업 활성화 관련자료 분석 및 정책 개발 금융 소외자 해소대책 관련 경제 I 분과(강만수 간사)와 한나라당 및 당선인 비서실의 창구 단일화
- 분과 업무추진사항 조정(사회교육문화분과)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세부실행계획 추진 검토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 허용 및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검토(당선인 지시사항)
- 보육 관련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복지부 e-바우처 시스템 운영경험에 비추어 본 보육 바우처 도입 방안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 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추진 과제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 ○ 광역경제권 관련 제1차 외부자문회의 개최 ○ 각 분과 업무 추진사항 조정(사회교육문화분과)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취업 허용 방안 등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분과 핵심과제 토론회 2회 개최 확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정부운영방식과 대의회 관계 정립 방안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성과평가제의 개선방안 ○ 조속 추진 국정과제 준비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른 분과 차원의 후속 준비 ○ 백서 발간 관련 실무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정보수집 분석 기능 강화방안 검토 ○ 국방 관련 주요 국정과제 세부내용 검토 - 국방개혁 2020 검토 및 보완 - 대국민 친화적 이미지 개선 방안 검토 -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기술품질연구원의 통제부서 적정성 검토 ○ 국방 관련 국정과제 해당부서와의 간담회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시스템 강화 위한 자문회의 - 종합적 안전기능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제도화 ○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업무협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3(산업시설 재난예방/대응) ○ 법무부 법무실 조직개편 관련 업무회의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분야 추진과제 검토회의의 준비 ○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간담회 개최 준비(1.30)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 검토 ○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검토 ○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 활성화 방안 검토 ○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및 서민주택담보 대출이자 인하방안 검토 ○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방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회의 ○ 소득창출형 일자리 구체화방안(신규 10만명 창출 목표) 검토 ○ 의료개혁 TF 회의 ○ 대학입시 자율화 일정, 영어교육혁신,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검토 ○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 관련 실무 정책협의 ○ 한국노총 정책연대 협약내용 검토 ○ 문화 분야 현장방문(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담회

-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자문회의(3차)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안) 발표 - 규제개혁의 업무추진 방안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온실가스 배출 실적 및 전망, 감축집재량 통계작성
 - 한반도대운하
 - TF 자문위원장 2차 워크숍/영산강운하 관련 설명회/운하건설 예정구간 내 생태계 조사방법 등 검토
 - 새만금
 -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선인 보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내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검토 회의/외국석학 Network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회의

4.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집계)

- 인터넷 접수 : 16일 밤 11시 현재 18,17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308건
- 공직자 정책제안 : 590건
 - ▶ 오늘 검토 완료 1,800건 중 52건 제안 반영

2008년 1월 17일

-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 일부에 대한 이른바 '협상용'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작고 유능한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임. 정부조직 개편안의 목적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 효율적이며 시대적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음.
- 무엇보다 공직자들은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변화에 따른 진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이해해야 함.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므로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길게 보면 조직개편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임. 작은 정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상당히 이루어졌다

는데 대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었음.

- 그러나 통일부 통폐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며, 통일부 문제는 대야협상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이에 대해 김형오 부위원장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해 폐지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폐지된 부서는 국정홍보처 하나뿐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음.

- 정부조직개편 관련 특정 이해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호의적이며 특히 기업·금융권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분과에서 전달했음.

- 앞으로 입법과정에 대비, △당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 △언론사 편집국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지분위기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음. 한편 대북접촉 등 특수 업무를 외교부장관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특임장관이 맡을 수 있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음.

▲ 김형오 부위원장이 국회로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방문,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음.

○ 국정원장 사표수리 유보문제

- 청와대가 국정원장의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수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는 바,

- 정치적 대응은 당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인수위는 일단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음.

▲ 대변인 브리핑 내용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여론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이 사안은 국기문란행위로서 유아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 감세를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

- 경제 I 분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잉여금 4조4000억 원, 금년 예상 추가세입 등 총 9조7천억 원 정도의 여유가 예상되어 이를 경제성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보고와 함께, 내부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를 이루어 1월 중에 감세를 위한 관련 법 손질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했음.

○ 신당 일부 의원들의 인수위 업무보고자료 요구 관련

- 인수위 업무보고서에 대해 통합신당 일부 의원이 해당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인수위는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이므로 인수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의견을 각 분과별로 해당부처에 구두로 전달하는 선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음. 한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범여권에 대해 '인수위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 태안 자원봉사자 취임식 초청

- 태안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경부운하지역 지가 모니터 결과

- 경제 I 분과에서는 국세청 모니터 팀에서 1주일 단위로 투기우려 지역, 특히 운하지역에 대한 동향을 점검한 결과 경부운하와 관련되는 7개 주요지역, 주로 여주·양평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현재 부동산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회의 개최 ○ 광역경제권 세미나 원고 보완/ 지방에서의 기업 활성화 관련 자료 분석 및 정책개발 ○ 광역경제권관련 전경련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개최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정부운용방식과 대의회 관계 정립 토론회 ○ 예산 10%절감지원 위한 감사지적 예산낭비 사례 분석 초안 작성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른 분과 차원의 후속 준비 ○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장 방북 및 문건 유출' 관련 자료 전달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20대 의제 및 제안내용 검토 ○ 경제·에너지 외교 강화방안 보고자료 작성 ○ 국정과제(역사 및 영토 지키기) 보완 자료 작성 ○ 국방관련 주요 국정과제 세부내용 검토 및 해당부서와의 간담회 - 국방부·합참 국방정책 관련 의견 수렴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토의 -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수출활성화 전략토의 법무행정분과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산업시설 재난 예방/대응) ○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TF팀 인선 및 업무개시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회의 개최 ○ 예산 20조원 절감방안 검토회의 개최 ○ '새는 돈' 추방 탈세방지 선진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경제 II 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복귀 현황 및 대책 검토 2. 중소기업부문 10대 과제 도출 및 검토 3.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준비 4. 방송·통신 융합 간담회 개최 준비 5. 휴대전화 생방향요금제, 누진제 등 의견 수렴 6. 우정사업 공영화 관련 체신노조위원장 면담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 정책협의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무 업무보고 ○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전문가 회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방문(16일) ○ 환경산업계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방문 실무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지자체 투자유치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의견 청취/외국인투자용 부지 확보 방안관련 회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규제개혁업무 과제 추진방안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온실가스감축 전문가 초청 워크숍/제4차 에너지대책반 워크숍
- 한반도대운하 - 부산시, 충북도와 경부운하 관련 논의
- 새만금 - 새만금사업 관련 현장 방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 내 주요시설(가속기 등) 설치 전문가 검토회의
 - 과학계 주요인사 초청 정책간담회(원자력의학원 김종순 원장)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접수현황)

- 인터넷 접수 : 17일 밤 11시 30분 현재 : 19,28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480건
- 공직자 정책제안 : 760건

2008년 1월 18일

1.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추진 국정과제 중 보완된 과제나 신규과제에 대해서 대통령당선인 보고 (금일 간사회이시) ○ 광역경제권 관련 16개 시·도 지역경제진흥담당관 회의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성과관리 및 공무원 역량 강화 토론회 ○ 예산 10% 절감 위한 감사결과 분석 관련 기자회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정부운영방식과 대의회 관계 정립방안 토론회 개최(1.17)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에너지 외교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 에너지 외교 관련 구체 전략 검토 ○ 제외공관 인력 T.O. 적정성 평가 ○ 국방 관련 국정과제 해당 부처와의 간담회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대책회의 ○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대책회의 ○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적용 관련 회의 ○ 공직청렴성 제고 방안 자문회의 ○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팀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분야 제도개선방안 검토회의 개최 ○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관련 회의 개최 ○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개최 ○ 2월 임시국회 감세추진과제 설정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기계통신비 부담경감 관련 대안 검토 ○ 지분형 분양주택 추진 세부방안 검토 ○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방안 간담회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체계 개선 논의 ○ 모훈·보상체계 개편TF 운영방향 논의 ○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개편 회의

	○ 직업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기능 효율화 관련 실무정책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제4차 자문회의 개최/FDI 활성화 전략, 부지공급 원활화, 투자인센티브 제도 개선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반 전체회의/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보고/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보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분석/에너지대책 중점 추진과제 선정
	○ 한반도 대운하 - 호남운하 관련 전라남도 및 광주시(광산구) 현안사항 논의/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 검토
	○ 새만금 - 새만금사업 관련 현장 방문 중
	○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자체 세미나/민간 R&D 산업체 현장 방문(삼성종합기술연구소 및 LG 전자기술원)/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면담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집계)

- 인터넷 접수 : 19일 0시 30분 현재 20,60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734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930건

2008년 1월 19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5일차로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인수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동 회의에서 이원구 총남지사로부터 '기업규제의 실상과 대책'을, 민동필 TF팀장으로부터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각각 보고를 받고 인수위처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음.

1. 업무조정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음. 나라 분위기가 바뀌고 민간 부문도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음.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수위가 잘 하고 있다는 국민이 64%이고 당선인과 인수위가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국민이 68%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큼.
- 공직사회도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리더십과 국가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드는데 창의적으로 임해 줄 것으로 기대함.
-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생계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 지난달 말에 내려간 긴급지원금이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법무 행정분과에서는 현장상황을 잘 살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봐주기 바람.

-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수위는 그 후속조치와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임. 특히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은 병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방향은 민생과 미래에 있음.

2) 지방 현장의 기업규제의 실상 보고

- 19일 업무조정회의는 이완구 충남지사로부터 지방의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기업규제의 답답한 실상과 타개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
- 이완구 지사는 기업규제의 3대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문제 △중앙과 지방간 복잡한 협의 절차 등을 지적하고 이의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정이 가능 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조성 윈스톱 결정을 위한 지방·중앙간 부서 합심제 도입 제도화 등을 제안했음.
- 이완구 지사는 이와 같이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36개월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조성 절차가 1년 5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경평가제도 개선, 문화재 관련 인력 확충, 농지·산지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큰 틀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 보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민동필 TF팀장의 브리핑이 있었음.
- 이어진 토론에서 현 정부에서도 산학협력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했음이 지적되고, 정부 역할의 명확한 설정과 구체적인 실전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세계적 과학자 유치, 대학들의 연구역량 제고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4) 주요 결정 및 논의사항

- 내주 주요업무 설정
 - 기획분과에서 내주에 실시할 주요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했음.
 - ▲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조속 추진과제 선정 마무리 ▲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의 수립
 - ▲ 국정과제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착수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 준비
 - ▲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 ▲ 각 분과 차원 현장방문 추진 등
-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현재 선정한 166개 국정과제는 국정 전반을 총망라하고 있으나 이명박정부의 특성과 중점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으며, 토론 결과 큰 그림을 그려 주제나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기로 했음. 인수위 차원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규제개혁 관련 실천계획 작성

- 김형오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부조직 개편임을 강조하고 정부출범, 총선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기업 민영화나 다른 규제개혁은 준비는 철저히 하되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음. 특히 규제개혁은 일정을 짜는 실천계획 작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여러 분과와 관련된 규제개혁 사안, 예를 들면 출생제, 공기업 민영화, 지주회사,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제별 TF팀을 구성하여 작업하기로 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주 초 국회 제출

- 정부혁신TF팀에서는 개정안이 1월 2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22일부터 직제 개정작업에 들어가는데 각 분과에서는 해당부처의 직제 개정작업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요청했음. 직제 검토지침은 내주에 각 분과에 전달될 것이라고 TF팀에서 고지했음.

○ 인수위 활동 언론보도 관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근 인수위 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언론의 취재경쟁이 심해 작문성 기사도 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영문 브리핑 관련

- 해외공보관실에 주요 발표문을 영문화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하였음.

각 분과별 활동 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조정회의 - 국정과제 목 국무위원 인사청문 준비계획 보고 ○ 전문위원회회의 -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방법, 분과 협조사항 등 논의 -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 관련 분과의 검토기능 필요성 간사회의에 건의키로 함.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분과 내부회의 개최 ○ "정부 성과관리 및 공무원 역량 강화" 토론회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폭력시위 시정 및 대책 논의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세계국가' 관련 정책간담회 ○ 국정과제 관련, 현장방문 후보지 4개 지역 검토 ○ 대북 쌀·비료 지원의 투명성 문제 검토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협의 ○ 우수 국민제안 선정 ○ 인수위원 현장방문 계획 수립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대불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 현장조사단 파견 ○ 지분형 분양주택 추진 세부방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전문가 회의 ○ 인재과학부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전문가 회의 ○ 보육바우처 도입방안 논의

-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투자유치 관련 관계자 면담
 - 정부혁신·규제개혁
 - 각 부처별 기능조정 갈등사항 정리 및 토의/규제자유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축진법> 제정안 마련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검토/에너지대책반 중점 추진과제 정리 및 작성
 - 한반도 대운하
 - 위성사진 및 GIS 등을 활용하여 의 친환경 친문화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경북도, 낙동강권 시도지 사협의회 구성 검토
 - 새만금
 - 새만금사업 관련 현장방문 결과 정리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계 주요인사 초청 정책간담회 (공공기술연구회 최영락 이사장)/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인수위 설명회
-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19일 밤 10시 40분 현재 21,50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862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060건

2008년 1월 20일

- 오늘은 인수위 출범 26일차로 간사단회의는 없이 각 분과별로 핵심 국정과제 다듬기, 추가 국정과제 선정 등 작업을 계속하였음.
- 이경숙 위원장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1년 연장 계획을 발표했음.

1.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보고서 작성 지침, 국정과제 관리지침 작성 ○ 당선인 지방순시 및 인수위 현장방문계획 지원, 조정 ○ 1.23 광역경제권전략안 검토 회의개최 ○ 기업-대학-정부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청년취업촉진을 위한 협약체결 추진 ○ 저출산·고령화 극복대책 관련 각계 의견 수렴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분과 내부 회의 결과 집행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과제 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대책 검토 ○ 북핵 TF 및 경제통상 TF 공동계획 수립 ○ 국방 관련 주요 국정과제 세부내용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부패 척결방안 구체적 이행방안 검토회의 ○ 적극적 이민정책 관련 의제 정리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행정과 일원화 문제 검토 ○ 기초질서확립 방안 자료정리 및 토의 ○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방안 토의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불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생계안정자금 지원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상황 검토 ○ 농작업 대행서비스 활성화 방안 검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자문회의 토의 의제 계획 수립/조세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외국인 투자를 위한 부지 공급 원활화 방안 연구 ○ 정부혁신 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법안 마련(최종 점검)/규제자유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법> 제정안 마련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검토 회의/에너지대책반, 종합 점검회의 개최 ○ 한반도 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동영상제작) 검토/호남운하 추진방안 검토 ○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민자 유치 방안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비즈니스벨트 세부사업 소요예산 검토조정 회의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인터넷 접수 : 20일 밤 11시 현재 22,44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862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174건

▲ 2. 25 대통령취임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별도의 페이지를 설치할 예정임.

2008년 1월 21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7일차로 핵심과제 선정 등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각 분과별로 계속하였음.
-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 행자위 일괄 심의를 통해 28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며, 규제개혁은 큰 주제나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칠레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뉴스를 보았음.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뉴스라 생각 함.
- 대불공단 전봇대가 당선인 지시로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씩씩한 마음을 갖게 됨. 5년 동안 뭐 했는지 한심함. 현장의 전봇대보다 마음의 전봇대가 더 문제임.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탁상행정을 끝내야 함. 어떤 일이 생기면 안된다,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선진화는 어려울 것임.
-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여파로 국내외 경제환경이 심각함. 어제 인수위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안' 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됨. 작고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매우 높으므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 김형오 부위원장은 당과 교육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음.
- 규제개혁 언론보도 관련
 - 인수위 이름으로 규제개혁 관련 언론보도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전체

인수위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내부 보안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기로 했음. 특히 내부에서 언론 유출이 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음.

- 또한 간사단회의에서는 어제·오늘 언론에 보도된 '8대 규제개혁 과제, 철도공사 등 민영화 추진' 은 인수위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관련 분과위 간사가 확인했음.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의 반발여론, 역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한편 규제개혁은 매우 민감하고 한번 완화하며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덩어리 규제군별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정밀한 실천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기획분과에서 보고하였음.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만으로도 인수위는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는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안' 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

○ 정부조직개편 관련

-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해야 법안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전에 협의했으나 국회의사국은 상임위 원칙주의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그러나 오늘 원내대표회담에서 당 원내대표가 우리측 입장을 관철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상황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음. 한편 당선인이 지시하신 외국인 국가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음.

○ 대불공단 전봇대 철거

- 주말에 전신주 2개를 철거하는 등 시급한 부분은 일단 조치하였으며, 4월 예정된 대형 선박 블록 이동을 위해서 전신주 10개 철거를 비롯한 주변지역 정리 등 응급조치를 강구했다는 경제Ⅱ분과의 보고가 있었음.
- 대불공단지역 전체 600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시스템 검토

-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주유소의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경제Ⅰ분과에서 보고했음.

○ 대입3단계 자율화방안 완료

-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을 완료했으며 '고교다양화 300' 도 이번주 내에 다 마칠 예정임.
- 인수위 차원에서 실천계획을 조기에 발표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 시키고 정부 출범 후

에는 교육정책다운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했음. 또한 영어교육 강화를 국가프로젝트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음.

○ 인권위원회 위상 관련

- 이경숙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는데 대해 외국 인권단체 등에서 우려의 편지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논리 마련을 당부했음. 이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소속상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된 것일 뿐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인수위 차원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음.

○ 통합신당의 한미FTA - 통일부 연계 움직임 대처문제

-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회의가 예정된 바 통합신당은 통일부 통폐합 반대 당론을 관철시키고자 한미FTA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음. 통일외교안보분과는 이에 대해 오늘 간사회의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회의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작성방침, 2월 임시국회 처리방안, 인사청문회 대비체계, 당선인 지역방문 준비계획, 인수위 차원의 현장 방문 계획 논의 ○ 인수위원 현장방문계획 기획.조정 ○ 광역경제권전략안 검토 ○ 국정이념 관련 구체화 방안 검토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제목 확정 ○ 국정과제 내용 목요일경 회의를 개최, 내용 확정 ○ 전문위원 회의 결과 인수위원 보고 및 내용 확정 ○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과제는 추후 백서 발간 등에 반영기로 ○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TF에 전영태 전문위원 파견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국정과제 검토 및 실천계획 작성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인수위원장 앞 서한 접수-검토 ○ 강원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검토 ○ 국정과제 관련 현장방문 계획 검토(안산반월공단, 하나원 등) ○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약체결(안)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위원회의 면담 ○ 서민경제지원(새마을금고활성화) 관련회의 ○ 공직부패(공무원징계, 연금제도) 관련 업무회의 ○ 공직자부패척결 자문회의 ○ 안전질서(산업재해예방) 확립 관련회의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만수 간사 한청포럼 강연 ○ 금융소외자 지원시스템 구축방향 협의 ○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협의 ○ 인수위원 현장방문 계획 수립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대불산업단지 기업애로 해결 우선조치계획 수립 ○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분야별 연구개발 관련 정책협의회 개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관련 현장방문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통합회의 ○ 제대군인지원 TF ○ 교육 세부공약 실천방안 마련 정책협의 ○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국민연금 개혁 TF ○ 저출산(보육) TF 회의 ○ 지역일자리 창출 효율화 방안 실무정책 협의 ○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공일 특위 위원장 해외출장

- 1.19(토) 한·미재계회의 참석(하와이)/ 1.20(일)21(월) LA경유, 런던도착
- 투자유치
 - 서비스분야(금융·물류·관광·의료) 투자인센티브 제도개선 회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법> 마무리 및 의안발의(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규제개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공장 설립절차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전문가 회의/규제개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선정회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반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초청 설명/신재생에너지/에너지 이용합리화 분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한반도 대응하
 - 호남운하 추진방안 검토/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
 - 전남지사 신년 기자회견 : 호남운하 영산강 뱃길복원사업과 긴밀 협의 추진
- 새만금
 - 새만금 민자 유치 방안 검토회의/왕궁 축산폐수 처리대책 세부방안 검토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한국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 참석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소개/과학계 주요인사 간담회 -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1일 11시 현재 23,82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1,967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351건

2008년 1월 22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8일차로 인수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작성에 착수하였음.
- 평택 2함대시령부·당인리발전소 방문 등 각 분과차원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발로 뛰는 인수위'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음.

1. 전체회의

〈이경숙 위원장이 매경 주최 제15차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맹형규 간사가 회의를 대신 주재하였음.〉

1) 맹형규 기획분과 간사 모두발언 요지

-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인과 인수위활동에 대한국민 평가가 85점으로 나왔는데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
- 우리는 99명의 칭찬보다 1명의 비판에 더 귀 기울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지분형 분양주택 추진계획 보고

- 언론에 내용이 먼저 보도돼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 △6월까지 구체안 마련 △9월 시범 실시 △내년도 본격 실시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경제Ⅱ분과에서 보고했음.
- 호남운하 민자사업 가능성 검토
 - 애초에 호남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서남해안 개발사업인 'J 프로젝트'와 연계 개발하겠다는 기업체의 제안이 있어 민자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KBS '추적 60분'에서 경부운하 현지탐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반도대운하 TF팀에서 밝혔음.
- 정부조직개편 관련
 - 폐지되는 부처들이 정당과 사회단체를 찾아가 존치 필요성을 로비하는 등 조직적 행동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 관련된 수십 개의 단체와 회원들이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다가오는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 있었음.
 -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가 행정자치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자부가 조직이기주의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특히 지역개발 업무, 해킹 등 정보보호 업무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타 부처 간 영역다툼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 이와 관련 후속조치는 실무상 행자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각 부처와 행자부가 대등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음.
- 외국인근로자 등 '성숙한 세계국가' 문제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음.
 -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중요 부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들의 실태 파악과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분과 공동 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안산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음.
- 인수위 전체직원 조회 개최
 - 인수위 출범 한 달이 되는 1월 25일(금)에 전체직원 조회를 개최, 사명감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현장방문 계획 조율 ○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한 기초분과 자료 제시, 각 분과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약사항 확인 ○ 정부조직개편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각 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및 쟁점을 기초분과로 제출토록 조치 ○ 정부조직 개편 및 후속조치 관련 문제점 종합 및 정리 ○ 당선인 시도지사협의회 참석(당선인 말씀 내용 참고) ○ 1.23광역경제권 세미나 준비 작업 ○ 광역경제권 관련 전경련 측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논의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공직자와의 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방문 추진' ○ '예산 10% 절감' 을 위한 예산낭비 사례 발표이후 후속조치 ○ 「영향평가」관련 제도개선 사항 논의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세부내용 검토 ○ 분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관련 현장방문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정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대토론회 참석 ○ 지방재정확충 및 거래세 인하 보전대책 협의 ○ 신정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별 법령 자료 수집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협의 ○ 최저가낙찰제 확대 보완대책/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협의 ○ 택시업계 LPG 특수세 감면 등 협의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 간담회 ○ 지방형 분양주택 추진 세부방안 검토 ○ 대불산단단지 기업애로 해결 종합대책 수립 검토 ○ 울산시 기업체들의 전주 지중화 요청 건 검토 ○ 출연 연구기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방안 협의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 이주호 간사, 민주노총 방문 ○ 당인리 발전소 현장방문 ○ 복지 분야 현장방문(서울시립어린이병원, 한사랑 마을) ○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 저출산/보훈·보상체계개편/여성일자리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공일 특위 위원장 해외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tin Wolf FT 경제편집장과의 간담회(21일) - 영국 경제계 인사 대상 신정부 정책설명(22일)/주영특파원과과의 간담회(22일)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탄신도시 입주 외투기업 현장방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외국인투자 입지구제완화 관련 회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법안 등/정부조직개편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등 준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 15개 과제 검토 보완 -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관계부처 보고 청취 ○ 한반도 대운하 :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 논의/전남도와 호남운하관련 논의 ○ 새만금 : 필요사업 소요예산·기간 분석/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방안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 현장방문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2일 밤 11시 50분 현재 24,990건
- 방문, 전화, 우편 등 접수 : 2,118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500건
 - ▲ 22일 오후 4시 현재 누적 접수 27,850건으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참여센터' 접수 건수 (27,583건)를 초과했음.

2008년 1월 23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29일차로 과제별 TF회의와 현장방문, 국정과제 작성 작업을 계속했음.
- 최근의 증시불안 등 경제상황과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어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안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수능 등급제는 보완하고 내신이나 수능시험의 반영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임. 정책의 큰 방향은 공교육은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는 줄이는 데 있으며 영어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임. 새 정부 출범하면 곧 바로 법령과 재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또한 대학입시 관리가 대학협의체에 이양되는데 자율규제가 되고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해 줄 것은 해주되 감독 관리는 철저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나 혼란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애로들이 쏟아졌음. 이제는 한 지방을 규제해서 다른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자율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민간이 잘하고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임.
-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인수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증시불안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 경제분과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으로 TF를 구성해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그리고 인수위가 경제상황을 챙기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음.
 - 특히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만 관심을 가지는 등 정부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각 분과에서 관련부처를 챙기고 독려하기로 했음.
-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메시지 강화
 - 인수위의 기업친화적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장 편향·기업과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

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안 원유유출 사고 삼성책임론, 삼성비자금 특검, 한국타이어 산재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반삼성,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런 분위기를 방지할 경우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과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수위에서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병행해서 강조하기로 결정했음.

○ 국제박람회(BIE) 사무총장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 국제박람회 사무총장이 오는 1월 29일 방한하는데 인수위원장 면담을 요청해와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 타 지역의 전봇대 철거 요구 관련

- 경제Ⅱ분과에서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철거 이후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전봇대 철거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음.

○ 군산항 준설토 처리장 건설 연기 요청

- 정무분과에서는 예산낭비 사례로 공개했던 해양수산부의 군산항 준설토 처리장 건설과 관련, 공사입찰을 연기해 달라는 인수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냈다고 보고했음.

○ 군 장병 간담회 주요 내용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22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 시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가산점이 위헌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금전적 보상 등 복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
- ▲ 군인연금 현재 상태 유지
- ▲ 장기복무 후 사회진출 시 대책 마련
- ▲ 일반인에 비해 자가 보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기복무 부사관 등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
- ▲ 출산, 육아 문제 등 여군 복지지원 확대 등

○ 사관학교 및 ROTC 임관식 참석 관련

- 대통령이 모든 사관학교의 임관식에 참석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 효율성 등을 따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덧붙여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관학교 임관식에 대통령이 운번제로 참석하고 있다는 보충설명이 있었음.

○ 택시업계 LPG 특소세 감면 협의

- 택시 LPG는 면세하고 그 대신 현재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 중 중복되는 부분은 감차재원으로 활용하기로 당과 협의했으며 월 국회 처리 여부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경제Ⅰ분과에서 보고했음.

- 유류세 10% 인하 3월 시행
 - 법 개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는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그동안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됨.
 - 이에 경제 I 분과에서는 당 정책위와 논의하여 새 정부 출범 후인 3월에 시행령을 고쳐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고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인수위 방침과 차이가 있는 사항 검토 및 보고 ○ 국정과제 목록 조정 ○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2월 입법추진 필요사항 보고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공직자와의 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방문계획 논의 ○ 민간인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마련 ○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보고서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세부내용 및 통일 분야 국민성공제안 내용 검토 ○ 한반도 평화구조/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 간담회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망복지 129골센타 관련 검토회의 ○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TF팀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현황 점검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회의 개최 ○ 유류세 관련 회의 개최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호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 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검토 ○ 출연연 및 연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개최 ○ 회유금속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한국노총 방문 ○ 복지 분야 현장방문 ○ 교육/문화 공약 세부실천방안 마련 정책협의 ○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관련 정책협의 ○ 전달체계개편/의료개혁 TF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공일 특위 위원장 해외출장 - 1.23(수), 다보스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자문회의(제 6차) 개최/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계속)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규제개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작성 검토 ○ 한반도 대응하 : 문화재 및 생태계 훼손 등 언론보도 쟁점사항 및 검토내용 정리/충북도와 충청문화관련 논의 ○ 새만금 : 강현욱 TF 팀장 mbn 대담 ○ 과학비즈니스벨트 -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정책 간담회/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상황 보고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3일 밤 11시 현재 26,23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2,264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683건
 - ▶ 국민제안 접수는 접수 이후 처리소요기일 등을 감안, 2월5일 마감 할 예정임.
 - 이 경우 36일 접수. 16대 인수위는 32일 접수.
 - ▶ 그러나 공직자 정책제안은 2월24일까지 접수할 계획임.

2008년 1월 24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0일차로 과제별 TF회의와 현장방문, 국정과제 작성 작업을 계속했음.
- 물의를 일으킨 자문위원을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경계하고 인수위 복무심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인수위 자문위원 한 사람이 인수위 이름을 팔아 개인 영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수위의 전체 이미지와 위상에 큰 피해를 주었음. 비상근 자문위원이 많다 보니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분과에서는 점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애써 주기 바람.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해외 여건이 매우 어렵고 민생, 물가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매우 많음. 또한 정권교체기의 정신적인 해이까지 있어 어려움이 더 심한데 정권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끝까지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 드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정운영의 새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 모두가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을 각 분과 검토를 거쳐 기초분과에서 당에 전달했음.
-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 관련
 - 기초분과에서는 국회 제출과정에서 인수위 방침이나 취지와 달라진 사항을 파악하여 다시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음.
 - 조분과는 이같은 일이 주로 행자부에서 후속작업 과정에서 업무를 자기네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빚어진 일로 파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당선인 지역방문시 당 배려
 - 당의 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 등을 참석 대상에 포함시켜 소외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군장병 정신교육 언론보도 관련
 - 어제 서울신문에 당선인이 12월 31일 군부대 방문 시 '장병들의 정신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인용보도가 실린 것과 관련하여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이런 사실이 없음을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로 했음.

-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 입학허용 검토
 - 국민정책제안센터에 접수된 내용으로 헌법의 평등조항,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남자 생도의 입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보고했음.
- 그린벨트 완화 관련
 -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 쪽에서 나왔는데 경제Ⅱ분과에서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지·농지 등을 풀어서 땅을 넓게 쓰자는 것은 우리 공약에도 나와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푸는 문제를 정책방향 수립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공교육 강화방안 마무리
 - 고교다양화 300을 포함한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무리돼 이번 주 말쯤에는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분과의 보고가 있었음. 한편 일부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등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오보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언론에 지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음.

2. 물의자문위원 조차사항

1) 경과

- 인수위를 내세워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도된 고종완은 원래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제Ⅱ분과 자문위원 임명장은 받았으나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 등 2회 참석했을 뿐 실질적인 업무회의에는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음.
 - 경제Ⅱ분과에서는 고종완의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1월 17일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음.

2) 조치 사항

- 고종완에 대한 해임 및 수사의뢰 요구
 - 부동산 투자 상담 명목으로 고액의 상담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종완을 1월 23일자로 해임한 데 이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음.
- 자체심사기구 설치
 - 이와 관련 백성운 행정실장이 오후에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종완에 대한 인수위의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내에 자체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음.

음을 공표했음.

○ 내부단속 강화 및 기강확립

- 비상근 자문위원까지 포함한 인수위 전체 직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분과간사가 중심이 되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불미스런 일이 있을 시에는 해임 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음.
- 1월25일 열리는 전체직원 조회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한 유감을 천명하고 내부기강 확립을 다시 촉구할 예정임.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언론 브리핑 ○ 규제개혁 관련 분과 간 협의체제 구성 ○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 대한노인회 노인 주거복지 관련 정책제언 수렴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제출 관련 전문위원회의 및 인수위원 보고 ○ 백서 발간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국정과제 세부내용 작성 및 검토 ○ 국정과제 관련 간담회 ○ 북핵 TF 회의 개최 ○ 대구공군기지(K-2) 관련 민원사항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토론회 참석 ○ MBC 100분토론 참석 ○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제 발굴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 관리 및 균형예산 실천 관련회의 개최 ○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제정 관련 검토 ○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자침안 협의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확대 및 조기지원방안 확정 ○ 혁신도시 / 산학협력 단지 현장방문 준비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피스시설 모현센터(경기도 포천) 현장방문 ○ 고용거버넌스 통합 관련 정책 협의 ○ 국민연금개혁 TF 제대군인지원 여성일자리 TF ○ 영어공교육 완성 및 학교교육 내실화방안 마련 회의 ○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 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공일 특위 위원장 해외출장 - 당선인 특사자격 다보스포럼 참석 ○ 투자유치 : 외투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개선 검토회의/외국인투자인센티브 제도개선 관련회의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규정 조정/정부조직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작업 착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 현장방문 세부계획 수립 및 행동요령 교육 ○ 한반도 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경제학회, "대운하와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25일 14:00) 계획 - 부산시, TF 방문하여 한반도대운하의 차질 없는 추진 요청 ○ 새만금 - 상류유역 수질개선대책 세부검토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 현장방문(2차)/중앙 SUNDAY 인터뷰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4일 밤 11시 30분 현재 27,600건
-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2,432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1,850건

2008년 1월 25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1일차로 전체조회를 갖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음.
- 국정과제 세부내용 작업, 분과별 토론회 및 현장방문 활동을 계속하였음.

1. 전체직원 조회

- 인수위 출범 30일째인 25일 오전 이경숙 위원장 주재로 전체 직원 조회를 갖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을 다짐했음.
- 이경숙 위원장은 당선인의 뜻을 전하며 전 직원에게 26일 하루 휴가를 선물했음.

〈위원장 말씀 요지〉

- 한 달 동안 휴일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았음. 우리들의 땀방울이 훌륭한 정부를 출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자긍심으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람.
- 지난 한 달 동안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음. 자신감이 넘치고, 과잉기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와 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부터 우리 국민이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
- 우리 사회의 뒤틀린 것, 왜곡된 것, 비효율과 방만, 분열을 털고 세계적 경기침체와 물가 불안 속에서 새 정부가 하루도 허송하는 일 없이 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함.
- 자문위원 한 사람이 인수위를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우리에게 불명예를 주었음.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이런 일은 용납 될 수 없을 것임.

2.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대입자율화 방안이 발표됐음. 그러나 그동안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이 있었지만 힘든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은 탓인지 학부모들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느낌.
- 발표한 내용 중에 국민들은 특히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음. 영어교육 구상은 기존의 틀을 바꾸어 학교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임.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과중한 사교육비,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니 하는 이산가족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임.
- 영어교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여기에는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막

대한 투자가 필요함. 새 정부는 투자를 감당할 각오가 돼 있음.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에 대해 사교육비가 더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고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오는 30일에 공청회를 하고 2월 초순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규제개혁 작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 기획분과에서 규제개혁 작업이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 중임을 보고했음.
 - ▲ 근본적인 개혁방향과 중장기 과제 중심, 예를 들면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 ▲ 새 정부 출범 3개월 내에 실시할 단기과제 중심, 이 부분은 분과 간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금융 등 8개의 TF가 활동하고 있음.
- 게임산업에 관심 요망
 - 게임산업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인데 인수위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산업 현장방문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지방감사원 설립 검토
 - 정무분과에서는 민선자치 이후 지자체의 감사기구가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지방감사원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음.
 - 이에 대해 시도를 몇 개씩 묶어서 할 경우 자치단체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국가 고유사무, 기관사무, 단체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중복감사 논란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음.
- 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관련 기자회견 준비동향
 - 정부혁신 TF에서는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보고를 했음.
 -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 현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고 과거 10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 ▲ 경영진단, 직무분석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한다.
 - ▲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다.
 - 노 대통령이 반박논리 작성을 각 부처에 지시해서 각 부처에서는 일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 대해 해바라기, 보신주의라고 비난을 했다는 전언이 있었음.
-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국회일정

-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법률인 정부조직법 등 14개 법안이 25일 행정자치위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하게 된다고 박재완TF팀장이 보고했으며 어제 법사위원들과 행자위원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았으며 법안 처리에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했음.
- 행자위의 향후 일정은 29일 공청회, 30일 법안소위, 31일 전체회의임.
-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필요
 -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부처에 퍼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Ⅱ분과에서 분석해 본 바 20개 부처에 걸쳐 총 1,361개 사업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 1차 분석작업 결과 중앙정부사업 952개 중 유사 중복되거나 통합 폐지할 수 있는 것이 603개이며, 이밖에 1회성 사업 115개 등이어서 대폭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음.
 - 따라서 부처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인수위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보고했음.
- 대구공군기지 이전 민원 관련
 - 외교안보통일분과에서는 대구지역 국회의원·구청장들이 직접들고 온 공군기지 K-2 이전 민원에 대해 설명을 했음.
 - 이에 대해 공군기지 이전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원, 광주, 성남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을 하기로 했음.
-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관련
 - 경제Ⅰ분과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음. 원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책임은 시·도 지사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법사위가 국가부담으로 바꿨는데 법논리도 맞지 않고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판결이 나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없으므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측면, 또 수도권 의원들이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어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어 당 차원에서는 자유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상황 설명이 있었음.
- 쌀 목표가격 연장 관련
 - 1월 28일 국회에서 현재 80kg당 17만원인 쌀 목표가격을 향후 5년간 연장하지는 의원 입법안이 논의될 예정임. 우리 공약도 5년 연장이었음. 그러나 2014년 관세화하면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큰 충격이 예상되므로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임을 경제Ⅱ분과에서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3년 연장은 동의할 수 있지만 5년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경제Ⅱ분과가 보고했음.

○ 송파신도시 계획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공동주택 용적률과 주택공급 규모를 약간 조정해서 송파 신도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경제Ⅱ분과에서 보고했음.

▲ 금년 6월 착공, 내년 9월 첫 분양 실시

▲ 애초보다 3천호 줄여서 4만6천호 건설, 공동주택 용적률 214%에서 200%로 하향 조정

▲ 서울시에서 요구한 광역교통대책 등 6가지 전제조건 전부 수용

-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인수위원 일부는 교통문제 등을 들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음.

- 또한 송파신도시계획은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시 뉴타운사업, 광역교통망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반대했던 것으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해결됐는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보고 대처하기로 했음.

- 특히 정권교체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 적으로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경제Ⅱ분과에서 알아보기로 했음.

○ 동탄신도시 내 외국인 투자업체 이전계획 재검토

- 투자유치TF에서는 동탄신도시 내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업체 17개 중 14~15개 업체가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음.

○ 영어교육강화방안 관련

- 30일 발표할 영어교육강화방안에 대해 위원장과 이주호 간사의 설명이 있었음.

- 영어교과서,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 와 언론의 불안과 비판을 말끔히 씻어내는 계기로 삼기로 했음.

- 특히 지금 언론에서 제일 궁금해 하는 영어교사 수급대책에 대해 자세한 토론이 있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 인수위 중간활동 보고서 작성 ○ 광역특별회계 관련 관계자 협의 개최 ○ 국정과제 실천계획 종합 및 검토 ○ 대학생학자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정무분과	○ 총 11개 국정과제 제출 ○ 지자체 자체 감사 활성화 관련 자료 준비 및 보고 ○ 1개월간 분과 활동 관련 내역 제출
외교통일안보분과	○ 34개 국정과제 세부내용 작성 ○ 국제평화유지활동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향후 5년간 FTA 체결 확대 방안 TF회의
법무행정분과	○ 조직개편 후속조치 관련 통·폐합 필요 법률 발굴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개통시 참석 ○ 한국정책학회/서울행정학회 개최 : 새 정부 방향관련
경제Ⅰ분과	○ 당선인 참석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개최 ○ 예산 10% 절감방안 회의 개최 ○ 관세행정 개혁방안 협의
경제Ⅱ분과	○ 혁신도시 / 산학협력 단지 현장방문 ○ 농촌진흥청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 운수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 중국진출기업 U-Turn 현장실태조사계획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 당선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교육 공약 실천방안 마련 정책협의	○ 당선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참석 ○ 유치원교사 수당 지원관련 저출산(보육) TF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자문회의(제 7차) 개최/투자유치 TF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자체 간담회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설명(국회 행정자치위)/100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현장방문 실시/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감축잠재량 분석 ○ 한반도 대운하 - 제3차 자문위원단 워크숍 실시/문화경제학회 주관, "대운하와 지역발전" 세미나 실시 ○ 새만금 -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조정 관련 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 현장방문 결과보고/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관련 간담회(2차) 개최	

3.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5일 밤 11시 현재 28,860건
-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2,489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021건

2008년 1월 27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3일차로 전체 인수위원이 참여하는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중간활동보고를 들고 현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음.
- 국정과제 실천계획 작성작업을 계속했음.

1. 업무조정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한 달 남았으나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일 정도임. 정부조직개편안과 규제완화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토론할 것은 토론하되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등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람.
- 인수위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65.9~69.9%가 찬성하고 10~15%가 부정적인데 찬성이 많아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임.
-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과 영어공교육 정상화는 단순히 한달 만에 만든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0~20년씩 노력한 것을 정리한 것임. 30일 공청회에서 교사수급

정책,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 교수법 개선, 수업환경 보완 등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임.

- 영어교육 강화와 관련, 오해나 불안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현재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임. 새 정부는 영어교육 하나만은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모든 뒷받침을 할 것임. 영어 공교육 정상화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1개월 활동 중간보고

- 기획조정분과에서 인수위의 지난 1개월간의 활동에 대한 내역과 자체 평가를 담은 중간활동보고를 했음.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했음.

▲ 국정과제 실천계획 수립. 현재 95% 완료됐으며 내주 수요일에는 확정할 예정임.

▲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및 후속조치

▲ 주요과제 추진방안 마련 및 발표. 예를 들면 규제개혁 추진 인프라 구축,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등

▲ 당·정 협조강화.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인사청문회 등 대비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 청문 체계적 지원

▲ 대통령취임식 준비

▲ 인수위 백서 발간 준비

○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회 의원인 인수위원들은 상임위에 반드시 참석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음. 인수위원 전체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Ⅱ·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여론과 조직적 반대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으며, 분과 차원의 설득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수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체육부문 소홀에 대한 체육계의 반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이 빠진 부분.

▲ 농촌진흥청, 체육, 과학기술, 여성 등 정부조직 개편 반발세력의 연대 움직임 등.

- 그러나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으며 회의에서 이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음. 일부 합리적 주장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당에서 반영하면 되지 인수위에서 관여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음.

○ 경부대운하 관련

- 'KBS 추적 60분'의 경부대운하 프로그램과 관련, 한반도대운하 TF에서는 환경연합 등 반대측 인사들이 현장에서는 우리측 설명에 수긍하고서도 인터뷰 때는 딴 소리를 한 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음.

- 이에 대해 대운하 찬반논쟁은 그만해야 하며, 2~3월부터는 홍보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대운하 논쟁은 감정적이며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는 반대 측의 주장이 더욱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무대응 전략이 제기됐음.
- 특히 김형오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에는 대운하와 과학벨트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 화합적 자유주의 재검토
 - 이경숙 위원장은 국정이념으로 내세운 ‘화합적 자유주의’가 너무 학술적이고 어렵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대해 사계 권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음.
 -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이념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 연휴에 즈음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음.
- 백서 영문판 등 외국어판 발간
 - 백성운 행정실장은 백서 영문판은 해외홍보원의 협조를 받아 제작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정부 취지에 맞추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판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또한 취임식 준비와 관련, 행사 컨셉 및 진행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했음.
- 미 상하원 당선축하결의안 관련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미국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하원은 2월 4일, 상원은 2월 14~15일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음.
- 영어교육 강화방안 토론
 - 이경숙 위원장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강화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인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음.
 - 인수위원들이 토론에서 제기한 중요한 문제인식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영어 외에 타 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큼.
 - ▲ 처음에는 우수한 인력으로 출발한 공교육이 왜 학원에 뒤처지는가? 경쟁·인센티브가 없고, 교장 등 학교운영자의 리더십문제 등, 따라서 경쟁·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함.
 - ▲ 자율형 사립고를 많이 만들어야 과외열풍 해소할 수 있음.
 - ▲ 현 안대로라면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이외의 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 ▲ 과학 분야 유능자, 영어 능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함. 무엇보다 교사자격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함.
 - ▲ 영어교수법 개혁 시급 등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천계획 종합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 제출 과제 중 과제의 적절성 검토 조정 / - 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 분류 조정 - 국정철학, 국정지표 등 보완 및 국정과제와 맵핑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목록과제 조정 및 추진시기 조정 ○ 현장 방문(홍은 3동 동사무소)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국정과제 세부내용 작성 ○ 민군 통합복지체계 구축 관련 회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관련 법령정비 추진 현황 중간점검 회의 ○ 법무행정분과 국정과제 20건 검토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안 검토 및 실천계획 수정·보완 ○ 국민연금 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 예산 10% 절감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 재래시장 방문 추진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준비 ○ 연구개발투자 확대(공약수정) 방안 검토 ○ 중국진출기업 U-Turn 현장실태조사계획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 통합복지체계 구축 관련 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TF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자체 간담회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작업/50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가칭) <규제개혁촉진법> 제정안 마련/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실천계획 마련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작성 검토/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 ○ 한반도 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내용 정리/월간지(현정)에 “친환경 친문학적 바로알기” 기고 ○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계획 세부검토(취임 전, 올해, 임기 중)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자체 세미나(2차)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7일 11시50분 현재 30,33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2,610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2,070건
 - ▶ 현재 검토 완료 8,610건 중 227건 제안 반영

2008년 1월 28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4일차로 간사단회의에서 30일 있을 '영어 공교육 강화 관련 공청회'에 대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음.
- 전문가회의·피주 드라마제작 현장방문 등 분과별 활동과 국정과제 실천계획 작성 작업을 계속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이번 주일이 매우 중요함.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본격 논의하는데 인수위원들부터 적극 참여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졸속·과속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조직개편 안은 대선 전부터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들은 영어공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지난 60여년 영어교육을 해왔으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형편임. 국민소득 10만 불의 룩셈부르크나 5만 불 이상의 선진국들은 모두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국가임.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영어공교육 개혁의 목적임.
- 오는 30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안이 나오면 학부모들의 불안이나 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인사청문회 TF팀 구성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비하여 당과 인수위 해당 분과 전문위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취임식 초청 대상자 건의
 - 행정실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 우리 사회의 의인들(예. 일본 지하철에서 승객을 구하고 살신성인한 이수현 씨 부모,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 북경올림픽 참가 운동선수 등) ▲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인 사람들(예. 비보이 대회, 미술대회, 미용대회, 기능대회 우승자 등)을 초청하자는 건의를 했음.
- 정부조직 개편안 기일 내 처리 강조
 -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심의와 관련, 국회가 시간을 지체해서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해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타당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했음.

○ 사공일 위원장 다보스포럼 참가 소감

- 사공일 위원장이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한미재계회의와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소감을 간략히 소개했음. 외국의 많은 정치·경제계 지도자들이 우리의 공약과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성원이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고 보고했음.

○ 4대 연금 통합징수 문제

- 경제 I 분과에서는 4대 연금을 일괄징수체제로 바꾸는 데 대해 2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하나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정부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는 방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인수위에 협조를 요청해 왔음. 그리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면서 인수위도 정부안으로 가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강만수위원이 제안함.
- 그러나 이 문제는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와 재경위쪽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므로 전재희 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3자가 마지막 조율을 하기로 했다고 김형오 부위원장이 정리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 연금징수체계와 맞물려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기금운용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음. 그러나 기금운용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자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공사 형태로 두자는 의견을 광승준 위원이 강력히 제기했음.

3) 영어공교육 강화 관련 토론

- 30일 공청회를 앞두고 인수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음. 학부모·학교의 반응과 우려되는 사항, 문제점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인수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음.
- 인수위에서 내놓은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과 영어공교육이 맞물리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정책목표를 사교육비 절감에 둘 것인지, 영어능력 향상에 둘 것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반론도 많았음.
 - 사교육이 급격하게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안은 단계적으로 바꾸는 식, 즉 점진적인 방향으로 교육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분과에서 설명했다.

- 영어공교육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영어교육과 관련한 진실과 오해' 라는 Q & A 자료를 만들어 브리핑하기로 했음.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구제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오해와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청회는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음.
- 홍보논리 : 영어공교육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후 국민소득 4만 ~ 5만 불 정도 세계화된 국가가 되자면 포터너 프렌들리(Foreigner friendly)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 또한 영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
 - 인터넷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는 등 영어가 개인생존에 필수적임을 홍보논리로 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음.
- 이 밖에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한 문제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왜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하느냐?
 - 영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 영어공교육 한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겠느냐?
 - 영어공용을 퍼블릭 센터부터 선도하자. 예를 들면 공중과 음성다중 영어방송 실시 등.
 - 국가 영어공인검증시험제도 도입
 -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하자.
 - 주부들을 영어교사로 활용하자는 의견.
 - 영어 외에 타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오해 조기불식 필요.
- 이주호 위원 해명
 - 일부 신문에 보도된 '영어교사 삼진아웃제' '영어 공익근무요원제' 등은 인수위에서 검토된 바 전혀 없으며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미 밝혔으며,
 - 1년 전 제출법안에 일부 포함된 것일 뿐임을 언론에 분명히 설명 했음을 보고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조정의견 및 당선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시 및 검토 ○ 국무총리 인사 청문 준비 ○ 광역경제권 관련 세부사항 검토 ○ 국정과제 실천계획 종합 및 검토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분과 익일 현장방문을 위한 사전 검토(홍은3동) ○ 국무총리 업무보고 준비 ○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의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 관련 부서와 협의 ○ 국방 관련 관계부서 합동회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후속 등 통·폐합 필요 법률 발굴 TF 회의 ○ 『희망복지 129콜센터』공약과제 업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국민운동』 관계자 면담 ○ 법무행정분과 국정과제 20건 검토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추진방안 검토 및 실천계획 수정·보완 ○ 백서 발간 준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 완화 기본방향 검토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대비 민생경제 대책 수립 ○ 부동산 가격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R&D투자 활성화 간담회 후속조치 회의 (TF활동) ○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예방계획 수립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회의 ○ 영어공교육 완성 관련 고교다양화 300 관련 전문가 회의 ○ 문화 분야 드라마 제작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지원/전달체계 개편 TF 회의 ○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교육정책 관련 간담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자문회의(8차)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규제개혁 과제 선정 및 추진 실천계획 마련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한반도 대운하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영상 제작 추진/부산시, 직원교육 실시계획 수립 ○ 새만금 : 새만금사업 관련 건의사항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병원 관련 회의/과학계 주요인사 초청 정책간담회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집계)

- 인터넷 접수 : 28일 밤 10시 40분 현재 31,82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2,610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050건
 - ▶ 검토 완료 11,098건, 제안 반영 264건

2008년 1월 29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5일차로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음. 내일 간사단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 정부조직 개편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당, 국회의원,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음.

1. 인수위원 전체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당선인께서 국무총리 내정자를 직접 소개한 것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함.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보기임.
- 새 정부가 순탄하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만히 처리되어야 함. 총리 내정자가 국정운영 철학과 과제 방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분과에서 논의과정이나 배경을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랍.
-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코멘트는 국민이 할 것임. 다만 인수위는 청와대, 여야 국회의원, 각 부처 사람들,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것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길임.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어공교육을 얘기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아주 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하면서 발을 맞춰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음. 내일 공청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노 대통령 기자회견 대응 방향
 - 인수위는 가능한 코멘트를 자제하고 대신에 당에서 대응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음.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전망
 - 기획분과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일정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했음.
 - 노 대통령의 반발, 신당의 비협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월 11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취임 전 조각이 가능한데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2월 5일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와 관련, 적정한 시기에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나서 직접 대국민 호소를 하는 방안을 기초분과에서 제시했음.

○ 재외공관 인력 조정 문제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조사하고 논의해온 해외공관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음. 전 세계에 146개 공관이 있는데 이 중 인원이 4명이 안되는 데가 65%가 넘고, 대부분의 인원이 4대 강국에 편중되어 있음. 어떤 경우에는 대사관이라는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외공관 직원들이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각부처 파견인원은 별도 보고를 하고 있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공관장의 지휘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 중임. 경제통상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관과 현지진출 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방안이 필요함.

○ 태국내 탈북자 문제

- 1월말 현재 약 700명의 탈북자가 방콕 이민국 등에 수용돼 있는 데 좁은 공간 등 환경이 열악해 고통이 매우 심함.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한국 이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태국 내 탈북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외교통일안보분과의 보고가 있었음.

○ 직제개정 관련

-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달된 행자부 일반지침이 규제혁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예를 들면 기획 예산처 같은 데는 전 정권에서 배 이상 늘어난 과 단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의미로 지적됐음. 따라서 직제개정을 행자부 실무진에게 맡겨 놓아서 안되며 인수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경제 I 분과에서 제안했음.

○ 과학기술계의 R&D예산 관련 요구 문제

- 대통령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청와대 교육과학기술 수석으로 해달라는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경제 II 분과에서 보고했음.
- 그 연유를 설명하면, 전에는 과기부의 차관급인 과학기술본부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어서 예산 사전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R&D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데 용이했음.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그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음.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굉장히 반발하고 있음.
- 이것은 결국 R&D 관련 예산권을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느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불안에서 나온 것임. 그러나 이것은 상당부분은 개편된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 그리고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김형오 부위원장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R&D 예산을 주관하게 하자는 주장은 청와대의 역할이나 다른 부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논란을 정리했음.
- 한반도대운하 관련 동향
 - 한반도대운하TF에서는 민자문제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영산강운하는 J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할 만하다는 민간업계의 제안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 아울러 대국민 홍보동영상도 새로 제작하여 2월20일경에는 배포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서울대 교수들의 '대운하 반대모임' 결성 등 반대 움직임이 전문가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과학비즈니스벨트 언론 브리핑 신중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TF에서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고 보고하고 정치적 이슈는 빼고 주요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그러나 이에 대해 아예 발표를 하지 않거나 정제된 내용만 발표하자는 신중한 요구가 있었음.
- 「영어공교육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토론회
 - 1. 30(수) 10시, 인수위대회의실
 - 이주호 간사의 주제발표와 외부전문가 10여명 토론자로 참여
 - 이경숙 위원장 등 인수위 관련분과 위원, 당 관련 인사 참여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보고서 체계, 국정과제 분류 등 조정 ○ 규제개혁 Working Group 회의 ○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 ○ 광역경제권 관련 세부사항 검토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현장 방문(홍은3동 주민센터)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부 국방정책 수립 관련, 육군참모총장 의견 청취 ○ 인수위원 하나원 방문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 법령정비 TF팀 ○ 희망복지 129 공약관련 간담회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Working Group 협의 ○ 금융규제 개혁 관련 회의 개최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 회의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방안 검토 ○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 차세대 성장 동력 간담회 후속조치 회의 ○ 운수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대표자단 간담회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 지역고용 통계 추진 관련 실무정책협의 ○ 보훈·보상체계개편/국민연금개혁 TF ○ 영어공교육 완성 관련 전문가회의 ○ 중소기업 지원책 개편 관련 실무정책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강화관련 자문위원 의견 청취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규제개혁 과제선정 및 추진 실천계획 마련/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경감 관리기술 전문가 설명회 개최/전기이용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설명회 개최/에너지대책

- 반 연구결과 보고
 - 한반도 대운하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검토 및 논의/포럼 푸른한국(주관), 심포지엄 개최/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영상 제작 시나리오 점검
 - 새만금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검토/새만금 수질 모델링 관련 협의/랜드마크타워 건설 건의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 벨트 내 주요시설(가속기 등) 설치 관련 회의
-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9일 밤 10시 20분 현재 32,800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2,933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2,236건
 - ▲ 검토완료 11,278건 제안반영 842건

2008년 1월 30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6일차로 '영어공교육완성 실천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음.
- 간사단회의에서 그동안 기획분과가 중심이 되어 작업해 온 국정과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오늘 영어공교육 토론회와 관련, 60년간 해 온 영어교육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지라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우려와 불안이 제기되었고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음. 이 모두가 최종안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음.
- 영어공교육 프로젝트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임.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게 될 것임. 이것은 우수한 우리 국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확신함.
-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돼야 함. 당선인께서도 청와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백방으로 노력 중임. 정부조직개편 안이 지연되어 리더십 공백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깎이고 국민적 손해가 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됨.
- 설말이지만 경기는 그리 좋지 않다고 함.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미풍양속이 발휘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청와대와 신당의 대승적 협조 촉구
 - 김형오 부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이 됐음을 지적하면서,
 - 10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 시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한 지 12일 만에 처리해 주었음을 상기시키고, 87년 이후 새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출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음.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지 파행출범할 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언급, 신당과 청와대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음.
- 국정과제 보고서 논의
 - 그동안 기획분과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국정과제 구성 및 분류(안)과 △당선인 보고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 2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금주 말이나 내주 초에 당선인께 국정과제 최종 보고를 할 계획임을 밝혔음.

- 선거과정에서 이미 발표되고 익숙해진 3대 비전(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과 10대 희망은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5대 분야 전략은 사실상 국정지표인데 용어가 너무 학술적이고 가슴에 와 닿지 않으므로 쉽게, 운율을 살려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
- 또 당선인께서 늘 강조하시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과학기술, 실용주의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문화, 보건 분야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인수위 4무(노동, 복지, 여성,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음.
- '정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쓰기에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음.

○ 예산절감 지침서 전부처 배포

- 정무분과에서는 예산낭비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한 예산절감 지침서를 당선인에게 보고했는 바, 당선인께서는 이 책자를 인수위 이름으로 전 부처에 배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시했다는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부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억울하거나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먼저 부처 의견을 한 번 듣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배포하기로 하였음.

○ 영어공교육 실천방안 주안점 보고

-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오늘 발표하는 영어공교육 방안의 주안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음.
 - ▲ 영어를 영어로 한다.
 - ▲ 지금의 읽기, 듣기 중심에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 새로운 타입의 영어교사 즉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교사를 양성한다. 5년 동안 23,000명을 양성하며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논란이 되었던 영어몰입교육은 국가차원에서는 추진하지 않으며,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제기된 영어능력 평가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하되 말하기·쓰기까지 포괄하는 시험은 201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음.

○ 비료값 급등에 따른 대책 논의

- 농진청 폐지에다 최근 비료값·사료값 폭등, FTA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농촌 출신 의원들의 어려움과 농업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특히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비료 255만 5천 톤, 돈으로 따지면 8천억을 지원했는데 우리 농민들 비료가격은 107%나 올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러한 것에 대해 농민들 불만이 매우 격앙돼 있고 쇠고기 개방 등 FTA까지 겹쳐 있어 총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 경제Ⅱ 분과에서는, 화학비료 차액보조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부 정책방향

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보조를 부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 그러므로 화학비료 양도 줄이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 -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두 배 정도 늘리는 방안- 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당선인 GM대우 부평공장 방문 관련

- 대변인은 당선인께서 민노총 대신 GM대우 공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새 정부 및 인
 수위의 노동정책 방향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 언론 인터뷰와 토론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인수위 차원에서 노사문제 등 노동정책
 의 조율 필요성과 우리 쪽 담당위원 선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비전, 국정철학, 국정지표 정리 ○ 광역경제권 관련 관계부처의견 검토회의 ○ 노동부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공약 관련 논의 ○ 국정과제 내용검토 및 분류 조정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산·학·관 간담회 개최 준비 ○ 저출산·고령화TF 분야별 중점과제 종합판 3차 편집회의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사례집(guide book)』시달 준비 ○ 백서 원고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공관 인력 점검 관련 검토회의 ○ 인수위원 전방지역 방문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병원 방문 ○ 조직개편 후속 통·폐합 대상 법령 조사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안 검토 및 실천계획 수정·보완 ○ 금융 분야(금산분리 등) 및 대기업 관련(출총제 등) 규제개혁 추진방안 검토 ○ 택시 LPG 판매부과금 관련 회의 개최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연구기관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경마산업 관련 간담회 개최 ○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방안 간담회 ○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개선방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관련 공청회 ○ 고령화 대책/국민연금개혁 TF ○ 노동단체 관련 정책협의 ○ 관악고용지원센터 방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제9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작업 - 금융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공공기관 경영혁신 관련 검토사항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연구결과 보고서 정리 및 보완 ○ 한반도 대운하 : 한반도대운하 Brown-bag 미팅/2차 워크숍 실시 ○ 새만금 : 새만금 수질 모델링 관련 협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상황 당선인 보고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30일 밤 11시 45분 현재 34,015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2,933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316건
 - ▲ 검토 완료 11,623건 제안 반영 961건

2008년 1월 31일

• 오늘은 당선인 간사단회의를 주재함.

1.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준비상황 당선인 보고 ○ 당선인 보고 시 논의할 사항 종합 ○ 광역경제권 관련 관계부처 의견 검토회의 ○ 국정과제 보고서 체계, 과제별 보고서 내용 검토·조정 ○ 규제개혁 워킹그룹 과제리스트 종합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 사례집 초안 각 분과에 전달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평화연구원 관계자 면담 ○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안) 보고·청취 ○ 나들섬 구상 추진계획 검토회의 ○ 대도시 인근 공공기지 이전 검토 회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역주민 대표와의 면담 참석 ○ 공직자 부패처결 관련 자문교수 면담 ○ 예산 10% 절감 지원을 위한 감사 지적 예산 낭비사례 검토 ○ 국민을 잘 섬기는 유능한 정부 관련 업무회의 ○ 선진화 법령정비 TF팀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안 검토 및 실천계획 수정·보완 ○ 동북아 금융허브와 국부펀드 활성화방안 협의 ○ 예산 현안 협의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고도화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팀 2차 회의 개최 ○ 친환경·고부가가치 미래 지능형자동차 간담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간담회 개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공약 점검을 위한 어린이집 방문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방안 회의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마련 방안 회의 ○ 당선인, 문화예술계인사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관련 국회 및 언론 대응/금융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공공기관 경영혁신 관련 검토사항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 대응 관련 CO2 다배출업체 간담회 개최 ○ 한반도 대운하 : 생태운하 구상과 생태전문가 중심의 홍보방안 논의/문화재 조사 관련 실무회의 ○ 새만금 : 부처별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조달계획 검토 요청/새만금 수질 모델링 실시 요청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문화예술교류 현장방문 계획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31일 밤 10시 50분 현재 :
-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3,276건
- 공직자 정책 제안 : 2,397건
 - ▲ 처리 완료 12,584건 제안 반영 961건

2008년 2월 1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8일차로 국정과제 보고서 및 당선인 보고 시 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 설 전에 발표할 서민생활과 관련 민생 정책을 관련 분과에서 집중 검토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2월은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달, 국민이 잘 살고 민생을 보살피는 섬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큼. 특히 민생과 관련한 정책은 설 전에 마무리해 국민들께 좋은 설 선물 주었으면 함.
- 신문에 보니까 83세 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전 재산 2천만원을 회사했음. 이 할머니를 보면서 나눔은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음. 요즘 적십자회비 모금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우리 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고 TV방송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태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함. 같은 동포로서 남북관계를 떠나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음. 해당 분과에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 새 정부가 취임식과 더불어 산뜻하게 내각을 구성하고 출범을 해야 함. 각 분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정과제 보고회 2월 5일 개최
 - 이번 주말까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2월 5일쯤 전체회의에서 당선인을 모시고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음.
- 이동통신 전화요금 인하방안 논의
 - 경제Ⅱ분과에서는 인가제 폐지와 재할인판매제 도입, 의무약정제 도입, 결합상품의 할인율 확대 등 주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 바탕한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했음. 그러나 언론발표는 좀 더 검토 후에 발표하기로 했음.
 - 금년에 15% 내외 인하효과가 있고 연차적으로 효과가 확대돼 2012년까지는 현재기준으로 30%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영어 공교육 관련 통합신당 측 동향
 - 통합신당은 인수위의 영어공교육 방안을 총선쟁점화 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장 등이 포

함된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획분과에서 보고했음.

-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이슈화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들 주장의 허구와 억지, 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되 정치쟁점화는 강력 차단하기로 했음.

- 통합신당 측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전 과목 영어 몰입교육 ▲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 ▲ 사범대생과 교사를 선동하여 편 가르기

▲ 빈익빈 부익부 정책, 서민교육을 말살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 등

○ 태국 내 탈북자 문제해결 촉구

- 외교안보통일분과에서 태국 내 탈북자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탈북자들의 참상에 대해 설명을 했음.

- 태국 정부는 빨리 보내주겠다는 입장임에도 우리 정부가 수용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음.

- 또한 탈북자 문제는 인권 차원 외에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종합적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수위 차원에서 통일과 국가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음.

○ 태안 유류피해대책위 면담 결과

-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어제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한 태안 유류피해투쟁위원회 대표들과의 면담결과에 대해 보고했음.

-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 내용에 충분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반영해서 조속히 통과해 달라는 것으로 투쟁위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상한도 300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 환경파괴에 따른 생태계 복원비용 사고원인자 부담

▲ 태안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지정, 경제회생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추진

▲ 검찰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고 관계자 처벌 요구 등

○ 남은 기간 인수위 활동 방향

- 향후 인수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그동안 정책발표도 많았고 정부조직개편, 교육 등 두 개의 큰 전선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금부터는 수습,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인수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국정과제의 수를 줄이고 너무 디테일한 것 보다는 조금 추상적으로 엮어가는 것이 나중에 국정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영어공교육 관련 불안·혼선 진정

-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30일 영어공교육 공청회 이후 영어공교육에 대한 불안이나 혼

선이 상당히 정리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는 언론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여론 수렴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음.

○ 간사단회의에 총리내정자 초청

- 내주쯤 총리내정자를 모시고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음.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분과와 각 분과간 협의회의 개최(09:00~22:00) ○ 규제개혁 워킹그룹 과제리스트 종합 및 규제개혁 실천계획 추진방안 검토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 광역경제권 일자리 맞춤형 산학링크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 인수위원장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간담회(2.4) 준비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내용 세부 검토 및 보완 ○ 예산낭비 사례집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내용 세부 검토 및 보완 ○ 박진 간사위원, 주한 EU 대사 면담 ○ 통합방산전시회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군사량, 민사랑 플랜 추진 관련 의견수렴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 확대 관련 자문회의 ○ 조직개편 후속 통·폐합 대상 법률 정비방안 마련 ○ 예산 10% 절감 지원을 위한 감사지적 예산낭비사례 검토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활성화의 과제와 대책 협의 ○ 원화의 국제화방안 협의 ○ 국가채무 관리방안 협의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초청 무역인 간담회 ○ 지분형 임대주택 세부 추진방안 자문 간담회 개최 ○ 농업통계 이관 관련 검토 ○ 신성장동력 간담회 후속조치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토의 ○ 서울지방 노동청, 서울고용지원센터 방문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마련 방안 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Time지 선정 환경영웅 시상식 참석/에너지대책반 제8차 워크숍 개최 ○ 한반도 대응하 : 대구시와 경부운하관련 논의/예정지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일정 등 논의 ○ 새만금 : 새만금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기초연구센터 연구 활성화 방안 간담회/지역 주요인사 간담회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1일 밤 12시 현재 35,610건
-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3,359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447건

▲ 처리 완료 13,802건 제안반영 : 1,032건각 분과별 활동 요약

2008년 2월 2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39일차로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내주 초 당선인 보고회에 대한 논의와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팀의 보고가 있었음.
- 국정과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계속 했음.

1. 업무조정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1월 무역수지가 33억달러 적자임. 지난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음. 당선인께서 무역인과의 만남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임. 지난 1월 물가상승률이 3.9%, 특히 생활물가상승률은 5.1%였음. 경제분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잘 챙겨 주시기 바람.
- 남은 기간 인수위 활동 방향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함. 인수위의 책무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음. 더 이상 구체적 정책이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말고 조용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음. 국민에게 어필하는 정책은 정부 출범 후에 새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라든지 물입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유포되고 있음. 우리가 발표한 영어공교육 방안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들임.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으며 허무맹랑한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위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문제 점검
 - 경제 I 분과에서는 최근의 무역수지적자는 유가 상승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물가와 관련해서 월요일에 재정부하고 물가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보고했음. 여기에서 공공요금 동향 및 유류 유통과정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음.
 - 또한 관광수지적자 등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음.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제주도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카지노 등 특별조치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관련
 - 정부혁신TF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2월 5일 여야 6자회담이 계획돼 있어 사실상 설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음. 이경숙 위원장은 그룹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설득작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음. 한편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행자부에 제출돼 최종 스크린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 인수위 활동 마무리 관련

- 기획분과에서 인수위 활동 단계별 종료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내주 초까지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 철수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특히 총선출마자, 자문위원 등은 1차 철수 대상으로 하되 당선인 보고회 이후에는 단계별로 인원을 축소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향후의 인수위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음.

○ 글로벌 청년리더 추진계획 검토

- 기획분과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사회교육분과 등 관련 분과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음.
- 이와 관련해서 2월 13일 위원장 주재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부처 업무보고자료 등 취합 요청

- 행정실에서 부처업무보고자료, 각종 정책보고서 등을 취합하여 인수위 활동 종료와 함께 비서실에 넘겨 새 정부 국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각 분과에 협조를 요청했음.

○ 경제와 민생에 대한 관심 필요

-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과 영어공교육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시중의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총선도 있고 한데 설 밥상에 올릴 경제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로 했음.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팀의 보고가 있었음.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일 밤 11시30분 현재 36,125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3,600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533건

▲ 처리 완료 13,912건 제안 반영 1,034건

2008년 2월 3일

1.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별 보고서 수정 및 종합 ○ 규제개혁 실천계획 추진방안 작성 ○ 인수위 잔여업무, 소요인력 파악 및 철수계획 수립 지침시달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 잔여 업무 등 파악 ○ 예산낭비 사례집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외 기타 과제 선정 및 내용 작성 ○ 인수위 백서 초안 작성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공제안제도 및 창의적 공무원제안제도 검토 ○ 법령 선진화 주요 대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점검 회의 ○ 예산 10% 절감지원을 위한 감사 지적 예산 낭비사례 검토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안 검토 및 실천계획 수정·보완 ○ 무역수지 및 물가 점검 실무회의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수립 검토 ○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방안 검토 ○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안 검토 ○ 농가의 비료 및 사료 구입부담 완화대책 검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자료 준비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출범 전 절차상의 쟁점 검토 및 당선인 보고/금융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보고서 초안 수정·검토 ○ 한반도대운하 : 생태계조사 실시 ○ 새만금 :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대책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술투자방안 검토회의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현황)

- 인터넷 접수 : 2월3일 밤 10시50분 현재 36,515건
- 방문, 우편, 전화 접수 : 3,600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550건
 - ▲ 처리 완료 17,585건, 제안 반영 1,034건

2008년 2월 4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41일차로 국정과제 보고서 최종 조율이 있었음.
-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당선인을 모시고 관광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내일 실시되는 국정과제 보고회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 내일 개최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6자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함.
- 무역수지 적자,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음. 인수위가 비록 정책수단은 없지만 새 정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청사진을 구상해야 함. 인수위가 권오규 부총리에게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정과제 보고서(안) 검토
 - 내일 당선인에게 보고드릴 국정과제 보고서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였음. 보고서는 5대 국정지표, 20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회의에서는 주로 국정철학과 5대 국정지표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를 넣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론이 있었으며 국정지표에 대해서는 더 함축적이고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음.
 - 보고서 체제와 키워드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선거 시 국민과 약속했던 과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은 오후의 실무회의에서 수정 보완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음.
- 잘못된 언론보도 관련 대응조치
 - 정무분과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새 정부 출범 후 봉하마을 특감” 기사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해당신문사에 항의했으며, 인수위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도 없고 감사원도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어젯밤에 배포했다고 보고했음.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동아일보의 “북한 내부 불안상황 대비, 새 정부 - 미 공동계획 추진” 기사에 대해 인수위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국방부 취재기사였다고 확인하고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음.

- 또한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 한다’는 주장은 인수위 방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언급된 적도 없는데 신문 사설에까지 언급되는 등 확대 유포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음.

○ 규제개혁 추진작업 계속

- 기획분과에서는 국정과제 보고서 마무리와는 별개로 규제개혁 관련 작업은 계속할 예정임을 밝히고 행정개혁기본법 개정과 8개 TF 운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회

- 2월 5일(화) 7시 30분, 인수위 대회의실
- 전체 인수위원과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실장 내정자 등 참석
- 당측에서는 정책위의장, 수석정조위원장 참석
- 이번 국정과제 보고는 사실상의 마지막 보고로 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보완 후 당정 협의를 거쳐 당선인 대면보고 후 취임 직전에 확정할 계획임.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 당선인 국정과제 보고자료 작성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인수위원회 간담회 관련 사전협의회 ○ 규제개혁 실천계획 Working Group 회의개최
정무분과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질문/답변 자료 검토 및 제출 ○ 예산낭비 사례집 작성 계속
외교통일안보분과	○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 준비 지원 ○ 병사보험제도 실용성 제고 방안 및 군 의료체계 개선관련 토의
법무행정분과	○ 법령 선진화 주요 대상 과제 타당성 점검 회의 ○ 예산 10% 절감지원을 위한 감사지적 예산낭비사례 검토완료
경제Ⅰ 분과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검토 ○ 당선인 보고 준비 및 후속 추진과제 설정
경제Ⅱ 분과	○ 게임업계 간담회 개최 ○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 발표 ○ 제2차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간담회 개최 ○ 농지 및 산지 규제완화 방안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 당선인 초청 관광사업인과의 간담회 ○ 저출산(보육) 및 세대군인지원 TF ○ 게임업계 현장방문, 간담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제12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 정부혁신·규제개혁 -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준비/금융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분야별 국정과제 연구결과 내부발표 ○ 한반도대운하 - 한반도대운하 동영상(안) 자문회의 실시 ○ 새만금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새만금관련 소요예산 협의를 위한 회의자료 작성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유비쿼터스 보건의료 관련 간담회/지역 주요인사 간담회(부산/대전)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누적 집계)

- 인터넷 접수 : 2월 4일 밤 10시 50분 현재 37,280건
-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3,658건
- 공직자 정책제안 : 2,630건
 - 처리 완료 15,505건, 제안 반영 1,211건/인터넷 제안 접수 5일 마감 예정

2008년 2월 5일

• 오늘은 당선인이 간사단회의를 주재함.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국정과제 보고 ○ 인수위 잔여업무 및 소요인력 종합검토 ○ 저출산·고령화TF 종합보고서 관련 후속대책 착수 ○ 규제개혁 실천계획 추진방안 검토 ○ 광역경제권 관련 산자부와 회의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비 사례집 초판 출판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제안 접수 및 분류 ○ 당정협력 모델 심화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가산점 관련 병역법 검토 등 국정과제 외 과제 추진방안 검토 ○ 남북공동 유해 발굴 추진계획 보고 ○ 인수위 백서 초안 작성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선진화 주요 대상 과제별 정비방안 마련 ○ 국민성공제안제도 및 창의적 공무원제안제도 검토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및 협의 ○ 백서발간 준비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 검토 ○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개혁과제 추진방안 검토 ○ 과학교육 경쟁력 강화 관련 쟁점사항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체계 개편 및 저출산(보육) TF 개최 ○ 영화진흥위원회 방문 및 영화계 간담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백서 초안 마련/국정과제 추진(안) 정리/외국인 투자 One-stop 서비스 추진(안) 마련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6자회담(국회)/(가칭)「규제개혁추진법」 제정안 초안 조문화 보완 ○ 기후변화-에너지 대책 : 분야별 국정과제 보고서(안) 검토·수정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한반도대운하 : 생태계 조사 관련 실무회/ 문화관광부 업무 청취 ○ 새만금 : 새만금 관련 소요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처 협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자체 세미나(3차)/연구병원 관련 간담회(원자력병원장)

2008년 2월 6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43일차로 간사단회의를 개최했음.
- 설날 응급환자 진료 등 비상진료 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국정과제 정리 등 각 분과별 활동을 계속했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어제 국정과제 보고회가 잘 끝났음. 그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어제 보고회에서도 당선인께서 민생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음. 며칠 전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좌편하는 할머니가 당선인을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보았음. 민생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이 편안할 수 없음. 설에도 민생과 민심을 잘 살피는 인수위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인수위는 휴일도 없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왔음. 극소수의 일탈이나 오해로 인수위의 명예에 손상이 있었지만 대체로 잘 해왔다고 생각함. 설과 이후에도 당선인과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도록 인수위 전체 직원들에게 잘 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보고회 이후 활동 계획
 - 기획분과에서는 어제 당선인 보고회에서 나온 당선인의 말씀, 문제점,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음. 또한 규제개혁TF와 공동으로 작업 중인 규제개혁은 작업속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편 인수위 1단계 활동이 종료됐으므로 설 이후의 활동 및 마무리 계획을 기획조정분과에서 수립해 보고하기로 했음.
- 물가안정 관련
 - 경제 I 분과에서는 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음.
 -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 ▲ 교육비 상승과 관련, 등록비·학원비 등 단속 강화
 - ▲ 주유소 가격 공시제도 강화 및 차질 없는 진행
 - ▲ 설 성수용품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임.
 - 한편 최근 새 정부의 건설경기 기대를 반영한 철근 매점매석 행위가 빈발해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 공정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음.

○ 신성장동력에 환경산업 포함

- 경제Ⅱ분과에서는 당선인의 말씀도 있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고했음.
- 정부혁신TF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어제 여야 6인회답에 이어 오는 8일에 2차 회담을 속개해 정부조직법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R&D예산 배분방식 합의 등 후속조치 및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음.

○ 정부부처 직제 개정안 인수위에서 검토

- 정부혁신 직제개정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출된 안을 스크린하고 있으므로 11일까지는 인수위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서 보고했음.
- 이와 관련 경제분과에서는 '과'가 축소되어야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책홍보관실 명칭 문제 등을 들어 인수위 차원에서 직제개정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 주 업무조정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음.

○ 현정부 국무위원 수 문제

- 현 정부의 국무위원 수가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4명이 사퇴해 현재 15명임. 여기에서 한 명이 더 빠진다면 국무회의 구성자체가 안되므로 향후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등 새 정부 일정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대통령 존영, 국정지표 게시 문제 등

- 취임 직후에 대통령 존영을 교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해 대통령 존영·국정지표의 게시 여부와 범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다음 회의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음. 참고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존영은 군부대에만 게시하고 일반 부처에서는 하지 않았음.
- 한편, 한글 로마자표기법, 지난 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교과서 문제, 1월 1일 국립묘지 참배 등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시되었지만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2008년 2월 8일

1.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실천계획 추진방안 마련 ○ 광역경제권 관련 후속 보완작업 종합정리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잔여업무 및 소요인력 종합검토 ○ 저출산·고령화TF 종합보고서 관련 후속대책 착수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 사례집 출판 ○ 법서 2권 원고 제출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중심의 법체계 단순화」방안 등 마련 ○ 국민성공제안제도 및 창의적 공무원제안제도 검토 ○ 법무행정분과 잔여업무 처리계획 마련
경제Ⅰ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및 협의 ○ 경제현안에 대한 새 정부 입장 정리 ○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검토
경제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만 LCD 산업 및 패널 구매현황 검토 ○ 「차세대 중소형항공기 개발사업」추진상황 점검 ○ 민간 R&D 투자촉진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 결과'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점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TF 백서 작성 초안 검토·수정/외국인 투자 One-stop 서비스 추진(안) 마련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관련 국회 6인회담 지원/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분야별 국정과제 내용 검토·보완 ○ 한반도대운하 : 대운하 사업 관련 특별법 필요성 검토/「한반도대운하 희망스토리」 홍보용 책자 발간 준비 ○ 새만금 : 새만금 홍보동영상 시나리오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화 재원 확보방안 검토회의

2.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1) 누적 집계 현황

- 2월5일로 공직자 제안을 제외한 일반 접수는 마감했음.
- 제안접수 총계 41,444건
 - 인터넷 제안접수 37,679건/방문, 우편, 전화 접수 3,765건
- 공직자 정책 제안(2월24일까지 계속) 2,700건

2) 처리 현황

- 2월 8일 현재 처리 완료 16,868건
- 제안 반영 1,318건

2008년 2월 9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46일차로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위 마무리 계획과 정부조직 직제·하부조직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정과제 세부 실천방안, 백서 원고작업 등 분과별 활동을 계속 했음.

1. 업무조정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 이제 당선인께서 취임하실 날까지 보름 정도 남았음. 올해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새 기분으로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면서 설 연휴 마무리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기운이 결집되어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함.
- 이제 우리 인수위에 남은 기간은 열흘 남짓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멋지게 책무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일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일과 △국정과제 보완작업을 더욱 착실히 하여 새 정부가 출범 즉시 일하는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설 연휴 기간 동안 파악한 민심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는 일 등에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하겠음.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인수위 마무리 관련
 - 기획조정분과에서 2월 22일까지 인수위 업무를 종료한다는 계획하에 그 기본방향과 마무리 대상 업무에 대해 보고했음.
 - 2월 22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업무는 △새 정부 출범 후 해당부처 및 수석실로 그 상태로 이관하고 △ 부득이하게 잔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월 20일 경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마무리 대상 업무는 공통사항과 분과별 자체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였는바 공통사항은 7가지임. : 국정과제 보고서 보완, 신정부 출범 100일 실천계획, 규제개혁방안 마련, 당선인 지역방문 지원, 인사 청문 지원, 국민제안·공무원 제안 검토, 백서 발간작업
- 예산절감 지침서 발간 배포
 - 정부분과에서는 당선인 지시에 따라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한 예산절감 지침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는 책자를 인수위원회 명의로 발간하여 인수위원들에게 배포하였으

며 정부부처에도 배포할 계획임을 보고했음.

○ 법령정비 추진기획단 구성

- 법무행정분과에서는 그동안 선진화법령TF가 중심이 되어 국민 중심의 법체계 단순화 및 사문화 법률 등 비현실적 법규 정비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보고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법령정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경제 분야 규제개혁 계속 추진

- 경제Ⅱ분과에서는 창업 및 공장 설립 간소화, 방송통신 규제, 토지 이용규제 등 3가지 분야의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 정부혁신TF에서 8월 2차 6인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10일 있을 3차 회담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12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 현행 유지 등은 신당의 요구에 대해 우리 쪽의 긍정적 검토 입장을 언론이 조금 앞서나가 보도한 사안으로 우리 쪽 입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괄타결이 대원칙이라고 밝혔음.

○ 직제·하부조직 개편문제 논의

- 정부혁신TF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하부조직 개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인수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음. 주로 개편 방향과 원칙, 하부조직의 설계 및 공통조직 모델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계 단계가 더 축소되어야 함. 개편 조직은 여전히 4~5단계인데 이것을 3단계로 줄여야 함.

▲ 정책기획실 명칭 문제. 정책 실행은 국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역할 기능으로 보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기획실, 기획조정실 등이 거론됐음.

▲ ○○담당관 명칭 문제. 예를 들면 '창의혁신담당관' 처럼 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적절한지 하는 지적이 있었음.

▲ 외국인 공직 임용문제. 성숙한 세계국가와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는 1.5~2세대 교포와 외국인들의 공직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수위 제도개선 문제

- 17대 인수위의 경험과 사례에 바탕하여 인수위 제도개선안을 마련 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인수위의 법적 지위, 인수위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정식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위원장과 현 정부 총리 간의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 거론되었는바,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백서에도 기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대로 정리해 새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음.

2008년 2월 10일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관련 규제 개선방안 검토회의 ○ 출범 초기 추진할 사항 정리 ○ 광역경제권 관련 6개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준비 ○ 규제개혁 Working Group별 추진방안 의견 종합·조정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 정리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 사례집 관련 기자회견 ○ 대통령실 업무 관련 모델 정리 ○ 백서 1권 원고초안 작성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년간 대북정책 및 프로젝트 등 검토 ○ 인수위 백서 작성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행정분과 잔여업무 처리계획 구체적 방안 마련 ○ 국민성공제안제도 및 창의적 공무원제안제도 검토 ○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 과제 발굴 및 분야별 정리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천계획 월별·분기별 실천계획 작성 ○ 백서 발간 준비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및 협의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 최종안 작성 ○ 부산 신항 배후부지 기반시설 민간투자 제안 검토 ○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관련 현안사항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TF(보육·유아교육) 실무회의 - 추가 확보된 교육예산 유아교육에 사용방안 협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TF 백서 작성 초안 검토·수정/외국인 투자 One-stop 서비스 추진(안) 검토·수정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금융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분야별 국정과제 보고서(안) 검토·수정/원자력분야 전문가 업무 면담 ○ 한반도대운하 : 한반도대운하 동영상 제작 추진/한반도대운하TF 백서 초안 작성 ○ 새만금 : 새만금사업 세부추진계획 실천계획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력을 위한 방문 준비/과학비즈니스벨트 실행계획서 작성

2008년 2월 11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48일차로 간사단회의를 갖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승례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부위원장과 해당 분과인수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문화재 보호 등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국보 1호 남대문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우리 자존심도 불타는 참담한 기분임. 조상이 물려준 신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것은 당대를 사는 우리의 책임임. 이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 자화상이 심히 부끄럽고 면목이 없음.
- 태안 유류사건을 통해 우리는 소방방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음. 그 과도기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정말 근본적인 시스템과 정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우리 인수위가 일할 수 있는 날이 1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화재 관리 보존 시스템과 정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함.
- 어제 청와대 수석에 인수위원 4명이 포함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운영하게 되어 든든한 생각을 하게 됨.
- 규제개혁 마무리에 꼼꼼하고 깔끔하게 박차를 가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부탁함.
- 우리는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짜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됨.

2) 김형오 부위원장

- 남대문에 소화기가 8대뿐이었다는데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크게 무너졌음. 조기진화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도 제대로 안됐음.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임.
-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것도 정권말기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임. 앞으로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리와 국무위원 인사 청문 까지 마쳐야 함. 오늘까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공직사회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새 정부 출범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 신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의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람.

3)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1)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추진계획 보고

- 당선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에 대해 기초분과에서 보고했음.
- 이 계획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나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인턴 3만명 양성. 5년간 소요예산 895억원
 - 청년 해외봉사단 2만명 육성. 코이카(KOICA)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임. 5년간 소요예산 350억원(코이카의 자체사업예산 1,500억원 제외)
 - 해외취업 5만명 달성. 기업과 정부, 대학이 수요처 발굴 등 해외 취업을 위한 공동 노력 전개. 5년간 소요예산 1,764억원
- 이와 관련 산·학·관 간담회를 2월 13일 인수위에서 개최한다고 보고했음.
- 이 계획과 관련, 여러 인수위원이 민간인 보호대책,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제공, 효율적 구심체 마련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음.

(2) 예산낭비 사례집 발간 관련

- 정무분과에서 어제 예산낭비 사례집 발간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했으며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고 평가했음. 또한 예산절감 모범사례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보고했음.

(3) 청와대 수석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

- 12일 오전 10시부터 각 수석 내정자에 대해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인수위에서 준비한 업무내용을 분과별로 보고할 예정임.

(4) 남대문(송례문) 화재 관련

- 관련 분과에서는 화재원인 등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복원을 위해서는 완전해체가 불가피하며 200억 정도의 예산과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했음.
- 목조건축물 문화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6)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

- 경제Ⅱ분과에서는 복잡다기한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음. 개선안은 업무별 창구 단일화, 유사중복사업의 핵심 기능위주 통합 실시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금의 260개 기관, 952개 사업을 30개 기관, 450개

사업으로 간소화 효율화할 수 있다고 보고했음.

(7) 경주 방폐장 문제

- 경제Ⅱ분과에서는 방폐장 건설운영허가 신청서가 12개월째 원자력안전기술 심의 중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을 보고했음. 울진 원전 임시 저장고의 포화, 신정부 출범에 따른 3~6개월의 공백 등을 고려하면 현 정권 내에 인허가 정도는 마무리되어야 방폐장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음.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보고서 수정·보완 ○ 출범 초기 추진할 사항 종합·정리 ○ 대통령실 수석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 규제개혁 대상 과제 및 추진시기 종합·검토 ○ 광역경제권 후속 보완작업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업무 관련 모델 준비 계속 ○ 공직자 정책제안 검토 자료 센터로 제출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업무보고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업무보고 준비 ○ 군사외교활동 강화 및 다양화 관련 실무부서 면담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정수석 업무보고 준비 ○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검토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사항 정리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및 협의 ○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협의 ○ 경제수석 업무보고 준비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유류 유출사고 특별법 제정 현황 검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확대 및 조기지원방안 검토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TF 4차 회의 개최 ○ 부산신항 배후부지 기반시설 민간투자 관계자 회의 개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레온 화재사건 현장 확인 및 점검 ○ 저출산TF(보육·유아교육) 실무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TF 백서 작성 초안 검토·수정/외국인 투자 One-stop 서비스 추진(안) 검토·수정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등 점검회의/정부조직 개편 관련 국회 6인회담 지원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분야별 국정과제 보고서(안) 검토·수정 ○ 한반도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자문위원단 워크숍 실시/총리후보자 업무보고 ○ 새내금 : 항공우주복합과학단지 조성 검토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계 주요 인사 자문회의

2008년 2월 12일

1. 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 이경숙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 신당 지도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내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새 정부는 장관도 없이 출범하는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게 됨.
 -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음.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그에 맞는 정부조직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임.
 -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음. 이대로 가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하는 길임.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을 사사건건 가로막아온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음.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당장의 작은 이해에 집착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음. 국민의 세금을 천금같이 여기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람.
 - 신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달라. 특히 다수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달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새 정치를 보여줄 것을 한번 더 간곡하게 호소함.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 출범 초기 추진할 사항 종합·정리 ○ 주말 당선인 참석 워크숍 준비 ○ 규제개혁 대상 과제 및 추진시기 종합·검토 ○ 광역경제권 후속조치 관련 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업무 관련 모델 준비 계속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업무보고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업무보고 ○ 주요 국정과제 100일 계획 작성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업무보고 ○ 국무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종합보고서 완료 ○ 법무행정분과 100일 전략 작성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및 협의 ○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협의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회의 개최 ○ 방송통신 분야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 검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관련 국회동향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TF(보육·유아교육) 실무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당선인 주관 합동워크숍(2.16~2.17) 보고자료 준비/국정과제 세부사항 수립 ○ 정부혁신·규제개혁 : 한나라당·신당 6인회의 결렬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부문별 연구 결과 보고서 취합 ○ 한반도대운하 : 문화재 조사관련 실무 논의/광주시와 영산강운하/대구시와 경부운하 관련 논의 ○ 새만금 : 새만금 TF 최종보고서(안) 검토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TF 당선인 보고/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력을 위한 방문(2.12~2.16)

2008년 2월 13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50일차로 간사단회의를 개최했음.
-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 관련 산학관 간담회, 대통령실 업무관련 모델 마련 등 각 분과별 업무와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용을 주고받는 협상이 아님. 세금을 아끼면서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취지로 만든 개편안임. 정파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를 따져 협상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자는 입장을 말씀드림.
- 당선인이 말씀한 승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은 당선인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 안돼 오해가 있음. 국민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승례문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상처 치유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는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오해가 풀어졌으면 함. 물론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해

야 함. 그리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시설은 점검을 해서 다시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 해야 함.

○ 복원만 빨리 하지는 것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님을 알았으면 함.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국민성금 모금 문제

- 기획분과에서는 국민성금 모금 발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관련

- 경제 I 분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및 이런 류의 의원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음. 지방자치단체가 쓴 돈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점,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또 다른 미환급금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의 가능성 등을 들어 이러한 법률은 법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다행히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재가결 가능성이 높는데 대해 당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이에 대해 김형오 부위원장은 재의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당의 방침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음. 그렇지만 학교용지 환급 금문제는 그 문제 하나만 봐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음.

○ 지방 여론 동향 등

- 수석 인사 등에 나타난 지역편중, 영어공교육 논란, 국민성금 모금 문제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총선 악영향을 걱정하는 인수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았음. 특히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지방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수위 차원의 지역현안 청취, 지역안배 내각 구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다른 한편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이슈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 규제개혁 문제

-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은 규제개혁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이고 인수위 기간에는 그 기초를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기획분과에서는 인수위 기간에 규제개혁의 방향 제시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산업단지 허가 관련 규제의 대폭 축소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 8개 TF 중심으로 덩어리 별 규제 분및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음.

- 취임 후 지방 방문 시 선거운동 시비 차단 필요
 - 당선인의 지역방문 일정이 불가피하게 취임 이후로 연기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지방방문 자체를 선거운동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정략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됨. 그러므로 당선인 말씀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당선인 이미지 메이킹 필요
 - 당선인의 순수하고 솔직함,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함 등 좋은 면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음.
 - 이와 함께 당선인의 말씀은 그 영향력이 크고 파장이 전방위적이므로 사전에 기획되고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
- 수석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 실시
 -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 분과 등에서 해당 업무 수석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보고했음.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Working Group 회의 ○ 출범 초기 추진할 사항 종합·정리 ○ 글로벌리더 양성 산·학·관 합인 관련 간담회 개최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 주말 당선인 참석 워크숍 준비 ○ 저출산·고령화TF 종합보고서 관련 후속대책
정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수정안 최종 제출 ○ 예산절감지침서 추가 배포 대상 결정외교통일
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워크숍 보고자료 작성 ○ 인수위 활동 백서 검토 및 보완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면담 ○ 당선인 주재 워크숍 분과자료 준비 ○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은 법령 지속 발굴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추진과제 확정 ○ 당선인 주관 합동워크숍 자료 준비 ○ 국민제안 및 공무원정책제안 검토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진출기업 무단철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대책 검토 ○ 민관 투자활성화방안 관계부처 최종 합동회의 ○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 관련 검토 ○ 2007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 검토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본센터 활용 등 복지전달체계 TF 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국정과제 세부사항 수립 ○ 정부혁신·규제개혁 : 국회 합의 결렬에 따른 대응방안 다각 검토/「규제개혁촉진법」 제정안 초안 조문화 보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언론 브리핑/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한반도대운하 : 한반도대운하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내용 정리/낙동강연구원 세미나 개최 ○ 새만금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검토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력을 위한 방문/가속기 등 과학벨트 관련 주요시설 현지조사(부산 고리원전 등)

2008년 2월 14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51일차로 간사단회의를 개최했음.
- 주말 당선인 참석 워크숍 준비, 경주 방폐장 건설 인허가 관련 회의 등 각 분과별 업무와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오늘도 뉴스를 보면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금하기 어려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도 경기와 물가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음.
-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경제대책을 위해서는 국가 리더십이 제대로 돼야 하고, 국가 리더십의 중추는 정치지도자들임. 새 정부 출범까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지도자들은 정부조직 개편조차 못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새 정부를 선택한 것은 국민임. 그런데 제1당 다수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민의 희망을 꺾고 있음. 당파를 떠나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함.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금을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일하겠다는 것임. 시켜 보고 평가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임. 일하고 싶어 하는 새 정부에게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지혜를 모아야 함.

2) 김형오 위원장

- 지금의 현실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공무원 사회도 안정이 안되고 있음. 열흘 후면 이명박정부 출범하는데 노무현정부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발상임.
- 세금을 줄이고, 방만한 정부를 줄이는데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은 본질은 외면하고 내 부처 살려 내라는 식의 구시대적 생각에만 젖어 있음.
- 협상권 위임 받은 대표가 협상에 나서야 함. 우리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 지금도 늦을 대로 늦었음.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 것을 촉구함.

3)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한미 FTA비준동의안 상정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0일 만에 통의통위에 상정되었다고 보고했음. 비준동의안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나 어쨌든 이번 회기 내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대북지원 쌀 군용 전용 보도 관련
 - 대북지원 쌀이 북한군에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고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보고했음.
 - 정부나 군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음.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쌀 군용 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음. 한편 쌀 전용 관련 현 정권의 저자세와는 다른 접근과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관련
 - 정부혁신TF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 설명했음. 그동안 6인회담이 네 차례 열려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일괄타결이 안되어 결국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금은 실무선의 대화채널이 가동 중인데 오늘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했음. 이와 관련, 협의는 계속하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협상은 없다는 선에서 대언론 메시지를 유지하기로 했음.
 - 오늘 협상이 잘 되어 타결이 되면 내일 내각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
- 취임식 초청인사에 국민통합차원의 고려 필요
 - 지방언론사, 대학교 총학장, 종교단체, 문화예술계 등 취임식 초청 대상에서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음.
 - 또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단체, 예를 들면 일부 재야단체나 NGO 등에 대해서도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중국진출기업의 무단 철수 문제
 - 경제Ⅱ분과에서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와 관련,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청도·상해 등 중국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음.
 - 중국은 도피한 기업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주중대사관, 코트라 무역관 등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근본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무단 철수한 기업들이 처한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또한 철수 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했음. 이들 기업 이 주로 노동집약형이므로 개성공단 입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음.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 국무총리, 국무위원, 수석내장자 합동워크숍 준비지원 ○ 백서 제1권 내용 보완 및 백서팀 제출 ○ 출범 100일 실천계획 수립 ○ 광역경제권 사업과 유형 관련 협의(행자부)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이관 실무준비외교통일안보분과 ○ 북한 비핵화 실천계획 등 국정과제 외 기타 과제 검토 ○ 합동워크숍 보고자료 작성 ○ 한나라당 국제위원회·분과 합동토론회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조사·평가 및 대응기능 강화방안 연구 ○ 당선인 주재 워크숍 분과자료 준비 ○ 선진화 법령정비 TF활동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참석 및 강연(강만수 간사) ○ 합동워크숍 자료 준비 ○ 금융 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마련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 관련 회의 개최 ○ 주택법개정안 국회 처리동향 검토 ○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 검토 ○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세부과제 도출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보훈·청소년·여성팀 워크숍 -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부합하게끔 국정과제 마무리/국민 제안 및 공직자 제안 점검 - TF별 마무리 작업 점검/100일 계획 점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TF 백서 초안 검토·수정/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작업/국회 합의 결렬에 따른 대응방안 다각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CO2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 관련 업무면담 ○ 한반도대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대운하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내용 정리/제5차 자문위원단 워크숍 실시 ○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법규 검토/합동워크숍 준비 ○ 과학비즈니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벨트 기술투자 활성화방안 회의 개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OECD)

2008년 2월 15일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이제 새 정부 출범 10일 전임. 행정실장은 취임식준비위와 협력해 경호, 초청인사 관리 등 취임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향후 인수위원회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잘 만들어주기 바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참고할만한 게 없어 애를 먹었음.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번 활동을 사실대로 기록해 국민들이 백서만 봐도 인수위 활동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외교통일안보분과 : 당 국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당 국제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자원 에너지외교, 성숙한 세계국가 등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고했음.
 - 또한 재외동포위원회 소속이 총리실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것과 관련, 위상이 격하됐다는 오해가 있는데 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위원회를 실질화한 것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덜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월드컵 평양시합 국기·국가 불허 문제
 -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월드컵 평양 시합에서 태극기 사용과 애국가 연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방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관계도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표명했음. 한편 화상 상봉센터 지원 설비자재와 현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어 북한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요구했다고 설명하고 남북관계 투명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일본 정부개혁에서 배울 점
 - 경제 I 분과에서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일본 정부개혁을 담당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성 장관의 발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음.
 - 개혁에는 3가지가 필요함. 첫째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정(passion)이 필요하고 둘째

는 정책의 타임 스케줄(sequence of policies)을 잘 만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전략적인 접근(strategic attitude)이 필요함.

○ 경주 방폐장 관련 지역개발사업 문제

- 경제Ⅱ분과에서는 방폐장 건설 관련 경주시장 면담내용에 대해 보고했음.
- 시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으며, 사업이 안되는 이유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이어서 각 부처에서 방폐장 관련 사업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분과에서는 우선적인 사업고려가 있어야 하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초분과와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취업식 준비 관련 보고

- 행정실장은 취업준비위와 협조하여 내주 초에 취업식 관련 준비 사항 및 일정 등에 대해 인수위회의에 종합보고를 할 예정임. 그리고 초청 대상에서 일부 누락됐던 지방언론사 사장, 지방대학 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고했음.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 출범 100일 실천계획 수립 ○ 국무총리, 국무위원, 수석내정자 합동워크숍 준비 지원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이관 실무 준비 ○ 공직자의 창의적 정책제안 접수서류 검토 ○ 당정, 대의회, 대시민사회 협력 모델 검토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워크숍 보고자료 작성 완료 ○ 인수위 백서 검토 및 보완 ○ 국정과제 외 기타과제 검토 -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비전 구상/군사외교활동 강화 및 다양화/미래지향적 국방정책성 정립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TF" 종합보고서 작성 ○ 합동워크숍 분과자료 준비 ○ 국민성공제안 등 검토
경제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마련 ○ 합동워크숍 자료 준비 ○ 골프장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협의
경제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청회" 사항 검토 ○ IEA의 최근 석유시장동향 분석
사회교육문화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대책 TF(노인 일자리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검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TF 백서 초안 검토·수정/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작업/국회 합의 결렬에 따른 대응방안 다각 검토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보고서 수정·정리/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관련 설명회 개최 ○ 한반도대운하 : 두바이 투자공사 시장과 논의/생태계조사 실시(2.2~2.28) ○ 새만금 :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IAEA 본부)/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현지조사 완료

2008년 2월 16일~17일

1. 각분과별 16, 17일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 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주관 합동워크숍(2.16-17) ○ 기록물 이관 실무 준비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검토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정무분과 ○ 공직자의 창의적 정책제안 검토 ○ 합동워크숍 참석 및 분과 국정과제 발제외교통일
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 대비 답변자료 보완 - 지난 10년간 대북정책 및 프로젝트 총점검/국군방송 TV의 공공채널 지정 추진방안 등 ○ 국정과제 외 기타과제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법무행정분과 자료검토 ○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TF」 종합 보고서 작성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마련 ○ 당선인 주관 합동워크숍 참석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협조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등 최근 수출입 관련 경기동향 점검 결과 검토 ○ 대불산단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현황 점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계속) ○ 정부혁신·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간 합의 준비 및 정부조직법 등 수정안 준비/「규제개혁촉진법」 제정안 초안 조문화 보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관련 외국의 대응전략 검토 및 대응방침 논의/원자력발전 관련 전문가 업무면담 ○ 한반도대운하 :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내용 정리 ○ 새만금 : 새만금사업 추진 방향 프리젠테이션 제작방향 설정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TF 종합보고서 최종 정리

2008년 2월 18일

- 오늘은 인수위 활동 55일차로 간사단회의를 개최해 취임행사준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
- 당선인 주관 내각 및 대통령실 합동워크숍 준비 등 각 분과별 업무와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였음.

1. 간사단회의

1)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연이틀 워크숍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음.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했음. 사소한 부분까지도 점검해서 수정·보완할 것은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인수위 활동은 이번 주면 종료됨. 백서 준비, 취임식 등 취임관련 행사, 규제개혁 작업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정부조직 개편안이 타결이 안되어 국무위원 내정자가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했음.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돼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움.
- 오늘이 정부조직법 처리의 마지막 시한임. 조직 개편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 조직개편안은 정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일을 열심히 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안인데 원내 다수당이라고 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파행시키는 불행한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임.

2) 김형오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내주 월요일이면 이명박정부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가 막힌 일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이 생각남. 통합민주당은 새 술을 헌 부대에, 그것도 10년이나 쓰던 낡고 탈 많은 부대에 부으라고 고집하고 있음. 더 이상의 발목잡기나 부처이기주의, 이익집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함.

3)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

- 위원장, 인수위 직원들 책임있는 처신 경고
 - 일부 인수위 자문위원 등이 항응을 받았다는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위원장은 인수위 직원들에게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 분과 간사들에게도 소속 직원들의 처신에 대해 교육과 주의를 실시해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음.

-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직원 등 인수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새 정부의 인수위에 걸맞는 처신과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내주 출범하는 이명박정부의 의미와 경축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경고와 아울러 호소를 했음.

○ 취임행사 준비상황 보고

- 취임준비위원회에서는 취임식 등 취임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했음.
- 백성운 행정실장(취임준비위부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은 섬기는 정부 메시지 전달에 역점을 두었으며 행사는 검소하고 숙연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일정, 행사계획, 향후 준비일정 순으로 보고했으며 대통령의 의상 등 몇 가지 문제가 결정이 되면 22일 당선인께 세부계획에 대해 최종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음.

2. 각분과별 활동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 당선인 주관 내각 및 대통령실 합동워크숍 개최 지원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검토
정무분과	○ 기록물 이관 실무 준비 ○ 공직자의 창의적 정책제안 검토 ○ 백서 관련 서면인터뷰
외교통일안보분과	○ 인수위 기록물 이관 ○ 대북정책업무 구조 정비 등 국정과제 외 기타과제 검토
법무행정분과	○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TF 최종 보고서 종합 ○ 시군자치구의회의협의회 시도대표단 면담
경제 I 분과	○ 금융 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정리 ○ 기록물 이관 준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투자유치 - 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계속)/제13차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준비 ○ 정부혁신·규제개혁 - 여야간 합의 준비 및 정부조직법 등 수정안 준비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CO2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 자료 검토 -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R&D 추진전략 세부 검토 ○ 한반도대운하:대구시 달성군과 경부운하 논의 ○ 새만금:외국인 투자를 위한 영문 사업설명 자료 작성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력을 위한 방문 결과 보고/과학비즈니스벨트 TF 종합보고서 최종 정리

2008년 2월 19일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주관 내각 및 대통령실 합동워크숍 개최 지원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TF ○ 광역경제권 추진 관련 수도권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 국정과제 보고서 수정·보완
정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이관 실무 준비 완료 ○ 백서 일지 및 1권 원고 검토외교통일
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외 기타과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 실천계획 보완/지난 10년간 대북정책 및 프로젝트 총점검/제대군인 직업교육 효율화 ○ 인수위 백서 1권(국정과제) 최종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TF 최종 보고서 작성 ○ 국민제안 처리 마무리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이관 준비 ○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 백서 수정·보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제작(가제본 발간)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통합보고서 수정·보완 ○ 한반도대운하 : 부산시/군산시/김해시와 운하 관련 논의 ○ 새만금 : 전복운하·새만금개발추진위원회 제안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TF 종합보고서 최종 정리

2008년 2월 20일

각 분과별 활동사항(요약)

분과	주요 활동
기획조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당선인 보고 ○ 기록물 이관 준비정무분과 ○ 기록물 이관 완료 ○ 국정과제 보고서 마무리 및 배포계획 수립 ○ 예산절감 지침 추가 배포 ○ 국정과제 관련 당정회의 실무 준비
외교통일안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외 기타과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외교안보정책 이행 실천계획 검토/지난 10년간 대북정책 및 프로젝트 총점검 -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성 정립 ○ 인수위 백서 1권(국정과제) 최종 검토
법무행정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 법령정비 향후 추진방식 관련 회의 ○ 대통령기록관 문서 이관 작업 마무리 ○ 백서편찬 1권 교정 마무리
경제 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개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장외금융시장 선진화방안 검토 ○ 기록물 이관 준비 및 백서 수정·보완
경제 II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유류세 인하에 따른 등유 판매가격 모니터링 검토국가경쟁력
강화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 투자유치 실천계획(책자) 발간 ○ 정부혁신·규제개혁 : 정부조직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작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종합보고서 마무리작업 ○ 한반도대운하 : 서울시, 경북도·고령군과 경부운하 관련 논의 ○ 새만금 : 새만금 수질 모델링 추진상황 점검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비즈니스벨트 TF 종합보고서 최종 정리

2 장

보도자료

● 이경숙 인수위원장 인사 말씀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쥐띠해를 맞이해서 쥐의 지혜스러움과 부지런함으로 한 분 한 분이 알차고 보람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수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통령당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위 여러분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일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금년에 당선인께서는 우리나라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진화는 사람, 제도, 문화가 같이 가줘야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될 만큼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선진화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아껴주고 신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방향을 잡으면 선진 문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문화로 될 때 결국 선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이러한 헌신과 각오와 열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국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일을 이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원하는 정말 멋진 청사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과 성장은 하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을 같이 보듬어 안고 나가는 데 열정을 더 쏟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배워 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수위는 이 부분을 반드시 늘 염두에 두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수위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50여일의 우리 활동이 앞으로 5년의 새 정부, 일하는 정부, 섬기는 정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융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

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설계도를 만드는 데 모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명박정부를 벤치마킹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헌신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에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인사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가 서울이니까 빌딩이 가리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 태양이 막 솟아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유난히 태양이 크고 붉고 햇빛이 짙 하늘로 뻗는 형상을 봤습니다만, 뭐 해가 달라졌겠습니까? 보는 사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해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또 실망시키지 않겠지. 이 정부는 좀 뭐가 다르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에 해맞이를 제대로 한 해가 없답니다. 꼭 정초에 구름이 가려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오늘 1월 1일 대략 7시 반 전후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디만 해가 뜨는데 많은 국민들이 추운데도 가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내 가정이 잘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있지만, 아마 금년에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수위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당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학계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각 부처에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생각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느 소속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든,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나보다는 내가 소속된 부서, 부서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각 부처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내 부처의 이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부처의 이해를 여기 인수위에 반영시키려고 나왔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부처에서 나왔든 간에 내 부처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우리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부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부처의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런 대표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신, 어떤 위치에서 참여했든 간에 이번이야

말로 자기도 버리고 자기가 소속된 부처의 이해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가 경쟁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다행히 21세기의 큰 자원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21세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소속된 일에 얽매어 있으면 5년 전 인수위원회나 10년 전 인수위원회나 똑같습니다. 내 부처의 이해, 자기가 일하다가 자기 부처의 이해를 가지고 잘되지 않으면 자기가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갖기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적어도 이 두 달간의 기간에는 나는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융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선진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전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야 합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은 될 수 있고,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허구한 날 샌드위치가 되었다, 샌드위치가 되었다, 말만 하면 어떻게 하지는 것입니까? 2008년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우리는 10년 안에 일본을 따라갈 수 있고,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지만 중국을 오히려 우리의 좋은 경제 파트너로 해서 독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온 세계를 다녀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이기주의를 따지고 자기의 견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뒤에서 탄소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목표의식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였다면 대단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수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정초에 왜 만났습니까? 1월 1일 일한다고 해서 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적당히 하루 보내버리면 나을 필요가 없고 하루 쉬는 것만 못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으면 생각이 그대로 고착되어 있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필요하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문서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라면 문장을 만들어서

보고도 하는데 문장을 들고 온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문서에 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은 뭐냐,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각자 부서에 돌아갔을 때 '야, 저 사람이 두 달 동안 인수위원회에 갔다오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만드는 서류에 여러분의 정신이 다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다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율에 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위에 엄한 사람이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질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지는 자율적 질서, 이것이 큰 성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오후시간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그 일부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전체가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 다 발전하시고요. 또 내가 참여한 일들 때문에 잘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성공정책제안 반영 총력 (2008.1.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이하 '국민성공센터', 센터장 이상목)는 7일부터 국민성공정책제안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터넷 접수절차를 보완하고 전화접수와 방문접수도 개시한다.

6일 오전까지 5,300여건의 제안이 인터넷으로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접수담당자들의 적극적 응대로 이미 국민들의 격려글을 받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7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접수에서 반영까지 현황을 표시해 줄 방침이다.

현황은 △접수중 △접수완료 △제안검토 △제안반영 등 네 가지로 표시되며, 국민들이 인터넷에 제안을 접수하면 [접수중], 접수담당자가 제안을 1차 검토하고 분류하면 [접수완료], 제안이 2차 검토되면 [제안검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분과의 검토를 거쳐 즉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제안으로 최종 선정되면 [제안선정]으로 표시된다. [제안검토] 중 국민들의 댓글

과 내용을 고려, '국민추천'으로 선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히 검토하게 되어 실질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성공센터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주요 현안을 각 분과의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을 대신해 인수위 각 분과에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것은 지난 4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이 경숙 위원장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말 경청해서 귀를 기울이고,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성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껏 회신을 해야 된다"며 "전부 만족은 시킬 수 없겠지만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발언한 맥락과 같은 것이다.

또한 전화접수(02-724-9590, 9591)와 방문접수(서울 종로구 삼청동사무소 2층)도 예정대로 7일부터 시작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요일~토요일, 주6일) 사이에 해당 요원들이 접수를 받는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2008.1.7)

법무행정분과 간사 정동기 위원은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에게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업무보고보다는 조속한 사태수습과 피해자 희생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당부 내용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우려되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많은 희생자 발생이 우려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시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태수습 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국회의원대상당선인 정책방향설명회 개최(2008.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윤진식 부위원장(투자유치 TF 팀장 겸직)이 오는 11일 일본을 방문한다.

윤 부위원장은 도쿄에서 일본 국회의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통치철학, 경제살리기 및 대외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가토 코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과 아마사키 타쿠 전 자민당 부총재 등 중의원 두 명의 공동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당선인을 예방,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하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대다수는 평소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들로 알려졌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회장 등 전 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대책 관련 정책간담회 참고자료(2008.1.11)

태안 유류유출사고 관련 정책간담회가 오늘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양수산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지 어민 생계보호 방안과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필요한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 측은 특별법 제정이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생계 지원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현재 충청남도에 배정된 300억원, 방제작업 인건비 120억원, 해수욕장 배후시설 정비 71억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지원된 300억원과는 별도로 충청남도와 6개 시·군이 협조하여 요청한 300억원의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빠른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자살한 태안지역 어민 이영권 씨를 애도하는 묵념을 했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Ⅱ분과 홍문표 위원, 해양수산부 신평식 해양정책본부장과 진태구 태안군수, 이용희 군의회 의장 및 시·군 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호남·충청운하 민자사업 관련(2008.1.18)

- 당선인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추부길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충청 운하의 민자사업 추진에 관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원래 재정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 다양한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BTO로 할 것인지, BTL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후 발표하겠다.
- 민자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 바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경부운하 98km 구간, 홍수 위험 관련** -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

1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은 “경부운하 98km 구간 홍수오면 범람 위기”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이 기사의 근거가 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 김 박사의 논문은 한강 및 낙동강에 대해 최소 9m 준설, 최대 11m 보 설치를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나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준설은 최대 6.1m로 설정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보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으나 이 역시 잘못 추정하고 있다.
- 김 박사는 수중보나 갑문이 고정보(댐 형식으로 물을 막아 놓는 방식)로 가정하고 홍수위를 계산하였으나 한반도대운하의 수중보나 갑문은 오픈형식(댐의 수문조절문 형식으로 개폐가 가능함)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위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연구 당사자인 김원 박사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한 관련에 대한 인수위 입장(2008.1.19)

-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박재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는 방송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여야 간에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방송위원회와 인권위의 위상 변화에 대한 입장(2008.1.20)

- 기획조정분과 위원 박형준

방송통신위 설치와 인권위 소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하는 데 대해서 혹시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럴 우려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 제도가 못 따라감으로써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제도의 정비 사안이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공약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측에서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부와 신당 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의 성격이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왔고, 이것이 국회 방송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가 정통부의 상당부분 기능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

정부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안입니다. 물론 지금 방송통신위 직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정통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융합에 따른 신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의 상당 기능이 방송통신위로 간다고 할 때 이 기관이 행정부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아닌 3부의 바깥에 법적지위가 모호한 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가 갖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방송통신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FCC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독립제도 아니고 합의제에 의해서 구성될 것이고, 또 구성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방송특위에서도 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인수위에서도 상당 부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당 일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의문제기는 그동안 자신들이 참여정부와 함께 해왔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인권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문제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독립성은 업무수행상의 독립성으로 이해를 해야지 소속상의 독립성으로 해석하여 그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와 국가인권위의 조직적 위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안이 현재의 헌법체계에서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지위의 모호한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기능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지만 그 소속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두 기관 다 성격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주요 내용(2008.1.22)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입시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학교도,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을 통하여 대입자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인수위에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수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로 수능등급제를 둘러싼 혼란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등급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완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방지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만큼, 올해 고3부터(2009학년도 입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입 자율화 조치로 우선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대학을 강제한 만큼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도 올해 고3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부는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제도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겠습니다. 2010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는 대학협의체가 수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학 책무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결과 학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고사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부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본고사는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로 현재 많게는 8개까지 보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중3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2012학년도 입시는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을 합쳐서 선택과목이 2개를 넘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2에 올라가는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서 언제나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능력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수능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자율화와 수능 과목을 축소되고, 대입제도 자율화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어 들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은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주요 내용(2008.1.24)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간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지방행정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선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골격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 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였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 향후 각 지역은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주강 삼각주나 일본 큐슈 경제권 등 외국 광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

1. '창조적 광역발전' 의 비전

따라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하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려는 것이다.

2. 5+2 광역경제권 설정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 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즉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 그것이다. 이는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3.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구체적인 6대 전략은 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③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 먼저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하여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 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둘째,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 셋째,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 거점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다.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 넷째,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 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 다섯째, 광역경제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 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과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한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 마지막으로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을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광역경제권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한다. 광역경제권본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

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2008.1.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언론 단체 및 현직 기자 대표들과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인수위측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맹형규 간사 등이 참석했고 언론 단체에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변용식 회장과 한국기자협회 김경호 회장,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그리고 현장 취재기자로 임화섭 연합뉴스 경찰청 출입기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일선 취재 기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경향신문 유신목 기자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불리한 보도는 못참겠다는 현 정부의 언론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 정부와 언론간의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언론자유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오히려 소홀히 다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기자실에서 쫓아냄으로써 모멸감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기자는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 당시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한국 기자들의 현장 접근을 막다가 인질 석방이 임박하자 청와대와 정부에서 풀 기자단을 빨리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자는 필요할 때만 찾는 ‘찍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임화섭 기자는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본질적으로 언론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편협과 기협은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폐쇄되거나 기형적으로 통합된 정부 부처 기자실을 원상회복할 것. 구체적으로는 대부처 시스템으로 갈 경우 한 개 부처에 한 개 기자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떨어져 있는 독립 청사의 경우는 브리핑룸과 송고시설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기협측은 일선 취재 기자들의 상징인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기자실의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취재원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감시·차단하는 취재제한조치의 즉시 철폐. 여기에는 기자가 민원인처럼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하는 제도의 즉각 시정도 포함됩니다. 또 언론중재 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자들을 옥죄기 위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취재권을 원천 제한하는 총리 훈령의 폐지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총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으며 앞으로 양측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안마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언론단체 참석자들은 그동안 언론 쪽에도 일부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순히 기자실의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취재환경 마련과 성숙한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용식 편협회장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도 없어야 하며 언론의 문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오늘 들은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취재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이 감시해야 하지만 새 정부가 잘하는 것은 격려, 고무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맹형규 간사는 “현 정권의 취재지원 선진화는 사실상 언론자유를 퇴행시킨 제도”라며 “새 정부의 언론인식은 180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까닭(2008.1.25)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는 생명과학을 비롯한 BT, NT 등 최첨단 과학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의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 지금처럼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등 정부조직으로는 더 이상 대외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 현행 정원, 직급과 보수체계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 불가능하다.
- 경직적인 정부의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는 농수산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한 중장기 연구 개발과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이 곤란하다.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창의와 자율도 제약된다.
- 정부조직으로는 특허권 획득, 기술개발에 따른 spin-off 및 혁신 농수산 기업의 창업 등 일련의 상용화 과정을 추진하기에 무리이다.
- 출연기관 전환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 R&D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게 된다.
 - 연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특허권을 보장한다.
 - 신축적인 중장기 연구개발을 허용한다.
 -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한다.
- 출연기관으로 전환해도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아울러 매년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출연해 농·임·수산업 진흥이라는 고유목적에 매진하게 되므로 출연기관이 영리기관으로 변질돼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한편 농진청 산하 한국농업대학(한국농업전문학교, 편제인원 총 97명)은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과 오랫동안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정부조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구이다.
 - 따라서 7,941명에 달하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방공무원들 신분은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 전환과 상관없이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의 출연기관 전환은 준비과정을 거쳐 새 정부조직법 시행일부터 1년 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007.12 현재)

기관	소속인원(명)	기관	소속인원(명)
농업과학기술원	378	농업공학연구소	117
작물과학원	382	원에연구소	246
축산과학원	346	고령지농업연구소	65
농업생명공학연구원	138	난지농업연구소	77
	계		1,749

1. 지난 1개월 간의 활동

1)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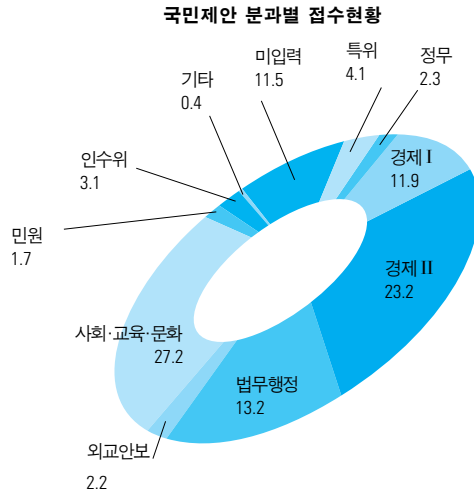
- 새 정부의 비전(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을 구현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중심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
- 인수위는 새 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4C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
- ①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Care)
- ②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자세(Credibility)
- ③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협력관계(Cooperation)
- ④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시(Creativity)

2) 경과

- 조기에 정부업무 현황 등을 파악하고, 국정과제 조율
 - 연초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방안을 각 부처와 함께 검토
 - 업무보고, 현장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공약과 주요과제 중심으로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 추진중
 - '노 할리데이' 원칙에 따라 인수위 출범 이후 1개월 동안 매일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업무 처리
 - 인수위원 전체회의(업무조정회의 포함) 9회, 인수위 간사단회의 17회 등
 - 업무보고 종료 후 1차 정리된 국정과제 추진방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보고(1.13)
 - 1차 보고과정에서 나온 이명박 당선인 말씀 등을 반영하고, 차기정부 출범 후 조속히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2차 보고(1.18)
 - 주요 활동내역
 - 각 분과 및 특위에서는 10일간 총 1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의(분과 59개 기관, 특위 51개 기관)
 - 각 분과 및 특위에서는 업무보고, 내부 자체검토 외에 총 267회의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실무협의 등을 실시하여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체화
- ※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하거나, 인수위 분과 및 특위팀 간 유

기적 협조를 위해 워크숍을 구성·운영하는 등 인수위 내 공동작업 네트워크 활성화

- 또한 각 분과 및 특위에서는 총 54회의 현장방문 및 현지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
- 인수위는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국민 제안을 받고 있는데,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서는 1.25일 현재 30,995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각 분과에서 검토하고 있음



2. 정책제안 접수 현황

- 정책공모 개시(1.4)이후 1월 25일 현재 1,800건이 접수되었으며 1,260건이 분과별로 검토 중
- 분과별로는 경제 397건, 법무행정 356건, 사회교육문화 355건, 특위 69건 등이고
- 소속별로는 지방공무원 635건, 중앙공무원 293건, 교육공무원 167건, 공기업 163건 등으로 나타남
- 국민제안이나 공직자의 정책제안 내용은 정책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한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인수위 행정실은 백서발간팀을 구성하여 인수위 활동의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인수위는 지난 1개월간의 검토결과를 국정과제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인수위는 2월에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규제개혁방안 마련 등 주요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 당선인 보고, 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월 20일 전후 국정과제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전임 대통령이 예우받는 관례를 만들고 싶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에 벗어난 말씀에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은 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살을 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융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18개의 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개편안을 받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30여개 나라의 정부 개편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 십여 차례의 논의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구구절절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위가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주장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혁신과 평등을 명분으로 공무원을 6만 5천여명이나 늘렸고 장·차관급만 32명을 늘렸으며 각종 위원회는 52개나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국가부채가 170조원이나 늘어나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인 이상 노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모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포퓰리즘적 행태에 끝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입안에 반영코자 출범 시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지금까지 접수된 제안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번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접수현황 및 제안반영사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국민제안에 대한 반영은 2월 5일(화요일)로 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 마감시간은 접수방법에 따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는 2월 5일 오후 5시까지 하며, 인터넷 및 팩스이용 접수는 2월 5일 자정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접수는 2월 5일 소인까지 접수·처리할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2월 3일 정오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 3만 9,881건으로,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가 91%인 3만 6,282건, 우편 및 팩스, 방문 등의 접수가 9%에 3,599건이었습니다. 접수건수는 1일 평균 1,173건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분야 31.4%, 경제Ⅱ 분야 22.1% 및 법무행정분야 1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접수된 제안을 해당 분과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3,965건이 검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1만 2,931건이 검토완료·처리되었으며, 1,033건이 제안 반영되어 처리되었습니다.
- 주요 제안반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요구 △영어 교육 관련한 분야로서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 반대건의 / 영어 공교육 강화 요구건 등이 있으며 △ FTA를 앞두고 농업정책 관련 건의 △ 당선인,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식 매년 참석 건의 △ 조직통합 관련 △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의견 및 국민성공제안센터 홈페이지 개선관련 제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 인수위원회에 최근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 정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 이에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위원은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에 관해 실무 점검회의를 오늘(2.3일 14:00)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 1월 무역수지 악화(△33억8천만달러)와 소비자물가 상승(3.9%)은 유가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실무점검회의 후 강만수 간사위원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가 수출입과 무역수지와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다가오는 설에 대비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 물가를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정부도 상반기 중 통신·가스·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물가대책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가스요금은 이미 1~2월 중 2.6% 인하했다. 정부는 또 사교육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고액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인수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신용보증기관 연대 입보개선(2008.2.4)

인수위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입보가 면제됩니다. 또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 입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경우, 기업 경영 참여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 입보 대상에 포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표자의 배우자 중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입보에서 제외됩니다. 신보·기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점 주주의 입보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보아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입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점 주주의 범위가 현행 주식 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과점주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연대입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기관의 입보기준과 사용용어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신보·기보 및 지역신보 간 입보기준이나 사용용어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실권자'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간주되는 관계기업' 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정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용보증기관 입보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 개정을 거쳐 빠르면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과점 주주의 입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5,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 재산과 배우자 재산이 동일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보·기보·지역신보 간 보증기준 및 용어 통일로 보증제도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2008.2.4)

- 경제Ⅱ분과

□ 대책의 필요성

- 지난해 비료·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금년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 5천억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 화학비료 가격 24%, 배합사료 가격 26% 상승
 - ※ 구입비 증가 : 화학비료 1,140억원, 배합사료 1조 4천억원
 - 향후 화학비료 10% 이상, 배합사료 20% 이상 추가상승 예상

- 3월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이다.
- 부담완화 방안
 -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하고자 한다.
 -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금년도 계획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
 - ※ 보조단가 : 700원/20kg → 1,164원
 - 농가의 화학비료 10만톤 사용감축을 유도하고(△500억원), 농협중앙회 조합환원사업으로 220억원 지원
 - 정부의 추가예산 소요 624억원은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540억원→1,164억원)
 -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료외상구매 이자(연12~24%) 경감을 위해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특별지원
 - ※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별도 강구
 - 이외에 사료원료곡의 관세를 인하(하반기 할당관세 조정), 금년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추진

3 장

브리핑자료

●인수위 현판식(2007.12.26)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오후 4시 45분 금융연수원에 도착해 인수위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백성운 행정실장의 사회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 현판을 들고 걸었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인수위 건물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당선인은 위원 각각에게 임명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오늘은 국민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인수위원 여러분의 활동 결과가 새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적 희망 가능성을 가늠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수위원은 주어진 각본대로, 형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백지 위에서 그림 그리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조적인 인수위'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수위 첫 간사단회의(2007.12.27)

오늘 회의에서 인수위가 다뤄나갈 8대 어젠다를 결정했습니다. 8대 어젠다는 1. 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당선인의 방침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마련 2. 공공부문 개혁 3. 해외 투자유치 및 국내 투자유치 4. 교육개혁 방안 5. 부동산 안정화 대책 6. 부패척결방안 7. 청년실업 해소방안 8.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 마련 등입니다.

8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각 분야별로 활동계획을 짜고 필요하다면 주말에 인수위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선인께서 16대 인수위보다 경비 및 조식을 20%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도 줄일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오후 브리핑(2007.12.27)

오늘 아침 간사단회의를 가졌습니다. 몇 가지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결정된 8대 어젠다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오전 8시30분에 하기로 했던 간사단회의를 7시30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선인의 의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당선인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8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이 1월 1일이어서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고한 인수위원 워크숍, 이것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열 것입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취재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다룰 논의의 주제들은 공약의 이행 과정, 2008년 신발전체제가 어떤 의미인지, 새 정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가치관이나 철학, 이념 등을 공유키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부처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공약의 실천적인 이행 방향, 실천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규제개혁방안과 부처 슬림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브리핑은 가능하면 9시30분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뀌서 (원래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였음) 시간이 당겨질 때는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오늘의 혼선은 아직 체제가 정비 안된 탓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1차 워크숍 소식(2007.12.30)

인수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7시 4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제 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새 정부의 국정철학 기초 △주요 국정 어젠다 및 당선인 공약 추진 사항 등을 점검 논의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매주 정례적으로 계속됩니다. 워크숍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인수위원 전원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 등 모두 31명이 참석했습니다.

● 전문위원 인선 관련 브리핑(2007.12.30)

인수위에서 일할 과건 공무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수위는 총원이 184명입니다. 이는 지난 16대에 비해서 20% 감축된 숫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인수위원은 26명이었으나 이번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문위원은 99명에서 71명으로 줄었습니다. 실무위원은 91명에서 76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무직원은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총원은 16대 인수위의 233명에서 184명으로 20% 감축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 이명박 당선인께서 슬림화되고 효율성 있는 인수위 구성을 지시하신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부처 과건 전문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3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개혁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인수위원들과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은 7개 분과위 그리고 국가경쟁력특위 내에 6개 TF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취임준비위에 나누어 배치될 것입니다. 인수위 과건 공무원 중 전문위원은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5명, 정부분과위원회 3명, 외교통일분과위원회에 3명, 법무행정분과위원회에 5명, 경제 I 분과위원회에 4명, 경제 II 분과위원회에 4명,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에 5명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TF팀에 5명으로 배치됐습니다.

●인수위 제2차 전체회의 브리핑(2007.12.31)

오늘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때 각 부처의 행정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기잡기식 보고를 지양하고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도 실무를 총괄하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해서 핵심 국장과 일부 과장들만 참석하는 슬림화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시간도 종전에는 하루 중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몇 시간 안에 단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습관이나 관행을 탈피해서 업무보고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리고 최대한 실무자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5년 동안 진행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니까 생산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과위원회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방과 현장을 찾아 가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현장의 관계자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 진행 계획은 오늘 오후까지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또 오늘 회의에서 16대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비해 실질적으로 12.2% 줄어든 예산안 21억 9,7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16대 인수위 예산 18억 8,700만원에 비해서는 외형상으로 16.4%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16대 때는 외교부 청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달청에서 4억 7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달청 지원도 안받고 있고, 사무실도 3곳에 분산돼 있어 실질적으로 12.2%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효율적이고 슬림화된 인수위 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의 시간도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2008.01.01)

오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또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민원 접수, 정책 제안 접수가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이 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그리고 직접 민원 접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접수해

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16대 인수위 때도 이와 유사한 참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각료 인선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해서만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고 같은 네거티브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실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성공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실제로 현장에서 다시 의견을 듣고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1월 7일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2월 초에 KDI와 국토개발원이 주관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운하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운하에 찬성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께서 한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가 2월 취임식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전적으로 남 교수 개인의 사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식 라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수위 간사단회의 브리핑(2008.01.02)

우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경숙 위원장의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형식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하며 질문은 날카롭게 하되 표현은 정중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교육현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자율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대교협 등 중간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준화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고교다양화 300플랜' 즉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국립고 150개, 마이스트고 50개 설립, 대학입시 단계적 자율화, 영어 공교육의 완성 등 공약의 시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 등의 사항은 매우 민감한 현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이기에 때문에 앞으로 시·도 교육감, 각 대학총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안은 2월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김형오 부위원장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현 정부 내에서 임기가 만

료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장 등 30여 명에 대한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수위와 협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실장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인수위가 직접 각 부처나 산하기관과 접촉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오늘 중에 각 부처의 인사를 관장하는 중앙인사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임기 말 인사를 자제하도록 정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당선인께서 밝힌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마치 인수위의 의견인 것처럼 발언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마는 어제 오후 개설된 국민정책제안센터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실명 정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홍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기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수시로 관련 분과위원회에 저희가 전달해서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몇 건 들어왔는지 하는 것을 수시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당선인의 대장성 개편발언과 관련해서 마치 부처의 개편과 직결되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선인의 발언의 진위는 일본의 예산 편성·집행, 그리고 금융기관의 감독까지 한손에 틀어쥐고 권력을 휘두르던 관료기구를 해체하는 일본정부의 결단이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경제회생을 이룬 출발점이 됐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재경원을 어떻게 재편한다든가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든가 그것이 공룡 부처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추측성 보도일 뿐이고 구체적인 정부부처 개편 안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각계각층 의견, 공직사회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측성 보도 안 나오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대변인 브리핑(2008.01.02)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인 교육부 업무보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장시간 업무 보고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행정공백을 막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날 보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이고 두 번째는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입니다.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 자율학교, 특목고 설립 지정 등에 대한 사전적 지도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완전 이양하고 -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하되 교원의 정원·임용·인사 관련 기능도 이양하고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 자율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대교협 및 전문대교협)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또 지방 및 대학의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부교육감 및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인사 문제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거에 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추후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 측은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를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기능 중 타 부처와의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교육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기능, 국가 R&D 기능 등을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2008.01.0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45분까지 2시간 45분 동안 국정홍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홍보처 측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정홍보처 폐지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1안은 현행대로 국정홍보처를 존속시키는 방안입니다. 국정홍보처는 그 논거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2안으로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정책방송 KTV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의정 등 국가영상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발과 대립을 야기함으로써 취지가 퇴색됐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보고에서는 금감위 측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금융감독 책임 및 중복 규제 문제, 신용회복 지원, 금산 분리의 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 등 크게 네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주로 토의했습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빠른 시간 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금감위는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규모가 10.4억 달러입니다. 그리 크지 않고 평가손실 규모도 은행수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표상으로만 보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이 두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2008.01.04)

오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참여정부 주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방안', '여성인권 강화', '보육정책의 문제점' 등이 다뤄졌고 주요 정책의 비효율적 집행과 미비점,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개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는 인수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보육관련 예산이 4-5배 이상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 보육정책으로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질 좋은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의 맞춤형 보육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로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시장기능과 연계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2008.01.04)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와 관련해서 해수부측은 선진형 해양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박람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을 서해안시대를 선도할 관광,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인수위측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서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1개월 가깝도록 정확한 사고원인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수위측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피해 보상의 선급금으로 충남도로 재배정한 300억원이 피해어민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경찰청 업무보고(2008.01.04)

경찰청 업무보고는 오후 3시에 시작해 5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보고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방안, 규제 완화, 예산 10%절감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추진 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매년 되풀이 되는 민관합동기구 구성과 같은 상투적 접근에서 벗어나 그동안 왜 기초질서가 무너졌으며, 왜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됐는지, 그리고 이를 회복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일선 민생치안 인력보다 본청 관리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 업무보고(2008.01.04)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첫째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한·미 FTA 비준관련 지원금에 대해 2조원을 제시했으나, 인수위측은 미흡하다며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에 부응토록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TF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지역 대체농지 의무제의 폐지 추진과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산지 규제를 과감하

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다시 논의기로 했습니다.

● 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 등 업무보고(2008.01.04)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는 현 정권의 실패나 실정을 들춰내고 담화문식 개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동안 국정을 맡아 왔던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간사단회의에서 이경숙 위원장께서 '업무보고는 국정감사가 아니다' 라고 당부하신 것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업무보고는 거의 대부분 정중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실무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은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율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행태의 변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바뀌었더라' 라고 실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당선인의 철학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취재경쟁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보고를 확대해석해서 당장 부처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급격한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내용의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자부 업무보고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행자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행자부는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민간이양, 기능재편, 인력재배치 등이 미흡했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또 전자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취약했고 지방자치나 균형발전은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대부분 구호로 시작해서 구호로 끝난 일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치안·방법, 생활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효율적인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해서 행자부는 정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 및 증원할 분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행자부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는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선인의 공약 실천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에 대한 논

의가 있었습니다. 인수위 측은 주택거래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주택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규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정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사업 수행방식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 10% 절감을 추진해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임 사무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임 사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인수위 측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단계적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수위 측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수위원은 지원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또 다른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인수위 측은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기준에 맞춰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정책 수행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외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인 보도로부터 탈피해 국익 우선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지난 5년간의 외교정책 추진에 대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 정부의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미동맹의 재조정, 협상과정 등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 측은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반영해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을 보고했고 인수위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비전은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 번영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7대 독트린은 첫번째, 핵의 폐기와 실제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의 추진, 두번째,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의 실천, 세 번째,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강화, 네 번째, 아시아외교의 확대, 다섯 번째,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여섯 번째, 에너지외교의 극대화, 일곱 번째, 문화 코리아의 지향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외교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은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2차

업무보고 때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인수위 측은 외교부의 정보조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며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비핵·개방·3000구상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400억달러 수준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인 대처방안은 역시 다음주 초 2차 보고 때 받기로 했습니다.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내 비준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주 중 구체적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보여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권을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외교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라시아대륙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중동지역 국가들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동소사이어티를 금년 중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소사이어티에는 우리나라와 아랍 18개국의 정부, 왕실 그리고 기업인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2008.01.05)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 보다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기능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감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 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다수·집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한 최근 급신장한 다단계업과 관련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측은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2008.01.05)

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의 진입장벽 및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인해 요금 경쟁이 미흡한 것이, 가격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가로 막은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요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보장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위한 선행투자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인수위측은 통신요금인하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시장 경쟁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요금인하 추진방안을 1월 중으로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경쟁촉진을 위해 단말기 교체시 비용경감 방안, 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IPTV, WiBro 등 신규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u-City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2012년까지 IT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일자리 50만개 이상 등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 민영화의 기본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국세청 업무보고(2008.01.06)

오늘 국세청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 위주 기관에서 탈피해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감축 등 세무 조사에 따른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 시스템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은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TF팀

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구성해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인수위측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과학기술부·기상청 업무보고(2008.01.06)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등 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측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광역권개발 개념에 맞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기부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 기초연구투자의 양적확대는 이루었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선택과 집중, 성과중심의 예산배분, 연구 성과 활용 확대, R&D의 글로벌화 등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핵심 선도과학자군 5천명, 해외체류 과학기술인재 1천명 유치 등 우수 과학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정부출연, 민간, 대학 등 연구기관간 칸막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당선인의 철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가석좌교수 및 석좌연구원제 도입방안과 외국연구자들이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수위측은 기상청의 업무보고에 대해 슈퍼컴, 기상위성 등 하드웨어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전문예보관의 능력도 중요하므로 예보 인력의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과기부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와 규모, 조성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업무보고(2008.01.06)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업무보고는 오후 2부터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윈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달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전 검토해 적정사업비를 책정하는 제도인 계약심사제도의 적용범위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측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계청은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핵심지표(key national indicator)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2008.01.06)

산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추진전략과 관련해 산자부는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및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조세지원 강화추진 등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산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 '기업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가 100불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산자부는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제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을 2008년도 5.7%에서 2012년 18.1%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재래시장 육성과 주변개발을 위한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보고 했으며, 창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방안 강구, 창업 및 신형 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자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특허기술 거래 시장 개설 등을 보고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2008.01.0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식약청은 인력과 조직, 기능이 확대돼 온 것에 비해 식품,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지연 등 국민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중하지 못한 발표 및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중장기 발전 비전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2008.01.07)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거듭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수의 인력만이 참여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 보도나 관계없는 분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앞서서 기사를 쓰는 것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또 당선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내용은 오늘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내일 발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일부 외곽에 있는 분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기사화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특히 소수 인력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앞질러 가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인다든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든가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루지지도 않을 뿐더러,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몇 가지 민감한 내용들은 다루지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그리고 기금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 이 같은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간사단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Ⅱ분과위 간사위원이 공항 귀빈실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급적 기업인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기업인은 첫째 성실납세자, 둘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셋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경제단체에 적절한 기업인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통일부 업무보고(2008.01.07)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증진 기반 마련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이 많고 평화, 안보 분야의 진전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국민과 국제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해 대북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당면 과제는 북한 핵 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존의 남북 합의사항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1~2월 중 예정된 남북 회담 및 현지 조사와 관련해 크게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순수 인도적 사업과 큰 재정 부담 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내에서 추진하며,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 확인 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사실상 ‘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자금 조성과 관련해 통일부는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규모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 △ 국제 금융기구의 장기저리 자금 △ 해외 직접투자 유치(연 평균 10% 경제성장 시 연 13억 - 30억 달러 유입 가능) △ 북일 관계 개선(1백억 달러 내외) 등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수위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관련 부처와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통일부는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보다 내실 있는 새터민 정책 개선방안과 함께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 통일부는 향후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해 ‘A/R CDM 사업’ 착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A/R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비감축의무국(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사들여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08.01.07)**

보훈처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10만개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국방부, 노동부 등과 연계해 단순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인수위측은 개정 추진 중인 '재향군인회법'에 대해 당사자인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08.01.07)**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또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연금개혁TF에서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통합 문제, 둘째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운영화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지난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측에서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2008년 6월까지 최대 7만 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적정수가를 설정해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 이 제도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인의 3%에게 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복지와 독거노인, 가족 양육과 해소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른바 전달체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조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환경부 업무보고(2008.01.07)

환경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년간 환경 인프라는 대폭 확충됐으나 국민이 느끼는 환경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난 10년간 아토피로 고생하는 초등생이 10%이상 급증하고 수돗물 불신도 여전히 환경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국가적 중대 사업에서 환경영향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에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인수위 측은 환경부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물 관리 관련 업무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방문조사 등을 거쳐 기능조정과 연계한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재정경제부 업무보고(2008.01.07)

오늘 오후 2시부터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기 여러분들의 취재를 위해서 잠깐 휴회를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보고됐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대립,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재 직업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직업공무원이고 2월 24일까지는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이지만 2월 25일부터는 새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공약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정책 수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7% 경제성장 문제, 300만 개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됐고, 또 서로 약간의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금산분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은행의 민영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같았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인수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7%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어느 정도, 7%까지 가지는 못해도 6% 전후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인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특히 물가 문제와 경상수지 문제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소위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금산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 때 설명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로 금산 분리

를 제한하는 이렇게 엄격한 나라는 없을 뿐더러, 또 역차별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금산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방법론이라든가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정 여건을 봐서 신중히 검토를 하기로 했고, 특히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수도권 역제에 의해서 균형 발전을 하는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공약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첫째,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동성 규제, 바로 이야기하면 주택 대출에 관련되는 규제를 통하는 것이 기본적인 억제 정책이고 조세정책은 하나의 보조적인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됐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는 유동성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조세정책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난번에 공약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행 경과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봐서 종부세 문제라든지 양도소득세 문제 등을 더 논의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 주요하게 거론된 이야기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 건설교통부 업무보고(2008.01.07)

오늘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관련되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파신도시는 교통대책 등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조치한 뒤에 추진하겠

다고 건교부가 보고했습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폭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고 할인시간과 내용은 비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시장 안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동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모든 제도를 활용해서 시장 과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존 국민주택기금과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를 금년 중에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보도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혹시라도 이상 과잉현상을 빚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판을 철저히 마련한 다음에 세금 내지 세수와 관련되는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뜻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저소득가구에 한해서는 시중 은행의 담보 대출을 연리 5% 수준의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1월 중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과 건교부가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이 건교부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 감사원 업무보고(2008.01.08)

감사원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사원 측은, 공기업 구조개선·공공부문 예산절감을 포함한 사회적 현안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며, 향후에는 새 정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직부패 척결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며 정책감사·시스템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조는 높이 평가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자유롭지 못했으며, 본연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이나, 만성적인 감사 결과 지연 및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공약실천 관련해서는, 세출을 늘리지 않고도 추진하며, 특히 10%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아울러 공기업과 정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 국방부 업무보고(2008.01.08)

국방부 업무보고는 오전10시부터 12시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면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호 위협 감소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전력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개혁 2020' 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북한군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 '6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 전력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대한 1차 중간 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되 안보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 의 정례화 및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고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생사 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방부는 2008년 1월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070명이 파병돼 있다면서 유엔 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 1천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PKO)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대 군인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현역 장병 뿐 아니라 제대 군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대근무 경력과 함께 복무 시 취득 자격증을 취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대 군인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노동부 업무 보고(2008.01.08)

노동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 '노사민정' 대타협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방안 △노동부의 기능조정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부측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고, 지역 단위 '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 즉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내에 별도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비롯해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 및 직업훈련시장의 탈규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과 관련, 인수위측은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부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업무 보고서에는 적시됐으나 구두 보고는 되지 않았고, 구체적 논의도 없었습니다. 인수위측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2008.01.08)

인수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함께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예산은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과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08 ~ 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7년말 기준 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에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재정위험요인인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상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부 업무보고(2008.01.08)

오늘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에서는 '문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 '신문법 폐지 및 대체입법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고부가 가치 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산업 지원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지원 재원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지난 5년간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의 만연으로 창작 의욕이 크게 꺾인 점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인재 양성 계획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부는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최소한 문화예산 2%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삭제명령, 불법 P2P 서비스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구축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문화부측은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2008년에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성 계획 수립 후 2009년부터 본격적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도에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 시설의 무료 관람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립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야간 일정시간을 상시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체육 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주·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을 유도하고 공공자금 지원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퇴선수 및 생활체육 지도사를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사로 파견하는 등 방과 후 체육교육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문화부는 스포츠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 세계화 재단’을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질을 복원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김치, 태권도 등 10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가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역동성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약하다고 비판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예산 10% 절감,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자체 생산성 제고 및 경영 개선 등의 추진의지를 요청하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 병무청 업무보고(2008.01.08)

병무청 업무보고에서는 병무 행정의 투명, 공정성 제고와 국민 편의위주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측은 실생활과 밀접한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병무 행정이 국민 감동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아울러 투명성 확보와 병무 비리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로운 병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왔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당부했습니다.

병무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무 행정 과정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병역 면탈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병무청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방위사업청 업무보고(2008.01.08)

방위 사업청은 업무보고에서 방산 업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충분한 신뢰를 형성해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보고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또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방산수출 30억불 달성을 비롯, 일자리 1만 4,000개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업무보고(2008.01.08)

국방과학연구소는 고효율 R&D 체계 정립,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비대칭 전력 대비 기술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뒤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 국익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거듭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아울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 방송위원회 업무보고(2008.01.08)

방송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성과로 '방송시장 규모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인수위는 이에 대해 '불균형만 심화시킨 난개발'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바람직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을 나누는 인위적 기능분리 모델은 적절치 않다' 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국회 방송특위의 방송통신 기구개편 입법 논의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미래 주력산업으로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육성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 5년간 약 2,70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융합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방송의 불공정성·편파성·중립성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공적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정책과 규제를 당당히 하려면 현재의 방송위원회 권위로는 무리이며 방송위원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방송위의 진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화재청 업무보고(2008.01.08)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제도 개선', '문화재관련 규제 개혁 방안',

‘왕릉 등 무료관람 실시’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민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실시와 연계해 문화재청 소관의 왕릉·박물관·유적관리소 등도 국민 휴식공간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문화재 조사 절차 완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남해안 공동화석지’, ‘조선 왕릉’ 등을 추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 국가청렴위원회 업무보고(2008.01.08)

국가청렴위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국가청렴위 업무 보고에서는 국가청렴위의 기능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측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 의식 제고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부패 개선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보완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깊게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조속히 개선해 국가청렴위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은행 업무보고(2008.01.09)

오늘 한국은행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측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가안정은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본 사명인 물가안정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긴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과잉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인수위측과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 소방방재청 업무보고(2008.01.10)

소방방재청 업무 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당초 1월 8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연기돼 오늘 이뤄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사고 및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재난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예방 투자가 전체 예산의 42%에 불과해 일본의 79%와 비교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보상이 좀 더 충분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함께 자체의 예방 예산 확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저소득층 연탄지원 확대 등 민생정책(2008.01.10)

인수위는 에너지 절감과 저소득층 연탄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경제Ⅱ분과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차에 대한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LPG 사용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날짜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차에 LPG 허용 배경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CO₂배출 감소 및 국내업체 기술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의 국산화(하이브리드차) 등이 기대되며, LPG 경차가 보급될 경우 중소형 및 대형차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경차 판매비중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92만 배럴의 휘발유 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LPG 하이브리드차 포함시는 연간 약 243만배럴 절감).

자동차 업계는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도입시 LP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수위 경제Ⅱ분과와 산업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탄가격을 종전보다 19.6% 인상키로 하면서 서민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에 대해서만 2006년 대비 가격 인상분만큼을 쿠폰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측과 산자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외에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용 연탄사용 가구 지원은 현행 4만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약 10만 가구로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외교통상부 추가 업무보고(2008.01.11)

외교통상부 추가 업무보고가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있었습니다. 인수위측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외교역량 발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 또한 '지금 가장 큰 과제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인 만큼 외교통상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 인턴 프로그램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관련해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외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성과 함께 국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외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 지역별 분야별 전문화 등을 통해 국제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외교정책의 기획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외교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외교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용경로를 통한 특별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채용제도 개선 및 인력충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측과 외교부는 에너지 외교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동소사이어티(Middle-East Arab Society)'를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인수위 대변인실 브리핑(2008.01.12)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와 대통령당선인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과제, 지표 및 주요 프로젝트를 밑그림으로 담아서 사료로 정리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백서는 모두 2권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제1권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수록을 하고, 제2권에서

는 인수위원회 활동 내용을 생생하게 수록할 예정입니다. 각 권별로 400쪽 내외의 분량으로 총 800쪽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서 발행시점은 2월 20일까지 1차 원고를 대략 정리해서 3월 말에 일반인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백서는 사료로서 공공기관에 보관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 희망자들에게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서와 함께 그 동안 한나라당이 일류국가비전을 위해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도 인수위 활동 내용은 물론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아서 국민들이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더 가깝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간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PSI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PSI 문제가 지난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교부 쪽에서도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도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을 했지만, 이 사안이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감안해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 2차 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자꾸 이 같은 사안을 다룸으로써 마치 PSI 문제가 본격 논의·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당선인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정책과제로서 PSI 참여 문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2008.01.12)

인수위가 언론사 간부 성향을 조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당선인의 의지에 정면 배치되는 일로 다른 것도 아닌 인수위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정부부처 내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한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돌출행동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박 모 위원은 지난 1월 2일 문화관광부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언론계 주요 인사에 관한 신상자료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은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박 모 위원이 문화관광부 실무자에게 요청한 이메일에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출판계, 영화계, 관광계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자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는 자료 요구 이유에 대해서 이메일에서 인수위의 자문위원 추천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모 위원은 이 같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분과 담당 인수위원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요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구할 경우 인수위원장의 사전 결재를 얻어야 하며 긴급할 경우에도 사후보고토록 돼 있는 인수위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오늘 간사단회의에서 “비록 개인적인 돌출행위라고 하더라도 인수위 전문위원 명의로 이뤄진 일인 만큼 저부터 스스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겠다, 당선인은 물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물의를 일으킨 박 모 위원 전문위원직을 면하고 해당 부처 장관에게 엄중 징계토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분과위 간사인 담당 위원에게도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당선인의 뜻과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기자실에 박힌 못을 빼겠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 대변인으로서도 개인적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2008.01.13)

오늘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선인의 제의로 윗도리까지 벗고 진지하면서도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는 국정과제 보고가 있었고, 12시부터는 모든 참석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고는 오후 2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 전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공일 위원장과 위원 전원,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조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정과제 보고는 △국정철학 및 비전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국가경쟁력 특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보고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기초 분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국정과제별 토론은 각 분과 간사와 위원들이 중심이 돼 당선인과의 토론으로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세계 일류국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돼 국민 요구에 서비스로 답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오늘 지침을 토대로 각 분과위 별로 조정 작업을 거친 뒤 조만간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은 이명박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과제에 대한 보고에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즉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 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 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 로, 5대 국정 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 등입니다.

인수위는 이날 155개 1차 국정과제를 보고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부법무행정 17개, 경쟁력강화 8개 등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1월말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7% 성장에 관해서는 금년도의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율(7%)을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무 법무 행정 분야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1실 7 수석 체제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 국정원장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2008.01.15)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수위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인수위 측에 보내왔습니다. 대화록 유출은 이미 국정원 측이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은 조사 결과를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인수위원장도 안타깝다는 말 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국정원장 개인의 사의 표명으로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다만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조직의 안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 인수위 간사단회의(2008.01.17)

우선 어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 중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합에 대해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라고 규정하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 전문성을 살려 전방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개편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존속은 협상카드가 결코 아니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른바 정보라인이나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되기보다는 전방위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통일의 길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특임 장

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뜻입니다.

한편,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수리 문제에 대해 청와대측은 '유출된 문건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이 국기문란행위이며 유아무야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 원장 자신도 이 문건이 당초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사안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그에 앞서 청와대측이 국민여론을 직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각 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의 작업을 발목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 직후 한나라당이 흔쾌히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협조했다는 점에 비추어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끝으로 어제 정부조직 개편 발표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대부처주의가 어디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성과가 검증됐는지 모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은 30여개국의 실증적 사례를 검토하고 한나라당과 인수위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정외의 중심에서 있는 청와대에서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상비평을 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17)

인수위는 오늘 지난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 보고했던 국정과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과제, 또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내에 계획의 발표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내일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간사단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먼저 감사원의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감사에 편중됐던 감사 운영으로 본연의 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유형을 종합 분석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운영하고 세금, 금융, 공사, 계약 등 고질적인 대민 관련 비리는 권역별로 지역 상주 감찰반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및 에너지 외교와 관련해서는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의 FTA협상도 올해 중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기금사용 내역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의 2.6%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2만 명으로 출국자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기준의 완화,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점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제도를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거쳐서 3단계는 완전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 목적 실수요자와 지분투자자가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데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 및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의 새만금TF는 어제 당선인에게 새만금사업 추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내부토지 이용의 기본구상을 변경해서 경제중심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 72%로 규정된 구상을 농지는 30%로 줄이고 산업·관광·환경 등 기타 용도로 70%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까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을 완벽하게 처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왕궁축산단지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30만톤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배후 해양물류단지의 조성, 이것은 2010ha의 면적이 됩니다. 또 방조제 주변의 다기능복합부지, 이것은 455ha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5290ha의 산업단지, 1240ha의 관광단지를 조

성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 제 공사를 조기 착수해서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보다 상세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18)

오늘 오전 간사단회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전 7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토요일 당선인께 보고된 국정과제 가운데 당선인이 수정·보완을 요청한 18개의 보완과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정과제의 정리 등 짧은 시간 동안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했다고 치하한 뒤 큰 가닥이 이미 잡힌 만큼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당선인께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오랜 시간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벌어지는 예산의 낭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외교 강화 방안에 대한 해당 분과의 보고에 대해서는 각 대사관에 나가 있는 인력과 구체적 업무 내용을 파악해 실용적으로 일하는 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시행령이 공표되면 이를 바로 영문으로 번역해 알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도 영문으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소 시차는 있겠지만 오늘 브리핑 내용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외신 프렌들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인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래서 책임성 있고 안정감 있는 인수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기계적 부처 통폐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권교체기에, 국정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한 시점에 물러나는 정부와 인수위가 불필요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인수위가 추진하는 기능 조정과 부처 간의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의 결합입니다. 바로 이 방안이 국민에게 양질의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는 취

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방만한 정부 운용과 비효율의 실상은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19)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업무조정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30여분간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규제 의 실상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전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의 회의 참석은 어제 이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에도 설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항상 현장과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지사는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허가, 인가, 승인, 금지 등 국무조정실의 규제 등록 현황을 보면 2000년 말 7,128건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연말 8,0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 주된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레드테이프 외에 중앙과 지방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한 예로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7개월, 시장 군수 주민 의견 청취에 2개월, 중앙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를 3개월, 환경 영향 사전평가에 최소한 12개월이 걸리는 등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각 부처의 시행지침까지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만 해도 대규모 공단설립이 지연돼 10조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농지 및 산지의 전용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 기간을 합해 환경영향평가에만 550일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화재 조사관련 규제도 엄격해 현실을 감안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 단지 조성 시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윈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심의기구를 우선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의 보고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나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규제 개혁이라고 보고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별도의 TF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탁상이나 중앙이 아니라 현장과 지방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1년 연장(2008.01.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설비 투자 등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2008년 1월 1일 투자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 계속 운영돼 왔으며 최고 15%(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 일도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2008년까지 1년 더 연장 적용해 줄 것을 지난 1월 14일 현 정부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 달성 및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2조원에 달하며 세금 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2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불공단 전주 후속조치(2008.01.20)

대불공단의 전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선박 불룩을 움직이는데 시급하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휴스틸 사거리에 있는 전주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세라믹스 쪽에 있는 전주는 바로 오늘 중 즉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틸 쪽에 있는 전주 1개는 한 2-3일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2-3일 뒤에 이설기로 했습니다. 2개는 우선 시급히 장애가 되는 만큼 철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월 중에 완성될 대형 선박 불룩의 출하가 예정되고 있는데, 장애가 되는 동부중공업 앞에 있는 전주 6개를 도로변 안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 5000만원 중 이른바 수익자 부담이 적용되는 1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해당 3개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전주의 지중화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2008.01.21)

오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45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될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 법률안은 43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두 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필요한 직위에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포지티브 방식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해당 법률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항, 외국인의 임용 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 그리고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직 이후에도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에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도 입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와 과학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국내외 석학, 전문가 그리고 기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트워킹에 대해서 현재 중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지를 포함한 내용은 1월 30일경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를 한 뒤 여러분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도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국토의 창조성, 문화 인프라, 생활여건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념을 대폭 강화하는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추진방안은 도시 공간 설계라든지 건축물 설계,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에서 서로 고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조정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종로 주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해 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디자인수도를 내세우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영국은 케이브(CABE)라는 기구를 통해서 여러 정책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올

해 발효 예정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해 이러한 총괄 조정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또 새 정부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세우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새만금사업,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공부문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 디자인 관련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 사업 등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통합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토록 권고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관리나 디자인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 과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이라든지 제도적 기반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디자인 및 경관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새 정부의 밑그림으로 인수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위원 주재로 민간 R&D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R&D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KT, SK에너지, LG화학 등 대기업과 SNU프리시전, 티맥스소프트, 넥슨 등 중소기업 등 업계 10인과 인수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간사위원을 비롯해 배은희, 김선진, 박구선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 예산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업들은 경제 살리기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R&D 역량 제고와 R&D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스스로 R&D의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환돼야 된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2008.01.22)

인수위는 10% 인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유소별 판매가격 실시간정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주유소별 판매가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도록 주유소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각 주유소, 현재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만, 주유소별로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종합해서 이른바 지도 정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유류세 등 유가인하 요인이 실제 소비자가격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유소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유류가격이 낮춰지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유소업계는 수익성의 악화 그리고 주유소 영업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이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인수위원회는 국민 편의의 극대화를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 현재 석유공사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차량용 네비게이션, 휴대폰, PDA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주유소에 대한 가격 정보뿐만이 아니라 세차, 편의점이 있는지의 여부,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정보도 함께 제공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셋째주 휘발유 가격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주유소별로는 최대 1리터당 256원, 지역 평균별로는 115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입할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경우에 1리터당 100원 정도 싼 주유소를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간 최대 14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이른바 발로 뛰는 인수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현장 방문을 분과위원회 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예고된 대로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를 찾아서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관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안보 현황을 현장에서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물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당선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유치TF는 동탄 신도시 예정지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당인리 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이미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장애인 요양시설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외교안보 분과위원회와 사회문화교육 분과위원회, 그리고 법무행정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안산 반월공단도 방문해서 외국인근로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설 전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밥퍼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2008.01.23)

오늘 간사단회의에서는 증권시장의 주가폭락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증권시장 주가가 반등했지만 증시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현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증시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간사단회의에서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정부의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업무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시장상황을 살피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TF팀 등을 구성해서 면밀히 시장동향을 살피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7시 30분부터 김석동 재경부차관, 이승우 금감위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인수위 경제 I 분과와 금융정책협의회 참석 멤버인 김석동 재경부차관 등이 만나서 시장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사단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한국경제 펀드멘털은 튼튼한 만큼 외생 변수로 인해 주가폭락사태가 빚어졌지만 투자자들이 뇌동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지는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조간에 '이명박 당선인께서 삼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모두 참석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숙 위원장께서는 '과거에 사관학교 졸업식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 그것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 상당한 물의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이 과연 섬기는, 봉사하는 정부의 모습에 맞는 것인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예단해 보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위 행정실장 발표문(2008.01.2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백성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Ⅱ분과 자문위원 고종완(RE멤버스 대표)씨를 1월 23일자로 해

임한테 이어 24일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고 씨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일이 빚어진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더욱 다잡아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밝혀 둡니다.

마침 인수위원회 출범 1개월을 맞아서 25일 오전 상근자 전체조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인수위 전체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비롯한 상근, 비상근 소속원들에 대해 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위원회 내에 자체심사기구를 설치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워낙 국민적 주목을 받았고, 활동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있음에 따라 인수위를 사칭하거나 인수위원회 또는 소속원에 대한 비방, 음해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이 점도 동시에 경계하고자 합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25)

오늘 청와대는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현 정부의 안과 거의 같으며 표절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제안한 초광역경제권구상은 지역혁신의 향후 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한 파워포인트 3쪽 분량의 자료로 정책 콘텐츠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국내에서도 10여년 전부터 학자와 전문가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미래구상입니다. 또 이명박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7+1안', '4+1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도 충분히 참조해서 광역 발전의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청와대 안은 전혀 참고한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정책만 발표하면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눠 먹기식 중복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27)

인수위가 지난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특히 '영어 공교육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혼선과 오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 한다는 얘기마저 들립니다. 그러나 거듭 밝힌 것처럼, 영어 공교육 강화를 비롯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대선 공약을 입안할 때부터 충분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입니다. 우선 오늘 간사단회의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TF팀은 이경숙 인수위위원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와 기획조정분과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간사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발제는 충남대 천세영 교수가 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기대만 부풀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어 공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영어교과 이외에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이른바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학교나 국제화특구 내 학교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들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몰입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도 영어수업의 말하기·쓰기가 강화되는 것으로 타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201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부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전면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인수위는 당초부터 우선 듣기·읽기 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평가 영역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었으며 4가지 영역이 모두 적용되는 평가는 빠르면 2015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오해는 영어 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의 근본적 취지는 부모의 빈부격차가 자녀의 영어 실력 차이를 낳고 영어 실력 차이가 다시 빈부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른바 영어 양극화, 즉 English Divide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잉글리시 디바이드 해소는 그 동안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제기돼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 최고의 영어 교육 환

경을 만들어 가난하더라도 고교만 졸업하면 일상적 영어 구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당선인의 신념인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 끊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도 영어 공교육 방안에 관해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의 일류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 영어 공교육의 강화는 필수 요건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또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영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자국 언어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만 해도 버스에 영어를 배우자는 광고가 있었다'며 세계화 시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진식 위원은 '영어 교육은 세계화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고 박승준 위원은 '인터넷 정보의 90%가 영어로 돼 있는 만큼 생활영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지상파 방송의 뉴스부터 전면 음성다중방송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영어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영어 교육 능력을 갖춘 주부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실현할 수 있고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는 것이 인수위의 다짐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1.30)

오늘 인수위가 주최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수위의 안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 공교육의 실천계획을 만들기 위한 시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채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대 단체 대표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이경숙 위원장의 뜻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 직후라도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반대 단체 대표들을 만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해산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편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찬성론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던 만큼 그 동안 영어 교육에 대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또 현직 교사 등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육부 측에 섭외를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찬반 논란을 넘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앞서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와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로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 청계천이 완성됐을 때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영어 공교육 강화는 나라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꿈을 드리는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무산으로 노사문제에 대해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새 정부와 당선인의 노사문제에 관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선 사는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노는 생산성을 증가시켜 복지를 스스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는 대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야기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결국 ‘노사 프렌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노의 적극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이며 언제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면담계획을 취소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초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법파업 등은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원인이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사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원칙은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2.04)

지분형 아파트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던 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분형 아파트, 투자 어렵다’, ‘반의 반값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Ⅱ분과가 지난 2월 1일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참석자(14명 중 8명, 57%)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14명 중 6명, 43%)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분형 아파트와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투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돼야만 매매/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습니다.

당초 발표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2.05)

오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정과제보고회의의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이경숙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전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그리고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 정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당선인으로부터는 ‘인수위에서 그동안 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음 정부 출발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인수위는 모두 110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267회의 각종 협의, 총 54회의 현지 의견수렴, 국민과 공직자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추진했다’면서 ‘국정과제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새 정부에 넘기는 즉시 시행되도록 착오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관광, 금융, 보건과 관련된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세계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 ‘기후변화와 연계해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은 며칠 전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해 느낀 소감을 전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변두리 시장이긴 하지만 설날 대목에 아주 썰렁했다. 좌판을 놓고 생선을 파는 한 할머니는 무조건 붙들고 우셨다. '장사가 잘 안돼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사료값, 비료값, 유가 등이 대폭 인상돼 농어민들께 굉장한 부담을 줄 것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어제 비료, 사료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당선인의 지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강구중인 감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윈스톱 행정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외신과의 회견에서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거치며 받는 도장이 770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하나 만드는데 3,4년씩 걸린다면 임기 중 공단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윈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 허가까지 나오는데 불과 2-3개월이면 착공할 수 있게 돼있다. 선진국도 업무가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처가 있어서 그 곳에 신청하면 다른 관련된 업무를 거기에서 다 처리한다', '우리도 주된 업무의 80~90%는 주무부처가 하고 협조부처와의 행정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오늘 보고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지적한 내용과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 보고서를 보완해 향후 구성될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2008.02.17)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인수위 워크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는 이명박 당선인,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수 총리 후보,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내정자,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됐다면, 국무위원 내정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와 대통령실의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인수위 각 분과 간사위원들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간의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어제는 분과별로 인수위 간사위원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내정자들이 밤 11시까지 토론을 벌였고,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 토의 내용을 보고하고 당선인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한승수 총리 후보가 각 분과를 돌며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밤 11시 분과별 토론이 끝난 뒤에는 구내식당에서 두부김치 등을 안주로 단합을 다지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전 6시 50분부터 50여분간 이명박 당선인, 한승수 총리후보와 워크숍 참석자들이 대운동장을 15바퀴를 돌며 조깅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운동장은 한 바퀴 도는데 350미터이므로 5킬로 이상을 조깅한 셈입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및 국가경쟁력 특위 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GDP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하위 계층은 실질 소득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거시 경제 운용에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제조업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관광, 의료, 문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강조돼야 하고 농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책이 너무 많고 복잡하므로 지원대책을 늘리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 대책의 일환으로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개혁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희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건, 얼마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인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TF'의 이름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사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 기후변화문제를 생활과 동떨어진 글로벌 어젠다가 아니라 국가적 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3년 국제기후변화협약 의무체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능동적 참여를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장, 제3세대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일안보와 관련해 남북관계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문화 등 실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켜야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새 정부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입니다.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는 승례문 복원과 관련해 졸속 복원을 피해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행정 분야 토론에서는 공직자 부패 척결과 관련해 '받는 부패' 뿐 아니라 '주는 부패'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강압적인 단속 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유아 교육부터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원인과 대응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무총리 산하 '중앙재난 조사 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분야별 원인별 제도 개선 방안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사회적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정책 시스템 효율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해 나

가기로 했습니다.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일하는 복지 구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은 중앙 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마무리 발언은 이미 자료를 통해 배포했습니다만,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각이 확정되면 취임 전에 철야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내각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도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삼아야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된 예산이 다시 신속하게 바로 재투자가 돼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신속히 해야 할 일, 3개월 내에 해야 할 일, 정권초기에 해야 될 사업들, 또 연말까지 해야 될 사업들, 또 중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구분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정부 조직개편의 난항은 여소야대라는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유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 부서들이 화합적 융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미 FTA 문제는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좋으며 현안 문제인 소고기 문제도 현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당히 효과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5년, 정말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요지(2008.02.18)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백성운입니다. 취임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사 개요와 단상에 초청될 국민대표 그리고 외국에서 참석할 축하사절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행사의 주요일정을 보면, 취임 전일인 24일 일요일 밤 11시 30분부터 0시 15분까지 임기 개시를 상징하는 보신각 타종 행사부터 시작돼서 25일 11시부터 12시까지 취임식 본 행사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4시 반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경축연회 그리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빈 만찬 그리고 밤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취임식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되며 국무총리의 식사에 이어서 취임선서 그리고 취임사, 이임 대통령 환송, 대통령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상을 한복으로 할 것이냐, 양복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현재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네티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6 대 4의 비

을로 한복이 우세합니다. 특히 젊은층이 한복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다음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취임식 단상에 앉을 국민대표들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대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을 상징하는 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 등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70여 명에 이르는 국민대표 중에는 국제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는 전북 남원의 이담현 양, 대구 서문시장의 박종분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유공자 및 서해교전 참전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가족, 4·19, 5·18 민주화항쟁 관련 인사 등도 초청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지만 강한 기업의 대표들도 초대했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대표들도 단상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5일 자정 17대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종 타종도 지역, 계층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시·도의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대표 16명과 재외동포 1명이 함께 타종하기로 했습니다. 타종에 참여하는 17명은 17대 대통령을 상징하고 타종 횟수는 전통에 따라 33회 실시합니다. 보신각종 타종에 참여하는 국민대표로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을 상징하는 여수엑스포 대표가, 외국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라북도는 투자유치에 성과를 낸 공무원, 그리고 대전에서는 인재교육양성 도시에 걸맞게 카이스트 학생대표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무대 앞 관객석에 특별 초청되는 국민들 중에는 태안유류사고 자원봉사자와 성차별,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분들과 남북 화해협력 증진에 노력하신 분들, 국제평화유지단 부대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객석 특별초청 인사는 1,200명 규모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외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가장 많은 외국 정상들이 축하사절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18일 현재 방한이 확정된 정상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앵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등입니다. 또한 전직 정상급 인사도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많이 참석합니다. 압둘 칼람 인도 전 대통령,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밥 호크 호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모시 요시로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총리,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건강 상태가 해외여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이명박 당선인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의료진을 대동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필립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라쉬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고위급 인사 등 10여 개 국의 고위급 정부 대표도 금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외교사절 중에도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등의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주요 외국인사 80여 명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계 인사로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 칼미키야 공화국의 키르잔 일롭지노프 수반을 비롯해서 연해주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다르킨 주지사 등이 참석합니다. 경제계 인사로는 코가 노부유키 노무라 그룹 CEO,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빈센트 회장 등이 있고, 하인즈 워드 미 프로축구 선수가 명예 서울시민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과 중국, 스페인 등 10여 개 국에서 국회의원, 기업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2008.02.19)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내각-대통령실 합동 워크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는 이명박 당선인,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수 총리 후보와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및 수석비서관 내정자, 인수위 간사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어제 저녁에는 워크숍 참석자 전원이 조각 명단 발표 직후 버스편으로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으로 이동해 밤 10시부터 12까지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씀에 이어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수 총리 후보자,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의 인사말이 있었고 맹형규 인수위 기초분과 간사의 인수위 활동 경과 보고,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의 정부조직 개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 뒷 부분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실의 일하는 자세로 신속 효율, 현장 철저, 시스템의 3가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평소애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이론과 논리를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은 자기가 작동시킨다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실장 내정자는 또 "5년 뒤 대통령직을 완수할 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당선 인도 일 한 번 원 없이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새벽 2시까지 분과별 토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첫날부터 밤을 새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늘은 밤 12시까지만 하자고 당선인과 참석자들에게 제의해 밤 12시 전체모임을 마치고 이후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뒤풀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뒤풀이 자리에서 '인수위에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시대보다 앞서가도 지지를 못 받을 수 있고 시대보다 뒤쳐져도 지지를 못받을 수 있다. 그래도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낫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선인은 또 국무위원 후보들

의 연령대에 대해 '60대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60대는 예전의 30, 40대다. 30, 40대의 마음이 짐으로 열심히 뛰어주기 바란다. 누구보다 일을 최고로 잘 할 분들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다과회 도중 이경숙 인수위원장,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국무위원 후보자,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에게 '내가 눈이 작아서 잘 안볼 줄 알겠지만, 다 보고 있어요. 어리석은 남성들이여 여성을 보라, 서울시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여성들이 일 잘하더라'는 격려의 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 번 인수위원, 수석 내정자 워크숍 때와 같이 오전 7시부터 50여분 동안 참석자 전원이 대운동장을 15바퀴 돌며 조깅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운동장은 한 바퀴 도는데 350미터 이므로 5킬로미터 이상을 조깅한 셈입니다. 오늘 조깅에는 30여명이 참여했는데 7바퀴를 돈 뒤 당선인은 방향을 바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것을 제안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였습니다. '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라는 평소의 철학대로였습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분과별 토의,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전체토론이 있었습니다. 분과별 토의와 전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국무위원(재정경제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고 MB노믹스의 원칙과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MB노믹스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경제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 소비 등 내수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규제의 최소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확대(GDP의 5%)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며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국무위원(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는 '교육은 정부 해당 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전 내각이 관심을 가져야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인데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경쟁력이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500대 대학 중 우리는 400개 대학 중 9개가 들었고, 이스라엘은 7개 중 7개가 들었다. 효율성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영어교육도 필요하지만 국어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인식돼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위상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국무위원(외교통상부) 후보자는 외교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자원 에너지 외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어 11

대 경제대국으로서 4강 외교뿐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외교, 대유럽외교, 아프리카 등과 의 외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한 국무위원(법무부)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제일 과제는 법질서확립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법 질서 지키기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확고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휘 국무위원(국방부)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5년 뒤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뛰어넘는 미래의 군대를 만들어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국방의 의무를 봉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국무위원(행정자치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최단기간내에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실천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실질적 분권화, 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국무위원(문화관광부) 후보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문화정책을 예로 들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화에서 보이고 들리게 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또 문화를 창조산업과 네트워크 걸쳐 육성 등을 통해 문화를 산업의 눈으로 바로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국무위원(농림부) 후보자는 '5000년 동안 농어업은 생산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윤호 국무위원(산업자원부) 후보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산업 강국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소멸의식을 갖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이 국무위원(보건복지부) 후보자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 분야도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예산은 2배나 늘었지만 체감도는 낮아 복지병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회복지 는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박은경 국무위원(환경부) 후보자는 '일본 등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센터가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해당 부처에서 조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나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유관 부처와도 협력해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희 국무위원(노동부) 후보자는 '노동정책도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문제는 단선

적 접근보다 중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종환 국무위원(건설교통부) 후보자는 부동산 버블 등 주택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면 기본으로 돌려놓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계획 없이는 개발 없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홍 국무위원 후보자는 '지난 10년을 꼭 잃어버린 10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좋은 경험을 한 것이고 좋은 반면교사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좌도 없고 우도 없다. 무엇보다 국익을 생각해서 국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춘호 국무위원 후보자는 '여성문제는 법과 제도 같은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성 문제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제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소신표명을 방불케 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발표제한시간인 5분을 넘겨 길게 설명하다가 사회자인 맹형규 간사로부터 "당선인은 짧게 발표하는 분께 점수를 더 줄 것 같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고축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접견 관련(2008.02.23)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23일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고축통 싱가포르 선임 장관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는 싱가포르 측에서 추아타이경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테디우스 후 1등 서기관, 어거스틴 이통양 선임장관 수석비서관 그리고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 권종락 당선인 외교보좌역,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고축통 선임 장관에게 전날 개성 방문 소감을 물었고, 고축통 선임 장관은 "발전상황을 보고 인상이 깊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고, 노동생산성이 중국 근로자보다 높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매우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축통 선임 장관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위해 싱가포르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방북대화를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긴장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협조해야 한다 △만약 싱가포르 정부차원의 방북이 계획된다면, 평양 방문 전이나 후에 서울을 방문해 우리의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

품을 싱가포르에서 인정해 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위해 북한이 조금만 더 개방정책을 써주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고축통 선임 장관은 “북한을 향해 더 개방해라, 세계를 향해 불신을 줄여라, 세상은 많이 변했고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 고축통 선임 장관은 “당선인께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성숙한 세계국가, 비즈니스 코리아,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하나의 키는 혁신이다. 지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중국이나 인도처럼 노동력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서로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한국기업은 싱가포르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나가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싱가포르 기업은 한국에 진출해서 중국, 일본으로 가는 허브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다. 양국의 기업인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중동국가 등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싱가포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주면 기업들도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싱가포르 양국 기업인들이 서로 적극 협력해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싱가포르 기업은 극동에 진출할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축통 선임 장관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취임을 축하드리고, 매우 바쁘신 줄 아는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당선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2001년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당시 중국이 부상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새로운 경제개편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총리로서 굉장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성공한 비결을 듣고 싶었다. 아마 그 때를 기억하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가회동 주민들과의 티타임 관련(2008.02.23)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오늘 오전 김윤옥 여사와 함께 가회동 자택에서 15명의 가회동 주민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당선인은 가회동 주민들과 차와 다과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배려와 따뜻한 정에 감사를 표했고 주민들은 당선축하 인사를 전하고 좋은 대통령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선인은 “잘못하면 인사 못 드리고 갈 것 같아 오늘 모셨다”면서 “한옥 마을 살면서 인심이 좋아서 다 이해해 주시고, 옛날 인정이 다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북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상기하며 “시장할 때 북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북촌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왔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기 길이 좁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사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 이사 갈 집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떠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제가 종로하고 인연이 깊다. 회사도 여기 종로에 있고(계동 현대 본사),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고, 서울시장 되고 난 후 시장 공판도 종로구 혜화동에 있었다. 시장 그만 두고 살 집을 구하는데 종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사 가는 곳도 여기서 가깝고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역사에 남는 좋은 대통령이 돼달라”, “한국을 크게 도약시켜 그런 대통령이 가회동 출신임이 자랑스럽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눈 후 가회동 주민들은 당선인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박수를 치고 당선인, 김윤옥 여사는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인수위 행정실장 겸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2008.01.2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백성운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기 시작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참여 신청자가 2일 동안 1만8,000명을 넘었고 오늘 중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슬로건에 대한 국민제안도 2일 동안 2,20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인터넷 참여 신청자는 23일 오전 10시 현재 1만8,854명으로, 17일동안 접수 받았던 16대 대통령 취임식 인터넷 참여신청 인원 2만1,000여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취임식 참여에 대한 국민 관심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 참여 신청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참석을 희망해 종전의 취임식과는 다른 분위기의 취임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신청 건수는 7,938건으로 참여 신청 가족인원은 평균 2.4명입니다.

취임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결혼기념일과 겹쳐 아내에게 결혼기념 선물로 초청장을 주고 싶다는 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벤처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분, 아들의 소원이 대통령이라 그 꿈을 키워주고 싶다는 분, 자녀에게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분, 불굴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온 새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자신도 용기를 얻고 싶다

는 분 등 기대와 희망, 용기를 담은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취임식 인터넷 참여 신청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30대 이하 연령대의 국민들이 많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참여신청자 1만 8,854명 중 30%에 이르는 5,600여명이 30대 이하입니다.

취임식 슬로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식의 경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19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취임식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2,015건이었지만, 17대의 경우 2일 동안 2,200건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슬로건 제안에 들어간 키워드는 주로 '경제', '국민성공', '희망', '다시 한 번', '성숙한 세계국가' 등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살아나길 기대하는 바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 행정실장 겸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취임식 관련 종합 브리핑(2008.02.2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 장 백성운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취임식에 대한 부분적인 보도가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범훈)는 이번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 하며, 검소한 취임식이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당선인의 뜻에 맞춰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취임준비위는 이를 위해 무대 구성에서부터, 단상인사, 참석자 자리배치, 취임식전 문화행사 구성, 임기개시 상징행사 프로그램 구성, 취임식 소품 등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무대의 높이를 이전보다 대폭 낮추고, 참석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단상에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관례적으로 단상에 앉았던 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 청와대 수석 내정자, 인수위원들은 모두 무대 아래에 앉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기능상의 이유로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김인중 경호처장 내정자는 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국회 앞에서 하차해 국민 속으로 걸어서 입장하고, 국민과 함께 걸어서 퇴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취임식 소품으로 사용되는 머물러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 참석자들이 추위에 고생할 것을 대비해, ‘방한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외국 기업인, 투자자들을 단상에 많이 모셨습니다. 취임식이 대한민국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것으로,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외빈은 주한 외교사절을 제외하고도 약 250여분이 단상에 앉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임행사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대 이명박대통령 취임행사는 24일 23시 30분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리는 '임기개시 상징행사', 25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열리는 '취임식전 문화공연', 그리고 11시부터 열리는 '공식 취임식'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24일) 밤11시 30분부터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임기개시 상징행사'의 타종행사 참여인사로 국민통합, 지역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16개 시·도에서 각계의 국민 16명, 재외동포 1명 등 17명의 국민대표를 모셨습니다.

임기 개시 상징행사에는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이 참석해 국민대표 17명과 함께 17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는 25일 0시부터 보신각종을 33번 타종합니다. 취임준비위는 타종행사 전에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성악가 최현수, 팝페라 가수 로즈 장 등이 조용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새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소회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영상메시지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일(25일) 새 대통령의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24일 저녁 가회동 사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25일 아침 10시 국립현충원으로 가기 위해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이후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난 후 10시 50분 경 취임식이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도착한 후, 단상까지 걸어가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약 1시간 정도의 공식행사를 마친 후 17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집무를 시작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십니다. 청와대로 가시기 전에 서울광장과 청와대 입구 효자동에서 시민과 주민들이 환영행사를 하겠다고 알려와 가능하면 인사를 드리고 가실 예정입니다.

이후 새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등 공식업무를 보시다가 오후 4시 국회 중앙홀에서 열리는 내빈 만찬에 참석하고, 다시 오후 7시에 청와대에서 축하사절로 오신 외빈들을 위한 만찬에 참석합니다. 외빈 만찬 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7대 대통령취임축하, 국민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연주회에 참석합니다. '천원의 행복' 연주회는 한·중·일 전통오케스트라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대통령 취임식과 겹쳐 축하행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임식 행사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7대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시는 국민, 외빈, 단상인사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준비위는 이번 취임식에 국민참여를 대폭 늘려 45,000명 규모로 계획하고 전체 60,405명을 초대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2만5천여명을 초청했으며, 행정자치부와 기타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국민 3만여명, 외빈 및 해외동포 등 5천여명 등

입니다. 이번 17대 취임식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참가 신청을 받아, 3,885가족 10,244명이 참석함으로써 취임식이 보다 즐겁고 교육적인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안유류사고 자원봉사자, 경제살리기에 앞장 선 분들, 성숙한 세계국가, 다문화코리아를 상징하는 분들도 초청했습니다.

단상 맨 앞줄에 대통령과 나란히 앉는 국민대표 52명은 각계각층에서 희망을 주는 분들을 상징적으로 모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담대한 꿈을 편지로 보낸 전북 남원의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이담현양, 신기술 특허로 받는 특허료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한 송명근 건국대 의대교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서해교전의 이회완 대위와 사망자 유가족,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어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강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단상에는 국회의원, 3부요인 등을 비롯해 약 500여명, 외빈 6개국 정상급 인사를 비롯 주한외교단, 외국기업인 정치인 등 외빈, 재외동포 400여명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리고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등 국내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 50여명을 단상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단상이 아닌 참석자석에는 더 많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자리해 새 대통령의 출발을 축하하실 예정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 정상들이 축하사절로 참석하십니다. 현재 취임식 참석을 약속한 정상급 인사는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앙호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줍코프 러시아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등입니다. 또한, 전직 정상급 인사로 압둘 칼람 인도 전대통령,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총리, 밥 호크 호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총리, 모리 요시로 일본 전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필립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라쉬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고위급 인사 등 10 여개국의 고위급 정부대표도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외교사절 외에도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등의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주요 외국 인사 약 80여명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과 중국, 스페인 등 10여개국에서 국회의원, 기업가 등 12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제 공식 취임식이 열리기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식전문화공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식 식전 문화공연의 주제는 '시화연풍'입니다. '시화연풍'은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뜻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신년 휘호로 말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연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세계적인 것, 옛것과 새것, 클래식과 팝이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참고로, 취임준비위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취임식을 검소

하게 치르기 위해 무용단-합창단 등 출연진의 의상을 새로 맞추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던 의상을 그대로 입기로 했습니다.

식전 문화공연의 사회를 맡은 김제동 씨와 축하 노래를 부를 김장훈 씨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 분들의 나눔의 정신이 취임식 정신과 통한다는 생각에 모시게 됐습니다. 공식 취임식 사회는 대규모 국가의전행사를 진행하는 행정자치부 황인평 의정관이 보게 됩니다. 식전 문화공연에 참가하는 개인과 단체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거리가 됐던 새 대통령의 취임식 복장, 즉 한복이나 양복이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당선인께서는 복장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인수위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래도 한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한복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임식은 세계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므로 보편적인 복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당선인은 취임식에서는 국제관계와 실용성 등을 고려해 양복을 입으시고, 평상시에 한복을 자주 입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일상 업무 중에도 입으시겠다면서 한복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섬기며,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이번 취임식의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축하와 격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며 (편집후기)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의 벽에다 그림을 그렸고, 손톱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돌을 쪼아 족적을 남겼다. 알 듯 모를 듯 그려진 그림과 지금은 뜻조차 해독하기 힘든 그것들은 인류 문명의 씨앗이 됐다.

기록은 단순하게 그 시대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기록이라는 작업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그 시대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추구해야 할 지평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록은 역사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한동안 우리는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이분법적 발상에 집착해 스스로를 제한하며 사회 발전 동력을 소모했다. 성장 우선주의와 분배 우선주의의 극단적 논쟁에 빠져들며 총체적으로 국부를 성장시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해법은 생각조차 못했다. 소모적 이념논쟁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며 우리 내부의 분란을 부풀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등장은 한동안 한국사회가 매몰됐던 이념논쟁의 허구를 일깨워 주었다. 한국사회가 민주화시대를 넘어 선진화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창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비전은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인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첫 과정이었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들은 정권을 원만하게 인수받는 작업과 함께 창조적 실용주의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인수위는 '일하는 인수위상(象)'을 실천했다.

일하는 인수위란 단순히 처리하는 업무량을 높였다거나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따지고 검토했다. 각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경청했다.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수위는 '섬기는 인수위상'을 실천했다. 인수위와 생각이 다른 가치관을 외면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애써 찾으려 노력했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체온도 재보려고 노력했다. 세상 모두의 외침을 통합하되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나가야 할 좌표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향하면서 발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려고 지혜를 짜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결코 몸집이 크지 않았다. 규모는 작았지만 비전은 크고 높았으며, 실천 의지는 강하고 단단했다.

백서는 기록이다. 건국시대를 넘어 산업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시대의 진통을 딛고 선진국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의 기록이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적 가치에 대한 반성이요,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인수위 활동이라는 채널을 통해 서기 2008년, 단기 4341년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듬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모색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창조적 실용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돼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기록성에 먼저 주목했다. 인수위 백서는 인수위 활동을 객관적으로, 그것도 있는 그대로 정확한 어휘로 기술하려 했다. 백서의 기술 내용은 인수위 활동의 주체들도 동의해야 하는 한편 인수위 활동을 지켜본 파수꾼들 또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수위 활동은 국정과제를 추출해서 그 국정과제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작업이었다. 이정표는 정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인수위

각 분과위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집대성해서 제1권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1권의 백서 내용은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전세계에 배부하도록 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명박정부의 국정 좌표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또 인수위 백서에서는 인수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갖는 의미를 밝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수위 활동으로 구체화된 결과물만을 요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입장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견을 밝혀 한 시대를 비추보는 거울이 되도록 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기보다는 우리 선택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얘기를 담고 싶었다.

우리의 허물을 뒤돌아보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제17대 인수위를 이을 제18대 인수위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바람을 바탕으로 깔았다. 사회적 쟁점이 됐던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정리되는 마디마디를 밝히면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등도 모아서 제2권에 담았다.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그들의 발자취를 새기던 숭고한 자세를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노력했다. 대나무를 쪼갠 죽간에 한 자 한 자를 정성스레 새기는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서에는 훗날 눈길을 끌지 못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했다.

제17대 백서는 백서발간팀 위원들과 각 분과위의 백서 편집위원들이 원고를 쓰고 정리했지만, 백서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백서 발간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지만, 백서는 역시 그들의 것은 아니다. 백서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고 함께 일하며 땀 흘렸던 모두의 작품이요, 인수위 활동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본 국민들 모두의 것이다. 이들 모두가 이제 인수위 백서를 만들던 그 설렘으로 이명박정부를 응원하고 격려할 것이다.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서 편찬위원회

편집위원

맹형규(기획조정분과 간사 / 인수위원)

백성운(행정실장 / 인수위원)

박형준(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조원동(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분과·특위 집필위원

신금자(대변인실 정책연구위원/전 선대위 MB미디어 부팀장), 공재광(행정실 실무위원/행정자치부 주민생활기획팀), 김종문(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국무조정실), 이상훈(정부분과 정책연구위원/윤건영 의원 보좌관), 조해구(외교통일안 보분과 실무위원/전 선대위 후보 보좌역), 서승우(법무행정분과 실무위원/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송광조(경제 I 분과 실무위원/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태경(경제 II 분과 전문위원/전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 김길성(경제 II 분과 정책 연구위원/법무법인 흥운 고문), 김영미(사회교육문화분과 실무위원/전 한나라당 여성국 부국장), 이관해(투자유치TF 전문위원/전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신승훈(투자유치TF 정책연구위원/코트라 투자전략팀), 김하균(정부혁신·규제개혁 TF 비공식과연/행정자치부 진단기획팀장), 이강후(기후변화및에너지대책TF 전문위원/산업자원부 국장), 김기수(한반 도대운하TF 비공식과연/전 KDI 전문위원), 이란우(새만금TF 실무위원/전 전라북도 공보관), 이철규(과학·비즈니스벨 트TF 자문위원/은하도시포럼 사무국장), 김선진(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자문위원/전 선대위 홍보팀장), 이홍준(취임준 비위원회 실무위원/행정자치부), 김영수(취임사준비위원회 실무위원/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서발간팀

정인학(전문위원 겸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사대우)

강승구(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상근부대변인)

김정문(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상근부대변인)

장형규(자문위원, 소설가, 디자인전문회사 (주)로프트 대표)

염운주(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대외협력총괄단장)

이도환(실무위원, 아동문학평론가, 한남대학교 문창과 강사)

서남수(기획위원, 국정홍보처)

전소향(사진취재, 국정홍보처)

손경숙(행정실무, 국정홍보처)